

자문조사 2011-4

“교육과학기술부 로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개편 방안

2011년 12월 8일

연구책임자: 김병주(영남대학교)

“로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조사 2011-4

“교육과학기술부 로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개편 방안

연구책임자 : 김병주(영남대학교)
공동연구원 :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백성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홍후조(고려대학교)
 김정희(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조원 : 김무영(영남대학교)
연구협력관 : 유승후(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12월 8일

“로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이 연구는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자문조사연구과제 지원비로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귀하

본 보고서를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11년 12월

연구책임자 : 김병주(영남대학교)
공동연구원 :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백성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홍후조(고려대학교)
 김정희(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조원 : 김무영(영남대학교)

연구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고등교육 정책이 시급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 주도적 역할론 대두
 - 특히 10년 후 산업부문·학교급별, 인력수요 전망치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한 새로운 고등교육의 역할·기능, 미래 고등교육기관의 유형, 적정규모, 교육·학위 프로그램 등 고등교육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노동과 자본투입을 기반으로 성장한 산업사회에서 사람과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지식창출과 활용에 있어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개인적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 대두
 - 대학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러한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인력을 양성하는 중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이 국가발전 정책의 수립·집행에서 갖는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큼. 고등교육이 국가발전 주요 전략수단으로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국가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불만과 문제 등 현재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경쟁력 취약의 문제점
 -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의 2001년 자료에 의하면 세계 49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전체순위는 28위이나 교육인적자원 경쟁력에 있어서는 32위에 그침. 특히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5위이나 대학교육의 효율성은 47위로 양적인 지표는 세계수준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1999년 현재 전세계 4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지식기반경쟁력 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지식기반경쟁력은 세계 24위 수준이며 지식투입경쟁력은 7위, 지식활용기반경쟁력은 24위이나 미래경쟁력의 지표인 지식창출기반경쟁력은 42위로 그동안 한국의 경쟁력유지의 원동력이었던 고등교육에 대한 인적자본경쟁력의 낙후도가 극히 심함
- 정부의 대학 지원예산규모는 전체 교육예산의 10%에 불과하고 학생 1인당 고등교육투자비도 OECD 평균의 $\frac{1}{2}$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또한 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이 국공립대학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 지식기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투자가 부족하고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질적 평가기준이 미흡
 - 지식기반 확충을 위하여 BK21, WCU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대학과 산업현장과의 취약한 연계로 인하여 인력공급의 질적 불일치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요구가 대학교육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 초래

◦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다양한 불만 사례

- 기업의 불만: “현장 적합도가 미흡하고 재교육 부담이 큼”
- 학생들의 불만: “우리보다 연구실적이 더 중요한가?”
- 교수들의 문제제기: “공부도 인성도 문제임”

◦ 국가혁신체제의 리더로서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및 개혁의 필요성

- 지식창출기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질적인 측면의 대혁신을 위하여 학습위주의 고등교육혁신관점에서 벗어나 지식생산, 학습, 확산이 연계된 즉, 교육과 연구의 결합을 통한 국가혁신체제의 측면에서 고등교육개혁의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
-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선진국의 구조변화는 신기술(IT, BT, NT)의 융합, 과학적 진보에 의하여 기술혁신의 시대가 도래함. 이는 과학·지식·기술의 창출, 활용, 확산에 관련된 국가혁신체제가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국가산업 및 지역발전 등 고등교육에 필요한 수요기반 파악을 국내 자원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산업·대학의 동반발전 추진전략 필요
- 지식기반사회를 리더하는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적자원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자율성 제고 및 인문·사회학 분야의 기초학문 활성화 필요
- 평생교육의 잠재적 공급기반과 실제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자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서비스 질적 제고 추진 필요
- 궁극적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의 개편방안 모색 필요

2. 우리나라 고등교육 관련 현상과 실태분석

◦ 학령인구 추이

- 2000년 이후 인구증가율은 감소하고, 2016년부터는 학령인구보다는 노인인구가 더 많아 질 전망으로 학령인구, 군 입대 자원 등도 감소할 전망임. 이러한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1995년 대학설립기준이 완화되면서 대학수가 327개교에서 2010년 411개로 대폭 확대되어 대학이 계속 늘어 앞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임
- 장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추정을 살펴보면, 대학생수는 현재 206만명에서 2020년 171만명(17% 감소), 2030년 125만명으로 현재 대비 3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대학원생수는 현재 19만명에서 2020년 44만명(129% 증가), 2030년 29만명으로 현재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해외유학생(out) 및 외국유학생(in) 추이

- 국가 간 인적자원 및 지식의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국외 한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 또한 우리 정부·대학의 유치노력, 저렴한 유학경비,

한류 등의 영향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서비스 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2010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60,000명이며, 여전히 나가는 유학생의 숫자가 들어오는 수보다 매우 크지만 2006년 이후 그 비율이 크게 개선됨

- 외국인 유학생수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대비 5,769명 증가함.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수는 총 63,653명으로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의 1.7%를 차지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학위과정에 있는 유학생은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학위과정 중 어학연수생은 20.6%로 '10년에 비해 0.2% 증가.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47,725명, 몽골 2,515명, 베트남 1,940명, 일본 1,430명 순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상위 순위를 차지함

○ 대학전공-직업 연계

- 대학의 경우 가장 높은 전공일치도를 보인 계열은 의약계열(96.5%)로 취업률(92.0%)과 정규직 취업률(81.0%)도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남. 대학 졸업생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곳에 취업하는 비율인 '전공일치 취업률'은 전체 대학 평균이 37.67%에 불과함. 학생 절반 이상이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임. 특히, 인문계열(29.9%), 사회계열(39.3%)은 낮은 편임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10년 8월 및 '11년 2월) 559,000명 중 취업자는 292,025명(직장 건강보험가입자 291,271명, 해외취업자 754명)으로 취업률은 58.6%로 '10년 55.0% 대비 3.6%p 상승함. 전문대학 및 대학은 '10년 대비 각각 5.1%p, 2.6%p 상승함. '11년에 조사대상으로 추가된 기능대학의 취업률은 85.5%인 것으로 나타남
- 7대 대계열별로 취업률 증감현황을 보면, 전문대학에서는 예체능계열이 '11년 43.1%로 '10년 35.3% 대비 7.8%p가 증가하였고, 대학과 일반대학원에서는 교육계열이 각각 4.4%p, 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진학률 증감현황을 보면, 전문대학은 사회계열과 교육계열, 예체능계열이 '10년 대비 각각 0.3%p, 0.2%p, 0.1%p 증가하였고, 대학은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이 '10년 대비 각각 0.5%p, 0.1%p 증가함
- 취업률이 높은 전공(소계열)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10년에 1위였던 농수산은 '11년에 10위권 밖으로, '10년에 2위였던 재활은 '11년에 5위로, '10년에 3위였던 금속은 '11년에 1위로 순위 변동이 있음. 대학은 1위 의학, 2위 치의학, 3위 한의학으로써 전년도와 순위변동이 없음. 일반대학원은 '10년에 1위였던 의학은 '11년에 2위로, '10년에 2위였던 한의학은 '11년에 5위로, '10년에 3위였던 전기공학은 '11년에 8위로 순위 변동이 있음

○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상과 실태 진단

- 2011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72.50%로 나타나 2008년 83.8%, 2009년 81.9%, 2010년 79.0% 진학률 보다 감소추세로 나타남. 고등학교 졸업자

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문계고 진학률 추이가 일반계고 진학률의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남

-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과 더불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수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고등교육기관 재적 총 학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대 학생 수의 감소상태를 나타냄.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수는 3,735,707명으로 '06년 이후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대비 91,549명이 증가함
- 2011년 고등교육기관 교원수는 82,18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대비 4,487명이 증가. 고등교육기관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대 재적학생수의 감소, 교원 수의 증가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어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교육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음
- 2011년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는 31.2명으로 '10년 대비 1.5명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어 대학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므로(OECD 평균: 15.3명, '07년도, 고등교육전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2011년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교육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교육경쟁력은 29위로 2010년 35위에 비해 6단계나 상승하였음. 고등교육 이수율은 상위권을 점하고 있어 미래 한국 고등교육에서 강점이나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이 약점임
-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체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낮고,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중등교육 30%로 OECD 평균(26%)보다 4%p 높지만, 초등교육(20%)과 고등교육(34%)은 OECD 평균보다 각각 1%p, 7%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정부지출 공교육비 중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85.2%로 OECD 평균(79.0%)보다 6.2%p 높으나, 민간에 대한 정부보조금 비율은 14.8%로 OECD 평균(21.0%)보다 6.2%p 낮은 것으로 나타남

3. 현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

- 이명박정부는 대학교육의 자율화를 기본으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놓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고등교육정책은 주로 재정지원 정책으로 그 대상은 주로 학부생, 대학원생 및 교수와 연구자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고, 대학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학부와 대학원, 재학생수 규모별 등으로 나누어짐
-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
 - 2008년부터 시작된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

를 위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부교육 선도 모델의 창출·확산을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ACE)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구분

- 20011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는 교육지표 포뮬러와 재원 배분 포뮬러를 적용하여 80개 대학(신청대학의 48.5%)을 선정하여, 1개교에 평균 29.6억 원을 지원
-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발전의 핵심지표로 구성된 포뮬러에 의해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자율적 재정집행을 보장하며, 2011년 지원총액은 2,406.6억원(기본지원금 2,366.6억 + 성과평가 인센티브 40억) 규모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 80개 이내 대학을 지원('10년 예산(수도권 675억, 지방 1,912억) → '11년 예산(수도권 645억, 지방 1,761.6억))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 「학부교육 선진화(ACE)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정한다는 원칙하에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
- ACE 선도대학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대학 중에서 선정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수도권 대규모(재학생 1만명 이하) 1개교·중·소규모(재학생 1만명 미만) 2개교, 지방 대규모 3개교, 중·소규모 5개교로 총 11개교를 선정
- ACE 대학은 2010년 11개교에 이어 총 22개교가 되며, 교당 평균 27억 정도 지원 ('10년 예산(수도권 119억, 지방 178억) → '11년 예산(수도권 209억, 지방 388억))
- 기대 효과는 첫째, 그동안 대학의 주된 관심이었던 학생을 "잘 뽑는 경쟁"이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되고, 교육보다는 연구에 더욱 적극적이던 대학과 교수 사회가 학생 교육에 더 큰 관심과 투자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함. 둘째, 선도적 학부교육 모델들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됨으로써, 각 대학들이 다양한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통해, 무엇을(교육의 내용) 어떻게(교육의 방법)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체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임. 셋째, 학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소규모 대학들이 다수 선정됨으로써, 일류대학 따라하기 식의 대학 특성화가 아니라, 각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교육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함으로써,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및 대표브랜드 사업

- 2008년부터 시작된 전문대학 교육역량 우수대학은 146개 전문대학 중 교육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전문대학 80개(수도권 26개교, 비수도권 54개교)를 선정하고, 대학 당 평균 약 32억원의 예산을 지원
- 2011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총 2,600억원 규모로, 지표가 우수한 80개 전문대학을 「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 자율 재정집행액 1,812억원,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에 776억원을 각각 지원
- 「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의 선정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산학협력수익률 등 전문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나타내는 8개 핵심지표로 지원대학을 선정

◦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 '11.9.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 2천5백억원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 이를 통해 전체학생 평균 5% 수준의 명목등록금을 인하하고, 7분위 이하 학생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됨

◦ 대학 구조조정 및 개혁

- 대학 특성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 관점에서 국립대학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며, 초등교사 장기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교육대학과 인근 일반대학의 통합을 강력 유도. 사립대학은 경영 부실대학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과 함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시 결과 등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되, 문제 지속시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른 학교폐쇄와 법인해산도 추진
-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들을 평가, 하위 15% 해당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 이와 별도로 선정하게 될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 평가순위 하위 대학(하위 15% 내외)에 포함될 경우 '12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
- 평가순위 하위대학 → 대출제한대학 → 경영부실대학 선정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감사 결과 이행 여부 등에 따라 퇴출 절차 추진.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유형화하고, 구조개선의 유도 수단을 강화함

◦ 국립대학 법인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간 통·폐합 및 동일권역 소재 대학간 "연합대학 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확정·발표.
- 연합대학 법인화는 동일 권역(행정권, 경제권) 내 2개 이상의 국립대학이 MoU 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를 구축·운영하여 유사·중복 영역을 통·폐합하고 대학 간 기능을 조정한 후 일정기간(예, 3~5년) 내에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특히 법인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중소규모 대학에 대해서는 법인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법인화 미이행 및 통폐합 성과 미진 등 당초에 의도된 실적이 도출되지 않거나 예산을 사업 목적으로 집행할 경우 지원예산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질적인 사업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

◦ WCU(World Class University)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6월, 2008년도 12월, 2010년도 3월 세 차례에 걸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사업'을 공고. 우수 해외학자를 유치하여 융복합 중심 전공·학과 개설 지원, 해외학자와 국내 교수의 공동

연구·교육 활동 등을 지원함

- 사업비('08~'12년)는, 총 8,250억원('10년: 1,591억원), 35개 대학 총 149개 과제('10.9월 기준)가 지원됨. 노벨상 수상자 9명을 포함하여 340명 유치
- WCC(World Class College)
 - 국내·외 산업체의 요구 및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계속적인 성장가능성과 글로벌 직업교육역량을 갖춘 선도 전문대학 육성. 2011년 전국 146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4단계 평가과정을 거쳐 7개교 선정, 향후 2년간 14개교를 추가하여 최종 21개교를 선정 예정
 - WCC로 선정된 대학은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재정 및 학사운영 측면에서 각종 우대조치를 지원. 재정적인 인센티브로 2011년 80개 전문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2,600억원의 교육역량강화사업비(교당 평균 32억원)를 별도의 평가 없이 3년간 ('11~'13년) 지원하며, 2011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도 일반대학보다 2~3배 수준 더 지원
- BK21(Brain Korea 21)
 -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후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 양성 사업
 -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과 박사후과정생 등을 지원하는 『창의적인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은 1단계(1999~2005)에 1조 3천억원을 지원하고, 2단계(2006~2012) 사업은 2006.3.1일부터 7년간 약 2조원을 지원하여 총 74개 대학 564개 사업단(팀)을 지원함.
 - 대학원 학과조직단위의 사업단(팀)을 지원 ⇒ 전반적인 교육역량 신장 ⇒ 세계수준의 우수대학원 육성
- GPS(Global Ph.D. Fellowship)
 -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여 미래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박사급 고급 두뇌로, 나아가 노벨상 후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국가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 선정된 287명의 박사과정생에게는 연 3,000만원씩 2년 동안 6,0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 학생에게는 우선적으로 추가(연장)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Post-Doc. 선발시에도 인센티브 제공 등 계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임

4. 고등교육발전방안 선행연구 분석: 미래 고등교육 모습 전망 중심

- OECD 회원국과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미래 전망 관련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고등교육 미래의 공통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 다양화 : 고등교육기관 학생 대상이 성인 근로자, 중·고령층으로 확대됨.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으로 인한 재직 근로자의 신기술·지식 습득을 위한 재교육훈련 수요 증가,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의 취미·교양교육 수요 증가 등과 같은 고등교육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기인함. 대학에서 성인 근로자나 중·고령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확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만을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이 설립·운영될 수 있음
- 특성화·전문화: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전문화가 보다 진전됨. 이는 고등교육기관 운영에 있어 효율성·효과성·대응성·책무성 등이 강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 경제성과 공공성(형평성, 시장실패 대응) 관점에서 보다 높은 투자 성과 창출을 요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는 부담 수업료 대비 보다 높은 고용가능성과 임금을 기대함. 학부교육에 집중하는 대학, 연구에 치중하는 대학, 특정 학문분야 전문대학 등이 확대됨
- 복합적 네트워크화: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에 대해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간, 고등교육기관과 기업·정부·연구소간, 또는 고등학교-대학-대학원간 등 연계·협력 구조가 더욱 활성화됨. 보다 원활한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표준화·모듈화, 거버넌스, 재정 확보 및 지원 방식 개편 등이 함께 이루어짐.
- 국제화: 세계시장에서의 국가 및 대학 경쟁력 제고·유지를 위해 국가 간 고등교육 연계·협력체계 그리고 대학 간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 공동 수행 등이 보다 체계화·활성화됨. 유럽 볼로냐 프로세스에 의한 학사-석사-박사학위 체계의 통일과 같은 국가 간 협약을 통한 국제화부터 개별 고등교육기관간 양자 또는 다자간 연계·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학교육의 수출 및 수입이 확대됨
- 지역화: 국가 및 대학 소재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사명이 강조됨. 고등교육기관은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맥락에서 각각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는 바, 지나친 국제화 강조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산업 발전 및 주민의 교육적 수요 충족에 1차적 관심을 갖는 대학이 증가함
- 고등교육 재정 및 거버넌스에 시장기제 확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연금 부담 증가 등 재정 압박으로 고등교육 재원의 다양화(학생, 기업 등)가 진전되고, 재정 부담자에 대한 책무성 보장 관점에서 고등교육 관련 의사결정에 이들의 참여가 확대됨

○고등교육 미래모습 변화 전망은 상기 변화 트렌드가 각각 어느 정도의 규모와 속도로 진행되고, 서로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 각국은 고등교육의 전통 및 운영 방식, 경제발전 전략과 특성,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 등에 있어 고유의 특징이 있는 바,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미래 모

습 전망은 상호 다르게 나타날 것임

5. 미래 고등교육 체제 전망 리뷰

○ 선행연구 검토는 단·중기 비전하의 발전방안, 장기비전 하의 발전방안, 초 장기 비전하의 시나리오, OECD의 시나리오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단·중기 발전 방안 관련 연구

- 전문대학 발전방안은 이용균·이기성(2010)의 「한국 전문대학의 미래 예측에 관한 연구」, 정태화(2009)의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문제점과 혁신 방안」, 김성태 외(2009)의 「전문대학 국제화 및 선진화 방안」를 검토
- 대학 발전 방안은 김문현(2008)의 「대학자율화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 관련 법령 체제 개편 연구」, 류장수 외(2008)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박정수 외(2009)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박정수 외(2009)의 「사립대학 구조조정 필요성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 김철희 외(2010)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인력수급체제 개선 연구」를 검토
- 대학원 발전방안은 민경찬 외(2011)의 「대학원교육 선진화 방안」, 반상진 외(2006)의 「대학원체제 개편방안」를 검토

○ 장기 비전하의 체제 변화 전망: 채재은(2009)은 「고등교육 장기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고등교육 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

- 1) 평생학습 친화형 유현한 학사운영 및 학위체제 개편
- 2) 소외계층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
- 3) 유비쿼터스 고등교육 환경 조성
- 4) 국제화를 통한 고등교육 시스템 역량 강화
-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 6) 「산업선도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체제 혁신
- 7) 대학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구조개혁 지속 추진
- 8) 융복합 학문의 활성화와 신진고급 두뇌 발굴 지원
- 9)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력 강화
- 10)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질 보장 체제 구축

○ 초 장기 비전하의 고등교육 체제 변화 (시나리오)

- 유현숙 외(2011)는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에서 향후 30년(~2040)을 내다보는 미래 전망으로, 미래 사회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창조”, “행복”, “지속가능”, “조화”의 4가지로 전망하고 각각의 키워드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 변화 전망을 제시

○ OECD의 고등교육 미래 시나리오

- OECD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시스템 개혁안을 준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미래 고등교육 시나리오를 제시함. OECD는 국제적/국제적 지향성과 시장주도/공적주체 주도의 두 축을 활용하여 미래 고등교육기관의 발전 모델을 4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제시

○ 시사점

- 선행 연구들의 제한점 : 양적 추계의 한계가 있고, 단기 방안에 치중되어 있으며, 장기 방안을 탐색함에 있어 시나리오 기법 부족
- 비전 설정을 위한 rationale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over-supply, 고등교육의 국제화 개방화, 고등교육 재정 투자에 따른 효율성 제고 필요, 자율과 책무의 균형을 이룬 정책 필요
- 비전 영역 : 학령인구 감소 및 초과공급, 재정한계와 책무성 요구 증대, 스마트 사회 첨단기술 사회, 국제화·개방화 사회, 고령화·웰빙사회, 조화로운 사회 등의 영역으로 과제 제시

6. 핵심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에 대하여 대학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464명으로서 국공립대학 123명, 사립대학 341명, 전문대학 201명, 4년제 대학교 251명, 기타 12명임
-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의 추진 배경, 추구 방향, 추진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 61~80(중간점 60)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였고,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에 대해서만 47.9로 다소 낮은 인식을 보였음.
-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지원사업,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에서는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였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BK21(Brain Korea 21)사업,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에서는 중간보다 다소 낮은 인식을 보임
-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이 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ACE 선도대학 사업, 전문대학 대표브랜드 지원사업, WCC사업, GPS지원사업에서는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정책, WCU사업, BK21사업에서는 다소 낮은 인식을 보임

-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지원사업,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WCC사업, GPS지원사업에서는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였고, ACE 선도대학 사업,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 WCU사업, BK21사업에서는 중간보다 다소 낮은 인식을 보임
-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의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대부분 60~70(중간점 60)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였고,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에 대해서만 54.5로 다소 낮은 인식을 보임
-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의 보완점에 대한 설문의 다중응답 결과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지원사업,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ACE 선도대학 사업, 대학 구조조정 추진 정책, WCC정책에서는 평가지표 및 방법의 보완의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에서는 사업을 없애고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단일 지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서는 재정지원의 확대,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에서는 개별대학의 사정에 따라 법인화를 추진토록 하는 문제 해소, WCU 정책에서는 특정 대학에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대학의 우수 학과/교수에 지원, Brain Korea 21(BK21) 정책에서는 단기적 성과위주평가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성과 평가로 전환, GPS정책에서는 인문사회계/이공계의 적절한 균형 유지의 의견이 가장 많음
- 10년 후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의 전망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7. 고등교육 체제개편에 대한 멜파이 조사

- 고등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요구와 미래사회의 변화 및 요구와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전문가 대상 멜파이 조사를 3차례 걸쳐 실시하여 분석
 - 응답자는 국책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16명, 4년제 대학교 기획 및 교무처장 9명, 고등교육 전문가 11명, 전문대학 기획 및 교무처장 4명으로 구성
-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미래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는 저출산고령화, 지식기반사회가속화, 급격한 사회변화와 양극화, 세계화의 심화의 순으로 나타남
-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생각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응답결

- 과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내 구조혁신, 대학교육의 질 관리, 교육과정개혁, 대학의 교육력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방안별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부과제에 대한 응답결과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서는 우수대학 집중육성, 대학내 구조혁신에서는 통용성 높은 교육과정으로 개혁, 대학교육의 질 통제에서는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연계와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교육과정 개혁에서는 전공 과정의 직업연계성 강화와 교육과정의 통합/융합성 강화, 대학의 교육력강화에서는 교육관련 재정지원 확대가 주요 대응방안으로 나타남

8. 주요 고등교육 발전 과제

- 고등교육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와, 대학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토대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대학유형/목적에 맞는 고등교육체제 정립, 세계 수준의 명문대학 육성, 차별화된 학부교육의 강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을 통한 적정 규모화, 환경·기술변화에 따른 대학 전공 개편, 대학 행·재정체제의 재구조화, 대학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역량 제고,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대학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質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 대학교육의 개방화와 세계화 추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 이들 중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고등교육의 구조 개편: 장기적으로 30개 우수대학 집중 육성
 - 학부/학과의 융합형 학과구조: (Convergence-oriented Structure) 설계
 - "아태 지역 통합 글로벌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협력 프로그램 마련
 - 고등교육단체 평생 직업교육기회 확대
 -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 고등교육연구개발센터의 설립
 -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및 지속적 지원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3. 연구 방법	4
II. 우리나라 고등교육 관련 현상과 실태분석	6
1. 학령인구 추이	6
2. 해외유학생(out) 및 외국유학생(in) 추이	10
3. 대학전공-직업 연계	12
4.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상과 실태 진단	16
III. 현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	2
1.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	23
2.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26
3.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및 대표브랜드 사업	30
4.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31
5. 대학 구조조정 및 개혁	34
6. 국립대학 법인화	38
7. WCU(World Class University)	40
8. WCC(World Class College)	42
9. BK21(Brain Korea 21)	44
10. GPS(Global Ph.D. Fellowship)	46
IV. 고등교육발전방안 선행연구 분석: 미래 고등교육 모습 전망 중심 ..	4
1. 고등교육 정책 환경 변화 전망	48
2. 미래 고등교육 시나리오	55
3. 논의	61

V. 미래 고등교육 체제 전망 리뷰	3
1. 단·중기 발전 방안 관련 연구	63
2. 장기 비전하의 체제 변화 전망	65
3. 초 장기 비전하의 고등교육 체제 변화 (시나리오)	70
4. OECD의 고등교육 미래 시나리오	75
5. 시사점	76
VI. 고등교육 체제개편에 대한 델파이 조사	97
1. 조사 개요	79
2. 1차 응답 결과	80
3. 2차 델파이 응답결과	88
4. 3차 델파이 응답 결과	115
VII. 설문조사 결과	141
1. 설문조사 대상 및 내용	141
2. 설문 분석 결과	142
VIII. 주요 고등교육 발전 과제	26
<참고문헌>	227
<부록>	231
<부록 1> 델파이 1차 조사지	233
<부록 2> 델파이 2차 조사지	241
<부록 3> 델파이 3차 조사지	256
<부록 4> 설문조사지	272

표 목차

<표 II-1> 인구 규모	6
<표 II-2> OECD 회원국의 고령화속도	6
<표 II-3>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수 추정치(2011~2030)	8
<표 II-4> 장래 추계인구 취학 적령 인구 추이(통계청, 2006)	9
<표 II-5> 연도별 유학생 현황	01
<표 II-6> 출신국가별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 추이	11
<표 II-7> 외국인 유학생 추이	21
<표 II-8> 대학의 계열별 전공일치도(2008)	2·1
<표 II-9> 학제별 취업통계 증감현황	31
<표 II-10> 대계열별 취업현황 및 졸업현황	41
<표 II-11> 취업률 상위 전공(소계열)	5·1
<표 II-12> 상급학교로의 진학률 현황	61
<표 II-13>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 현황	71
<표 II-14>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현황	81
<표 II-15> 고등교육기관 교원 수 현황	91
<표 II-16> 전임 교원 1인당 재학생수	02
<표 II-17> IMD 교육경쟁력 주요 국가별 순위	1·2
<표 II-18>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8)	1·2
<표 II-19>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 유형(2008)	2·2
<표 III-1> 주요 사항 신구 대비표	42
<표 III-2>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유형 구분	72
<표 III-3>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주요 평가요소(예시)	8·2
<표 III-4>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선정지표	7·3
<표 VI-1>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	08
<표 VI-2>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	18
<표 VI-3>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28
<표 VI-4>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대학내 구조혁신 (특성화 등)	2·8
<표 VI-5>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	3·8
<표 VI-6>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3·8
<표 VI-7>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교육과정 개혁	4·8
<표 VI-8>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4·8
<표 VI-9>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대학교육의 질 통제(대학평가 등)	5·8
<표 VI-10>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5·8

<표 VI-11>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68
<표 VI-12>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대학의 연구력 강화	68
<표 VI-13>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대학의 교육력강화	78
<표 VI-14>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교육기회 형평 보장	78
<표 VI-15>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기타	88
<표 VI-16>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1차 응답결과	88
<표 VI-17>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1, 2차 응답 비교	88
<표 VI-18>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의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	98
<표 VI-19>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1차 응답결과	49
<표 VI-20> 사회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키워드에 대한 1차, 2차 응답결과 비교	49
<표 VI-21> 사회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키워드의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	59
<표 VI-22> 미래사회에 대비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99
<표 VI-23>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101
<표 VI-24>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103
<표 VI-25>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104
<표 VI-26>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 개혁”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105
<표 VI-27> 미래사회에 대비한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107
<표 VI-28>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질 통제(대학평가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108
<표 VI-29>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109
<표 VI-30> 미래사회에 대비한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110
<표 VI-31>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의 연구력 강화”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111
<표 VI-32>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의 교육력 강화”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112
<표 VI-33>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기회 형평 보장”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113
<표 VI-34> 미래사회에 대비한 기타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41
<표 VII-1> 배경변인별 응답자 현황	1
<표 VII-2>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의 추진 배경, 추구 방향, 추진 내용에 대한 인지도	2
<표 VII-3>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인지도	3
<표 VII-4>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인지도	4

<표 VII-5>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에 대한 인지도	1
<표 VII-6>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2
<표 VII-7>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2
<표 VII-8> 대학 구조조정 추진 정책에 대한 인지도	2
<표 VII-9>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에 대한 인지도	2
<표 VII-10>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에 대한 인지도	841
<표 VII-11>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에 대한 인지도	941
<표 VII-12> BK21(Brain Korea 21)사업에 대한 인지도	051
<표 VII-13>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051
<표 VII-14>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1
<표 VII-15>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1
<표 VII-16>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1
<표 VII-17>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1
<표 VII-18>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1
<표 VII-19>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1
<표 VII-20>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5
<표 VII-21>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651
<표 VII-22>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651
<표 VII-23> BK21(Brain Korea 21)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751
<표 VII-24>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851
<표 VII-25>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0
<표 VII-26>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0
<표 VII-27>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0
<표 VII-28>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0
<표 VII-29>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0
<표 VII-30>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0
<표 VII-31>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0
<표 VII-32>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361
<표 VII-33>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461
<표 VII-34> BK21(Brain Korea 21)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561
<표 VII-35>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561
<표 VII-36>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만족도	6
<표 VII-37>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만족도	6
<표 VII-38>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에 대한 만족도	6
<표 VII-39>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6

<표 VII-40>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	❶
<표 VII-41>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에 대한 만족도	❷
<표 VII-42>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에 대한 만족도	❸
<표 VII-43>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에 대한 만족도	171
<표 VII-44>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에 대한 만족도	271
<표 VII-45> BK21(Brain Korea 21)사업에 대한 만족도	271
<표 VII-46>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371
<표 VII-47>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	❹
<표 VII-48>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지속 추진의 필요도	❹
<표 VII-49>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	❺
<표 VII-50>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	❻
<표 VII-51>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지속 추진의 필요도	❻
<표 VII-52>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 지속 추진의 필요도	❻
<표 VII-53>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 지속 추진의 필요도	❻
<표 VII-54>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	871
<표 VII-55> WCC(World Class College)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	971
<표 VII-56> BK21(Brain Korea 21)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	081
<표 VII-57>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	081
<표 VII-58> 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보완점	❻
<표 VII-59>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보완점	❻
<표 VII-60>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의 보완점	❻
<표 VII-61>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의 보완점	❻
<표 VII-62>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보완점	❻
<표 VII-63> 대학 구조조정 추진 정책의 보완점	❻
<표 VII-64>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의 보완점	❻
<표 VII-65> WCU(World Class University) 정책의 보완점	981
<표 VII-66> WCC(World Class College) 정책의 보완점	091
<표 VII-67> Brain Korea 21(BK21) 정책의 보완점	191
<표 VII-68> GPS(Global Ph.D. Scholarship) 정책의 보완점	391
<표 VII-69> 10년 후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전망	❻
<표 VII-70> 10년 후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전망	❹
<표 VII-71> 10년 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의 전망	❹
<표 VII-72> 10년 후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의 전망	❹
<표 VII-73> 10년 후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전망	❹
<표 VII-74> 10년 후 대학 구조조정 추진 정책의 전망	❹

<표 VII-75> 10년 후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의 전망	91
<표 VII-76> 10년 후 WCU(World Clss University) 사업의 전망	0·0 2
<표 VII-77> 10년 후 WCC(World Clss College) 사업의 전망	1·0 2
<표 VII-78> 10년 후 BK21(Brain Korea 21) 사업의 전망	2·0 2
<표 VII-79> 10년 후 GPS(Globl Ph.D. Scholrship)지원사업의 전망	3·0 2
<표 VII-80>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의 10년후 전망	52
<표 VIII-1> 고등교육 예산 추이	3
<표 VIII-2> 주요국의 학생당 고등교육비(US\$)	322
<표 VIII-3> GDP 대비 고등교육 재원	4
<표 VIII-4> 고등교육투자의 정부재원 대비 민간재원 비율	2

그림 목차

[그림 II-1] 장례 추계 인구 학생수 추이(통계청, 2006)	0·1
[그림 II-2] 일반대학·대학원·전문대학 재적학생수 추이	81
[그림 II-3] 고등교육기관 교원수 추이	02
[그림 V-1] Vincent-Lancrin의 미래 고등교육 시나리오	8 5
[그림 VIII-1] 학령인구(18세인구)의 변화 추이	12
[그림 VIII-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1
[그림 VIII-3] OECD 국가 25-64세 인구 정규 및 비정규 교육 참여율(2007)	2·12
[그림 VIII-4] OECD 주요국 45-54세 및 55-64세 정규 및 비정규교육 참여율	3·12
[그림 VIII-5] 고등교육단계 평생 직업교육학제 개편(안)	❶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고등교육 정책이 시급. 지식 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 주도적 역할론 대두
 - 특히 10년 후 산업부문·학교급별, 인력수요 전망치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한 새로운 고등교육의 역할·기능, 미래 고등교육기관의 유형, 적정규모, 교육·학위 프로그램 등 고등교육 체제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노동과 자본투입을 기반으로 성장한 산업사회에서 사람과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지식창출과 활용에 있어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개인적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 대두
 - 대학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러한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인력을 양성하는 중추기관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이 국가발전 정책의 수립·집행에서 갖는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큼. 고등교육이 국가발전 주요 전략수단으로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노동과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에 대한 요구 증대
 - .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지리적 접근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다양한 부류 및 연령층의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고등교육 서비스 방식 시도
- 국가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불만과 문제 등 현재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경쟁력 취약의 문제점
 -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의 2001년 자료에 의하면 세계 49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전체순위는 28위이나 교육인적자원 경쟁력에 있어서는 32위에 그침. 특히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5위이나 대학교육의 효율성은 47위로 양적인 지표는 세계수준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1999년 현재 전세계 4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지식기반경쟁력 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지식기반경쟁력은 세계 24위 수준이며 지식투입경쟁력은 7위, 지식활용기반경쟁력은 24위이나 미래경쟁력의 지표인 지식창출기반경쟁력은 42위로 그동안 한국의 경쟁력유지의 원동력이었던 고등교육에 대한 인적자본경쟁력의 낙후도가 극히 심함

- 정부의 대학 지원예산규모는 전체 교육예산의 10%에 불과하고 학생 1인당 고등교육투자비도 OECD 평균의 $\frac{1}{2}$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또한 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이 국공립대학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 지식기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투자가 부족하고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질적 평가기준이 미흡
 - 지식기반 확충을 위하여 BK21, WCU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대학과 산업현장과의 취약한 연계로 인하여 인력공급의 질적 불일치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요구가 대학교육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 초래
-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다양한 불만 사례
 - 기업의 불만: “현장 적합도가 미흡하고 재교육 부담이 큼”
 - . 신입사원이 평가한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용도: 48점(100점 기준)
 - . 신입사원 채용 후 실무투입까지 재교육 기간 및 비용 과다(약 20개월, 약 6천만원 소요)
 - . “인성, 도덕성, 창의성, 의사소통력, 리더십도 부족함”
 - 학생들의 불만: “우리보다 연구실적이 더 중요한가?”
 - . “학생은 비싼 돈 내고 있는데 질 높은 강의는 얼마나 되나?”
 - . “매 학기 똑같은 수업 지루하고 재미없음”
 - . “강의계획서 따로, 수업 따로”
 - 교수들의 문제제기: “공부도 인성도 문제임”
 - . “요즘 학생들은 시험 때만 공부하고 꾸준히 공부 안 함”
 - . “기초 능력이 부족해서 전공수업을 하기 힘듦”
- 국가혁신체제의 리더로서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및 개혁의 필요성
 - 지식창출기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질적인 측면의 대혁신을 위하여 학습위주의 고등교육혁신관점에서 벗어나 지식생산, 학습, 확산이 연계된 즉, 교육과 연구의 결합을 통한 국가혁신체제의 측면에서 고등교육개혁의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
 -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선진국의 구조변화는 신기술(IT, BT, NT)의 융합, 과학적 진보에 의하여 기술혁신의 시대가 도래함. 이는 과학·지식·기술의 창출, 활용, 확산에 관련된 국가혁신체제가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국가산업 및 지역발전 등 고등교육에 필요한 수요기반 파악을 국내 자원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산업·대학의 동반발전 추진 전략 필요
 - 지식기반사회를 리더하는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적자원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육

성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자율성 제고 및 인문·사회학 분야의 기초학문 활성화 필요

- 평생교육의 잠재적 공급기반과 실제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자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서비스 질적 제고 추진 필요
- 궁극적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의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우리나라 고등교육 관련 현상과 실태 분석
 - 학령인구, 해외유학생(out) 및 외국유학생(in) 추이
 - 전공별 학생수급, 대학 전공-직업 연계, 청년실업 추이
 - 고등교육 관련 현상과 실태 진단
-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의 현 주소
 - 고등교육체제 구조
 - 고등교육 관련 정부 정책
 - 환경 변화에 대한 고등교육 체제의 대응력 진단
- 고등교육 발전방안 선행연구 분석
 -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방안: 국가의 경제, 교육,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생산요소 투입에서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을 기본으로 하는 인적자원으로 바뀌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향후 역동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지식분야 제시
 - 고등교육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 미래 고등교육기관의 유형과 적정규모
 - 환경·기술변화에 따른 대학 전공 개편
 - 대학 행·재정체제의 재구조화
 - 고등교육 개혁의 예시적 분야
 - . 대학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 . 인문·사회분야 기초학문 활성화
 -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역량 제고
 -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 대학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質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
 - . 대학교육의 개방화와 세계화 추구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외국 사례 등에 관한 문헌 고찰
 - 특히 미래 환경 변화와 고등교육체제 개편 관련 국내·외 연구 자료 수집·분석
- 전문가 협의회
 - 고등교육전문가, 대학 관계자, 재단 관계자, 정책 담당자, 시민단체 등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진과 상호의견을 교환함과 동시에 토론을 통하여 보다 타당한 방안 모색
 - 정부부처 관계관과의 수시 협의회 개최
 - 의제별 정책연구진과 정례회의 운영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주제별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아젠다 도출
- 전문가 델파이조사
 - 델파이방법(Delphi-technique)은 쉽게 결정될 수 없는 정책이나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일련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종합하여 합의점을 찾아내는 조사방법
 - . 전통적인 의견 수집방법인 집단토론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델파이방법은 집단 의사결정이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유효하며,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한 장소에 모여서 면대면 회합방식을 갖지 않고서도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다 는 것을 기본전제
 - 델파이 설문조사는 3~4회에 걸쳐 동일한 전문가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실시
 - . 각 회수별로 회수된 설문지는 개별 전문가의 응답으로부터 도출된 의견이나 정보, 분석결과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설문지로 재구성
 - . 질문과 결과제시의 절차를 반복 시행하여 질문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초기단계에서의 전문가들의 이질적인 의견이나 판단에 동질성을 확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정한 합의에 도달
 - 궁극적으로 델파이방법은 면밀하게 계획된 익명의 반복된 설문과 전회에 실시한 설문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이 직접 한데 모여서 논쟁을 하지 않고서도 집단 구성원의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집단협의 방식에 대한 대안적 조사방법
 -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40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실시

- 설문조사
 -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에 대하여 대학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II. 우리나라 고등교육 관련 현상과 실태분석

1. 학령인구 추이

1) 인구구조의 변화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1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8,219천명으로 2005년에 비해 2.0% 증가하고, 2000년 이후 인구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음(통계청, 2011). 또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6년부터는 학령인구보다는 노인인구가 더 많아질 전망으로 향후 평생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임. OECD 회원국에 비해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인 고령사회는 2018년에, 20%인 초고령 사회는 2026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요시간은 각각 18년과 8년임.

<표 II-1> 인구 규모

(단위: 천명, %)

연도	총인구	남자	여자	총인구증가율	등록외국인수
1990	43,411	21,782	21,629	7.3	50
1995	44,609	22,389	22,219	2.8	110
2000	46,136	23,159	22,978	3.4	210
2005	47,279	23,624	23,655	2.5	485
2010	48,219	24,045	24,174	2.0	919

자료: 통계청(2011: 2), 2010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교육개발원(2011: 39).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표 II-2> OECD 회원국의 고령화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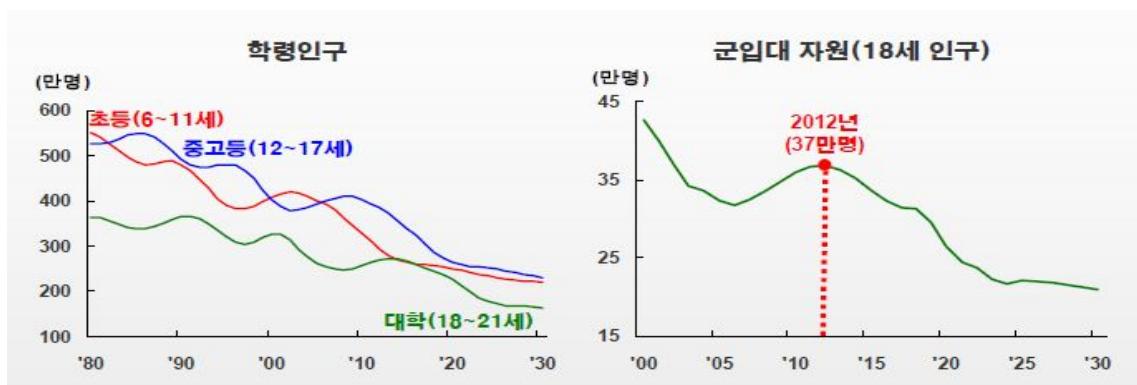
구분	도달연도			소요연수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고령사회도달	초고령사회도달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영국	1929	1976	2026	47	50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주: 7%, 14%, 20%는 고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10: 187).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한국교육개발원(2011: 41).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2) 대학 입학정원과 18세 인구 추이

- 2000년 이후 인구증가율은 감소(통계청, 2011) 하고, 2016년부터는 학령인구보다는 노인인구가 더 많아질 전망으로 학령인구, 군 입대 자원 등도 감소할 전망임. 이러한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1995년 대학설립기준이 완화되면서 대학수가 327개교에서 2010년 411개로 대폭 확대되어 대학이 계속 늘어 앞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임(통계청, 2009).



자료: 통계청(2009: 7).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2011: 39).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자료: 통계청(2010: 15).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2011: 40).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 장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추정을 살펴보면, 대학생수는 현재 206만명에서 2020년 171만명으로 17% 감소하고, 2030년 125만명으로 현재 대비 3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대학원생수는 현재 19만명에서 2020년 44만명으로 129% 증가하고, 2030년 29만명으로 현재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이영, 2011).

<표 II - 3>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수 추정치(2011~2030)

연도	대학생수				대학원생		학령인구	
	전체	일반대학	전문대	전문대 비중	학생수	학령 인구 대비 비율	대학생 (18~21세)	대학원생 (22~24세)
2011	2,066,989	1,573,451	493,538	24%	193,013	10.5%	2,716,294	1,839,015
2012	2,096,617	1,607,738	488,879	23%	214,843	11.6%	2,755,229	1,844,727
2013	2,121,971	1,638,546	483,426	23%	243,812	12.9%	2,788,548	1,888,180
2014	2,108,341	1,638,808	469,534	22%	278,891	14.3%	2,770,636	1,951,095
2015	2,073,638	1,621,944	451,694	22%	317,712	15.8%	2,725,031	2,011,980
2016	2,020,934	1,590,090	430,844	21%	356,175	17.4%	2,655,771	2,046,598
2017	1,953,086	1,545,293	407,793	21%	391,978	19.1%	2,566,610	2,048,930
2018	1,916,422	1,524,249	392,173	20%	424,715	21.0%	2,518,429	2,024,975
2019	1,835,210	1,466,844	368,366	20%	454,109	22.9%	2,411,706	1,980,232
2020	1,709,723	1,372,830	336,893	20%	441,223	23.0%	2,246,800	1,918,359
(%)*	-17%	-13%	-32%		129%		-17%	4%
2021	1,636,200	1,319,417	316,783	19%	425,721	23.0%	2,150,180	1,850,962
2022	1,551,081	1,255,736	295,345	19%	415,294	23.0%	2,038,323	1,805,626
2023	1,433,671	1,164,921	268,750	19%	403,696	23.0%	1,884,031	1,755,199
2024	1,376,016	1,121,812	254,205	18%	383,072	23.0%	1,808,265	1,665,530
2025	1,389,909	1,136,580	253,329	18%	353,931	23.0%	1,826,521	1,538,831
2026	1,376,019	1,128,299	247,720	18%	328,540	23.0%	1,808,269	1,428,435
2027	1,336,162	1,098,285	237,877	18%	310,820	23.0%	1,755,891	1,351,392
2028	1,342,672	1,105,995	236,677	18%	299,134	23.0%	1,764,447	1,300,583
2029	1,311,526	1,082,328	229,198	17%	292,069	23.0%	1,723,516	1,269,864
2030	1,253,842	1,036,326	217,516	17%	290,579	23.0%	1,647,712	1,263,385
(%)*	-39%	-34%	-59%		51%		-39%	-31%

주: 1) 이영 외(2011)의 장래 인구 추계를 사용함. 통계청의 2005년 장래인구추계(중위값), 2006~2010년 주민등록상 지역별/연령별 인구수를 결합하여서 활용함. 장래인구추계에 최근 주민등록상의 인구 자료를 결합함. 2010년의 주민등록기록상 인구수가 현재 가용한 자료 중 가장 실제적인 자료임을 감안하여 이를 이용하고, 2011년 0세 인구 이후부터는 통계청 2005년 장래인구추계값을 이용함.

2) * 2011년 대비 증감률

자료: 이영(2011.8.6). 장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추정.

-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현상은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2006년) 「장래추계인구 학생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표Ⅱ-4> 장래 추계인구 취학 적령 인구 추이(통계청, 2006)

(단위: 명)

연도	유치원적령인구	초등적령인구	중학적령인구	고등적령인구
1962	5,680,627	4,160,824	1,631,172	1,459,358
1970	5,424,396	5,710,825	2,574,146	2,101,164
1980	4,852,124	5,499,265	2,599,386	2,670,705
1990	3,870,483	4,785,789	2,317,320	2,594,656
2000	3,969,179	4,072,583	1,869,467	2,166,163
2001	3,846,860	4,152,025	1,854,851	2,018,658
2002	3,682,604	4,191,304	1,873,414	1,918,659
2003	3,502,786	4,177,543	1,925,461	1,872,747
2004	3,338,225	4,112,409	1,995,300	1,851,582
2005	3,166,691	4,016,417	2,058,079	1,863,882
2006	2,980,232	3,922,772	2,093,196	1,907,669
2007	2,832,282	3,806,079	2,095,348	1,971,137
2008	2,744,597	3,642,803	2,070,698	2,032,436
2009	2,691,497	3,464,005	2,024,864	2,067,131
2010	2,648,490	3,296,917	1,961,501	2,069,278
2011	2,627,098	3,123,847	1,892,469	2,044,962
2012	2,609,833	2,940,052	1,846,078	1,999,735
2013	2,579,244	2,794,175	1,794,376	1,937,200
2014	2,543,614	2,707,778	1,702,421	1,869,070
2015	2,504,493	2,655,506	1,572,802	1,823,314
2016	2,463,152	2,613,212	1,460,019	1,772,233
2017	2,421,532	2,592,202	1,381,236	1,681,385
2018	2,381,689	2,575,229	1,329,260	1,553,412
2019	2,346,623	2,545,115	1,297,892	1,442,076
2020	2,316,915	2,510,024	1,291,222	1,364,267

주 1) 2006.11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2)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3)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연령별(전국) 추계 인구)



[그림 II-1] 장례 추계 인구 학생수 추이(통계청, 2006)

2. 해외유학생(out) 및 외국유학생(in) 추이

- 국가 간 인적자원 및 지식의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국외 한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 또한 우리 정부·대학의 유치노력, 저렴한 유학경비, 한류 등의 영향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서비스 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2010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60,000명이며, 여전히 나가는 유학생의 숫자가 들어오는 수보다 매우 크지만 2006년 이후 그 비율이 크게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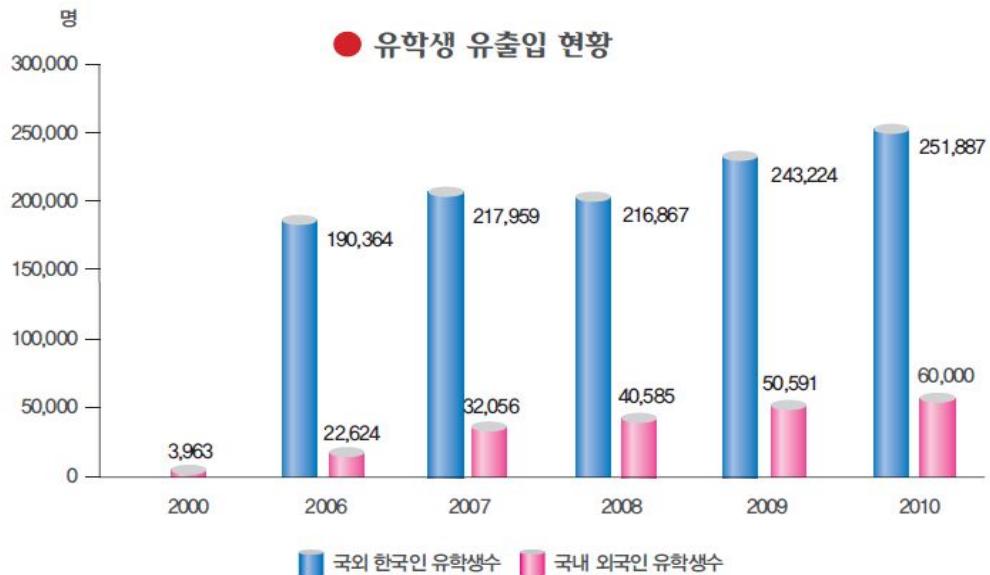
<표 II-5> 연도별 유학생 현황

(단위: 명)

연도	국외 한국인 유학생수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
2000	-	3,963
2006	190,364	22,624
2007	217,959	32,056
2008	216,867	40,585
2009	243,224	50,591
2010	251,887	60,000

주: 2003년 이전의 국외 한국인 유학생수는 6월 기준으로 집계되었고, 2004년 이후부터 4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0: 40). 2010년 간추린 교육통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0: 40). 2010년 간추린 교육통계.

<표 II - 6> 출신국가별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연도	합계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미국	기타
2006	22,624	15,308(67.7)	539(2.4)	963(4.3)	1,267(5.6)	773(3.4)	3,774(16.7)
2007	32,056	23,106(72.1)	903(2.8)	1,496(4.7)	1,250(3.9)	617(1.9)	4,684(14.6)
2008	40,585	30,579(75.3)	1,237(3.0)	1,443(3.6)	1,093(2.7)	754(1.9)	5,479(13.5)
2009	50,591	39,454(78.0)	1,632(3.2)	1,457(2.9)	1,107(2.2)	918(1.8)	6,023(11.9)
2010	60,000	45,944(76.6)	2,196(3.7)	1,667(2.8)	1,350(2.3)	1,182(2.0)	7,661(12.8)
2011	63,653	47,725(75.0)	2,515(4.0)	1,940(3.0)	1,430(2.2)	1,408(2.2)	8,635(13.6)

주 : 1)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 (%) =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수 / 해당년도 학위과정의 총 외국인유학생수 × 100

2)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가 포함됨.

3) 기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미국 이외의 국가를 모두 포함함.

* 상기 <표>는 국내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수가 많은 국가순으로 나열함.

자료: 교과부(2011.8.17). 2011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외국인 유학생수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대비 5,769명 증가함.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수는 총 63,653명으로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의 1.7%를 차지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학위과정에 있는 유학생은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학위과정 중 어학연수생은 20.6%로 '10년에 비해 0.2% 증가.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출신 국가

별로 살펴보면, 중국 47,725명, 몽골 2,515명, 베트남 1,940명, 일본 1,430명 순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차지함.

<표 II-7> 외국인 유학생 추이

(단위: 명, %)

구분 연도	합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소계	전문학사/학사	석사	박사	어학연수생	기타연수생
2006	32,524	22,624(69.6)	15,268(46.9)	5,183(15.9)	2,173(6.7)	7,938(24.4)	1,962(6.0)
2007	49,270	32,056(65.1)	22,171(45.0)	7,247(14.7)	2,638(5.4)	14,184(28.8)	3,030(6.1)
2008	63,928	40,585(63.5)	28,197(44.1)	9,143(14.3)	3,245(5.1)	19,521(30.5)	3,822(6.0)
2009	76,082	50,591(66.5)	36,525(48.0)	10,697(14.1)	3,369(4.4)	20,335(26.7)	5,156(6.8)
2010	83,768	60,000(71.6)	43,709(52.2)	12,480(14.9)	3,811(4.5)	17,064(20.4)	6,704(8.0)
2011	89,537	63,653(71.1)	44,641(49.9)	14,516(16.2)	4,496(5.0)	18,424(20.6)	7,460(8.3)

주: 1) 외국인유학생 비율 () = 해당 과정 유학생수 /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 × 100
 2)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에는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됨.

*국제통계에서는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본통계와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수 및 유학생 비율이 다르게 나타남.(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제외).

자료: 교과부(2011.8.17). 2011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3. 대학전공-직업 연계

- 대학의 경우 가장 높은 전공일치도를 보인 계열은 의약계열(96.5%)로 취업률(92.0%)과 정규직 취업률(81.0%)도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남. 대학 졸업생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곳에 취업하는 비율인 '전공일치 취업률'은 전체 대학 평균이 37.67%에 불과함. 학생 절반 이상이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임. 특히, 인문계열(29.9%), 사회계열(39.3%)은 낮은 편임.

<표 II-8> 대학의 계열별 전공일치도(2008)

(단위: 명, %)

순위	계열명	졸업자수	전공일치도	취업률	전공일치 취업률	정규직취업률	진학률
1	의약계열	13,162	96.5	92.0	88.8	81.0	4.1
2	예체능계열	31,566	80.9	76.5	61.9	38.9	11.3

3	교육계열	17,007	79.4	60.9	48.4	30.0	4.1
4	공학계열	67,535	78.4	71.6	56.1	60.6	11.9
5	자연계열	35,695	61.1	66.7	40.8	42.2	18.0
6	사회계열	79,221	60.9	64.6	39.3	46.8	4.3
7	인문계열	38,484	46.4	64.4	29.9	37.4	11.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8: 70). 취업통계분석자료집 일부 재구성.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10년 8월 및 '11년 2월) 559,000명 중 취업자는 292,025명(직장건강보험가입자 291,271명, 해외취업자 754명)으로 취업률은 58.6%로 '10년 55.0% 대비 3.6%p 상승함. 전문대학 및 대학은 '10년 대비 각각 5.1%p, 2.6%p 상승함. '11년에 조사대상으로 추가된 기능대학의 취업률은 85.5%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 - 9> 학제별 취업통계 증감현황

(단위 : 명, %, %p)

구분	졸업자	2011년			2010년			취업률 증감	
		취업자			취업률	졸업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계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해외취업자					
고등교육기관	559,000	292,025	291,271	754	58.6	539,996	267,003	55.0	3.6
전문대학	188,216	105,589	105,272	317	60.7	190,033	97,717	55.6	5.1
대학	293,967	140,201	139,827	374	54.5	280,341	129,130	51.9	2.6
교육대학	5,574	2,988	2,988	0	55.1	5,956	3,057	52.6	2.5
산업대학	21,339	12,848	12,822	26	65.3	22,236	12,960	62.4	2.9
각종학교	860	240	240	0	37.3	294	85	31.7	5.6
기능대학	6,329	4,999	4,992	7	85.5	-	-	-	-
일반대학원	42,715	25,160	25,130	30	72.1	41,136	24,054	70.7	1.4

- 주: 1) 조사기준일: 해당년도 6월 1일
 2) 기능대학은 2011년부터 조사에 포함됨
 3) 졸업자 : 전년도 8월 졸업자 및 당해년도 2월 졸업자
 4)'11년 취업률 = (직장건강보험가입자+해외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100
 5)'10년 취업률 = 직장건강보험가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100

자료: 교과부(2011.8.24). 대학정보공시, 2011년 대학 계열별 취업률 공개 보도자료.

- 7대 대계열별로 취업률 증감현황을 보면, 전문대학에서는 예체능계열이 '11년 43.1%로 '10년 35.3% 대비 7.8%p가 증가하였고, 대학과 일반대학원에서는 교육계열이 각각 4.4%p, 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진학률 증감현황을 보면, 전문대학은 사회계열과 교육계열, 예체능계열이 '10년 대비 각각 0.3%p, 0.2%p, 0.1%p 증가하였고, 대학은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이 '10년 대비 각각 0.5%p, 0.1%p 증가함.

<표Ⅱ-10> 대계열별 취업현황 및 졸업현황

(단위 : 명, %, %p)

구 분	2011년				2010년				전년대비 증감	
	취업률	진학률	취업자	진학자	취업률	진학률	취업자	진학자	취업률	진학률
전문대학	60.7	3.6	105,589	6,838	55.6	3.6	97,717	6,929	5.1	0
인문계열	51.1	7.5	3,437	577	48.0	7.5	3,455	618	3.1	0
사회계열	59.7	4.0	31,559	2,346	57.0	3.7	31,543	2,241	2.7	0.3
교육계열	78.3	1.9	7,100	181	74.1	1.7	6,637	155	4.2	0.2
공학계열	66.7	2.8	26,378	1,181	60.6	3.3	23,439	1,368	6.1	△0.5
자연계열	54.5	3.2	6,828	433	48.6	3.4	5,931	438	5.9	△0.2
의약계열	72.6	1.7	17,979	441	68.1	1.7	16,297	430	4.5	0
예체능계열	43.1	5.3	12,308	1,679	35.3	5.2	10,415	1,679	7.8	0.1
대학	54.5	8.4	140,201	24,575	51.9	8.9	129,130	24,879	2.6	△0.5
인문계열	46.3	9.1	14,444	3,437	43.6	9.9	13,904	3,648	2.7	△0.8
사회계열	53.5	3.2	42,426	2,780	51.9	3.5	38,956	2,829	1.6	△0.3
교육계열	43.5	4.6	6,549	762	39.1	4.1	6,147	689	4.4	0.5
공학계열	66.9	11.3	40,599	7,869	63.8	12.3	36,293	8,093	3.1	△1.0
자연계열	51.3	18.0	14,775	6,438	49.9	18.2	14,200	6,411	1.4	△0.2
의약계열	76.7	4.2	10,593	616	73.9	4.1	9,529	563	2.8	0.1
예체능계열	37.8	8.3	10,815	2,673	36.3	8.5	10,101	2,646	1.5	△0.2
일반대학원	72.1	7.8	25,160	3,346	70.7	8.5	24,054	3,479	1.4	△0.7
인문계열	44.5	11.6	1,102	458	43.3	13.8	1,268	546	1.2	△2.2
사회계열	70.6	5.8	3,683	400	68.4	6.4	3,389	423	2.2	△0.6
교육계열	72.3	4.5	1,374	98	68.6	5.7	1,212	112	3.7	△1.2
공학계열	82.5	9.1	9,159	1,210	82.3	9.5	8,402	1,173	0.2	△0.4
자연계열	69.6	10.4	4,379	802	69.2	11.4	4,247	858	0.4	△1.0
의약계열	86.7	3.9	4,539	220	86.9	3.7	4,550	207	△0.2	0.2
예체능계열	34.3	5.2	924	158	35.5	5.1	986	160	△1.2	0.1

자료: 교과부(2011.8.24). 대학정보공시, 2011년 대학 계열별 취업률 공개 보도자료.

- 취업률이 높은 전공(소계열)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10년에 1위였던 농수산은 '11년에 10위권 밖으로, '10년에 2위였던 재활은 '11년에 5위로, '10년에 3위였던 금속은 '11년에 1위로 순위 변동이 있음. 대학은 1위 의학, 2위 치의학, 3위 한의학으로써 전년도와 순위변동이 없음. 일반대학원은 '10년에 1위였던 의학은 '11년에 2위로, '10년에 2위였던 한의학은 '11년에 5위로, '10년에 3위였던 전기공학은 '11년에 8위로 순위 변동이 있음.

<표 II - 11> 취업률 상위 전공(소계열)

(단위: 명, %)

학제	순위	학과명	2011년			학과명	2010년		
			졸업자	취업률	진학률		졸업자	취업률	진학률
전문대	1	금속	178	81.1	1.1	농수산	333	77.1	2.4
	2	유아교육	9,054	78.8	1.7	재활	3,509	75.3	2.8
	3	간호	9,135	78.0	1.0	금속	113	74.8	3.5
	4	기전공학	1,463	76.9	2.0	유아교육	9,068	74.1	1.6
	5	재활	3,594	76.4	2.8	특수교육	265	73.9	3.4
	6	비서	1,004	76.1	1.2	간호	8,850	73.6	1.2
	7	전자	3,003	73.9	2.7	비서	1,105	73.1	1.4
	8	기계	5,611	72.3	2.1	기전공학	1,285	70.4	2.1
대학	1	의학	2,535	92.1	1.0	의학	2,688	94.1	0.4
	2	치의학	573	86.9	2.1	치의학	555	84.5	1.1
	3	한의학	796	77.4	2.5	한의학	800	77.0	2.1
	4	해양공학	2,100	75.9	7.0	약학	1,513	75.8	17.8
	5	기계공학	8,142	75.9	11.3	지상교통공학	146	75.4	13.0
	6	유아교육학	2,551	74.7	1.8	기전공학	499	73.6	13.0
	7	약학	1,604	74.1	18.0	재활학	1,532	72.8	4.2
	8	기전공학	625	74.0	12.6	기계공학	7,541	70.9	12.9
일반대학원	1	응용소프트웨어공학	146	91.2	5.5	의학	3,070	91.1	3.0
	2	의학	3,107	90.4	2.6	한의학	581	89.5	2.6
	3	치의학	566	88.1	4.1	전기공학	578	87.2	9.7
	4	해양공학	280	86.8	12.1	토목공학	998	87.1	3.8
	5	한의학	440	86.7	4.3	치의학	615	87.1	1.3
	6	간호학	417	86.2	4.3	기전공학	252	85.6	19.8
	7	전자공학	1,814	86.0	11.5	정보·통신공학	945	85.4	8.1
	8	전기공학	634	85.7	9.3	도시공학	186	85.2	1.1

* 졸업자가 100명 이상인 전공에 한함

자료: 교과부(2011.8.24). 대학정보공시, 2011년 대학 계열별 취업률 공개 보도자료.

4.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상과 실태 진단

1)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

- 2011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72.5%로 나타나 2008년 83.8%, 2009년 81.9%, 2010년 79.0% 진학률 보다 감소추세로 나타남.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문계고 진학률 추이가 일반계고 진학률의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남.

<표 II-12> 상급학교로의 진학률 현황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중학교→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고등교육		
	진학률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졸업자	진학자
1970	66.1	799,969	528,652	70.1	312,814	219,142	26.9	145,062	39,073
1980	95.8	874,329	837,204	84.5	741,618	626,520	27.2	467,388	127,326
1990	99.8	763,694	761,989	95.7	835,699	799,549	33.2	761,922	252,831
2000	99.9	614,759	614,494	99.6	631,398	628,644	68.0	764,712	519,811
2005	99.9	707,126	707,013	99.7	616,499	614,900	82.1	569,272	467,508
2006	99.9	691,774	691,657	99.8	612,936	611,496	82.1	568,055	466,248
2007	99.9	682,911	682,685	99.6	677,547	674,922	82.8	571,357	472,965
2008	99.9	680,804	680,648	99.7	690,438	688,092	83.8	581,921	487,509
2009	99.9	657,402	657,293	99.6	674,864	672,393	81.9	576,298	472,243
2010	99.9	647,572	647,458	99.7	668,575	666,509	79.0	633,539	500,282
2011	99.9	617,533	617,406	99.7	668,224	666,109	72.5	648,468	469,961

주 : 1)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100

2)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4)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됨(2005년도부터 국외 진학자가 포함됨).

자료: 교과부(2011.8.17). 2011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 고등교육기관 학교수 현황

-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과 더불어 한국 고등교육기관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2011년 고등교육기관 학교수는 총 434개교로 일반대학은 183개교이며 학

제변경과 신설학교 추가로 전년 대비 4개교 증가, 전문대학은 147개교로 전년 대비 2 개교 증가함.

<표 II-13>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 현황

(단위: 개교)

구분 연도	고등교육 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타
1970	168	71	16	-	-	-	65	16
1980	358	85	11	-	-	121	128	13
1990	563	107	11	6	-	298	117	24
2000	1,184	161	11	19	17	812	158	6
2001	374	162	11	19	18	887	158	6
2002	376	163	11	19	18	927	159	6
2003	405	169	11	19	25	985	158	23
2004	411	171	11	18	28	1,002	158	25
2005	419	173	11	18	34	1,017	158	25
2006	412	175	11	14	36	1,015	152	24
2007	408	175	11	14	36	1,006	148	24
2008	405	174	10	13	37	1,018	147	24
2009	407	177	10	12	38	1,077	146	24
2010	411	179	10	11	40	1,098	145	26
2011	434	183	10	9	41	1,126	147	44

주: 1)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2) 폐교는 학교수에서 제외됨.

3) 기타에는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4) 대학원은 대학부설대학원으로 고등교육기관 학교수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교과부(2011.8.17). 2011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3)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현황

- 고등교육기관 재적 총 학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대 학생 수의 감소상태를 나타냄.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수는 3,735,707명으로 '06년 이후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대비 91,549명이 증가함. 일반대학과 대학원의 재적학생수는 2,065,451명, 329,934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에 비해 각각 36,610명, 13,301명이 증가함.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전문대학의 재적 학생수는 금년 776,738명으로 '10년 대비 9,651명 증가함(교과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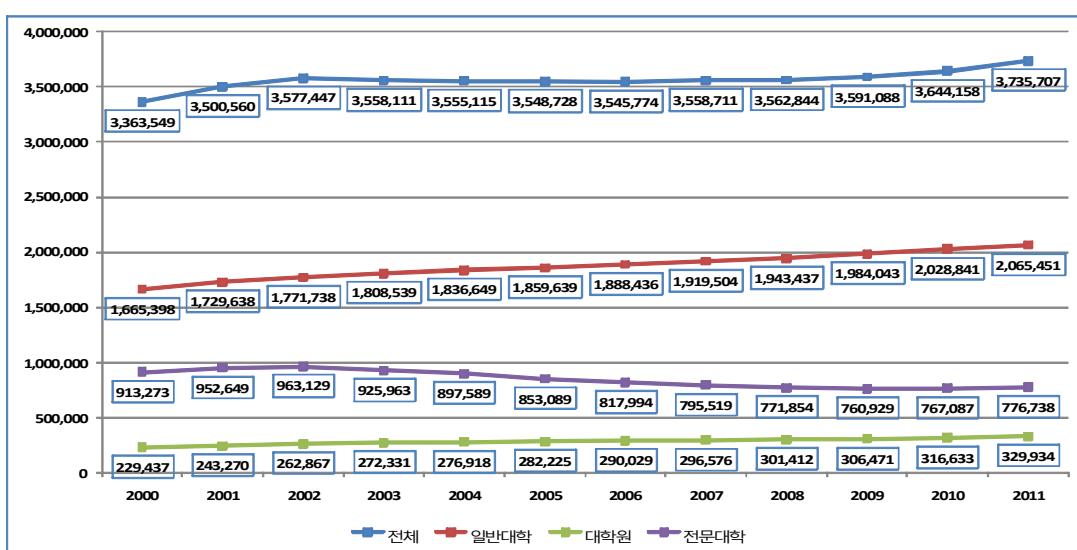
<표 II-14>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타
1970	201,436	146,414	12,190	-	6,640	33,483	2,709
1980	647,505	402,979	9,425	-	33,939	165,051	36,111
1990	1,691,681	1,040,166	15,960	51,970	87,163	323,825	172,597
2000	3,363,549	1,665,398	20,907	170,622	229,437	913,273	363,912
2001	3,500,560	1,729,638	21,418	180,068	243,270	952,649	373,517
2002	3,577,447	1,771,738	23,259	187,040	262,867	963,129	369,414
2003	3,558,111	1,808,539	23,552	191,455	272,331	925,963	336,271
2004	3,555,115	1,836,649	23,335	189,035	276,918	897,589	331,589
2005	3,548,728	1,859,639	25,141	188,753	282,225	853,089	339,881
2006	3,545,774	1,888,436	25,881	180,435	290,029	817,994	342,999
2007	3,558,711	1,919,504	25,834	169,862	296,576	795,519	351,416
2008	3,562,844	1,943,437	24,116	161,876	301,412	771,854	360,149
2009	3,591,088	1,984,043	22,879	143,368	306,471	760,929	373,398
2010	3,644,158	2,028,841	21,618	133,736	316,633	767,087	376,243
2011	3,735,707	2,065,451	20,241	122,916	329,934	776,738	420,427

- 주:
- 1)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 2) 폐교는 학교수에서 제외되며, 대학원에는 대학부설 대학원의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이 포함됨.
 - 3) 기타에는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 4) 재적학생수 : 재학생 총인원 + 휴학생 총인원

자료: 교과부(2011.8.17). 2011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그림 II-2] 일반대학 · 대학원 · 전문대학 재적학생수 추이

4) 고등교육기관 교원수 현황

- 2011년 고등교육기관 교원수는 82,18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대비 4,487명이 증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63,899명, 12,891명으로, '10년에 비해 각각 2,879명, 361명 증가하였으나, 산업대학은 1,946명으로 '10년에 비해 72명 감소 함. 고등교육기관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대 재적학생수의 감소, 교원 수의 증가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어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교육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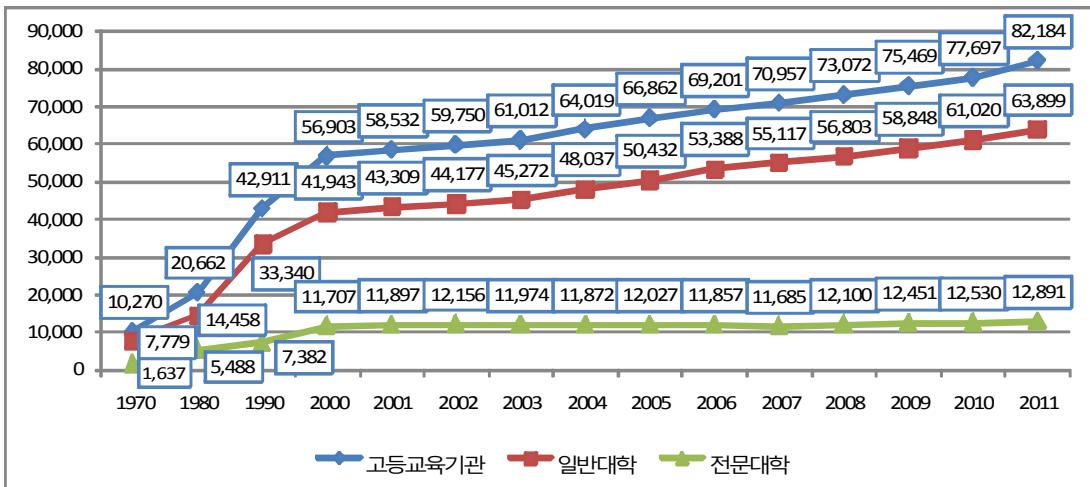
<표 II-15> 고등교육기관 교원 수 현황

(단위: 명)

연도 \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타
1970	10,270	7,779	660	-	1,637	194
1980	20,662	14,458	564	-	5,488	152
1990	42,911	33,340	694	855	7,382	640
2000	56,903	41,943	698	2,390	11,707	165
2001	58,532	43,309	710	2,456	11,897	160
2002	59,750	44,177	721	2,543	12,156	153
2003	61,012	45,272	740	2,655	11,974	371
2004	64,019	48,037	756	2,588	11,872	766
2005	66,862	50,432	798	2,720	12,027	885
2006	69,201	53,388	857	2,175	11,857	924
2007	70,957	55,117	855	2,252	11,685	1,048
2008	73,072	56,803	812	2,201	12,100	1,156
2009	75,469	58,848	805	2,144	12,451	1,221
2010	77,697	61,020	813	2,018	12,530	1,316
2011	82,184	63,899	821	1,946	12,891	2,627

- 주 : 1) 교원수는 총(학)장 및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포함됨. 단, 국공립대학은 전임교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금교수(520명)가 포함됨. ※ '기금교수'라 함은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총장이 교수로 임명한 국내외 인사를 말함
 2)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3)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은 학부와 대학부설 대학원의 교원이 포함됨.
 4) 기타에는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대학원대학이 포함됨.

자료: 교과부(2011.8.17). 2011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그림 II-3] 고등교육기관 교원수 추이

- 2011년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는 31.2명으로 '10년 대비 1.5명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어 대학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므로(OECD 평균: 15.3명, '07년도, 고등교육전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표 II-16> 전임 교원 1인당 재학생수

(단위: 명)

구분 연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2000	57.9	32.2	37.0	48.9	51.2
2001	58.5	32.3	38.1	48.7	51.5
2002	58.4	32.3	40.9	47.8	49.7
2003	56.4	32.6	40.2	46.5	47.4
2004	54.9	31.0	38.9	46.8	46.5
2005	52.5	29.5	39.2	44.4	44.1
2006	35.3	28.6	36.7	53.0	44.5
2007	34.9	28.3	36.1	49.4	44.5
2008	33.9	27.7	36.6	48.3	41.6
2009	33.0	27.3	35.6	45.3	39.3
2010	32.7	27.0	34.7	45.1	39.4
2011	31.2	26.7	33.2	43.6	39.1

- 주 : 1)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 = 재학생수 / 전임교원수(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2)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시내대학, 전공대학, 가능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대학원대학이 포함됨.
 3)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의 교원 및 학생 수는 학부 및 대학부설 대학원의 교원 및 학생수가 포함됨.

자료: 교과부(2011.8.17). 2011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5) IMD 교육경쟁력 주요 국가별 순위

- 2011년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교육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교육경쟁력은 29위로 2010년 35위에 비해 6단계나 상승하였음. 고등교육 이수율은 상위권을 점하고 있어 미래 한국 고등교육에서 강점이나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이 약점임(기획재정부, 2011).

<표 II-17> IMD 교육경쟁력 주요 국가별 순위

(단위: 순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핀란드	1	1	1	6	8	2	2	3
캐나다	2	2	6	8	4	8	7	7
스웨덴	5	5	4	5	3	3	5	4
오스트리아	13	10	10	10	10	11	10	14
미국	11	11	11	13	12	19	21	18
아일랜드	10	15	14	15	15	14	16	15
프랑스	15	20	22	20	16	16	15	22
홍콩	37	26	24	25	24	29	30	28
일본	25	28	23	19	22	26	29	34
체코	38	30	31	35	33	25	26	32
영국	40	36	32	27	20	15	19	17
한국	44	40	42	29	35	36	35	29
멕시코	56	56	55	50	50	48	52	54
인도네시아	60	60	61	51	49	55	55	53

자료: e나라지표(2011). IMD 교육 경쟁력 순위(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26)

6)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체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낮고,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중등교육 30%로 OECD 평균(26%)보다 4%p 높지만, 초등교육(20%)과 고등교육(34%)은 OECD 평균보다 각각 1%p, 7%p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8>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8)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구 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한 국	5,420	20	7,931	30	9,081	34
OECD평균	7,153	21	8,972	26	13,717	41

주: 1) 2008년도 PPP 환율은 \$1당 785.72원이며, 1인당 GDP는 US\$ 26,877임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경상비+자본비/학생수) / PPP

3)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학생 1인당 공교육비/국민 1인당 GDP)*100

자료: 교과부(2011.9.9).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7)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고등교육단계 정부지출 공교육비

-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정부지출 공교육비 중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85.2%로 OECD 평균(79.0%)보다 6.2%p 높으나, 민간에 대한 정부보조금 비율은 14.8%로 OECD 평균(21.0%)보다 6.2%p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9>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 유형(2008)

(단위 : %)

구 분	교육기관 직접지출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GDP대비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소계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기타 민간단체에 대한 이전지출		
			장학금/기타 가계지원	학자금 대출		
한 국	85.2	14.8	6.0	5.4	3.3	0.10
OECD평균	79.0	21.0	11.4	8.9	1.8	0.28

주: 기타 민간이전 비용은 정부출연 교육연구기관 사업비, 산학협력 프로그램 보조금 등이 포함됨.

자료: 교과부(2011.9.9).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III. 현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

- 이명박정부는 대학교육의 자율화를 기본으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놓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여기서는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 학생선발보다 재학생들의 교육을 잘 시키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역량있는 우수 외국연구자 영입을 통해 국내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꾀하는 WCU(World Class University),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및 대표브랜드 사업 및 이를 잇는 WCC(World Class College)가 있고, 대학생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사업인 BK21(Brain Korea 21), 대학원 졸업 후 우수연구자를 지원하는 GPS(Global Ph.D. Fellowship) 사업 등이 있음
- 또한 학생수 급감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학 구조조정 및 개혁과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인 국립대학 법인화 사업 등이 있음. 이명박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사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역량있고 우수한 대학, 대학원,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고등교육정책은 주로 재정지원 정책으로 그 대상은 주로 학부생, 대학원생 및 교수와 연구자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고, 대학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학부와 대학원, 재학생수 규모별 등으로 나누어짐
- 아래에서는 10개 정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정책의 내용, 정책의 경과 및 결과를 중심으로 이명박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간략히 안내함

1.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

- 2008년부터 시작된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부교육 선도 모델의 창출·확산을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으로 구분
- 2011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는 선정·지원신청 가능 대학 185개교 중 165개교(89.2%)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교육지표 포물려와 재원 배분 포물려를 적용하여 80개 대학(신청대학의 48.5%)을 선정하여, 1개교에 평균 29.6억 원을 지원
-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발전의 핵심지표로 구성된 포물려에 의해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자율적 재정집행을 보장하며, 2011년 지원총액은 2,406.6억 원(기본지원금 2,366.6억 + 성과평가 인센티브 40억) 규모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 80개 이내 대학을 지원('10년 예산(수도권 675억, 지방 1,912억) → '11년 예산(수도권 645억, 지방 1,761.6억))

- 지원 대학 선정은 대학별 공시정보인 객관적·정량적 지표를 사전에 구성된 공식(formula)에 적용하여 결정되며, 지원대학 순위는 대학이 창출한 성과 및 교육여건 관련 지표로 구성된 공식(교육지표 포뮬러)에 의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결정
- 대학별 지원액은 교육지표 포뮬러 획득 점수 및 대학의 재학생 규모 등을 반영한 공식(재원배분 포뮬러)에 의해 결정

1) 정책의 목적과 기대효과

- 2011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됨(2011.2.16). 주 목적은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함

2) 정책 내용

- 대학의 교육역량 및 성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전에 구성된 공식(formula)을 적용하여 교육 역량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고, 해당 대학의 성과와 재학생 규모 등을 고려, 교육비용을 지원
- 대학은 지원받은 재원을 스스로의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집행(Block Grant)

3) 정책의 경과

-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되, 수도권과 지방, 규모별(재학생 1만명 이상, 5천명~1만명, 5천명 미만), 목적별(산업대, 교육대 등), 공시된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원함. 순수 종교지도자 양성학과를 제외함.
- 별도의 선정 심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된 공식(formula)에 의하여 지원함. 대학의 교육역량 및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된 「교육지표 포뮬러」 획득 점수에 의하여 지원 대학의 순위를 결정

※ 교육지표 포뮬러 : ①취업률, ②재학생 충원율, ③국제화, ④전임교원 확보율, ⑤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⑥장학금 지급률, ⑦학생 1인당 교육비, ⑧등록금 인상 수준, ⑨대입전형

<표 III-1> 주요 사항 신구 대비표

항목		2010년도	2011년도
예산	교육역량강화 지원	2,600억 (수도권680, 지방1,920)	2,420억 (수도권650, 지방1,770)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300억 (수도권120, 지방180)	600억 (수도권210, 지방390)
교육 지표 포물 러	취업률 (산식변경)	건보DB 검증 취업자 수 / 취업 대상자	$0.8 \times (6\text{월} \cdot 12\text{월 평균취업률} + 해외취업률) + 0.2 \times \text{유지취업률}$
	등록금 인상수준 (산식변경)	총산식 $100 - (0.2 \times '08\text{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0.8 \times '09\text{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100 - (0.4 \times '10\text{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0.6 \times '11\text{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등록금 인상지 수	$0.5 \times \text{전년대비 등록금 인상액 (T점수)} + 0.5 \times \text{전년대비 등록금 인상률 (T점수)}$	$0.4 \times \text{등록금 절대수준 (T점수)} + 0.6 \times \text{전년대비 등록금 인상률 (T점수 및 절대점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세부지표 신규)	$0.5 \times \text{학점관리 현황 (T점수)} + 0.2 \times \text{소규모 강좌 비율 (T점수)} + 0.3 \times \text{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T점수)}$	$0.5 \times \text{학점관리 현황 (T점수)} + 0.2 \times \text{소규모 강좌 비율 (T점수)} + 0.15 \times \text{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T점수)} + 0.15 \times \text{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T점수)}$
	대입전형 지표 (신규)	-	$0.5 \times \text{대입전형 간소화} + 0.5 \times \text{대입전형 공교육 연계}$
참여 자격	본·분교 분리지원	일괄 통합지원	모든 지표가 분리 산출 가능할 경우, 신청대학에 한해 분리지원
	편제 미완성 대학	참여 불가	참여가능 (단, 취업률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지표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참여 불가	참여가능 (단, 순수 종교지도자 양성학과를 제외한 일반학과의 재학생이 과반수인 대학에 한함)
	외국인 유학생 관리부설 미개선 대학 및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	참여불가
포물러지표 점검		사후점검 실시	가선정 후 사전점검 실시 및 사업집행 중 사후점검 지속실시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집행불가항목 열거	합부수준 교육역량 강화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자율집행 허용

2.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선도대학)은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정한다는 원칙하에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
- ACE 선도대학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대학 중에서 선정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신청대학 98개 중에서 수도권 대규모(재학생 1만명 이하) 1개교·중·소규모(재학생 1만명 미만) 2개교, 지방 대규모 3개교, 중·소규모 5개교로 총 11개교*를 선정
- ACE 선도대학은 2010년 11개교에 이어 총 22개교가 되며, 교당 평균 27억 정도 지원('10년 예산(수도권 119억, 지방 178억) → '11년 예산(수도권 209억, 지방 388억))

1) 정책의 목적과 기대효과

-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출·확산하기 위하여,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특성화를 장려하고, 교육과정의 개편은 물론, 학사제도, 교수평가 제도 등 교육 지원 시스템의 종체적 개선을 병행하여 21세기형 학부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즉 학생 선발부터 교육과 졸업의 전 과정을 종체적·체계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함.
- 기존의 신입생 선발 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로, 학부교육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다양화에 기여하기 위함.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의 교육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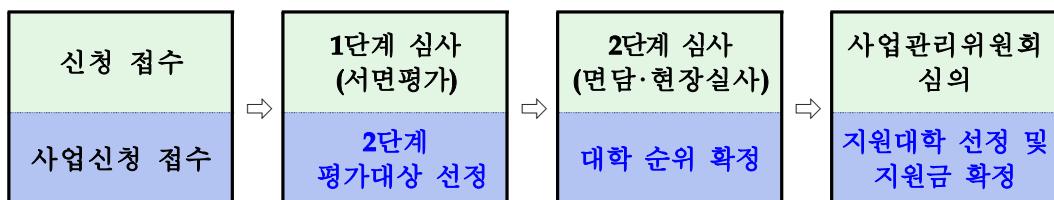
2) 정책의 내용

- ACE 선도대학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대학 중에서 선정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신청대학 98개 중에서 수도권 대규모(재학생 1만명 이하) 1개교·중·소규모(재학생 1만명 미만) 2개교, 지방 대규모 3개교, 중·소규모 5개교로 총 11개교*를 선정함.
- 사업기간은 '10년 ~ '13년(4년, 2년+2년)이고, 2년 지원 후, 중간 평가 결과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표 III-2>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유형 구분

구 분	대규모(1만명 이상)	중·소규모(1만명 미만)	합 계
수도권	1개교	3개교	4개교
지 방	2개교	5개교	7개교
합 계	3개교	8개교	11개교

- 지원대학 선정
 - (평가 내용)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교육의 내용)과 교육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교육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
 - (평가 절차) 학부교육 선진화 역량 및 계획 평가(선정평가 위원회)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학별 지원금 최종 확정



<표 III-3>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주요 평가요소(예시)

평가항목	평가 요소		
학부교육 선진화 목표 및 계획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학부교육 선도모델의 독창성, 수월성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과의 연계성	
		수립 과정의 타당성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 구성 및 예산 배분의 적절성	
	2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자체성과지표의 적절성	
		- 학생 핵심역량 향상에 대한 측정 및 평가 등	
	3 확산 및 지속 가능성	성과관리 및 지원체계(자체평가, 모니터링)의 적절성	
		타대학으로의 공유, 확산 적용 가능성	
		사업 종료후 사업성과의 지속 가능성	
특성화된 교육 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 및 계획)	1 교양 교육과정	창의력, 팀워크, 인성, 의사소통, 외국어 능력, 예술적 소양 등 핵심소양 교육과정 구성	
		교양교육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교원 운영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의 유연성	
	2 전공 교육과정	특성화 전략(융·복합, 국제화, 산학협력, 지역연계 등)에 부합하는 전공교육과정 구성	
		- 융복합 전공 교육과정 개설	
		- 전공과목 영어강의 확대, 외국인 교수 담당 강의 확대	
		- 산업체 경력 교원 확대, 인턴십·문제해결형 교육과정 운영	
	3 비교과 교육과정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개편의 유연성	
		정규 교과 이외의 학생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학습동아리 및 스터디 그룹,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취 업지원 프로그램, 리더십 캠프, Freshman Seminar 등	
		교원 및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현황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	1 학생 선발	대학특성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	
		입학전형 현황, 선진 입시전형 우수사례 등	
	2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수요자 중심의 학사조직 (교수중심 경직적 학사조직 혁신, 학과간 경계 완화 등)	
		전공선택 유연성 보장	
		학생 지도 및 상담(전담교수제 등)	
	3 교육의 질관리(평가, 환류) 체계 구축	교수	교육(강의)평가의 운영 및 활용
			강의자료 및 강의의 공개
			교수업적평가의 교육(강의) 평가 반영
			교육 및 강의평가를 통한 개선 환류 체계
		학생	학업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성적평가의 신뢰성, 엄정성, 공신력 제고 노력
			졸업생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졸업 인증제 등)
	4 교수-학습 지원	교수-학습지원 조직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수-학습지원 시설 구축 현황 (교수법 향상 지원시설, 첨단 교육 기자재, 기숙사 등)	

3) 정책의 결과 및 기대효과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 지원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함. 수도권 대학 중에는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등 4개교가, 지방 대학 중에는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세명대, 신라대, 울산대, 한동대, 한림대 등 7 개교가 선정됨. 선정된 11개 대학에는 매년 약 30억원씩 4년간 약 12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특징임. 선정된 11개 대학은 성과지표 달성 여부와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 등에 대한 연차·중간·종합 평가를 받게 되는데, 사업 수행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연차평가를 통해 연도별 지원액이 차등 지원되며, 2년 지원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 대비 사업 수행 실적이 미흡한 대학은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음.
- 또한, 교과부는 선정대학의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대학 및 한국연구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선도대학간 협의체 구성 및 정보교환, 선진화 사례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워크숍·심포지엄 등을 통해 학부교육 선도모델이 타 대학으로 적극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임.
- 교과부는 본 사업이 대학 사회 및 개별 대학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을 통한 성과의 체계적 분석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성과분석 모형 개발 및 거시적·미시적 성과분석연구를 실시하는 등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는 것은 물론, 사업의 관리, 운영체계 등의 지속적 보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 의견도 수렴할 예정임.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는 첫째, 이 사업을 통해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대학의 주된 관심이었던 학생을 “잘 뽑는 경쟁”이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되고, 교육보다는 연구에 더욱 적극적이던 대학과 교수 사회가 학생 교육에 더 큰 관심과 투자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둘째, 동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각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학부교육 선진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선도적 학부교육 모델들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어, 학부교육 전체의 질과 경쟁력이 함께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무엇보다 각 대학들이 다양한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통해, 무엇을(교육의 내용) 어떻게(교육의 방법)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체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임. 셋째, 학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소규모 대학들이 다수 선정됨으로써, 일류대학 따라하기식의 대학 특성화가 아니라, 각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교육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함으로써,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출처: 교과부 보도자료).

3.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및 대표브랜드 사업

- 2008년부터 시작된 전문대학 교육역량 우수대학은 146개 전문대학 중 교육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전문대학 80개(수도권 26개교, 비수도권 54개교)를 선정하고, 대학당 평균 약 32억원의 예산을 지원
- 2011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총 2,600억원 규모로, 지표가 우수한 80개 전문대학을 「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 자율 재정집행액 1,812억원,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에 776억원을 각각 지원
- 「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의 선정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산학협력수익률 등 전문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나타내는 8개 핵심지표로 지원대학을 선정

1) 정책의 목적과 기대효과

- 우수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정책의 내용

-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우수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대학을 선정 지원함.
- 대학의 교육역량 및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식(formula)을 적용하여 교육성과가 우수한 전문대학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의 학생 규모 및 성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함.
- 대학은 지원받은 재원을 스스로의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집행(Block Grant)
- 대학이 강점과 역량을 가진 비교우위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대학별 대표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도록 유도함. 「교육역량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자동으로 「대학 대표브랜드사업」 지원 대상이며, 평가를 통해 지원 금액만 차등 지원함.
- 교육역량 우수대학 지원금은 1,812억원이고,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지원금(776억원), 사업 관리운영비(12억원)를 포함 총 2600억원임. 2008년의 경우 대학 지원금은 496.5억원이었음.
- 교육역량 우수대학은 별도의 선정 심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구성된 객관적 공식(formula)에 의하여 지원함. 대학의 교육역량 및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된 「성과 포뮬러」에 의하여 지원 대학의 순위를 결정함. 학교 규모 및 성과 수준 등과 연동된 「재원 배분 포뮬러」에 의하여 대학별 지원금액을 산정함. 지원하는 대학의 수는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결정함.

4.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 고등교육법의 등록금 인상 제한(2010년 1월 22일 고등교육법 제11조의 전문 개정)
 - 제11조 제4항: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을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을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제3항: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6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9월 8일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 2천5백억원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
- 기준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
 - 1조5천억원 중 절반 수준인 7,500억원이 이러한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될 전망
- 1조5천억원 중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며, 학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준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
 - 이 재원은 5%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계획
 - 대학의 자구노력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7,500억원을 매칭하여 대학의 노력을 뒷받침
-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
 -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

1) 정책의 목적과 기대효과

- 경제침체, 청년실업 등으로 인한 가계의 학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여 학업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기 위함.

2) 정책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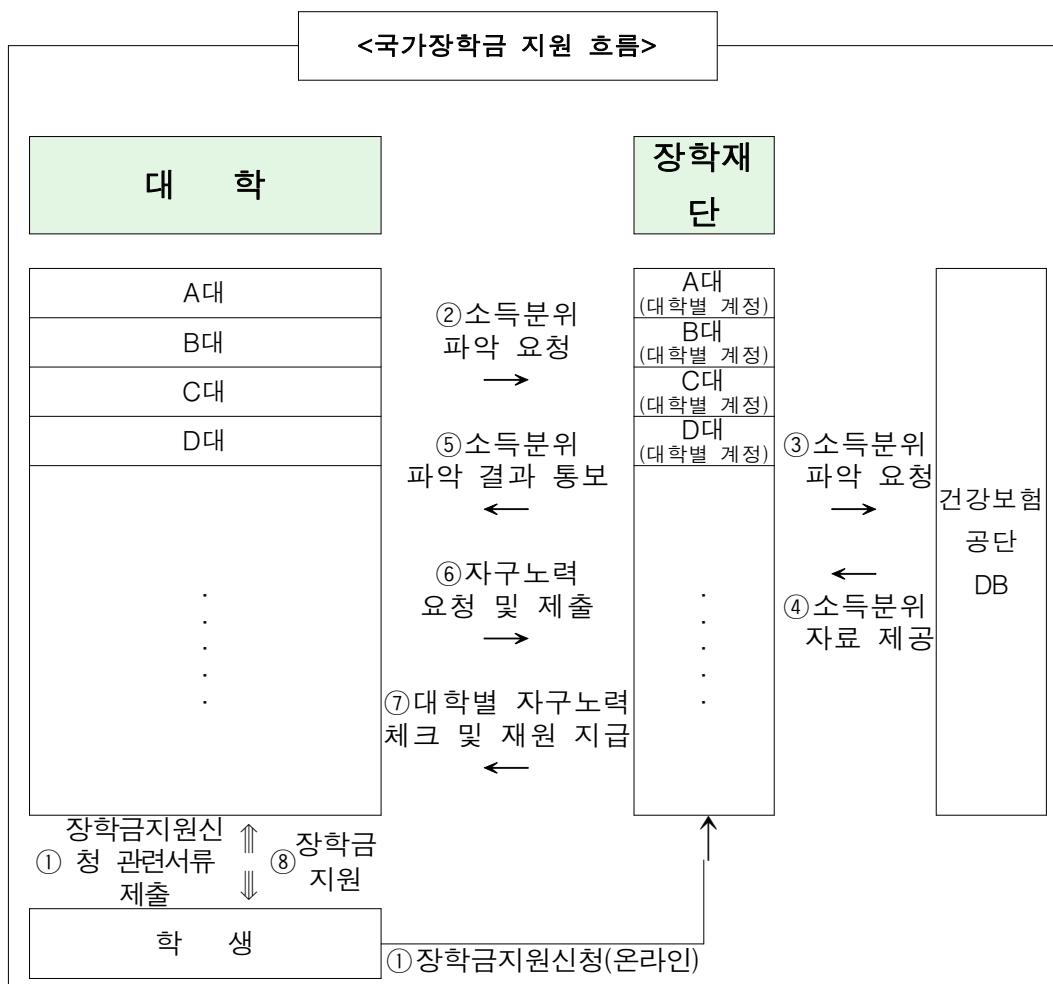
- ‘11.9.8일 발표된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의 내용은 1.5조원의 국가장학금과 0.75조원 이상의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전체학생 평균 5% 수준의 명목등록금을 인하하고, 7분위 이하 학생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기대함.

<참고> 소요재원 및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단위 : 조원)

구 분	(정부) 국가장학금	(대학) 등록금 동결· 인하 포함 자구노력	총 부담완화 효과
소요재원(조원)	1.5	0.75	2.25
부담완화	16.9% ¹⁾	5.4% ²⁾	22%이상 ¹⁾

- 개별 대학생이 속한 소득분위 및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기대효과가 달라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설계됨.
- 새로 개편된 국가장학체제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과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급한다는 측면이 고려되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I 유형은 소득분위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0.75조원을 지원하며, II 유형은 정부가 지급률을 정하지 않고 지원 대상 대학의 소득7분위 이하 학생수에 따라 0.75조원을 대학에 배분하고, 대학은 재학생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급률을 정하여 지원함. II 유형은 대학이 자구노력(등록금 인하)을 할 때만 정부가 대학에 지원함.
- 지원 시기는 '12학년도 1학기부터임. 대학생의 가구소득분위는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 및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소득분위 파악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됨.



3) 정책의 경과 및 결과

- 평균적으로 기초 생보자의 경우 546만원, 1분위의 경우 321만원, 2분위의 경우 231만원, 3분위의 경우 186만원, 4~7분위의 경우 96만원, 8~10분위의 경우 38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짐.

※ 소득분위별 세부 인하효과(추정)

(단위 : 만원)

5구분	기초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7분위	8~10분위
국가장학금 I 유형	450 (100%)	225 (50%)	135 (30%)	90 (20%)	-	-
국가장학금 II 유형	평균 58만 원					-
대학 자구노력	평균 38만 원					-
총 부담 문화	546	321	231	186	96	38

5. 대학 구조조정 및 개혁

□ 2011년 7월 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추진 기본계획

<국립대학>

○ 대학 특성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 관점에서 국립대학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며, 초등교사 장기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교육대학과 인근 일반대학의 통합을 강력 유도

○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선과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총장 직선제 개선과 총장 성과목표제 도입을 검토하며, 평가 순위 하위권 대학에 대한 “특별관리제”를 운영

<사립대학>

○ 경영 부실대학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과 함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시 결과 등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되, 문제 지속시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학교폐쇄와 법인해산도 추진

○ 대학간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요건을 조정하고, 연금 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을 학교 회계에서 내지 못하도록 하며, 대학의 결산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

○ 사립학교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구조조정 촉진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국·사립대학 공통>

○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들을 평가, 하위 15%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 이와 별도로 선정하게 될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

○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1. 7. 21)됨에 따라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가 도입되며,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에 따라 대학의 특성을 감안한 3·4학기제 등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 대출제한대학 선정평가 지표

- 절대평가 :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4개 지표)
- 상대평가 :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장학금지급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 (전문대학은 산학협력수익률을 포함하여 9개 지표)

□ '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

-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목적과 교육여건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평가하며,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통합하여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수도권 하위 대학들의 경쟁을 유도
-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 중 절대기준 4개가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 행재정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를 결정
- 평가순위 하위 대학(하위 15% 내외)에 포함될 경우 '12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다만,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9. 5일(월)** 대학 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
-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 전문대 **146**)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8**, 전문대 **15**)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17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대학 **9**, 전문대 **8**)으로 선정
- **2012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전체 **346개** 대학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금번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대학을 제외한 **288개** 대학(대학 **157**, 전문대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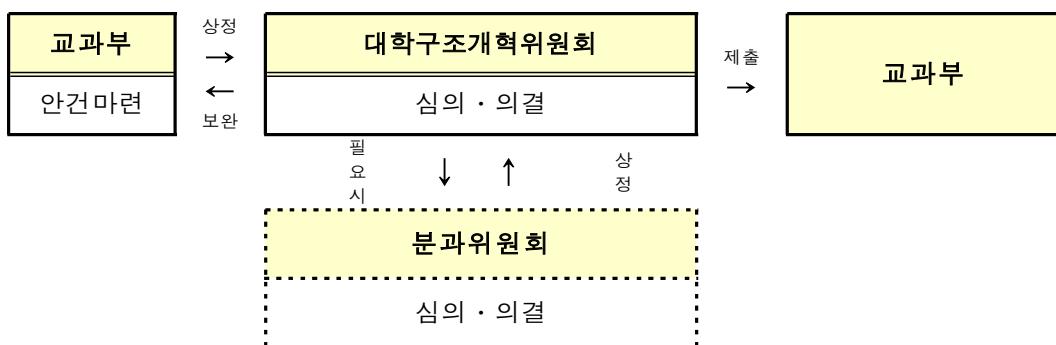
1) 정책의 목적과 기대효과

- 사립 부실대학의 경영진단, 실태조사 및 구조개선 계획 심의, 국립대 선진화 및 통폐합 등을 심의하여, 국립대학간 통폐합 및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부실대학을 정리하여,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고등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 대학의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유형화(평가순위 하위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하여 체계적으로 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촉진하고, 자발적 경영개선을 위한 동인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2) 정책의 내용

-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구조개혁 성과창출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 20명, 임기 2년)를 구성 운영함.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운영하되,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을 통과시켜 법적 심의 기구로 전환할 것임, 사립 부실대학의 경영진단·실태조사, 구조개선 계획 및 합병·해산 등에 관한 사항, 국립대 선진화 및 통폐합 등을 심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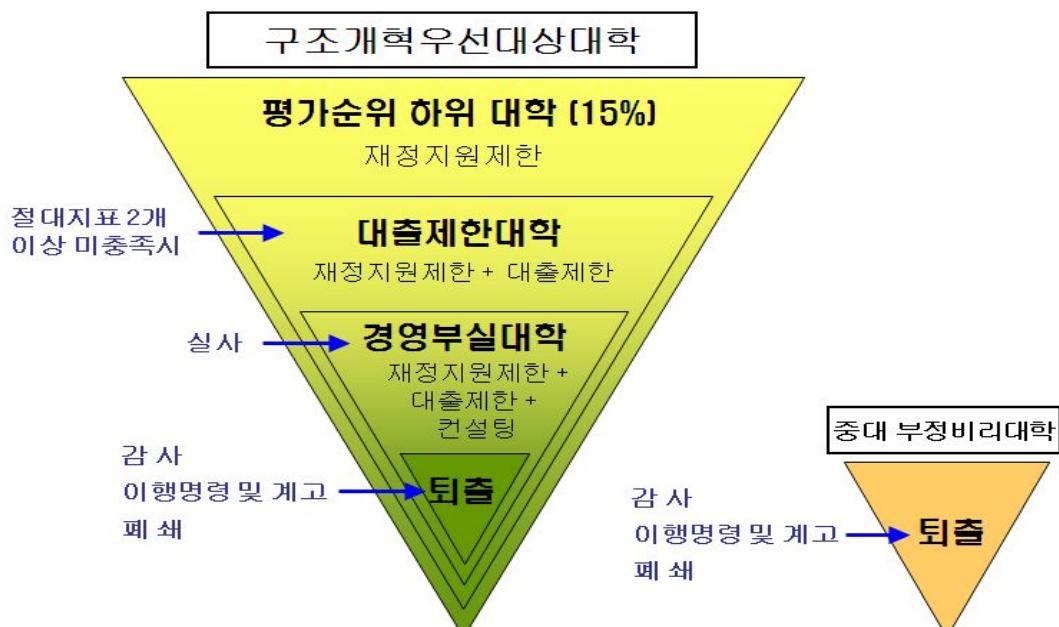
- 교과부에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교과부 제출



-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목적과 교육여건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평가하며,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통합하여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수도권 하위 대학들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임. 또한,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 중 절대기준 4개가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 행·재정 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다른 구조개혁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함.
- 평가순위 하위 대학(하위 15% 내외)에 포함될 경우 '12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됨.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방침임.
- 선정 지표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제한 대학의 지표를 동일하게 활용하되, 일부 지표의 배점은 조정함. 입지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의 배점은 축소($10\% \rightarrow 5\%$)하고, 대학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률의 배점은 확대($5\% \rightarrow 10\%$)함.
- 평가순위 하위대학 → 대출제한대학 → 경영부실대학 선정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감사 결과 이행 여부 등에 따라 퇴출 절차 추진.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우선대상대학을 유형화하고, 구조개선의 유도 수단을 강화함. 감사결과 중 대한 부정·비리가 밝혀져 시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대학 등은 구조개혁우선대상대학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퇴출 절차 추진함.

<표 III-4>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선정지표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취업률	20%	20%
재학생충원율	30%	40%
전임교원확보율	5%	5%
학사관리	5%	5%
장학금 지급률	10%	7.5%
교육비 환원율	10%	5%
상환율	10%	10%
등록금 인상수준	10%	5%
산학협력수익률	-	2.5%



3) 정책의 경과 및 결과

-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하위 15% 내외)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 발표(2011. 8. 16.). 동 방안은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이 잠재적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우려를 차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이를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공지함.
- 평가대상은 모든 대학 및 전문대를 원칙으로 하되, 신설대학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예하고, 전문대·산업대 등에서 일반대로 개편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

의를 거쳐 평가 대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임. 종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평가대상 포함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다만, 평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도 제한됨.

-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시안)’(2011.8.23)과‘정부 재정지원제한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2011.9.5)에 이어 5개 국립대(강원대·충북대·강릉원주대·군산대·부산교대)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2011.09.24) 발표함. 전남 순천의 명신대(4년제) 와 강진의 성화대학(전문대)에 대해 학교 폐쇄를 확정 발표함(2011.11.8).

6. 국립대학 법인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간 통·폐합 및 동일권역 소재 대학간 “연합대학 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확정·발표
○연합대학 법인화는 동일 권역(행정권, 경제권) 내 2개 이상의 국립대학이 MoU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를 구축·운영하여 유사·중복 영역을 통·폐합하고 대학 간 기능을 조정한 후 일정기간(예, 3~5년) 내에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특히 법인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중소규모 대학에 대해서는 법인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법인화 미이행 및 통폐합 성과 미진 등 당초에 의도된 실적이 도출되지 않거나 예산을 사업 목적외로 집행할 경우 지원예산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질적인 사업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이미 법인화된 국립대학으로 출범하였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 시행령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대 법인화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 양도, 정관 제정, 교직원 신분 전환 등 후속조치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고, 차질 없는 준비과정을 통해 '12년 1월에 서울대법인이 공식 출범 예정

1) 정책의 목적과 기대효과

-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야로 대학이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구조로 대학체제 재편을 유도하여 통합 대학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함. 동일 권역내 대학간 연합을 통해 대학별로 기능을 재조정하여 특성화하고, 학내 자원을 공동활용토록 하여 법인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또한 통·폐합 국립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현상 대비하기 위함.

【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지향점 】

- 고등교육 기회의 양적 확대를 넘어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 추진
-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체제로 대학의 학사구조 재편
- 대학 전체자원을 융·복합/특성화 분야 등에 집중,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
- 지역사회·산업계와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인력양성과 지역·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 형성

2) 정책의 내용

- 대학의 이념과 목적, 지역·대학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스스로 통·폐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정원감축 및 학과·학부 통·폐합을 통해 특성화, 융·복합 또는 사회 수요가 많은 실용적 분야로 전환하도록 함.
-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통·폐합 기반조성, 강점분야 특성화, 법인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소요예산 지원, 교명변경을 위한 규정 개정, 학사구조 개편 등에 대한 행정지원
- 서로 원거리에 위치한 일부 통합대학의 경우 구성원간 합의 도출이 어려워 유사·중복학과가 존치하고, 예산의 목적외 집행 등 발생. 규모가 큰 대학이 규모가 작은 대학을 흡수·통합하는 형태로 통·폐합이 이루어져 일부대학의 경우 교명결정 등에 있어서 갈등 유발됨.
- 통·폐합 대학의 특성, 지리적 위치(대학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대학간의 통·폐합을 유도함으로써 유사·중복학과 존치, 교명결정 상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 법인화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규모 대학에 대하여 법인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대학 체제 방식 유도. 입학정원 감축 위주의 단순 통폐합 재정지원은 지양하고, 대학 특성화, 교육여건 개선 등 실질적 구조조정 효과 창출에 중점. 사전일률적 재정 지원 방식에서 구조개혁 성과를 반영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연차평가결과 등을 차년도 지원예산 규모산정에 활용). 통·폐합 성과가 미진하거나, 예산이 명백히 목적 외로 집행된 경우지원예산 환수 등 제재수단 마련함.
- 2011년도 신규 통폐합 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함. 2개 이상의 국립대학이 단일대학으로 통합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년도 : '11학년도)함.
 - ◆ 2개 이상의 국립대학(교대 포함)이 단일대학 체제로 전환하여 유사·중복학과·학부를 통·폐합하고, 대학과 지역의 강점분야로 학내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특성화 추진
※ '11년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12년부터 재정 지원 예정

- 공동의사결정 체제를 갖춘 동일 권역내 대학간 연합대학 법인화를 추진함.

◆ 동일 권역 내 2개 이상의 국립대학이 MoU 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예, 연합대학운영위원회)를 구축·운영하여, 유사·중복 영역의 통·폐합 및 대학간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내에 단일법인으로 전환
※ '11년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12년부터 재정 지원

-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회는 기 통합 대학에 대한 중간·연차평가, 대학별 재정지원액 산정하고, 신규 통·폐합 및 대학간 연합·법인화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며, 기 통합대학 및 신규 참여 대학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함.

3) 정책의 경과 및 결과

- 기추진 사업('05~'10)의 주요 성과로는 18개 국립대학을 9개로, 2개 공립대학을 1개로 통합하여 '04년 대비 총 8,764명의 입학정원 감축, 103개의 학과·학부 감축. 일부 대학의 경우 캠퍼스별 기능 개편, 특성화 분야 육성 등에 있어 가시적 성과 창출.
※ 부산대(+밀양대) : 밀양캠퍼스를 생명자원, 나노기술 분야 관련 단과대학으로 특성화하여 자원을 집중 투입 특성화분야 성과창출의 기반 조성
- 통합 국립대학에 대한 연차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11년 지원 예정액의 20% 범위 내에서 대학간 차등 지원함. 경북대(+상주대), 전북대(+익산대), 제주대(+제주교대)에 '11년의 경우 총 189억5,800만원을 지원함.

7. WCU(World Class University)

□추진 배경

- 新성장동력 분야의 국가 핵심인재 양성 및 세계적 연구 선도
- 우수 해외학자(Star faculty)를 국내대학에 유치하여 교육·연구 풍토를 혁신하고, 나아가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도모

□주요 내용

- 총 사업비: '08~'12년, 총 8,250억원('10년 : 1,591억 원)
- 지원 현황: 35개 대학 총 149개 과제('10.9월 기준)
- 지원 내용
 - 우수 해외학자를 유치하여 융복합 중심 전공·학과 개설 지원
 - 해외학자와 국내 교수의 공동 연구·교육 활동 지원
- 해외학자 유치 현황: 노벨상 수상자 9명을 포함하여 340명 유치

1) 정책의 목적과 기대효과

- 우수 해외학자(Star faculty)를 국내대학에 유치하여 교육·연구 풍토를 혁신하고, 나아가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도모
- 해외학자의 유치활용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학문의 융복합 분야 연구와 인력양성을 집중 지원하고자 함.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계획임.
- 2011년의 경우,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연구 추진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으로, 기초 과학의 새로운 전공분야, 지식기반 서비스 및 신산업창출 기반 분야를 집중 육성함. 이것은 World Class Faculty ⇒ World Class Dept. ⇒ World Class Univ.을 꾀하기 위함. 즉 연구 역량이 높은 해외학자 확보를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풍토를 혁신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하기 위함.

2) 정책의 내용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6월, 2008년도 12월, 2010년도 3월 세 차례에 걸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사업' 을 공고함.
- 사업비('08~'12년)는, 총 8,250억원('10년 : 1,591억원), 35개 대학 총 149개 과제 ('10.9월 기준)가 지원됨.
- 지원 내용은 우수 해외학자를 유치하여 융복합 중심 전공·학과 개설 지원, 해외학자와 국내 교수의 공동 연구·교육 활동 지원 등임.
- 2011년의 경우,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창출 및 녹색성장 분야로, (원자력에너지시스템, 비발전분야 제외) 최근 미래 국부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는 무공해 원자력에너지 분야에 차세대 신형 원자로 개발 등 세계적 연구 선도 및 고급 인력 양성과, (IT Software) IT 인력양성 패러다임을 기존 HW에서 SW 중심으로 전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음.
- 연구 역량이 높은 해외학자를 전일제 교수로 유치·채용 전제로, 전공·학과 개설을 지원 하여, 해외학자와 국내 참여교수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전공·학과 운영하는 것임.

3) 정책의 경과 및 결과

- 해외학자 유치 현황: 노벨상 수상자 9명을 포함하여 340명 유치
- 성과 관리 (Performance Management)를 위해 2011년과 2012년 연차별 사업비 운영, 연 구성과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Annual Report) 제출하도록 함. 중간 평가(2012년,

2014년)를 실시하고, 향후 종합 평가(2015년)를 통해 사업 전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연구팀을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임.

8. WCC(World Class College)

□ WCC(World Class College): 국내·외 산업체의 요구 및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계속적인 성장가능성과 글로벌 직업교육역량을 갖춘 선도 전문대학 육성
○ 2011년 7개교 선정: 전체 146개 국·공·사립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4단계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
- WCC로 선정된 대학은 한국 최고의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명예를 갖게 되고,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재정 및 학사운영 측면에서 각종 우대조치를 지원
- 재정적인 인센티브로 2011년 80개 전문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2,600억원의 교육역량강화 사업비(교당 평균 32억원)를 별도의 평가 없이 3년간('11~'13년) 지원
- 2011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도 일반대학보다 2~3배 수준 더 지원
○ 2011년 7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14개교를 추가하여 최종 21개교를 선정 예정
- 평가순위 15%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것에 대응하여 최상위 15% 대학(21개교)은 자율성을 확대하여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수월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1) 정책의 목적과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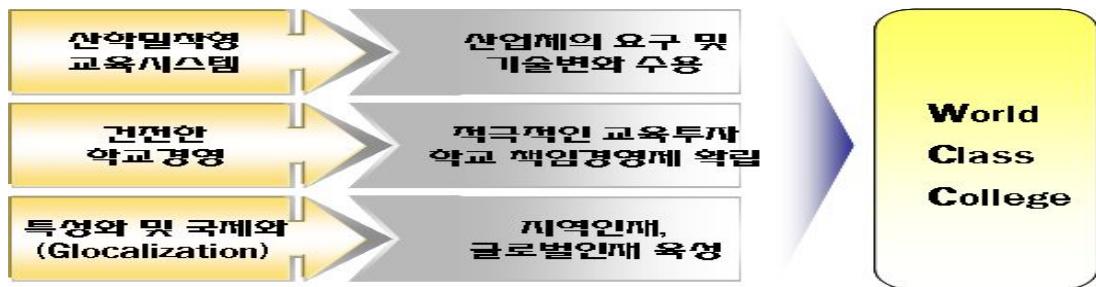
- 국내·외 산업체의 요구 및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계속적인 성장가능성과 글로벌 직업교육역량을 갖춘 선도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함.

2) 정책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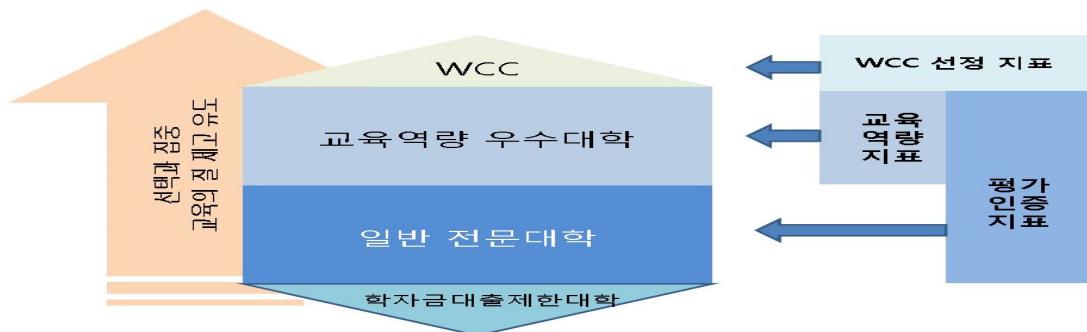
- World Class College 기본 계획(글로벌 역량을 갖춘 한국의 대표 전문대학 육성 스타트)(2011.4.26)을 수립 전국 146개 전문대학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함.
- WCC는 1단계 요건평가 ⇒ 2단계 재정건전성 평가 ⇒ 3단계 기관역량평가 ⇒ 4단계 고객평가의 절차를 거쳐 선정함.
- World Class College는 한국 최고의 기술명장을 양성하는 한국의 대표 전문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개교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21개(WCC 21)을 선정할 계획임. WCC로 선정된 대학은 재정 및 학사운영 측면에서 각종 우대조치를 받게 될 것임. 재정적인 인센티브로 현재 80개 전문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2,600억 원의 교육역량강화사업비(교당 평균 32억원)를 별도의 평가 없이 3년간 지원하고, 금년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도 일반대학 보다 2~3배 수준을 더 지원하게 됨. 학사운영 측면에서는 현재 인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전공심화과정(4년제 학사학위과정)

을 별도의 인가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율성도 대폭 확대됨.

- 지역산업 기반의 특성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화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지역인재 육성, 세계 각 국으로부터의 교육수요 유인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글로벌인재 육성에 전념하는 대학임.



- WCC로 선정된 대학은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한국의 대표 전문대학이라는 명예와 자부심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임.



3) 정책의 경과 및 결과

- 매년 7개교, 3년간 21개교를 WCC로 지정·운영할 예정임. WCC로 선정된 대학은 한국 최고의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명예를 갖게 되고,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재정 및 학사운영 측면에서 각종 우대조치를 지원받게 됨. 재정적인 인센티브로 현재 80개 전문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2,600억원의 교육역량강화사업비(교당 평균 32억원)를 별도의 평가 없이 3년간('11~'13년) 지원받게 되고, 금년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도 일반대학 보다 2~3배 수준을 더 지원받게 됨.
- 전체 146개 국·공·사립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4단계 평가과정을 거쳐 이루어짐. 1단계 평가는 대학의 성과 및 여건을 공시지표로 평가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취업률, 재

학생충원율, 산학협력수익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금지급률 활용)의 평가결과(4년간의 자료 활용), 점수가 높은 상위 40개 대학을 선정함. 2단계 평가는 재정건전성 평가로 40개 대학 중 교원의 연봉수준, 등록금의존율, 연구·학생경비 등 3개 지표를 활용, 대학 재정측면에서의 건실성을 평가하여 상위 30개교를 선정함. 3단계 평가는 기관역량 평가로 대학의 특성화수준, 취업역량, 산학협력역량, 국제화역량 등 전문대 직업교육의 핵심 영역을 평가하여, 30개교 중 평가점수가 높은 상위 14개교를 선정함. 4단계 평가는 고객평가로 14개교 전문대학 졸업생이 취업한 2,800개 기업체 대상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①대학인지도, ②졸업생역량, ③산학협력 만족도, ④전반적 만족도 등 4개 영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산업체 만족도 조사와 실시함.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대학의 역량 및 평판도, 학교경영의 충실햄 등을 춤출히 평가하였고, 최종선정은 3단계 기관역량 평가결과(50%)와 4단계 고객평가(설문조사) 결과(50%)를 합산하여, 'WCC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상위 7개교를 선정함.

- 교과부는 21세기 한국의 고등직업교육을 선도할 우수 전문대 7개교(거제대학, 대전보건대학, 연암공업대학, 영남이공대학, 영진전문대학, 울산과학대학, 제주한라대학)를 선정 발표함(2011. 09. 01).



9. BK21(Brain Korea 21)

- | |
|---------------------------------------------------------------------------------------------------------------------------------------------------------------------------------------------------------------------------------------------------------------------------------------------------------------------------------------------------------------------|
| <input type="checkbox"/>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후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
<input type="radio"/>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과 박사후과정생 등을 지원하는 『창의적인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
- 1단계(1999~2005) : 1조 3천억 원
- 2단계(2006~2012) : 약 2조 원
- 총 74개 대학 564개 사업단(팀)
<input type="radio"/> 대학원 학과조직단위의 사업단(팀)을 지원 ⇒ 전반적인 교육역량 신장 ⇒ 세계수준의 우수대학원 육성 |
|---------------------------------------------------------------------------------------------------------------------------------------------------------------------------------------------------------------------------------------------------------------------------------------------------------------------------------------------------------------------|

1) 정책의 목적과 기대효과

-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및 신진 연구인력(박사후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으로 대학원 학과조직단위의 사업단(팀)을 지원하여, 전반적인 교육역량을 신장하고, 나아가 세계수준의 우수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함임.

2) 정책의 내용

-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과 박사후과정생 등을 지원하는 『창의적인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은 1단계(1999~2005)에 1조 3천억원을 지원하고, 2단계(2006~2012) 사업은 2006.3.1일부터 7년간 약 2조원을 지원하여 총 74개 대학 564개 사업단(팀)을 지원함.
- 지원사업은 전국단위 우수 대학원 육성사업(응용 및 학제간 융합분야, 기초과학 분야, 인문사회 분야, 핵심사업 분야), 지역 우수 대학원 육성사업(응용 및 학제간 융합분야, 기초과학 분야, 인문사회 분야, 핵심사업 분야), 고급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사업(의학, 치의학, 경영 분야), 글로벌 캠퍼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지원시 구분하여 관리됨.

3) 정책의 경과 및 결과

- 2단계 BK21사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의 연차평가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 분야별 최하위 사업단(팀)의 사업비 20%(사업팀 10%)를 감액, 최상위 사업단에 추가 지원, 2차년도의 경우 총 567개 사업단 중 70개 사업단이 신규로 교체(교체율 12%)하였으며, 3차년도(2008년)의 경우 사업분야별 하위 사업단(팀)의 사업비 10% 내외를 감액하여 상위 사업단(팀)에 추가 지원,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팀)은 탈락시킴. 45개 대학 112개 하위 사업단(팀)의 사업비 34억 48백만원을 감액하여 40개 대학 112 개 상위 사업단(팀)에 증액 지원하고,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6개 사업단(팀)은 탈락시킴.
- 이 사업 참여 대학원의 경우, 연구성과로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증가하고 있고,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의 논문게재 건수가 증가하고, 논문 1건당 IF가 증가하고, 과기분야 SCI(E)논문 게재 건수, 과기분야 국제특허가 증가했고, 산학협력의 연구비 수주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력양성에서 석·박사과정생 참여자 수와 석·박사 학위 배출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10. GPS(Global Ph.D. Fellowship)

□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는 2011년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지원대상자는 287명
○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여 미래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박사급 고급 두뇌로, 나아가 노벨상 후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국가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 선정된 287명의 박사과정생에게는 연 3,000만원씩 2년 동안 6,000만원까지 지원
- 우수 학생의 국내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이공계의 경우 선발인원의 30% 이상을 석·박사통합과정생에게 배정함은 물론,
- 기초학문 중심의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에 각각 1대 1*로 인원을 배정
* 인문사회: 인문학 30명, 사회과학 30명, 과학기술: 자연과학 120명, 공학 120명

1) 정책의 목적과 기대효과

-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여 미래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박사급 고급 두뇌로, 나아가 노벨상 후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국가 핵심 과학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임.

2) 정책의 내용

- 우수한 박사 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여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Global Ph.D. Fellowship 사업을 2011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음. 연 300명 선발, 연 3,00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임. 2년 지원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 3년까지 지원 가능함. 지원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한 학생에게는 우선적으로 추가(연장)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Post-Doc. 선발시에도 인센티브 제공 등 계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임.
- 지원자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신청서를 포함 자기소개서, 교수추천서(3장), 학업·연구계획서, 연구활동 실적서, 대학선정 사유서 등을 영문으로 작성 온라인 제출함.
- 정부는 동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던 이공계 인력양성 체제를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고 학부생부터 국가 핵심 과학기술인재를 전주기적으로 양성하는 경력단계별 지원시스템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밝혔음. GPS 시스템은 학부과정에서는 대통령 과학장학생, 대학원과정에서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박사후 과정에서는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을 지원하여 단절없이 학업·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것임. '11년의 경우, 대통령과학장학생(554명), 글로벌박사펠

로우십(시범, 300명),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시범, 15명)임.

*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



-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에 2011년 3월 입학 예정자로서, 학부성적 및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인 자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함 (학부성적 : 4.3/4.5만점 기준 3.20/3.45이상, 공인영어시험 성적 : TOEFL iBT기준 80점, TEPS 650점 이상 등)

3) 정책의 경과 및 결과

- Global Ph.D. Fellowship은 GPS 시스템의 중심축(Pivot)으로써 이공계 위주의 국가 핵심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동 사업을 통해 우수 박사과정생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글로벌 수준의 박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노벨상 수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학생 선택에 의한 연구중심 대학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IV. 고등교육발전방안 선행연구 분석: 미래 고등교육 모습 전망 중심

1. 고등교육 정책 환경 변화 전망

- 미래 고등교육 모습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환경 변인들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미래 고등교육에 주는 시사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함.
-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다룬 주요 정책환경 변인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 산업 구조 변화, 정보 통신 기술 발달, 글로벌화, 융합기술·학문의 발달 등을 들 수 있음. 여기서는 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이들 변인들의 특성 및 변화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고등교육에 주는 시사를 정리·제시함.

가. 인구 구조 변화

- 인구 구조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다양화로 표현할 수 있음.
 - 저출산 현상은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외국인 유학생의 획기적 증가와 같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2020년대부터 우리나라 대학들은 입학자원 부족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것임.
 - 대학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지식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재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성인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국제결혼, 국제이주노동, 탈북현상 등의 증가로 부모 모두 한국인인 일반 학생과 차별화된 교육적 요구를 지닌 다문화 가정 출신의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채재은 외(2009)는 전망하고 있음.
- 고령화 추세는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저축·소비·투자 위축 등에 따른 경제 활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 등이 초래될 것임.
 -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 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성이 큼.
 -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대책은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전담기구와 교육기관의 확충 및 개편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혁신 등이 필요함.
 - 고령화에 따라 나타날 문제는 경제적 측면의 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측면에서도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됨

-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교육 분야에서는 당연히 성인교육이 중요해질 것임.
 - 성인교육 체계는 평생교육, 계속교육, 원격교육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져야 하고, 늘어가는 중·고령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임.
 - 미래의 중·고령자들을 위한 교육은 목적 면에서도 다양하고 방법 면에서도 다양해질 것임.
 - 아동교육과 달리 성인교육은 각자의 구체적인 필요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양해지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다양한 상황 때문에 면대면 학급 수업뿐만 아니라 원격 교육, e-learning, 재택교육, 통신교육 등이 활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백성준 외(2011)의 「미래 지향 고등교육체제 개편 구상」 (미발간) 연구는 2030년까지의 대학 입학자원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대학 입학 정원 대비 대학 입학자원의 비율로 정의되는 대학의 충원율(결과적으로 미충원율)을 추정한 후, 그 결과가 고등교육에 주는 정책적 시사를 논의하였음. 대학 입학자원 전망 시 학령인구의 규모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학력별 임금격차, 대학 등록금, 고교단계 직업교육 관련 정책, 사회양극화 문제, 성인 대학교육 수요, 외국인 학생 유입 등)을 같이 고려하였으며,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하여 전망하였음. 전망 결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1) 외국인 학생 유입만으로 대학입학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함.
 - (2) 최대 20~30%의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 예상됨.
 - (3) 이러한 대학구조조정의 압력은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에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임.
 - (4) 대학구조조정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지역균형 발전, 직업교육 발전 등과 부합되는 형태로 진행되도록 하는 정책 대응방안 모색이 요청됨.

나. 산업 구조 변화

- 최용재 외(2008)에 의하면,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화전망을 통해 볼 때, 제조업은 취업 구조에서 완만하게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력구조가 지속적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노동생산성의 증가 및 점진적인 기술진보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전산업 대비 2007년 17.6%에서 2020년까지 13.6%로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은 각각 2007년 5.0%, 12.6%에서 2020년 3.8%, 9.8%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주력기간 산업은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기반이 견고하고 이에 따른 견조한 생산 증가가 예상되면서 여타 제조업에 비해 취업자 비중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주력 기간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2007년 7.5%에서 2020년 6.7%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서비스업 총공급 확대와 서비스 수요 증가에 기인해 2007년 66.7%에서 2020년에는 74.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상돈 외(2008)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모형 개발 및 인프라 확충」 연구에 의하면, 2007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간 중 산업대분류의 학력별 신규 인력수요는 총 4,583천 명에서 전문대출 1,548천명(33.8%), 대출 2,137천명(46.6%), 대학원졸 896천명(19.6%)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됨.
 - 산업대분류별로 학력별 신규 인력 수요 규모를 살펴보면, 전문대 학력출신은 서비스업의 신규수요가 1,340천명으로 전체 전문대 학력출신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학학력 출신과 대학원 학력출신의 경우에도 서비스업의 신규수요가 각각 2,138천 명, 896천명으로 각 학력 출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1%, 88.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산업대분류의 수급차 전망결과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문대 출신은 연평균 26천명 씩 총 263천명, 대학출신은 연평균 14천명씩 총 138천명이 초과공급 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학원 출신 또한 연평균 1천명씩 총 13천명이 초과공급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이로부터 향후 노동시장에서 전반적인 고학력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대분류별로 학력별 수급차 전망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 학력출신은 제조업에서 연평균 22천명씩 총 219천명이 초과공급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연평균 3천명씩 30천명이 초과수요 될 것으로 전망됨.
 - 대학 학력출신은 여전히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246천명이 초과공급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전문대 학력수준과 동일하게 93천명이 초과수요 될 것으로 전망됨.
 - 대학원 학력출신은 제조업에서 여전히 66천명이 초과공급이 예상되지만, 서비스업에서는 앞서 전문대 및 대학 학력에서와는 동일하게 49천명이 초과 수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산업구조 변화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채재운 외(2009)는 「고등교육 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산업세계의 질적 고도화가 이루어짐에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이 국가 경쟁우위의 원천인 ‘혁신주도경제’가 도래하면서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혁신경제 하에서는 노동집약·단순사무직 비중은 감소하고, 그 대신에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조하는 전문직 영역, 휴먼 서비스 직종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평생직장, 평생직업은 사라지고, 누구에게나 역량과 지식의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될 것임.

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 첨단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고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의 도래는 대학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미 물리적 캠퍼스 위주의 교육, 면대면으로 학사운영, 학생상담, 행정지원이 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대학과 달리,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모든 대학서비스들이 이루어지는 원격대학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대학에서도 온라인 수업, 모바일 교육콘텐츠 제공이 확대되고 있음(채재은 외, 2009).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물리적인 기술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과 관련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가 될 것임.
 - 이것은 초기 정보화 사회를 거쳐 나타나는 고도 정보화 사회의 특징 중 하나임.
 -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그 속에서 연결된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가능하게 하는 그들만의 공간(space of flows)을 창출함.
 - 이러한 변화는 미래의 학습자들이 그들 이전의 환경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학습 환경을 맞이하게 됨을 시사함.
 - 이미 무수한 학습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미래사회에서는 더 진화되고 질 높고 편리한 학습 네트워크들이 가동될 것임.
- 미래 고등교육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IT 기술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전자책(e-books), 모바일(mobiles), 게임기반학습(game-based learning),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동작인식컴퓨팅(gesture-based computing), 학습분석학(learning analytics) 등을 들 수 있음. 이 들은 적어도 5년 이내에 고등교육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고등교육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백성준 외(2011)의 「미래 지향 고등교육체제 개편 구상」(미발간) 연구에 의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1) 더욱 발전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된 모바일 기기, 그리고 개별학생 중심의 맞춤식 교육 경로 관리를 위한 학습분석학 등이 고등교육체제에 도입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 학생을 위한 대학 간 협력(통합) 모델이 등장할 것임. 그리고 (2)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하는 모바일 기기의 발달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진화, 직업역량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학습도구의 개발 등으로 인해, 대학 입학 자원이 재직자, 전직자, 취업 준비자, 실업자, 지역 주민 등으로 다변화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기초능력 교육, 직무 능력 향상 교육 등 양질의 평생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될 것임.
- 특히 이들은 학부보다는 사이버대학원 등을 통해 자기 계발과 전문성을 계발하고자 할 것이며, 기업내 재교육을 대학에 위탁시켜 교육하는 사례들이 증가할 것임.

라. 글로벌화

- 경제·사회·기술·문화·정치 등의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의존과 통합 그리고 상호 작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교육 분야에서는 국경을 넘는(cross-border) 교육 체제가 구축되고 있고, 국가 간 유학생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무역이 증가하게 되고, 외국 자본의 투자가 증가할 것임.
 - 정치적으로는 국제 정치의 역동적인 전개 속에서 국가의 위상들이 재편성될 것으로 전망됨.
 - 문화적으로는 국제적인 문화 교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가 융성하며, 국제 여행과 관광이 증가할 것임.
- 세계 고등교육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국제화 및 글로벌화 변화 추세를 살펴 볼 때,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화 및 글로벌화 현상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의 경우도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 외국 학생의 국내 수학, 외국 대학 및 프로그램의 국내 유치·운영 등 고등교육의 국제화 활동 및 실적은 이제까지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다음 사실에 근거함.
 - (1) 최근에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이 확대되고 있고, '공학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국제인증 획득이 이루어지고 있음.
 - (2) 외국으로 유학가는 한국 학생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대학으로 유학오는 외국인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음.
 - (3) 또한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음. 광양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Shipping and Transport College)의 한국 분교(STC-KOREA)가 2009년 3월에 개교하였으며, 2009년 8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8개 대학과 설립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채재은 외, 2009).

- 그러나 이러한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노력은 한국이 안고 있는 언어, 문화 및 지리적 위치 등의 한계로 글로벌화로의 진전을 위한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백성준 외(2011)의 「미래 지향 고등교육체제 개편 구상」(미발간)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및 글로벌화 미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다음 5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1)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 (2) 정부 고등교육 글로벌화 정책 수립·추진의 목적·기본철학 및 역량
 - (3) 한국 대학의 글로벌화 목적 및 역량
 - (4) 한국과 타국 간 그리고 한국 대학과 타국 대학 간 힘의 관계
 - (5) 주변 국가들의 고등교육 글로벌화의 전략적 가치 인정 및 전략화 정도
-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영향력 분석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글로벌화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음.
 - (1) 고등교육의 국제화(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및 교수, 그리고 연구요원의 이동 · 교류 · 협력과 외국 고등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국내 설치 · 운영)가 현재 정부와 개별 대학이 기획 · 추진하고 있는 수준에서 지속되며, 글로벌화라고 일컬을 만한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2)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를 경험하게 될 비수도권 지역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은 줄어드는 학교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아시아 국가 학생들의 유치 전략을 적극 시도할 것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우수 인재들을 자국 예산 또는 국제기구의 재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보낼 것으로 예상됨. 그 수는 향후 10년간은 현재보다 증가하겠지만, 큰 증가는 없을 것임.
 - (3) 선진국 유명 고등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한국 내 설치 · 운영은 외국 고등교육과의 경쟁을 통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한 정부 정책과 일치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지원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강구할 것임.
 - (4) 경쟁력을 갖춘 소수 대학은 지속적으로 연구와 교육에서의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나머지 대학은 지역사회 고등교육 수요와 지역 특화 산업에 초점을 맞춘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계 전략을 추진하게 될 것임.
- 세계화는 장점과 함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 파급효과로 인한 경제,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가 전망됨.
- 경제적으로는 국제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이민이 증가하며, 문화적으로는 종전보다 훨씬 많은 교류가 예상됨.
- 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유치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마. 분권화와 지역발전

- 정치·행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분권화,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 및 행정의 효율화가 진척될 것으로 전망됨(박상남, 2011).
 - 중앙의 권한이 널리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역의 발전이 이루 어지며, 행정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임.
 - . 각 국의 도시들이 국제관계의 주체적인 행위자가 되는 경향과 이를 사이의 협력과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
 - . 세계화 추세에 예외가 아닌 우리나라로 이와 같은 지역화, 분권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사회에서 공공부문과 행정체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필요가 절실함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민간위탁 등을 포함한 효율화가 추진되고, 이것이 하나의 강력한 추세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 분권화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지방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들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으로서 지방분권과 아울러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자율권을 확대해 갈 것임.
 -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그 목적인 수도권 과밀 집중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휘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목표들이 달성된다면 우리나라의 세계화와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
- 공공부문의 책무를 민간 기업에 맡기는 민영화(privatization) 추세도 대두될 것
 -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그로 인한 조직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닐 것임.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추진을 통해서 향후에는 지방의 역동적 발전 기반이 구축되고, 낙후지역의 자립기반이 조성될 것임.
 - . 지방대학 혁신역량 제고 및 구조개혁과 국립대학 법인화, 지역 클러스터 개발, 낙후 지역 활성화 등이 추진

바. 융합기술·학문의 발달

- 정보통신기술 혁명과 더불어 ‘융합 기술과 학문’의 발전은 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 학과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융합기술은 NT, BT, IT 등의 신 기술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학문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임. 차세대 기술혁명의 원천으로 간주되는 융합기술은 단일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종기술의 효용성을 융합하는 기술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창출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정부 주도로 미래사회에서 국가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융합기술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음. 최근 우리 대학에서도 전공별로 칸막이가 쳐진 기존의 대학원 선발시스템으로는 학문 융·복합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융합학문 활성화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음. 앞으로 이러한 융합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과 같은 전통적인 학과 구분 대신에 다학제 학과, 융복합 학과 등이 새로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채재은 외, 2009).

2. 미래 고등교육 시나리오

- 고등교육의 미래 모습을 정확히 그리는 것은 불가능함.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고등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책환경 변인들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미래 고등교육 대상, 범위,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예상해 보는 것은 가능함.
- 여기서는 OECD 회원국과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발표한 미래 고등교육 모습과 시나리오들을 정리·제시함. 이는 미래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역할, 고등교육기관 간 그리고 기업 및 정부와의 관계, 고등교육 운영 및 지원 방식 등을 예상 또는 설계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들과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해 줌.

가. OECD 고등교육 미래 전망

- OECD(2008)는 「Higher Education to 2030」 보고서에서 OECD 국가들의 학생 인구, 대학 교수, 그리고 졸업생들의 변화 추세 및 전망을 계량적인 관점과 질적인 관점에서 분석·논의하였음. 주요 변화 전망은 다음과 같음.
 - ① 폴란드, 한국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에의 학생 참여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며, 고등교육 규모도 증가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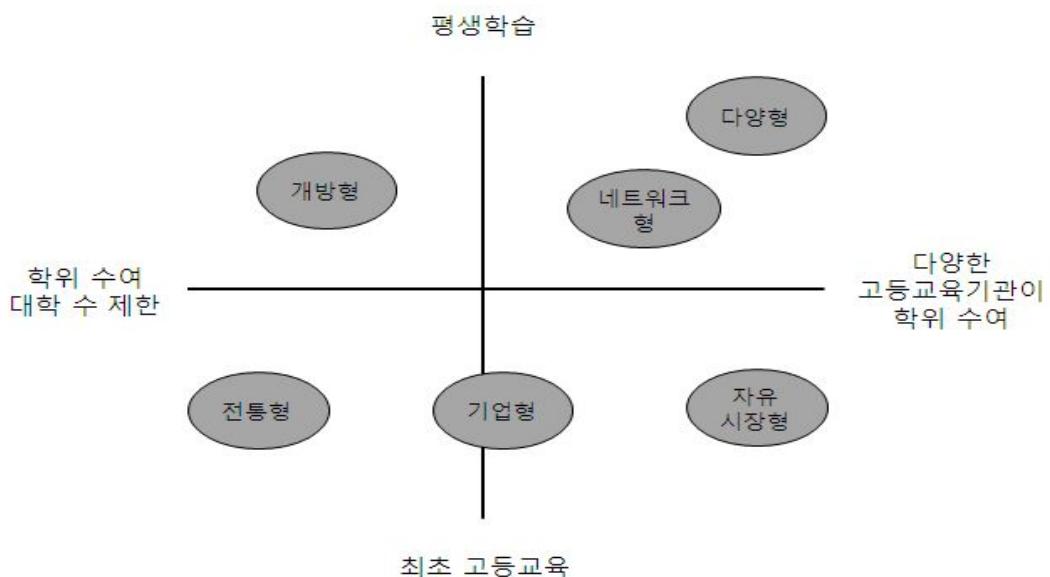
- ② 여성이 학생 인구의 다수를 차지할 것임
 - ③ 외국 학생, 성인 학생, 정시제 학생 비중이 늘면서 학생 구성이 다양화될 것임
 - ④ 고등교육의 사회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인데, 이러한 확장이 사회계층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불확실함
 - ⑤ 대학 교수직은 더욱 국제화되고 유동적으로 변할 함
 - ⑥ 직업 활동은 보다 다양화·전문화되고, 여러 가지 고용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
 - ⑦ 인구 중 대학 졸업자 비중이 커질 것인 바, 이는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이 연구는 정치적 결단이나 기술 혁신이 고등교육의 변화 흐름이나 작동 양식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음에 주목하여 과거 변화 추세에 기초한 단순한 전망이 가져올 수 있는 오류를 경고하고, 정치적 결단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 관점에서 미래를 그려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OECD의 고등교육 전망 관련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고등교육체제의 모습을 설정하는데 유의미한 정보와 관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2030년까지의 각국 고등교육 학생과 교수 등의 변화를 전망한 자료는 우리나라가 타 회원국과 비교하여 학생 인구 변화 면에서 매우 달라 그 분석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나. Stephan Vincent-Lancrin의 미래 고등교육 시나리오

- Vincent-Lancrin(2004)은 (1) 고등교육에의 참여(최초 고등교육(initial tertiary education)과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의 축)와 (2) 고등교육의 공급(학위 수여에 대한 고등교육 기관의 독점력을 기준으로 소수의 대학이 학위를 주는 경우와 다양한 기관이 학위를 주는 경우의 축)의 두 축과 (3) 여섯 가지 변인들(고등교육 대상 학생(학령인구↔성인), 재원(공공↔민간), 대학사명(교육↔연구), 국제화, 교수/학교의 동질성, ICT 활용도)을 사용하여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은 OECD 국가들의 6가지 미래 고등교육 시나리오를 논의한 바 있다(Vincent-Lancrin, 2004).
(1) 전통형(tradition): 현재와 같은 대학 형태로 취업 자격 취득 목적을 가진 비교적 작은 비율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 전통형 대학은 민간부문에 크게 의지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교육과 연구 기능을 수행함.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정부는 대학 재정 지원, 규제, 운영에 큰 역할을 수행함. 공공 책임성 및 형평성 보장 원칙 때문에 대학이 스스로 이익을 창출할 여지는 매우 작음. 평생학습과 원격교육 모두 대부분 대학 영역 밖에서 이루어짐.

- (2) 기업형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ies): 소수 대학들이 젊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최초 고등교육을 제공함. 전통형 대학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기업형 대학은 자율성을 갖고 다양한 재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임.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익이 인정됨으로써 연구는 매우 중요한 수익활동으로 간주됨. 그러나 기업형 대학은 근본적인 학문적 가치는 유지하면서 시장친화적 경영방식을 취함. 대학의 자율성과 대응성이 커짐에 따라 대학간 커다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 기본적인 3대 사명은 균형있게 추진됨. e-learning과 국제시장에 대한 상업적 접근이 중요하며, 지역 경제와의 연계가 강함.
- (3) 자유시장형(Free Market): 자유시장 모형에서는 시장논리에 의해 대학의 기능(교육, 연구), 전공분야(경영, 인문학 등), 대상(학령학생, 정시제, 원격교육, 성인, 평생학습) 등이 특화됨.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직업교육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매우 다양한 고등교육기관들이 생겨나고 교수들의 양극화와 함께 대학들간의 서열화가 심화됨. 학생 모집을 위한 대학간 경쟁이 심화되고, 학생이 부담하는 납입금이 대학의 주된 수입원이 됨. 고등교육 시장의 국제화가 중요해짐.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연구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연구 기능은 공립대학이나 기업연구소에서 수행하게 됨. 교육의 표준화 그리고 교육과정 및 교육방식의 특허가 확대되며, 연구는 수요 분야에 특화되고 지적재산권을 통해 수익을 보장받음.
- (4) 평생학습과 개방교육형(lifelong Learning & Open Education): 이 유형의 대학은 모든 연령층에 열려 있는 반면, 연구에 대한 비중은 매우 작은 편임. 지식경제가 진전되면서 고등교육기관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업, 상위 직무역량 습득을 원하는 개인, 그리고 국가가 재정 부담하는 재교육 기관이 되었음. 이 유형의 대학들은 단기코스, 원격교육, e-learning 등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학습자 및 교육수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보다 치중함. 정부 또는 독립적인 평가·인정 기구들이 대학 교육의 질 관리에 책임임됨. 시장영향력에 대한 대응력이 높고, e-learning에 대한 투자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짐.
- (5) 글로벌네트워크형(Global Network of Institutions): 중등 이후 교육이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그리고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학습자들은 글로벌 중등 이후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교육과 학위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고등교육기관들은 점차 기업을 포함하여 타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함. E-learning이 크게 발전함. 학습내용이 표준화되고, ICT기술과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됨. 평생학습 시장이 매우 커지고, 많은 연구가 고등교육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짐. 교수의 자격조건과 지위가 현재 대학 교수들보다 낮아지나, 보다 세련된 교수방법을 사용함. 프로그램과 코스가 기관보다 중요해짐. 교육 컨텐츠나 방법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소유자에게 큰 수익을 제공함.

(6) 다양형(Diversity of Recognized Learning-disappearance of universities): 이 시나리오에서는 공식적 고등교육영역은 사라짐. 사람들은 생애를 통하여 직장에서, 집에서, 개인적 또는 직업적 동기에 따라, 점점 더 스스로 그리고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전문성 공유를 통하여 학습함. 실습이 필요한 전문 직업교육은 도제 제도나 정교한 전자 도구를 통하여 이루어짐.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확산을 가능하게 함. 학습은 open course 교육 모형으로 대부분 무료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짐.



[그림 IV-1] Vincent-Lancrin의 미래 고등교육 시나리오

다. OECD 미래 고등교육 시나리오

○ OECD(2008)는 미래 고등교육 시스템의 4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음. OECD 사무국은 (1) 이 시나리오들은 고등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전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가설적 미래 모습을 논리적으로 일관성있게 표현한 것이며, (2) 이러한 시나리오는 일부는 의도적인 전략과 정책 활동을 통하여 또 다른 부분은 정책결정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미래를 생각하기 위한 도구로 (3) 고등교육 미래 모습을 보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한 구조화된 신중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4가지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네트워크 기반 개방 시스템(Open Networking): 이 시나리오에서 고등교육은 매우 국제

화되고, 고등교육기관, 학자, 학생간 그리고 기업과 같은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크게 발달됨. 이 모델은 경쟁보다는 협력에 기반하고 있음. 고등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관련 시스템들이 점차 원활하게 작동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은 국제화된 고등교육 네트워크에서 자신이 원하는 코스를 택하고, 스스로 자신의 교육과정 및 학위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음. 국제협약에서 정한 몇몇 제한규정 내에서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의 자율권을 가짐. 상급 직업교육 기관들도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점차 일반 고등교육기관처럼 변화하게 됨.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는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와 기관간의 긴밀한 네트워킹으로 강화됨. 고등교육기관간 서열은 여전히 존재함.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고등교육기관도 연구 자료, 연구 도구, 데이터 등에 실시간 접근이 가능함.

- (2) 지역사회 연계 중심 시스템(Serving Local Communities): 이 시나리오는 국제화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음. 이 시나리오에서 정부는 고등교육기관의 국가적 사명을 강하게 강조함.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및 연구는 대학 소재 국가 및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춤. 고등교육기관은 현재와 같이 주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통제를 받음. 소수의 엘리트 고등교육기관과 학과는 국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국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함. 그러나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은 지역사회 필요에 초점을 맞춰 교육과 연구를 수행함. 국제화나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적어 재원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지는 않음. 지방 정부와 기업들이 지역 대학을 적극 지원하고, 여가 코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기도 함. 대학과 폴리테크닉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초기 및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설계·제공함. 고령자에게는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제공함. 인구가 고령화되고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 과거에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 고등교육기관이 사라지지 않음. 물리학이나 공학과 같은 전략 분야 연구는 정부 부문에서 수행하고, 국제협력 연구는 보다 제한된 소수의 우호 국가간에서 유지됨. 대학 교수는 연구는 하지만 그들의 일차적 사명은 교육임.
- (3) 신공공관리 시스템 (New Public Responsibility): 고령화 사회 진전(의료비와 연금 부담 확대)으로 촉발된 정부 재정 압력으로 정부예산이 주 재원인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정부는 시장기제와 재정 인센티브 등 새로운 경영방식을 사용함. 책무성,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 대응성 등의 공공관리 기준을 고등교육기관에도 적용함. 고등교육기관은 – 정부 예산에 대한 의존율이 높긴 하지만 – 국제교육시장, 수업료 규정 완화, 연구 특허, 그리고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재원의 다양화를 추진함. 대부분의 재원이 학생 납입금과 기업 및 민간재단으로부터의 지원으로 충당됨에 따라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 차이가 모호해짐. 학생과 그 가족들은 학습 경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데, 소득 연계 학자금 대여(income contingent loan) 방식을 사용하기도 함. 고등교육기관은

다양한 학습욕구를 가진 모든 연령계층 학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학문적 연구에 대한 평판도가 우수 학생을 유인하고 수업료 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경쟁 우위 요인인지만, 학생과 그들의 가족들은 교육의 질과 졸업생의 취업가능성과 같은 요인들을 점차 중요하게 생각함. 교육과 연구의 차별화를 통한 고등교육기관 내 그리고 기관 간 분업이 더 강화됨. 학문적 연구를 위한 공공재원은 동료평가에 근거한 경쟁방식을 통하여 지원됨. 그 결과 연구재원 획득을 위한 소수 대학들간의 경쟁이 심화됨.

(4) 대학의 상업적 운영(Higher Education Inc.): 이 시나리오는 교육시장 거래 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in education) 흐름을 반영함. 이 시나리오에서는 고등교육기관들이 교육 및 연구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함. 연구와 교육간 연계가 상당한 정도로 사라지고, 고등교육기관들은 교육이나 연구 중 그들이 정한 핵심 사업에 주력함. 연구중심대학은 거의 가르치지 않고, 대부분의 직업교육대학이나 일반 대학은 교육 서비스에만 집중함. 가장 평판도가 높은 대학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대부분의 고등교육시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작동됨. 정부는 상업적 관심이 적어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함.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원이 상업적 연구 및 교육 거래를 왜곡시켜서는 안됨. 직업교육이 고등교육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짐. 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데, 많은 대학들이 교육 프로그램의 프랜차이징 방식으로 해외에 분교 캠퍼스를 설립함. 고등교육기관간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져 어떤 대학은 학부 교육을 특성화하고, 다른 대학들은 대학원 과정 전문교육이나 연구에 집중함. 인구나 중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은 IT기술이나 농업경제학에 집중하고, 싱가폴은 개발도상국에 교육 서비스를 수출함. 연구 분야에서 스타 연구자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이 심화됨. 기초연구는 여전히 정부 몫임. 영어가 연구 및 대학원 학습 언어가 됨.

라. 유럽 고등교육 미래 시나리오

○ Twente 대학교의 고등교육정책연구센터(Center for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는 「유럽 고등교육 및 연구 전망 2020」 보고서에서 2020년 유럽 경제·사회의 변화 모습을 전망하면서 세 가지 고등교육 미래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음(Center for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 2005).

(1) 센트레일리아(the City of the Sun): 현재 볼로냐 프로세스에 의한 학사-석사-박사 3단계 학위체계가 자리를 잡음. 전형적인 고등교육기관의 모습은 정부 지원의 대규모 대학 형태를 띠며, 고령화 영향으로 정규 과정과 평생학습과정이 섞여 제공됨. 재원은 기본적으로 학생 수에 근거하여 정부가 지원하지만, 정부 채권이나 학생 납입금과 같

은 민간재원도 활용함. 비티스 비니페라에 비하여 융통성이 적고 필요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 방법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 대형 고등교육기관은 교육과 연구 두 영역에 모두 관여함.

- (2) 옥타비아(the Spider–Web City): 고등교육기관간 그리고 고등교육기관과 수요자간 복합적 네트워크가 보편화됨. 서로 다른 단계의 양자 또는 다자 협약에 근거하여 학위 유형 및 기간에 있어 센트레일리아 보다 다양하고, 지역적·시대적 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융통성이 뛰어남. 이 시나리오에서 고등교육 재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파트너십을 통하여 양자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부담함. 공공부문 재원은 교육기능에 초점을 맞춰 사용됨.
- (3) 비티스 비니페라(the City of Traders and Micro–Climates): 이 시나리오에서는 고등교육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해지고, 시장기제가 크게 작동함. 물론 학부교육의 외부효과를 인정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민간재로 여겨짐. 성인 계속교육 및 직업교육과 긴밀하게 연계된 고등교육은 자율성과 융통성이 최대한 보장되어 일정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됨. 특정분야의 강소대학부터 대형종합대학까지 다양한 유형이 대학이 존재함. 사립대학의 비중이 커지고 고등교육 투자에 있어 단기 인센티브가 정부가 관리하는 센트레일리아 경우보다 크게 영향을 미침.

3. 논의

- OECD 회원국과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미래 전망 관련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고등교육 미래의 공통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1) **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 다양화**: 고등교육기관 학생 대상이 성인 근로자, 중·고령층으로 확대됨.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으로 인한 재직 근로자의 신기술·지식 습득을 위한 재교육훈련 수요 증가,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의 취미·교양교육 수요 증가 등과 같은 고등교육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기인함. 대학에서 성인 근로자나 중·고령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확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만을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이 설립·운영될 수 있음.
- (2) **특성화·전문화**: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전문화가 보다 진전됨. 이는 고등교육기관 운영에 있어 효율성·효과성·대응성·책무성 등이 강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정부

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 경제성과 공공성(형평성, 시장실패 대응) 관점에서 보다 높은 투자 성과 창출을 요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는 부담 수업료 대비 보다 높은 고용가능성과 임금을 기대함. 학부교육에 집중하는 대학, 연구에 치중하는 대학, 특정 학문분야 전문대학 등이 확대됨.

- (3) **복합적 네트워크화**: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에 대해 보다 효율적 ·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간, 고등교육기관과 기업 · 정부 · 연구소간, 또는 고등학교-대학-대학원간 등 연계 · 협력 구조가 더욱 활성화됨. 보다 원활한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교육 과정 표준화 · 모듈화, 거버넌스, 재정 확보 및 지원 방식 개편 등이 함께 이루어짐.
- (4) **국제화**: 세계시장에서의 국가 및 대학 경쟁력 제고 · 유지를 위해 국가 간 고등교육 연계 · 협력체제 그리고 대학 간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 공동 수행 등이 보다 체계화 · 활성화됨. 유럽 볼로냐 프로세스에 의한 학사-석사-박사학위 체계의 통일과 같은 국가 간 협약을 통한 국제화부터 개별 고등교육기관간 양자 또는 다자간 연계 ·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대학교육의 수출 및 수입이 확대됨.
- (5) **지역화**: 국가 및 대학 소재 지역의 사회 · 경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사명이 강조됨. 고등교육기관은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맥락에서 각각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는 바, 지나친 국제화 강조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산업 발전 및 주민의 교육적 수요 충족에 1차적 관심을 갖는 대학이 증가함.
- (6) **고등교육 재정 및 거버넌스에 시장기제 확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연금 부담 증가 등 재정 압박으로 고등교육 재원의 다양화(학생, 기업 등)가 진전되고, 재정 부담자에 대한 책무성 보장 관점에서 고등교육 관련 의사결정에 이들의 참여가 확대됨.
- 고등교육 미래모습 변화 전망은 상기 변화 트랜드가 각각 어느 정도의 규모와 속도로 진행되고, 서로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 각국은 고등교육의 전통 및 운영 방식, 경제발전 전략과 특성,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 등에 있어 고유의 특징이 있는 바,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미래 모습 전망은 상호 다르게 나타날 것임.

V. 미래 고등교육 체제 전망 리뷰

- 선행연구 검토는 단·중기 비전하의 발전방안, 장기비전 하의 발전방안, 초 장기 비전 하의 시나리오, OECD의 시나리오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선행연구 검토 순서는 1. 단 중기 발전 방안 연구, 2. 장기 비전 하의 체제 변화 전망, 3. 초 장기 비전하의 고등교육 시나리오, 4. OECD시나리오 5. 시사점 순으로 검토

1. 단·중기 발전 방안 관련 연구

가. 전문대학 발전방안

- 한국 전문대학의 미래 예측에 관한 연구(이용균·이기성, 2010)
 - 2020년경 전문대학의 존속 규모는 101개, 적정규모는 82개 수준
 - 2020년 전문대학 존속 학교수, 신입생의 기초학력 수준, 전임교원대학생 비율, 전체 취업률 및 정규직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학력별 임금 격차 등에서 현행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전문대학의 미래 규모 및 세부 항목 면에서 전망
 - 대학과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미흡
-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문제점과 혁신 방안(정태화, 2009)
 - 일반교육 경로(고급기술자, 학자 양성), 직업교육 경로(중견기술인 양성, 재직근로자 계획교육)을 구분하여 양성
 - 전문대학을 산업대학으로 개편한 후 수업연한을 1~4년으로 자율화
 - 고등교육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문학사 과정과 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
 - 현행 체제 유지 시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철저한 차별화 방안 강구
 - 직업교육기관 간의 학과 교환과 직업교육기관 간 통합 운영체제 구축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공
- 전문대학 국제화 및 선진화 방안 (김성태 외, 2009)
 - 전문대학 직업교육 국제화 방안 제시

나. 대학 발전 방안

- o 대학자율화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 관련 법령 체제 개편 연구(김문현, 2008)
 - 대학자율화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시
- o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강화(류장수 외, 2008)
 -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관 접근성 제고
 -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및 사내대학 활성화
 - 고등교육 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o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박정수 외, 2009)
 -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7대 과제 제시
 - 다양한 대학 리그 조성
 - 장소학부교육 중심대학 및 세계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
 - 대학교육과정의 혁신(다양한 교육목표의 제시, 교양 및 전공구조, 교육의 품질 관리
 - 우수교수의 Critical Mass 확보
 - 교육의 질과 출구관리의 강화
 - 대학경영시스템의 선진화
 - 대학 자율경쟁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 o 사립대학 구조조정 필요성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박정수 외, 2009))
 - 대학 간 통·폐합 특례 상시화
 - 미개교 법인 해산의 적극 추진
 - 학교법인과 대학의 설립요건 심사기준의 강화
 - 부실대학 선별기준 마련과 퇴출의 촉진
 - 민간 부문에서의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기구 설치 운영
 - 대학평가·인증 제도, 정보 공시와 연계한 대학 구조조정
- o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인력수급체제 개선 연구(김철희 외, 2010)
 - 경영한계에 도달한 사립대학의 자진 폐교 유도·지원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고등교육 체제 구축
 - 대학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반영한 대학특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 대학자체 평가를 통한 학과 구조조정

다. 대학원 발전방안

- o 대학원교육 선진화 방안(민경찬 외, 2011)
 - 통합형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 체제 모색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직업석사 과정의 도입
 - 전문분야 석사학위의 강화
 - 공학·경영 등의 분야에 있어 학·석사 통합과정의 운영
 - 정보 공시를 활용한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 방안
 - 대학원 재정지원 방식의 개선
- o 대학원체제 개편방안(반상진 외, 2006)
 - 대학원 관련 법령정비
 - 전국 수준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 통합형 대학원 체제 모색 등

2. 장기 비전하의 체제 변화 전망

- o 고등교육 장기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채재은, 2009)
 - 비전의 방향
 - 대학교육 시스템의 유연화(flexibility)
 - 국경과 지역을 넘는 고등교육의 개방화(openness)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등교육의 효율화(efficiency)
 - 책무에 기반한 고등교육기관의 자율화(autonomy)
- o 고등교육 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과제1> 평생학습 친화형 유현한 학사운영 및 학위체제 개편

가. 배경 및 필요성

- 성인학습자들의 직업역량 수요와 대학의 새로운 학생지원 발굴 수요간의 효과적인 접목 필요
- 학문발달과 산업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위체제 혁신 필요
-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고령인구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나. 정책과제

- 일과 학업이 병행 가능한 시간제 등록제의 보편화
- 전공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위별 최소 이수 학점제’ 도입
- 산업현장, 근로자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학위 유형 도입
- 성인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습휴가제와 고등교육간의 연계 강화
- 고등교육 분야의 선행학습 인정제도 확대
- 노년층의 평생학습 요구를 충족하는 대학교육 확대

<과제2> 소외계층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

가. 배경 및 필요성

- ‘대학 입학 이후의 경제력 향상’ 중심의 현행 대학생 학자금 지원정책의 한계
- 저소득층은 물론 가계소득 중간계층까지 등록금을 포함한 대학교육비 부담 문제 확산
- 평생학습 시대의 도래에 따라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자금 지원 필요

나. 정책 과제

- 경제력-정보력-학력 향상을 위한 토탈 지원체계의 구축
- 대학입학을 목표로 한 소외계층 학생의 학력 증진 정책 강화
- 가계소득 중간계층 이하 대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위한 경제 부담 완화
- 소외계층 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대학입학 준비를 위한 정보력 향상
- 소외계층·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생활 적응 및 정보포털 서비스 제공
- 소외계층 대학생의 대학원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과제3> 유비쿼터스 고등교육 환경 조성

가.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IT기반의 대학혁신 및 대학 경쟁력 제고 필요
-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 편이성과 교육방식의 다양화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 캠퍼스 환경 구축 필요
- 급격한 정보통신기술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정보화 기반의 지속적인 고도화 요구

나. 정책과제

- Teaching 2.0 시대의 e-러닝 교수-학습체제 구축
-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
- 최첨단 교수-학습관리시스템 구축

<과제4> 국제화를 통한 고등교육 시스템 역량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선택이 아니라 국가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 핵심 전략으로 부상
-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국제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추진실적은 아직 까지 매우 미흡한 상태
-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국내 대학들의 캠퍼스 국제화가 절실히 요청

나. 정책과제

- 해외유학자 인력 관리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전략적 유치·활용
- 외국 대학 및 프로그램의 전략적 유치 및 캠퍼스 국제화 지속 추진
- 고등교육기관간의 상호협력, 학생·연구자의 이동 및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아시아 지식협력체(Area of Knowledge) 구축

<과제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의 사회·경제적 자본 형성의 중추로서 대학의 혁신적 역할 요구 증대
- 고등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가 국가의 필수적 과제
- ‘대학 재학생 지원 중심’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한계
- 평생학습시대, 국제화시대에 지방의 다양한 요구 충족 필요

나. 정책과제

- ‘지역 복합문화 및 혁신센터’로서 대학의 기능 강화
- 지방대학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평가기제 운영
- 지방대학의 탄력적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지원

- 국제화와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와 지방대학의 상호발전 유도

<과제6> 「산업선도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체제 혁신

가. 배경 및 필요성

- 고용위기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의 정립이 시급
- 불황기에 맞는 ‘산업선도형 산학협력’ 인재양성 방안 마련 필요

나. 정책과제

- 산업체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력교류 확대
- 서비스업 등 새로운 산학협력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산학협력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 산업체와 대학간의 지속성 협력을 위한 ‘호혜형 산학협력’촉진
-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고등교육단계별로 적합한 산업선도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과제7> 대학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구조개혁 지속 추진

가. 배경 및 필요성

- 대학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양적으로 팽창된 대학의 구조조정 불가피
- 특화된 학과 중심보다는 백화점식 학과(부) 및 교육과정을 제공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이루지 못하여 대학의 브랜드화 지체
- 국립대학 법인화가 지체됨에 따라 국립대학의 경쟁력 저하

나. 정책과제

- 국립대학 통·폐합
- 국립대 법인화
- 사립대학 구조조정

<과제8> 융복합 학문의 활성화와 신진고급 두뇌 발굴 지원

가. 배경 및 필요성

- 선진 각국은 이미 미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융합기술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가속화

- 그러나, 선진국 학문 습득을 위한 잠재적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이 지속되고, 국내박사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낮음

나. 정책과제

- 융합 연구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사구조 유연화
- 고급융합기술 연구인력 양성
- 우수 석·박사과정생 연구장학금(Dissertation Grant) 지원

<과제9>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력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인해 인재상에 대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인재 양성을 책임지는 대학교육 개혁의 필요성 증대
- 대학에 투입되는 비용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대학교육의 효용은 불확실해짐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과 효과를 강조하는 추세

나. 정책과제

- 고등교육의 질, 영향력,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고등교육 질 보장 체계와 연계
- 대학의 교수-학습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 마련
- 잘 가르치는 대학, 잘 가르치는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화

<과제10>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질 보장 체계 구축

가. 배경 및 필요성

-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기제 확립은 고등교육개혁의 성공에 근간이 되는 요소임
-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기관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계속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 책무성 정책의 방향은 적절하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

나. 정책과제

-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구축 및 안정적 정착
- 대학정보공시체제의 정교화
- 고등교육 질 보장 총괄·조정 기능 수행 주체 정립
- 국내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를 국제적 질 보장 체제와 연계

3. 초 장기 비전하의 고등교육 체제 변화 (시나리오)

o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유현숙 외, 2011))

- 향후 30년(~2040) 을 내다보는 미래 전망

□ 비전 설정의 방향

- 미래 사회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창조”, “행복”, “지속가능”, “조화”의 4가지로 전망하고 각각의 키워드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 변화 전망

□ 고등교육 체제 전망

가. 창조적인 사회를 주도하는 고등교육

1) 개요

21세기 경제사회와 학계의 핵심 학문은 “융합(fusion)”이다. 융합은 이질적인 요인들이 결합해 강력한 에너지로 기존의 특성들과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지식융합과 학문융합은 21세기의 ‘새로운 가치창조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식융합시대의 지향점은 창의성(creativity)으로 규정된다(김광웅, 2009; 이인식 2008).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조, 혁신, 감성을 키워드로 하는 스마트사회의 등장으로 대학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새로운 가치창조 활동의 중심에 위치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사회의 고등교육은 융합형 인재배출을 통해 스마트 사회를 주도하게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대학은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추동하는 창의적 지식 생산을 통한 경제에 더욱 중요한 주체로 부상할 것이다.

2) 창조적인 사회를 주도하는 고등교육의 SWOT 분석 및 과제

		강점(S)	약점(W)
		내부 환경	외부 환경
기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기반의 산업 구조로 전환 ◦ 세계적 수준의 한국 기업 등장 ◦ IT, BT, 뇌과학 등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 ◦ 지식의 융복합 ◦ 환경과 문화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에 대한 재빠른 적응 ◦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대학의 연구 역량 ◦ 높은 (이공계) 고등교육 학생비율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 <p style="text-align: center;"><우선 수행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 없는 캠퍼스 구축 ◦ 융복합 첨단 과학기술분야 창조적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고한 대학내 (학과간) 대학외 (기업-대학-정부) 협력 ◦ 주입식 위주의 교육체제 ◦ 대학 교육 질에 불만 ◦ 세계적 대학과 견주어 미흡한 대학연구의 질적 수준 <p style="text-align: center;"><우선 보완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 기반 대학의 교육·연구 통합체제 구축 ◦ 학부/학과 융합가능 학과구조 (Convergence-oriented Structure) 설계 ◦ 융합사회에 대비하는 뇌기반 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 질적 방법 중심의 대학연구 평가 체제 강화
	위기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등 동아시아 국제 경쟁 강화 ◦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국내 기업 불만족 상승 ◦ 고등교육제도 혁신에 대한 대내외식 미약 	<p style="text-align: center;"><리스크 해결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수준의 국제 고등교육캠퍼스 구축 ◦ 과학-기술-산업 융합을 주동하는 대학-기업 연계강화

나.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고등교육

1) 개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는 생산성 감소, 개인적으로는 긴 노후 대책 문제가 미래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리 사회의 웰빙(well-being)을 위하여 미래 고등교육은 기존의 교육목적과 기능을 재정의, 재설정하여 성인 재직자 및 노령층의 직업 역량 및 생산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고등교육은 무엇보다도 성인, 특히 40대에서 60대 성인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고도화된 지식기반社会의 핵심인력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이 쉽게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고, 성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며, 성인의 지속적인 자기계발 및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고등교육의 SWOT 분석 및 과제

내부 환경		강점(S)	약점(W)
외부 환경			
기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구조 재편 및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직업이동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년퇴직자층의 재취업 요구 증대 	<p>〈우선 수행 과제〉 제3기 인생대학 체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 및 대입전형제도 개선을 통한 성인 고등교육 진입 장벽 제거 노년 퇴직자층 전문교육 과정 제공 	<p>〈우선 보완 과제〉 학습-고용-복지 통합체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환교육체제 구축 성인 고등교육 재정분담 체계 구축
위기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및 입학자원의 감소 	<p>〈리스크 해결 및 장기보완과제〉 지역 사회 교육거점으로서 고등교육체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성인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기능 확대 지역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고등교육

1) 개요

미래사회는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푸드, 물 등의 환경 자원의 가치가 더욱 중시되고, 환경의 보전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 및 통합과 균형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할 것이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 사회안정 및 통합, 환경보전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개발·제시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사회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즉, ‘지속가능사회를 이끄는 고등교육’이란, 지속가능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체제 및 녹색융합기술의 고도화를 주도하는 고등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고등교육의 SWOT 분석 및 과제

내부 환경		강점(S)	약점(W)
외부 환경		◦ 고등교육 보편화로 이를 통한 환경 대응 위한 활발한 교육, 연구, 정책개발 가능 ◦ 대학의 녹색융합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기반 확대 ◦ 친환경 구축을 위한 대학 사회의 관심 확대	
기회 [O]	위기 [T]	〈우선 수행 과제〉 ◦ 녹색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체계 활성화 ◦ 대학의 친환경 경영 활성화	
		〈우선 보완 과제〉 ◦ 기후변화 대응교육의 다각화·전문화 ◦ 경제·사회·환경 통합적 교육 및 연구체제 구축	
		〈장기 보완 과제〉 ◦ 녹색융합기술의 세계적 연구기반 구축 ◦ 녹색융합기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의 핵심적 역할 확립	

라.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고등교육

1) 개요

다가오는 2040년에는 동아시아 국가 중심의 신흥시장경제권 영향력 확대, 남북한 통합, 경제적 격차에 기인한 삶의 질 양극화 심화 등의 정치적 격변과 경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구성원들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대내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 갈등과 반목의 골을 깊게 하여 구성원 전체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고등교육이란 이러한 국내외 정치경제적 변화에 기인한 국내외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고등교육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 더 나아가 지구촌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고등교육의 SWOT 분석 및 과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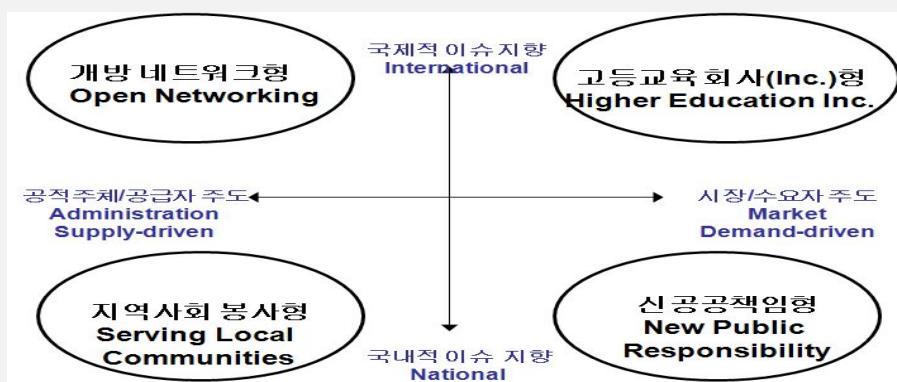
		강점(S)	약점(W)
내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등교육 성장을 견인한 강한 추진력 •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고등교육 수요자 유치 의지 확대 • 정부 대외개발원조 정책과 연계된 고등교육 국제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제반 인프라 미흡 • 양적 성장 위주의 고등교육 국 제화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 • 학생교류에 국한된 단편적 교육 협력 프로그램 • 핵심산업분야별 인재양성 및 인력공급과 국제화 정책 연계 미흡
외부 환경			
기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 ◦ 중국 사회의 상대적 경직성/ 폐쇄성 ◦ 계속된 경기 침체에 따른 일본의 국력 약화 ◦ 아시아 국가 중심의 신흥 경제강국들의 부상 ◦ 국내 기업들의 성공적 세계화 ◦ 국가 인지도 상승 	<p style="text-align: center;"><우선 수행 및 우선 보완 과제></p> <p style="text-align: center;">역내 국가들의 조화로운 경제 발전을 이끄는 아·태 지역 통합 글로벌 인재양성체제 구축 주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 지역 통합 글로벌 인재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 프로그램 마스터 플랜 수립, 시행 ◦ 국내외 노동시장 인력수급 및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유학생 정책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위기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들의 공격적인 국제화 정책 추진 ◦ 북한의 도발에 따른 위험지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3)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고등교육의 SWOT 분석 및 과제(2)

		강점(S)	약점(W)
내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정보 부족 ◦ 남북한 통합 고등교육 체제 개혁에 대한 장기비전 및 구체적 추진 계획 미흡
외부 환경			
기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정치, 경제적 위기에 따른對북한 관심 고조 ◦ 고위층과 지식인층 탈북자수 증가로 인해 북한 교육 실태에 대한 정보 원천 증대 		
위기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내부의 체제 불안정성 증대 ◦ 이라크, 이집트, 리비아 등 친북 장기독재정권 체제 유지국들의 정치적 급변에 따른 북한 체제 불안정성 증대 ◦ 경색된 남북관계의 장기화 	<p style="text-align: center;">중장기 보완 과제></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고등교육 체제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이후 북한 고등교육 발전 계획(안) 수립 및 기반 조성 ◦ 남북한 고등교육 학위 및 자격 상호호환성 제고를 위한 제도, 법·규정 개혁(안) 수립 ◦ 남북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분담 최적화 및 대내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4. OECD의 고등교육 미래 시나리오

OECD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시스템 개혁안을 준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미래 고등교육 시나리오를 제시함. OECD는 국제적/국제적 지향성과 시장주도/공적주체 주도의 두 축을 활용하여 미래 고등교육기관의 발전 모델을 4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제시함. 각 시나리오별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 1: 개방 네트워크형

- 고등교육은 국제화되고 대학, 교수·연구자, 학생 그리고 산업체 등이 서로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경쟁보다는 협력 지향적으로 운영되는 모델이다. 학생들은 글로벌 고등교육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학업 코스를 선택하고 자신의 교육과정과 학위를 디자인하게 된다. 개방 네트워크형 체제 하에서는 국제공동연구가 강화되는데 고등교유직관의 서열구조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비슷한 명성을 가진 기관끼리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또한 기술주도 네트워킹으로 연구중심대학이 아닌 경우에도 지식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한적 자원을 지닌 대학의 교수와 학생은 원격으로 연구물과 연구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컴퓨팅, 시각화 도구들의 활용도가 극대화 된다.

□ 시나리오 2: 지역사회 봉사형

- 고등교육기관이 국가 및 지역사회 임무 수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인 요구를 적극 수요, 연구와 교육 활동에 반영한다. 현재와 같이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다. 국제적 대학 순위나 연구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국내 현안에 치중하게 된다. 지방정부와 기업체가 지역 대학의 주요 재정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산업과 관련한 코스가 수익을 창출한다. 일반대학과 직업중심 기술대학이 비슷한 위치에 놓이고 대학에서 연구 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양자 모두 지역 산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초 및 평생교육을 설계한다.

□ 시나리오 3: 신공공책임형

- 고등교육 재정은 공적인 재원을 주로 하지만 시장과 재정적 유인을 포함한 신공공 관리형 도구 활용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동 시나리오하에서 고등교육기관은 법적으로 민영화된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공적 재정지원에 의존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증대, 수업료 인상, 연구 특허화, 기업체와의 재정 연계 강화 등 재정 확충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된다. 학생 수업료, 기업체 자금, 민간재단 기부금 등 대학의 재원이 민간으로부터 나오면서 공립과 사립의 경계를 허물어지게 된다. 대학은 국가 및 다른 재정지원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책무성을 갖게 된다. 대학 간 또는 대학 내 분업은 두드러지고 대학마다 교육과 연구 관련 미션을 특화하게 된다.

□ 시나리오 4: 고등교육 회사형

- 고등교육기관은 사업적 기반에서 교육과 연구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연구와 교육은 한층 분리되고 고등교육기관은 각 기관의 주력 서비스-교육 또는 연구-에 집중하게 된다. 시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작동하고 고객의 요구에 반응하며 효과적인 대학행정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학생 유치를 위한 극심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많은 대학들이 해외 대학 신설이다 분교 캠퍼스 설치에 적극 나서게 되고 교육프로그램 프랜차이즈가 조명을 받게 된다. 고등교육에서도 국제적인 분업이 나타나 일부 국가가 양질의 학부교육으로 명성을 얻는 반면 다른 국가는 대학원과정 학생 훈련과 연구 수행에 경쟁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도국은 특정 연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예. 인도의 IT 기술, 중국의 농학 등) 연구의 아웃소싱이 일반화된다. 영어는 연구와 대학원 교육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되고 자국어는 직업교육 및 학부교육에서 사용된다.

5. 시사점

가. 선행 연구들의 제한 점

- o 양적 추계의 한계
 - 인구 고령화 및 학령인구 추계치가 각기 다름
 - 양적 추계와 구조조정과 연계함에 있어서 미래의 고등교육 유형변화에 대한 숙고가 미흡함(단순히 학교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 그러나 고등교육이 공간과 시간

을 초월하여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단순 추계가 모호한 수치일 수 있음)

o 단기 방안에 치중되어 있음

- 구조조정, 국제화, 질관리 등은 비교적 단기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고등교육의 방법과 유형에 대한 시나리오가 중요함

o 장기 방안을 탐색함에 있어 시나리오 기법 부족

- STEEP 분석 미흡
- 간 학문적 접근 미흡
- 다양한 시나리오 기법 활용 미흡

나. 비전 설정을 위한 rationale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over supply
- 고등교육의 국제화 개방화
- 고등교육 재정 투자에 따른 효율성 제고 필요
- 자율과 책무의 균형을 이룬 정책 필요

다. 비전 영역

변화 요구	과제
학령인구 감소 및 초과공급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
재정한계와 책무성 요구 증대	성과에 근거한 대학평가, 신 공공책임형 대학 등장 대학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스마트 사회 첨단기술 사회	창의인재육성, 산업선도형 인재육성 기업형 교육, 유비쿼터스 교육환경 구축, 융복합 및 하이브리드 교육 및 연구체제 구축
국제화·개방화 사회	국제 통용성 교육체제, 개방 네트워크형 교육, 다문화 대비 교육체제, 국제 수준의 질 보증제도 아·태 지역을 주도하기 위한 고등교육

고령화· 웰빙사회	평생학습 친화형 교육 체제구축, 은퇴 후 교육, 여가교육, 지역사회 봉사형 대학의 강화
조화로운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지역간 균형 발전(지방대학문제) 남북한 통합 대비 고등교육
기타	친환경 교육체제, 지속가능한 교육체제 등

VI. 고등교육 체제개편에 대한 델파이 조사

1. 조사 개요

여기서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요구와 미래사회의 변화 및 요구와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함. 전문가 의견 조사를 위하여 고등교육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 고등교육 전공 교수 및 전문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기획처장과 교무처장, 한국교육학회의 분과학회장을 대상으로 델파이 참여 의사를 묻는 메일을 발송함. 동 메일에 답장을 준 응답자를 중심으로 총 40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함.

응답자는 국책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16명, 4년제 대학교 기획 및 교무처장 9명, 고등교육 전문가 11명, 전문대학 기획 및 교무처장 4명으로 구성됨.

이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 등),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교육과정 개혁,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대학교육의 질 통제(대학평가 등),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대학의 연구력 강화, 대학의 교육력 강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방안별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세부과제에 대하여 질문함.

1차 조사는 2011년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40명의 조사 대상자 전원(응답율 100%)이 응답함. 질문지는 자유기술식으로 의견을 묻는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함. 2차 조사는 2011년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40명의 조사 대상자 전원(응답률 100%)이 응답함.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응답 내용을 유의미한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각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중요도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서술하도록 함.

3차 조사는 2011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 40명 전원(응답률 100%)이 응답함. 3차 조사는 1, 2차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1, 2차 조사에서 다루어지

지 않은 기타 사항 및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2. 1차 응답 결과

가.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

- 미래 한국사회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그러한 영역으로 저출산 고령화, 분권화와 지역발전, 지식기반사회 가속화, 세계화의 심화, 급격한 사회변화와 양극화, 가치관의 변화,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 등을 들 수 있음.
-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미래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1>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합계
저출산고령화	19	3	2	4	2	30
지식기반사회 가속화	12	7	6	2	1	26
세계화의 심화	1	11	4	5	3	21
급격한 사회변화와 양극화	2	3	9	3	4	23
분권화와 지역발전	1	4	3	3	5	16
가치관의 변화	1	3	6	3	1	14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		1	1	1	4	7
기타		2	1		1	3

* 기타응답으로 스마트 및 하이브리드사회, 대학에 대한 요구 증대, 다양성 존중 사회, 고등교육의 중앙집중화, 고등교육의 초과 공급현상 등이 있음.

나.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

- 저출산 고령화, 분권화와 지역발전, 지식기반사회 가속화, 세계화의 심화, 급격한 사회 변화와 양극화, 가치관의 변화,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생각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2>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빈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16	1	2		1	20
대학교육의 질 통제	3	3	5	5	3	16
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 등)	1	7	6	2	3	21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2	1	3	4	2	11
교육과정 개혁	2	6	4	1	1	14
대학의 교육력 강화	3	3	2	3	3	13
대학간 구조조정		3		1		7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2	2	2	2	3	9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1	2	2	2	1	9
대학의 연구력 강화	1	1	1	1	1	5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1	2		2		5
대학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	2	2				4
대학 거버넌스 개혁	2	2	2	3		9
기타			2	2	3	7

* 기타 응답으로는 남북 통합에 따른 체제 정비, 산학연 체제의 강화, 통일한국, 다문화 한국 리더십, 대학 재정의 부담과 운영 투명성, 사회적 연계강화, 국사립 대학간 적정 분담 비율, 국가인재와 지역인재의 양극화 심화, 융합형 인력양성 수요 급증, 창의적 중심의 지식기반 중시, 적정 고등교육 인구 규모 등이 있음.

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 등),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교육과정 개혁,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대학 교육의 질 통제(대학평가 등),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대학의 연구력 강화, 대학의 교육력 강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방안별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부과제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3>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 안	응답수
우수대학 집중육성(30개교)(연구중심, 교육중심)	15
지방대학 경쟁력강화	10
대학의 자율성확대	9
미래기술 선도분야 협력 강화	9
대학의 책무성 제고(대학 및 교수 책무성 보장기제2)	9
대학원 경쟁력강화	8
대학거버넌스 체제혁신	2
경쟁력 개념상세화 및 성과지표개발	1
계량화된 지표 이외 정성적 지표 보완이 필요	1
공동학위제등 대학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강화	1
대학간/학과간 통폐합을 통한 CriticalMass(인적/물적자원)조건충족	1
대학교육 질 보증제도의 정착	1
대학별 특성화(탁월성중심의 우수대학과 지역산업관련인재양성)	1
대학유형/목적에부합하는 고등교육체계의정립	1
대학의 산업기여	1
대학의 연구여건조성	1
대학의 질적 통제체제 확립	1
부실대학의 정리 강화	1
우수교수 확보	1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취업률중심의 평가로 인한 부작용최소화	1
질관리를 위한 정보공개	1
평가기제 정착	1

<표 VI-4>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대학내 구조혁신 (특성화 등)

방 안	응답수
통용성 높은 교육과정으로 개혁	14
특성화 유도를 위한 정부재정지원방식개선	11
학과간 구조조정	8
지역산업과의 연계	7
정원 감축	5
대학의 특성화	2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준국립대학(가칭)의 전체적방향과 정체성정립	1
국립대학 육성방안마련과 사립대학의 자율성확보	1
다전공 활성화	1
대학의 특성화에 부합하는 평가 지표의 개발에 의한 객관적 대학 평가	1
블록펀딩과평가의 엄격화	1
대학지배구조 및 투명성개선, 비리척결	1
대학행정혁신	1
학과중심에서 벗어난유연한 교수조직	1

<표 VI-5>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

방 안	응답수
국립대 통폐합	15
경영부실사립대학 구조조정	15
대학정원 감축	10
국립대학 지배구조(법인화)	7
전문대학별 특성화 방안	7
대학의 거버넌스의 개선필요	2
교수학생중심의 재정지원제도정착	1
국립대학 특성화 유도	1
다양한유형의 대학 및 프로그램운영	1
대학 자율성 확대	1
대학생 대학원생의 능력 극대화	1
대학유형/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체계의 정립	1
대학의설립목적이 뚜렷한대학을 중심으로대학을 육성하되, 지역거점형 태는부가적으로 고려될수있음	1
전문대학과 대학간의 동일한조건하에서경쟁유도	1
정부주도의 특정 학과 지원 배제	1
정부지원 대학의 집중화	1
특성화를 통한 downsizing 유도와 관련 기관의 통합	1
특정학과의 대학대학원 동시지원배제	1

<표 VI-6>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방 안	응답수
연구자 교류 확대	15
유학생 유치	13
국내대학 해외진출	12
해외 우수대학 유치(국내대학과 연계)	10
해외대학과 공동연구 및 교육체제구축	2
교육과정의 국제 표준화	1
국제화에 부합하는 대학 프로그램정립	1
명확한 방향설정후 중장기관점에서 전략적접근 시도필요.	1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주도	1
유학생 교육과정 질 향상	1
유학생관리 체계정립	1
주요대학에서 국내학위자 고용할당제	1
해외잠재적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대학입학설명회' 등 지원 필요	1

<표 VI-7>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교육과정 개혁

방 안	응답수
전공 과정의 직업연계성 강화	14
교육과정의 통합/융합성 강화	13
교육과정의 국제 통용성 강화	8
대학원과 학습연계 강화	4
동문 및 기업의 교육과정개정과정 참여보장	3
교수개인용 교육과정 탈피	2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매뉴얼화(표준화)	2
교육과정 적용 결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및 feedback	2
각대학 교육철학이 반영된 교육과정의 개발·적용	1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1
교수법 혁신, 교육수요와 교수 전공의 불일치 해소	1
교양과 전공지식의 구분	1
교양과정의 창의력	1
교육과정의 개별화 체제구축	1
국가인정박사학위 제도입	1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1
기업연계형 과정과 순수 연구형 과정의 차별화,	1
다전공 활성화, 학생 진로와 연계한 트랙 개발 운영	1
사회 변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1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과 교양 교육과정의 국제화	1
외국어능력배양	1
융복합 대학원의 설치	1
융합과정은 대학원 중심으로 연구와 병행하는 교육과정 개편	1
이론과 실무지식의 구분	1
창의적 교양 및 전공과정의 운영	1

<표 VI-8>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방 안	응답수
국제적 이러닝 체계	12
다학기제 도입	9
선진화된 정보화 서비스	8
사이버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5
교수의 강의 공개 강화 및 강의 평가의 실질적 운용	2
학기 운영의 다양화	2
고령화에 부응하는 개방형 학사운영체제구축	1
교육자료 및 강의 공개분위기조성이 필요함	1
브랜디드러닝	1
사이버 학습의 교양과정 중심화	1
사이버대학간 특성화방안	1
성인의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1
시간제 학생 제도 정착	1
이런닝 뿐만아니라 Offline학습의 개방	1

<표 VI-9>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대학교육의 질 통제(대학평가 등)

방 안	응답수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9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8
고등교육연구원 설립	6
국가공인박사학위제 도입	6
대학평가 의무화	6
대학 평가 기준의 합리화, 객관화	3
기관평가보다는 개별 학과 등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정착	3
대학의 인증제 강화방안	3
대교협의 기능고도화로 수용가능	1
대학의 자율성 최대한 확보	1
대학자율화와연계한대학평가업밀화	1
대학평가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1
대학평가지표에 대한 새로운 고민	1
실질적 교육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 연구 개발	1
정부 주도의 평가에는 반대 따라서 재정지원 연계도 부정적	1
지식의 현장 적응력 제고(실제 사회에서 활용되는 교육)	1
평가결과의 강력한 집행	1
현재대학은민간언론사의평가에더비중을두고있고, 대교협을통한정부의평가는 단지정부의재정지원자격요건으로서만인식되고있음	1
협의회 등 대학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기관을 배제한 독립적인 평가기관 설립/운영	1

<표 VI-10>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방 안	응답수
성과중심 재정지원	11
선택과 집중	8
수요자중심 재정지원	7
재정지원 확대	5
학생지원 위주 재정지원	3
국사립대학간 재정지원 차등 철폐	2
국가고급인재양성 측면에서 선별적 재정지원	1
기업 재정지원 성과와 연계한 정부지원	1
기업체의 대학교육투자 확대	1
대학성과에 대한평가의 합리적개선이 필요함	1
대학의 자체적 발전전략을 교란하지 않는 재정지원정책	1
대학재정 활용의 자율성증대와 책무성확인 방안	1
대학재정은 대학의경상비를 지원할 수있어야 함	1
대학재정의 충실판 겸종체제구축	1
안정적 대학재정 확보방안	1
장기적인 투자관점에서의 평가지표보완필요	1
재정지원 규모 및 방식 법제화	1
특성화 중심 재정지원	1

<표 VI-11>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방 안	응답수
교수 평가 강화	14
교수 고용구조의 유연화	10
국내학자육성우대	9
외국인 우수교수 유치	8
교수별교육과 연구의 적정비 자율선택과 책무성	1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원임용체계	1
대학간 인적 교류 활성화	1
신임교수 지원 프로그램 확대	1
외국인 교수 유치를 위한 규제의 대폭 완화	1
외국인 교수를 유치할 수 있기 위해 외국인 교수 개인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할 수 있어야 함	1
우수교수 평가가 건수 중심으로 평가에서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1
정년보장 교수의 재임용제 강화에 따른 연구력 확보	1
주요대학에서 국내박사학위소지자의 일정비율고용할당제를 통한대학원육성과 학문의 자립도 강화	1

<표 VI-12>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대학의 연구력 강화

방 안	응답수
연구 중심대학의 집중 육성	13
대학의 R&D역할확대	12
박사과정 진학자 재정지원 확대	9
학문적 새 이론 창출과 신기술 개발 집중 육성(연구량기준 평가체제 철폐)	2
RA 및 TA제도의 정착	1
SCI중심의 연구업적평가 지양	1
교수별교육과 연구의 적정비 자율선택과 책무성	1
국내 대학원 역량 제고	1
대학 연구성과 기반 중기적 연구비 지원 확립	1
대학내 연구조직의 정착 및 연구조직 경쟁력확보	1
신진 연구 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1
우수 연구자 우대 정책 및 연구자 재정 지원	1
정부출연연과 대학연구소의 연계	1
협동연구의 강화	1

<표 VI-13>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대학의 교육력강화

방 안	응답수
교육관련 재정지원 확대	18
교수업적평가에서 교육업적 강조	9
교육중심대학 집중육성	6
창의, 융합교육의무화	2
대학의 교육력 제고 방안	2
교육중심 대학과 기업연계	1
1인교수의 강의수업에서 유연한 교수체제로 전환방안	1
AHELO 도입확산	1
교수 업적평가에서 교육과 연구의 비중을 optional하게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1
교수별교육과 연구의 적정비 자율선택과 책무성	1
교수업적 엄밀화	1
교육중심대학 소속교수에게 연구실적은 업적평가에서 제외함	1
교육중심대학은 실무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양성하는데 교육과정, 교수과정이 집중되어야함	1
연구중심대학과 연구소 연계 강화	1
직업교육 중심의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과 산학협력으로 중심축 이동	1
책임강의시수제의 폐지와 대안	1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확립	1

<표 VI-14>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교육기회 형평 보장

방 안	응답수
학자금 및 장학금 확대	16
평생교육 기회 확대	10
국사립대간 지원 차등 철폐	2
저소득층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 및 학자금 지원 증진	3
기업의 주문형 교육강화	1
기업의 직업준비 교육(인턴십)지원강화를 통한 1년치 학비절감	1
대학 입학 연령의 분포 확산(우리나라가 2024세 대학생수 세계 1위 95%정도)	1
대학원의 연구비 연계형 학자금 지원	1
변형 바우처 제도의 활용방안	1
실질적인 ICL 운영	1
평생 학습계좌제 확산	1
평생교육 관련 재정 지원 확대	1
학생들의 현 가정소득수준, 졸업후 취업소득수준에 대한 데이터 확보 체제 마련이 핵심	1

<표 VI-15>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기타

방 안	응답수
기업의 주문형 교육강화	1
기업의 직업준비교육(인턴십)지원강화를 통한 1년치 학비절감	1
기업체의 필요 인재상의 개발과 명세화	1
창의성, 융합 학제기반 교육을 위해 졸업학점 확대는 필수적이며,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여 수시과제 부여 배가, 자기 학습 강화 등을 통해 졸업 심사를 엄격히 하여 우수 인재 육성	1
국립대학부터 시범적으로 업무 분석 및 혁신 필요	1
기업체 필요과제에 대한 안내와 지원	1
대학별/전공별 배출 인재상의 개발과 구체화	1
비전임교원에 대한 처우개선(강의평가를 바탕으로 전임교원과차별완화)	1
예절, 인성교육의 강화	1
학생·교원 대비 적정 교직원수 비율 제시 필요	1
학생진로교육의 확대와 교육과정 연계	1

3. 2차 텔파이 응답결과

가.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

- 2차 조사결과 40명의 전문가들은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미래 한국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음.

<표 VI-16>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1차 응답결과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계
저출산고령화	29	2	2	4	1	38
지식기반사회 가속화	9	21	6	3	1	40
세계화의 심화	1	10	15	6	5	37
급격한 사회변화와 양극화		5	9	15	9	38
분권화와 지역발전		1	2	5	12	20
가치관의 변화	1	1	4	6	11	23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			2	1	1	4

<표 VI-17>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1, 2차 응답 비교

구분	1차 응답자수	2차 응답자수
①저출산고령화	30	38
②지식기반사회 가속화	28	40
③세계화의 심화	24	37
④급격한 사회변화와 양극화	21	38
⑤분권화와 지역발전	16	20
⑥가치관의 변화	14	23
⑦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	7	4
⑧기타의견:	5	

*추가의견: 저출산 고령화 --> 평생교육 확대 강조 필요, 사회의 변화를 근시안적인 측면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의 고려가 중요함

<표 VI-18>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의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

변화	이유
저출산 고령화	고등교육의 대상이 되는 인구비율에 따라 교육구조 및 교육내용, 운영방식이 달라지기 때문
	교육대상의 변화를 강제해 고등교육의 내용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 즉, 취업교육과 평생교육의 강화가 주요해 질 것임
	대학수의 감소, 평생학습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대학 운영의 위기상황 도래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미충원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및 특성화 중심 발전전략 전환 불가피
	학생수 감소와 더불어 대학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
	저출산에 따른 경제여건변화 및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시장 변화
	고등교육 인구의 감소
	학령인구변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큰 문제가 됨
	학령인구의 변화 등 사회경제 구조적 변화 초래
대학 운영	저출산 기조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위기이며, 이에 따라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심화되어 왔음. 최근 80%에 이르는 고등교육 수혜율, 이른바 학력인플레이션 문제, 고학력 실업자 양산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와 산업체를 중심으로 고졸채용확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바, 대학 입장에서는 더더욱 입학자원이 감소할 위기에 직면. 따라서 대학은 신입생 유치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발맞춘 '평생교육'을 고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함. 지금까지의 대학 평생교육은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음
	이미 예정된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교육시장의 수급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대학생이 줄어들어 우수학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용 인력의 생산성 배가, 시스템 효율성 배가를 위한 교육 및 연구 인프라와 프로그램 갖출 필요

변화	이 유
	<p>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적 향상과 차별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계속 교육과 재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의 개발 필요</p> <p>저출산으로 인한 대학신입생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이며 반대로 재취업을 위한 고등교육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p> <p>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의 경쟁력의 근본</p> <p>저출산 고령화는 나라의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로 생산성 저하와 복지예산 증가로 국가적 부담이 가중될 것임.</p> <p>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고등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의 문제임</p> <p>고령화사회의 도래, 모든 산업경제의 주축연령의 고령화</p> <p>다른 나라와 달리 취학률이 지나치게 높은 나라에서 고등교육 체계의 방향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시점과 연계되며, 결국 노동력 공급과 연계</p> <p>저출산 시대에 따라 자녀 교육에 대한 방향이 국가적 핵심인재 양성에 중점</p> <p>고등교육의 질 제고 필요</p> <p>고등교육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는 요인이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조직 차원,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p> <p>사회안정망 확충으로 과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고급 두뇌인력의 해외 이민 급증</p>
지식기반사회 가속화	<p>지식, 정보의 소유와 이용의 흐름이 편중되는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며, 이는 교육으로 해결 가능</p> <p>지식기반 사회의 가속화는 대학이 거부할 수 없는 필연적인 명제임. 그 중심에서 대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기존의 교육시스템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구조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p> <p>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 평생취업을 위해 평생학습이 필수적이므로 대학의 성인 재교육 기능이 증대할 것임.</p> <p>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변화</p> <p>어떤 상황에서든지 사회를 이끌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기반사회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p> <p>미래 산업구조는 지식중심경쟁, 가치창출의 핵이 지식중심, 모든 산업(1,2,3차)이 지식 중심으로</p> <p>현 고등교육으로서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 핵심역량과 같은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미흡함</p> <p>대학교육의 의미가 고등교육이 아닌 후기중등교육으로 변모</p> <p>대학교육의 내용과 대학의 역할에 대한 변화가 필요</p> <p>한국 대학의 경쟁력 미흡-질적인 변화 없다면, 한국 사회는 이류로 전락/고착화될 것임.</p> <p>지식기반 사회화로 인간의 숙련에 의존한 업무에서 탈피하여 상상력, 인문학적 사고 등이 더욱 요구되며, 새롭게 생겨나는 인간활동 영역에 대한 가치 기준의 수립과 적용을 위해 동기부여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필요</p> <p>고등교육을 통해 배출하는 인재상의 변화 및 이에 따른 대학의 기능 변화</p> <p>글로벌화와인터넷, 스마트폰의 발전은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모르는 지식도 알 수 있게 된다.</p> <p>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보의 생사-가공-전파가 가속화될 것임.</p> <p>지식의 이전과 창출이 중심되는 사회풍토</p> <p>고등교육은 지식기반社会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임</p> <p>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격, 도덕성, 문제 해결력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p>

변화	이 유
	<p>교육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과거 지식의 답습 보다, 가치 창출 지식의 생산이 요구되는 사회에 직면하면서 고등 교육이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고등교육의 역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균원적 변화가 지식기반사회로부터 일어나고 있다고 봄 ICT 등 기술발전에 따라 지식전달체계의 변화, 학습방법의 변화 고등교육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조, 확산, 보급이 중요 한국 대학의 경쟁력 미흡-질적인 변화 없다면, 한국 사회는 이류로 전락/고착화될 것임.</p>
	<p>국내 대학생들의 해외유학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국내유학비율도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앞으로 세계화가 더욱 진전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질'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또한 해외대학의 국내 진출 또한 확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내대학의 경쟁력 강화방안 또한 깊게 고민해야 할 사안임 산업체 저임금 부족 인력 심화 및 개도국 인력 국내 충원 다양한 해외 인력의 유입 국내 대학간의 경쟁체제 구조는 국제적 수준의 질적 제고라는 차원으로 변화하여 대학교육이 재평가될 것임 세계화에 따른 교육시장의 개방과 국제교류의 증대는 고등교육서비스의 국제화(내용+언어)를 가속화할 것임. 경제, 산업구조상 외국의 영향(세계화)이 점점 커지고 중요해짐 국가별 지역별 상호의존이 커짐 21세기의 특징의 하나인 세계화에 대비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시대적 사명 노동시장의 세계화 및 다변화에 대비</p>
세계화의 심화	<p>세계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서 국가발전과 인적자원교류로 인해 국제경쟁력과 상호인증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음 사회 전반에서의 개방 범위 확대와 대외 의존도 심화 속에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산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국제 감각과 외국어 능력의 강화 필요 -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 고등교육의 인적자원(학생, 교수)의 국제적 교류 확대 산업체 저임금 부족 인력 심화 및 개도국 인력 국내 충원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국경없는 고등교육이 활발해질 것임 세계화로 인하여 성과 중심의 대학간 경쟁이 치열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세계화를 정확히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 고등교육의 글로벌 아젠더가 급속히 생성 중에 있고,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대학 국가 경계의 유연화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토대임 세계화와 더불어 대학교육의 국제화가 본격화되고, 국제경쟁력 확보가 중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p>
급격한 사회변화와 양극화	<p>교육의 부재로 인한 지식, 정보의 소유와 이용의 흐름이 편중되는 경우 부작용이 심각해짐 대학교육의 확대도 급격한 사회변화의 일부였으며, 양극화는 대학의 모든 지성이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화두 고등교육의 주요한 임무가 양극화 완화,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청년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임 고등 교육은 많은 사회 문제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될 수 없고, 사회 변화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 (사회 문제를 분석하</p>

변화	이 유
	<p>여 이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제도를 만들어야 함)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장학제도, 등록금 인하 등으로 대학 발전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급속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사회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전통적 가치가 약화될 수 있음. 더불어 사회구조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수 있음 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과 사명, 재정립할 필요. 중재자, 매개자, 프로그램/정보제공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새롭게 감당해야 할 것임. 양극화에 따른 중간계층의 붕괴는 사회전체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단순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넘어 도덕적 가치관확립, 인적관계의 확장, 협동능력배양 등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필요 학생의 대학입학기회 및 재학 가능성에 대한 영향 오늘날의 양극화는 10년전과 비교해 볼때 훨씬 심화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더 큰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시장경쟁체계의 심화로 양극화 문제가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이 될 것임. 명문대학신입생의 출신계층분석에서 나타나듯이고등교육을받을기회면에서양극화가심화되고있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단절 문제에 대한 내부 고민과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묻는 사회적 요구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 노동시장과 대학의 연계 촉약 불평등의 심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계층간 교육격차에 따른 고등교육의 불평등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과 사명, 재정립할 필요. 중재자, 매개자, 프로그램/정보제공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새롭게 감당해야 할 것임.</p>
	<p>지금까지 중앙집권화되어있던 고등교육 행정체계가 분권화 가속화 추진에 따른 펀딩 구조를 포함한 운영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수도권 중심의 가속화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 시킴 지역사회나 산업에 뿌리내리는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기 때문 정치 행정의 분권화 보다 지역별 경제의 분권(지역 발전)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함 ·지역적 불균형화는 지역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인 ·대도시와 지방의 공생발전은 고등교육의 동반성장의 원동력 소재 지역 발전 주체로서 역할 재정립 필요</p>
분권화 와 지역발 전	<p>지방대학의 위상 및 역할 변화 모든 국가정책의 주요 트랜드가 분권화와 지역발전이며, 지역발전 없이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 분권화될수록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증대됨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정책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교육에서의 역할분담 재설정 필요 -지역사회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대역할은 전세계적인 트랜드로 고등교육의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간주될 것으로 기대 지역간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며, 고등교육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 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 축이 될 것이기 때문</p>

변화	이 유
가치관의 변화	소재 지역 발전 주체로서 역할 재정립 필요 또한 교육과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건강성, 정당성이 필요함 양적 중심에서 질적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대학교육 또한 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를 받게 될 것임 진정한 사회 발전 및 고등 교육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는 가치교육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 물질중심에서 인간중심의 변화 가치관의변화와 국가발전간의관계가매우더욱중요해짐 ·물질만능주의에서정신적세계를중시하는가치관필요 ·기술과학적중시풍조에서인문학적학문에대한필요성을증진시킬필요 ·여가생활에대한새로운가치창출을위한고등교육필요 한국 대학에서 인간 삶의 목적, 의미, 철학, 가치관, 도덕관 등에 대해 한국교육과정을 갖고 있나? 단순한부의축적이아닌생활속에서의행복과개인맞춤형선택의자유를추구하며,네트워크를통한협업에익숙하고,계임하듯모든일에서속도감과재미를즐기는세대의등장으로기성세대교수자와네트워크세대학생이단절된상태에서교육이이루어짐 남녀차별없는교육과오늘날점차가속화되는여성중심의가족화는사회가치관의급속한변화가있으리라는예측이가능하다.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의 확산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되고 있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 한국 대학에서 인간 삶의 목적, 의미, 철학, 가치관, 도덕관 등에 대해 한국교육과정을 갖고 있나?
	세계화심화의 역기능으로 제기되는문제를 세계질서교육으로 다소 해결할 수있을것임 남북관계의 급격한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필요
	남북관계는 국가안보 및 사회 전체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사이므로 고등교육의 방향은 세계질서와 남북관계의 변수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기 때문

나.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

○2차 조사결과 미래 사회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키워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음

<표 VI-19>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1차 응답결과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29	1	2		2	34
대학교육의 질 통제	1	13	4	6	3	27
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등)	2	13	11	4	5	35
교육과정 개혁	4	3	4	6	1	18
대학의 교육력 강화	1	5	7	4	6	23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2	1	6	5	7	21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6	1	7
대학 거버넌스 개혁		2			3	5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1	2	3	6
대학의 연구력 강화			3	3	4	10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1		1	2	4
대학간 구조조정			1	1	2	4
대학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				1		1

○사회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키워드에 대한 1차, 2차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VI-20> 사회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키워드에 대한 1차, 2차 응답결과 비교

구분	1차 응답자수	2차 응답자수
①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20	34
②대학교육의 질 통제	19	27
③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등)	19	35
④교육과정 개혁	14	18
⑤대학의 교육력 강화	14	23
⑥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12	21
⑦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11	7
⑧대학 거버넌스 개혁	9	5
⑨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8	6
⑩대학의 연구력 강화	5	10
⑪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5	4
⑫대학간 구조조정	4	4
⑬대학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	4	1

*추가의견: 1+5, 3+4면 더 나을 것으로 봄, ‘고등교육경쟁력강화’가 아래 항목 모두를 포함하며, 제시된 항목이 상호 구분이 보다 명확하게 재설정할 필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그리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누어서 조사해야 함, 고등교육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정립하여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대학 교육과 연구의 공공성에 관한 문항도 추가되었으면 함

<표 VI-21> 사회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키워드의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

키워드	이유
고등 교 의 경쟁력 강화	스위스IMD의 국가경쟁력평가에 의하면 우리대학에서 습득하는 지식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의 부합수준이 낮게 나타남 대학졸업자가산업체에취직을하게되면그기업에서필요한지식을다시습득하고있어즉각적인투입이어려움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 비례 대학이자율적으로책임감을가지고사회를선도할인재양성을하기위해서 고등교육도세계화속에서경쟁 산업과같이경쟁력없는고등교육은도퇴됨 -한국대학교여건의심각한우려 -고등교육경쟁력강화는특성화,구조조정등다른부분을포괄하는내용임 국내 대학은 외형적인 성장을 통해 발전해온 측면이 있음. 대학환경은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임. 국내외적으로 기관 및 전공단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상황임 한국 고등교육 전반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 및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 국가경쟁력은 교육경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
	고등교육의 경쟁력의 핵심동력임 교수의 연구업적평가 강화로 인하여 교수들이 연구에 치중하고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 질관리를 통한 경쟁력 제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 미래 다양한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음 국가경쟁력지표로서의 고등교육 경쟁력 순위의 중요성증대 고등교육에 대한 경쟁력은 국제수준과 비준하는 기준에서 요구 및 평가 되어질 것이라 생각함 경쟁력, 통용성, 동아시아 및 국제적 지도력 제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
	정부 및 언론사 등의 대학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일부 부작용 등 그 효과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종 평가를 통해 대학들이 교육여건 및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고, 그 결과로 교육의 질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임 대학자체의 운영방향,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위한 대학평가 및 통제 필요
	고등교육에 대한 공개성 증대에 따른 최소 수준의 질 유지 필요 대학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지만, 국가수준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정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함
	사회변화와 양극화 방지의 핵심 키워드가 대학 교육의 질 개선에 있을 가능성 이 높음 사회 각 영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질적 제고 필요. 대학의 연구력 강화와 교육력 강화는 이에 포함된다고 생각함.
	대학교육의 질 관리는 대학교육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대학교육이 중요시되며, 국제화로 인해 고등교육의 상호인증을 위해서도 교육의 질에 대한 비교와 요구가 증대함. 국내 대학 및 대학졸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질 제고와 유지 및 통제가 필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학교육 평가를 위한 독립적 기관 운영 필요
	대학교육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학 내·외부의 질 관리 체계 구축

키워드	이유
대학 내 구조 혁 신	대학교육이 제대로서야 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평가를 통해 학위 장사하는 대학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대학교육은 교수의 역량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현장의 수준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적정수준의 S/W와 H/W를 갖추어야 함. 대학교육의 질이 곧 대학의 경쟁력 자연적이고 부드러운 수준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현재 일관된 양적지표를 적용하여 대학을 평가하기 보다, 각 고등교육기관을 특성화함으로써 질제고 노력은 경주하게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질통제에 대한 수단 확보가 여타 다양한 이슈들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학령인구 감소, 대학경쟁 가속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잘 하는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여 대학을 운영해야 할 것임.
	인구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규모 조정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내의 자율적인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연구가 아니라 지역산업 인력공급시스템으로서의 특성화)가 지방대학의 주요 역할이 될 것임
	대학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운영 면에서 검토와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
	대학내 학과 및 교육과정의 세계적 통용성 강화, 직업적 연계성 강화 등은 교육과정의 통용성과 표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학의 변화 대응력 강화와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에 따른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필요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 기능분화가 요구됨
	국립대학의 경우 구조혁신이 어렵다. 그러나 해야 한다.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취업과 연계된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와 교육 어느 것을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인지? 한나라의 고등교육의 수준은 곧 개별대학의 끊임없는 자아 성찰과 혁신의 노력이 필수적임.
대학 재 정의 확보 및 분담	특성화 없이 대학의 생존 불가능 비전문가로 구성되는 보직자 중심의 현행 구조를 고등교육 전문가에 의한 운영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제공이 필요하므로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의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고등교육 수혜율이 80%에 육박하면서 대학 등록금 수준은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음.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사회전반에서 대학 등록금 수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축소하고, 등록금 외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대학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사업,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및 분담
	대학교육의 질 제고는 대학 재정 확보 능력에 따라 좌우됨. 재정 확보 능력은 대학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됨
	등록금 장학금의 정부, 학생의 부담 비율, 기여입학제 허용 등
	고등교육의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함. 국내 고등교육 재정은 개인 중심의 부담이었으나, 한계가 있음.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수익자이기도 한 국가, 사회, 기업들이 대학 재정 확보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필요

키워드	이유
	<p>다른 나라에 비하여 민간인이 부담하는 고등교육비가 매우 높으므로 정부는 대학재정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p> <p>초중등교육에 비해 국가 지원의 열악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p> <p>현재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확충이 필수적</p>
교육과정 개혁	<p>기업체가 대졸신입사원의 재교육에 투입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임. 그만큼 대학교육과정이 산업체의 요구사항과 mismatch되어 있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개혁이 필요함. 다만, 이는 즉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의 교육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의미하여야 함.</p> <p>사회 변화에 맞춰 교육대상과 내용의 변화를 이루하지 못하면 고등교육 자체가 붕괴될 것임</p> <p>세계화 속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대학의 교육과정 개혁과 부기관의 통제 배제가 필수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학기별 학점제 교육과정은 경직된 고등교육의 요인 · 멘토제 또는 도제식 교육을 통한 개별적 지도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함 <p>교수와 학생,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제거하는 교육과정 운영방식으로 전환 필요</p> <p>- 미래 사회 필요 지식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야 함</p> <p>사회 변화가 심하지 않고 대학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은 시기에는 교육과정 운영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었음.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임</p> <p>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수준 충족을 위한 교육 과정 개혁</p> <p>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야 함.</p> <p>일부 이공계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과 및 전공에서 30년 전과 다름없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p> <p>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p> <p>현 대학의 교육과정이 지식기반사회, 노동시장과의 연계,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를 리드하는 인재양성 등에 적합하지 않는 형태와 태용으로 구성되어 있음</p>
대학의 교육력 강화	<p>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p> <p>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은 결국 우수한 교육과 연구에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집중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대학은 4년간 또는 2년간 학생교육 시킨 후 졸업시 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이의 성취를 위한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가? 교수 개인이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것 가르치는 것이 맞는가? (2) 대학전체, 단과대학,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노력/체계 있는가? 개별 교수들이 교육과정 작성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요소가 있는가? (3) 한학기 또는 1~3년과정의 학생역량 향상정도를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판단하나? (4) 기업, 사회, 인생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적기에 교육과정에 반영/평가하고 있는가? 안해도 문제 없지 않은가? <p>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이 대학 및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적 작업임</p> <p>유. 무선 인터넷과 글로벌화는 교육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한국의 교육아이콘은 도덕을 가르치고, 훌륭한 인성이 길러지도록 해야 한다.</p> <p>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매개체이므로</p>

키워드	이유
	<p>노동시장과 교육의 연계, 우수한 인재의 유치뿐 아니라 이들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을 통해 개선되어야 함 현재 한국대학의 연구력을 향상 되었으나, 교육력이 약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p>
대학간 구조조정	<p>절대 공급초과에 따른 구조조정의 도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대학간 통폐합 및 대학내 구조개혁이 필수적 나라의 전체적인 고등교육의 수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 누구나 인정하듯 대학이 너무 많다. 관리부실 사립대학의 출구마련과 국공립대학의 1도1대학통합을 통하여 연구력을 결집시켜야한다. 퇴출되는 대학은 나라에서 책임지고 국립으로 만들면 등록금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학의 양적팽창에 따른 질적 수준 강화가 필요 학생수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p>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p>국제화 및 글로벌 시대에 맞게 다양한 국제적 대학, 기업, 연구소와 교류협력 및 협력의 내실화필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교육시장 개방 요구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전통적인 대학서열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임. 세계화의 일원으로서 교육시장도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미래사회는 국내대학끼리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며 혼자서 모든 것을 할수없음. 외국대학과 교류협력을 통해 대학생과 대학의 국제화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매우 중요함에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화 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p>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 학습	<p>평생교육 및 일반인 재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및 국민의 권리와 욕구 충족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하여 다학기제, 학점제 운영, 야간수강 및 사이버학습이 활발해질 것임.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개방적 체제의 필요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교육환경 제공의 필요 사이버 평생학습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방적 고등교육체제의 필요성대두 학습 학생 증가에 따른 질 관리 필요 학과 및 전공의 특성에 맞는 융통성있는 학사운영이 요구되며, 블랜디드러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다</p>
대학의 연구력 강화	<p>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지식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력 강화가 필연적인 과제임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은 결국 우수한 교육과 연구에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집중투자 ·기존지식의 전달은 더 이상 고등교육의 역할이 아님 ·고등교육은 미래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나 통섭적 연구에 기반을 두어야 가능할 것임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매개체이므로</p>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p>교육경쟁력은 결국 우수교원이 연구, 교육을 잘 하는 것이므로 사회 변화에 따라 교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능력과 범위 변화 우수한 교원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현재 1명이 수만명의 노동자를 먹여 살린다고 했다. 훌륭한 연구는 곧 엄청난 산업적 효과로 이어지며 인성의 개발로 이어진다.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에 의해 결정</p>
대학	1번의 고등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질 관리가 가장 중요함

키워드	의 유
및 교육 프로그 램 평가	(1)대학이 또는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이 주어진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대학도 정부도 암묵적으로 직무유기하고 있다. 국민들도 문제의식이 없다. PISA 성적 좋은데, 대학은 왜그런가 (2)대학교수평가-교수의 Roles&Responsibilities 먼저 재정립한 후, 만들어야! 새 시대가 요구하는 교수의 역할/책무는 엇인가? 교수되는 방법만 알고, 교수 제대로 하는 방법/의식은 모르는 교수 문제.
대학 거버넌 스 개혁	(1)국립대학: 누구 돈으로 월급받나? 누구한테 책임져야 하나? 책임 한번이라도 져받나? Value for Money 자신있나? Polifessor 얼마나 많은지-대안있나? 그런데 누가 대학경영관련 의사결정하나? 대학교수들이 하는 것이 맞나? 책임도 지지않으면서, 투자도 하지 않았으면서. 교수들이 대학의 주인인가? 당연히 경영실적이 나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거버넌스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2)사립대학: 공익법인 목적실현을 위한 이사회구성 및 책무성보장기제를 확실히 갖추어야 할것임. 그런데 현실은?

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등교육체제의 핵심 대응 방안

1)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미래사회에 대비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22> 미래사회에 대비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대학의 자율성 확대	40	4.25	170	1
②대학원 경쟁력 강화	40	4.15	166	2
③미래기술 선도 분야 협력 강화	40	4.05	162	3
④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40	4.03	161	4
⑤우수대학 집중 육성(30개교)(연구중심, 교육중심)	40	4	160	5
⑥대학의 책무성제고(대학 및 교수 책무성 보장기제)	39	3.95	154	6
⑦대학별 특성화(탁월성 중심의 우수대학과 지역산업 관련인 재양성)	37	4.05	150	7
⑧대학 거버넌스 체제 혁신	39	3.69	144	8
⑨대학-유형/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체계의 정립	37	3.86	143	9
⑩우수교수 확보	36	3.86	139	10
⑪대학교육 질 보증제도의 정착	38	3.63	138	11
⑫대학의 연구여건 조성	37	3.73	138	11
⑬대학의 산업기여	37	3.7	137	13
⑭부설대학의 정리 강화	37	3.68	136	14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⑯대학의 질적 통제체제 확립	37	3.49	129	15
⑰질 관리를 위한 정보공개	37	3.43	127	16
⑱공동학위제등 대학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강화	37	3.41	126	17
⑲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에서 취업률 중심의 평가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37	3.41	126	17
⑳경쟁력 개념상세화 및 성과지표개발	37	3.38	125	19
㉑평가기제정착	37	3.35	124	20
(21)계량화된 지표 이외 정성적 지표 보완이 필요	37	3.32	123	21
(22)대학간/학과간 통폐합을 통한 Critical Mass(인적/물적 자원) 조건충족	37	3.19	118	22

○추가적으로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 5, 7, 11, 13, 17 방안을 통합적으로 설계 · 실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함. 즉 대학 의사결정에 교수 외에 산업체 인사, 사회지도층 인사가 1/2이상 참여하고, 우선 대학소재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에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을 개발 · 운영하는 것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는 대학의 역할과 책무를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립 · 실현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의미임(대학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학 예산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대학 교육 및 연구의 주 고객은 누구입니까?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혁신이 어렵습니다). 각 대학별 경쟁력 분야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개인, 기업, 국가차원에서의 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것임. 이에 대한 또 다른 보장기제로 철저한 책무성 이행 확인 제도가 필요함. ‘실제적 책임지는 대학(정책) 거버넌스 체제 확립’이 급선무임(이는 institutional level과 government 모두를 포함).
- 우수대학 집중육성에 찬성은 하지만, 소규모의 학교 중에는 한두 분야가 탁월할 수도 있는데, 전체 대규모 대학의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여 없어지거나 차별받을 위험이 우려됨. 우후죽순의 대학 설립도 문제이지만, 한 가지 기준으로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것도 문제임. 이에 대한 숙고와 배려 필요함.
- 하위지표 중 우수대학이나 경쟁력 등의 개념 및 지표가 있어야 수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므로 이것들을 별개의 항으로 보기 어렵고, 중요 개념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외국 대학과 공동학위제 운영
-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교육 이수자들의 역량 강화(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현재 다가올 대학자원의 부족, 즉 고교졸업생들의 부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부설

대학의 정리가 우선인데 18위에 올라와 있으니 문제의 심각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함.

- 대학에 대한 규제 또는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평가가 아닌 지속가능한 지표 그리고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질적인 지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그렇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대학의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개념이 응답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2) 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23>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통용성 높은 교육과정으로 개혁	38	4.34	165	1
②대학의 특성화	37	4.27	158	2
③특성화 유도를 위한 정부재정지원방식 개선	38	4.08	155	3
④지역산업과의 연계	38	4.03	153	4
⑤학과간 구조조정	36	3.89	140	5
⑥정원 감축	37	3.7	137	6
⑦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준국립대학(가칭)의 전체적 방향과 정체성 정립	33	3.85	127	7
⑧대학지배구조 및 투명성개선, 비리척결	33	3.85	127	7
⑨국립대학 육성방안 마련과 사립대학의 자율성확보	33	3.7	122	9
⑩학과중심에서 벗어난 유연한 교수조직	33	3.64	120	10
⑪대학행정 혁신	33	3.48	115	11
⑫대학의 특성화에 부합하는 평가 지표의 개발에 의한 객관적 대학 평가	33	3.42	113	12
⑬블록펀딩과 평가의 엄격화	33	3.24	107	13
⑭다전공 활성화	33	3.09	102	14

○추가적으로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학과(전공)간 융합연구/교육으로 높은 통용성 교육 및 사회수요 연구를 특화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
- 정부재정지원 방식도 기간이 아닌 특정학과(복수포함)간 융합연구/교육단위로 지원 필요, 지원기간도 최소 10년은 보장 필요
- 교수 조직도 외국대학처럼 복수학과 또는 계열조직으로 전환하여 융합 강조 필요(현재 정보공시제 입력으로 불가)
-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체제 혁신을 우선 강조하고 싶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주인이 교수들인 것으로 착각하고 시대가 대학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재의 국립대학 거버넌스 체제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설계하여야 함.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각 지역별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그나마 각 지역 소재 국립대학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도 지금과 같은 패쇄적, 자기만족적 거버넌스 체제가 지속된다면, 영원히 발휘되지 못할 것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버넌스 - 있을 수 있는 것인가?
 - . (1) 학생, 사회, 기업,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설계·운영이 가능한 의사결정체제의 설계·실행이 필수 (법인화 필수)
 - . (2) 자율성에 부합하는 책무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기제 마련 필요: 사립대학 거버넌스도 상기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
- 대학에서는 진정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가르치고 있는가? 관점에서 각 대학별로 대학설립 철학에 기반한 미래 대비 교육과정의 설계·운영·평가에 최우선 관심을 가져야 함. 현재의 교수 개인 위주의 교과목 운영으로는 세계 기준으로 minor league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임.
- 융합학제를 위한 학부제 강화
- 대학에서 미래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말 필요한 교육과정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의 필요는 단순히 실용적 측면에서의 필요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인 가치관 교육부터 필요하리라고 생각함.
-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이 현 상황(구조조정을 통한 대학교육의 최소 수준 유지)에서는 기관단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교수에게 연구비를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전공별 교육 성과에 대한 졸업생 개개인에 대한 인증 평가 실시
- 현재 대학진학 학생들에 대한 문제중의 하나는 수학능력역량과 관련이 큼,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중요하고, 교육과정이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함. 또한 대학에서 지속적인 교수법의 개발과 학습클래스 사이즈

감소 등과 같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3)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24>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경영부실사립대학 구조조정	40	4.28	171	1
②대학정원 감축	40	3.95	158	2
③국립대통폐합	40	3.78	151	3
④전문대학별 특성화 방안	39	3.85	150	4
⑤대학의 거버넌스의 개선필요	39	3.74	146	5
⑥대학 자율성 확대	36	4.06	146	5
⑦대학유형/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체계의 정립	36	3.97	143	7
⑧다양한유형의 대학 및 프로그램운영	36	3.86	139	8
⑨국립대학 특성화 유도	36	3.75	135	9
⑩국립대학지배구조(법인화)	40	3.35	134	10
⑪교수학생중심의 재정지원제도 정착	36	3.72	134	10
⑫대학생 대학원생의 능력 극대화	36	3.64	131	12
⑬대학의 설립목적이 뚜렷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을 육성하되, 지역거점형태는 부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36	3.5	126	13
⑭특성화를 통한 downsizing유도와 관련기관의 통합	36	3.22	116	14
⑮정부주도의 특정 학과 지원 배제	36	2.89	104	15
⑯정부지원 대학의 집중화	36	2.75	99	16
⑰전문대학과 대학간의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 유도	36	2.56	92	17
⑱특정학과의 대학대학원 동시지원배제	36	2.47	89	18

○추가적으로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대학생, 대학원생의 능력 극대화는 교육 및 연공의 성과로 나타나는 후행지표이지만 대학채무시각에서 볼 때 중요한 항목임. 동 수행에 필요한 대학 자율성을 확대 필요
-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대학은 중앙정부가 집중지원 육성
- 대학 거버넌스 개선: 앞에 제시한 의견 참조 요망
- 1과 8을 통합적으로 운영: 한 개도에 두 개 이상의 국립대가 있는 경우, 각 캠퍼스별로 특성화하고, 1도 1국립대학 체제로 운영

- 14 방안: 전문대학과 대학간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 유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각 대학 유형별로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에서는 기술인력 양성공급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행정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권역별 국립대학 통폐합 및 부설사립대학의 흡수
- 국립대나 사립대나 무관하게, 노력하고 필요한 만큼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국립대학의 통폐합 효과 분석 지속 추진
- 산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실습기간을 포함하는 전문대학 체제 강화. 이를 통해서 무분별한 대학진학 풍토를 개선해야 함.
- 대학에 대학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확립이 필요

4)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25>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연구자 교류 확대	40	4.3	172	1
②해외대학과 공동연구 및 교육체제구축	39	4.33	169	2
③유학생 유치	40	3.95	158	3
④해외우수 대학유치(국내대학과 연계)	40	3.75	150	4
⑤유학생관리 체계정립	36	4.06	146	5
⑥국내대학 해외 진출	40	3.6	144	6
⑦국제화에 부합하는 대학 프로그램정립	36	3.86	139	7
⑧유학생 교육과정 질 향상	36	3.83	138	8
⑨명확한 방향 설정후 중장기관점에서 전략적 접근 시도 필요	36	3.81	137	9
⑩교육과정의 국제 표준화	36	3.72	134	10
⑪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주도	37	3.3	122	11
⑫해외 잠재적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 입학설명회’등 지원필요	36	3.31	119	12
⑬주요대학에서 국내학위자 고용할당제	36	3	108	13

○추가적으로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우수 석학과 교류로 연구/교육분야의 수월성을 높이고 기초/응용과학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
- 고등교육의 국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교육과정의 국제화’라고 판단함.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5, 6, 7 방안을 종합적으로 설계·실행하는 것이 바람직. 교육과정의 국제화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분야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가 우선 될 필요성, 분야, 가능성방안, 교육과정안, 실행 후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 필요
- 우수 유학생 유치 장학금 지원
- 연구자 교류 확대를 위해서 단기, 장기 교류 계획 및 지원 확대
- 연구자 교류와 해외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교육 체제 구축을 통해서 교육 및 연구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음.
- 국가 및 대학 차원의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시스템의 보강이 필요

5) 교육과정 개혁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 개혁”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26>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 개혁”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종점	우선 순위
①전공 과정의 직업연계성 강화	40	4.38	175	1
②교육과정의 통합/융합성강화	40	4.2	168	2
③교육과정의 국제 통용성 강화	40	4.15	166	3
④교육과정 적용결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및 feedback	39	3.82	149	4
⑤교수개인용 교육과정 탈피	38	3.87	147	5
⑥사회 변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36	3.97	143	6
⑦교수법 혁신, 교수수요와 교수전공의 불일치해소	36	3.81	137	7
⑧대학원과 학습연계 강화	39	3.46	135	8
⑨외국어능력배양	36	3.69	133	9
⑩다전공 활성화, 학생진로와 연계한 트랙 개발운영	36	3.67	132	10
⑪동문 및 기업의 교육과정 개정과정 참여보장	39	3.33	130	11
⑫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과 교양 교육과정의 국제화	36	3.61	130	11
⑬교육과정 개정절차의 매뉴얼화(표준화)	38	3.39	129	13
⑭각대학 교육철학이 반영된 교육과정의 개발·적용	36	3.58	129	13
⑮국제화·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36	3.56	128	15
⑯융합과정은 대학원중심으로 연구와 병행하는 교육과정개편	36	3.44	124	16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⑯ 창의적 교양 및 전공과정의 운영	36	3.39	122	17
⑰ 기업 연계형 과정과 순수 연구형 과정의 차별화,	36	3.36	121	18
⑲ 교양과정의 창의력	36	3.19	115	19
⑳ 융복합 대학원의 설치	36	3.17	114	20
(21)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36	3.11	112	21
(22) 교육과정의 개별화 체제구축	36	3.03	109	22
(23) 국가인정박사학위제 도입	36	2.83	102	23
(24) 교양과 전공지식의 구분	35	2.77	97	24
(25) 이론과 실무지식의 구분	36	2.67	96	25

○ 추가적으로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임.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기술발달이 가속화되면서 과거에는 서로 별 관계를 맺지 않았던 집단과의 긴밀한 연계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다른 집단과 개방적 자세로 협업하는 경험 전통이 없다는 것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하는 큰 어려움이 있음. 대학 내에서 각 전 공간, 대학과 기업간, 어떻게? 강력한 인센티브 기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positive 와 negative 병행. 교수업적평가, 연봉, 연구비, 참여기업 세제 혜택,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 산업현장밀착형 학과 지원
- 전공과정의 직업연계성은 대학생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급변하는 사회 및 지식 발전, 기업발전에 따른 update 된 내용을 가르쳐야 함. 그러나 이것이 실용적인 지식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은 아님. 기초지식 발전 확보 방안도 필요.
- 역량기반 대학 교육과정의 강화
- 명시적 성과를 행동으로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행수준 설정
- 전공학습의 경우 PBL과 연계하고, 현장실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학습 실시
-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전문성.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의 연계성

6)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 미래사회에 대비한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27> 미래사회에 대비한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사이버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40	4.1	164	1
②교수의 강의 공개 강화 및 강의 평가의 실질적 운용	40	3.88	155	2
③국제적 이러닝 체계	39	3.74	146	3
④선진화된 정보화 서비스	38	3.82	145	4
⑤다학기제 도입	39	3.64	142	5
⑥학기 운영의 다양화	38	3.53	134	6
⑦성인의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35	3.83	134	6
⑧고령화에 부응하는 개방형 학사운영체제구축	35	3.71	130	8
⑨평생학습개념에 따라 다양한 정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 체제구축	35	3.69	129	9
⑩교육자료 및 강의 공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35	3.46	121	10
⑪브랜디드러닝	35	3.31	116	11
⑫시간제 학생 제도 정착	35	3.23	113	12
⑬이런닝 뿐만 아니라 Offline학습의 개방	35	3.2	112	13
⑭사이버 대학간 특성화방안	35	3.14	110	14
⑮사이버 학습의 교양과정 중심화	35	2.94	103	15

○추가적으로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 이러닝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를 위해 강의공개/자료공개의 범 국가적 분위기 조성(제도포함)은 필수적임
- 성인 학생이 시간적·재정적 제약없이(최소화)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급선무
 - . (1) 우선 고용보험기금 활용에 있어 성인 근로자의 대학 수강, 사이버 코스 수강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 (2) 대학에서의 시간제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물론 일부 대학에서 이를 악용하여(대학, 브로커, 학생이 공범이 되어)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 . (3) 다학기제, 계절학기, 주말, 야간 등
-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관리 -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 마련 필요
-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온라인 학습체제 및 컨텐츠 개발과 함께, 사이버 강의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질관리가 필요함. 적어도 일반대학의 사이버 강의는 면대면 수업의 상호작용과 인격적 대화와 만남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사이버 학습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학습 효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
- 사이버 학습 환경 체제의 구축과 이를 위한 재정 및 행정 지원,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

7) 대학교육의 질 통제(대학평가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질 통제(대학평가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28>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질 통제(대학평가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대학평가기준의 합리화, 객관화	40	4.15	166	1
②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40	3.93	157	2
③기관평가보다는 개별 학과 등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정착	39	3.74	146	3
④대학의 인증제 강화방안	39	3.69	144	4
⑤대학평가 의무화	40	3.48	139	5
⑥고등교육평가원 설립	39	3.44	134	6
⑦대학평가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35	3.83	134	6
⑧대학의 자율성 최대한 확보	35	3.8	133	8
⑨실질적 교육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 연구 개발	34	3.91	133	8
⑩대학평가지표에 대한 새로운 고민	34	3.88	132	10
⑪대학자율화와 연계한 대학평가 업밀화	35	3.6	126	11
⑫지식의 현장적응력제고(실제사회에서 활용되는 교육)	34	3.71	126	11
⑬국가공인 박사학위제 도입	40	3	120	13
⑭협의회등 대학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기관을 배제한 독립적인 평가기관 설립/운영	34	3.5	119	14
⑮고등교육연구원 설립	38	3.08	117	15
⑯평가결과의 강력한 집행	35	3.09	108	16
⑰정부 주도의 평가에는 반대 따라서 재정지원 연계도 부정적	35	2.91	102	17
⑱대교협의 기능고도화로 수용가능	36	2.75	99	18
⑲현재대학은 민간언론사의 평가에 더비중을 두고있고, 대교협을 통한 정부의 평가는 단지 정부의 재정지원 자격요건으로 서만 인식되고 있음	33	2.94	97	19

○추가적으로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 평가 주체의 비신뢰, 비형평, 비미래지향성 및 지표의 부적절성으로 대학 자율성 저

해함.

- 꼭 필요하다면 기간 평가보다 개별학과 인증제도 및 실효적 질 제고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함.
- 대학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책임있는 기관에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대학교육 및 연구 수요자에 따라 중요시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와 논리를 이용, 다양한 평가를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학, 수요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 현재 등록금 문제, 구조조정 등의 당면과제를 생각 하더라도 - 더욱 늘릴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지원의 근거로 대학평가결과를 사용. 정부 인력개발, innovation, 사회통합 등 전략적 목적 실현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이때 중요한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의 개발임. 대학 교육력 및 연구력의 투입, 과정, 산출 등의 일련의 과정별 중요요인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지표의 설정 · 활용이 필수. 이를 위해서는 국제 협력 연구 필요.

8)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29>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재정지원 확대	40	4.45	178	1
②선택과 집중	40	4.13	165	2
③성과중심 재정지원	40	4.03	161	3
④기업체의 대학교육투자 확대	35	4.23	148	4
⑤수요자중심 재정지원	40	3.65	146	5
⑥안정적 대학재정 확보방안	35	4.14	145	6
⑦학생지원 위주 재정지원	39	3.64	142	7
⑧대학재정 활용의 자율성증대와 책무성확인 방안	35	3.97	139	8
⑨대학성과에 대한평가의 합리적개선이 필요함	35	3.97	139	8
⑩대학의 자체적 발전전략을 교란하지 않는 재정지원 정책	35	3.91	137	10
⑪장기적인 투자관점에서의 평가지표보완필요	35	3.77	132	11
⑫국사립 대학간 재정지원 차등 철폐	38	3.42	130	12
⑯대학재정의 충실통계증명제구축	35	3.57	125	13

⑭특성화 중심 재정지원	35	3.46	121	14
⑮국가고급인재 양성 측면에서 선별적 재정지원	35	3.37	118	15
⑯대학재정은 대학의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35	3.34	117	16
⑰재정지원 규모 및 방식 법제화	35	3.17	111	17
⑱기업 재정지원 성과와 연계한 정부지원	35	2.91	102	18

○추가적으로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립대학 체제 개편에 대한 재정지원은 일반 재정지원사업과 별도로 운영될 필요
- 기관중심, 프로그램/사업단 중심, 개인 중심 재정지원의 합리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 최적점 설정을 위해 어떤 요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 필요: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지역별 국립대학 육성 및 일정 수의 사립대학 육성 필요,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 및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국내 또는 지역내 대학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학생/교수 중심 재정 지원의 필요 등의 중요도 파악 필요
- 고정 지원금과 경쟁적 지원금의 구분: 경쟁적 지원금의 배정 원칙, 경쟁적 지원금의 공정한 배정

9)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미래사회에 대비한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30> 미래사회에 대비한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교수평가강화	40	4.38	175	1
②교수 고용구조의 유연화	40	4.28	171	2
③외국인 우수교수 유치	40	3.68	147	3
④국내학자 육성 우대	40	3.65	146	4
⑤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원임용체계	35	3.69	129	5
⑥우수교수 평가가 건수 중심으로 평가에서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35	3.6	126	6
⑦대학간 인적 교류 활성화	35	3.54	124	7
⑧신임교수 지원 프로그램 확대	35	3.54	124	7
⑨교수별교육과 연구의 적정비 자율선택과 책임성	35	3.51	123	9

⑩ 외국인 교수 유치를 위한 규제의 대폭 완화	35	3.43	120	10
⑪ 정년보장 교수의 재임용제 강화에 따른 연구력 확보	35	3.37	118	11
⑫ 외국인 교수를 유치할 수 있기 위해 외국인 교수 개인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할 수 있어야 함	35	3.06	107	12
⑬ 주요 대학에서 국내박사학위 소지자의 일정비율 고용할당제를 통한 대학원육성과 학문의 자립도 강화	35	3.03	106	13

○ 추가적으로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유사 전공분야 다수의 교수 확보를 통한 교수간 경쟁 및 협력 유도가 중요. 학과별로 다수의 critical mass를 확보하여 -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간 빅딜, 특성화 등을 통해 (물론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임.
- 실력이나 열정없는 정년보장 교수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신진학자들이 연구하거나 가르칠 자리가 없거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풍토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연구나 교수 업적 및 성과에 비추어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유연한 고용 풍토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0) 대학의 연구력 강화

○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의 연구력 강화”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31>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의 연구력 강화”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 대학의 R&D 역할 확대	40	4.38	175	1
② 연구 중심대학의 집중 육성	40	4.3	172	2
③ 박사과정 진학자 재정지원 확대	40	3.95	158	3
④ 학문적 새이론 창출과 신기술개발 집중 육성(연구량기준 평가체계 철폐)	38	4.16	158	3
⑤ 국내 대학원 역량 제고	35	4.03	141	5
⑥ 대학 연구성과 기반 중기적 연구비 지원 확립	35	3.74	131	6
⑦ 대학내 연구조직의 정착 및 연구조직 경쟁력 확보	35	3.74	131	6
⑧ 우수 연구자 우대 정책 및 연구자 재정 지원	35	3.71	130	8
⑨ RA 및 TA제도의 정착	35	3.69	129	9
⑩ SCI 중심의 연구업적 평가 지향	35	3.69	129	9
⑪ 교수별 교육과 연구의 적정비 자율선택과 책무성	35	3.57	125	11
⑫ 신진 연구 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35	3.57	125	11
⑬ 협동연구의 강화	35	3.57	125	11
⑭ 정부출연연과 대학연구소의 연계	35	3.37	118	14

○추가적으로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 정부의 반값등록금 사태 재정 대처로 사립대학은 연구분야 육성 재원 태부족이라는 심각한 사태 도래를 예견하고 있음.
-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 등 국가와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 국가 재정 지원은 필수적임 .
- 다학문적 협동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중장기 기초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WCU보다 진전된 국제협력연구 지원 강화
- 대학은 근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어야 함.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임. 이 대학의 수와 학생이 너무 많아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만들기 어려움. 과감하게 그 수를 줄이면 됨. 나머지는 모두 전문대학 또는 직업교육 대학교로 하고 그 수는 인력 수급 정도에 따라 하면 됨. 여분의 대학은 통폐합하여 그 재정을 대학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임.

11) 대학의 교육력 강화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의 교육력 강화”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32>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의 교육력 강화”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교육관련 재정지원 확대	40	4.58	183	1
②교수업적평가에서 교육업적 강조	39	4.31	168	2
③대학의 교육력 제고 방안	38	4.21	160	3
④교육중심대학 집중육성	40	3.88	155	4
⑤교육중심 대학과 기업연계	35	3.89	136	5
⑥창의,융합교육 의무화	34	3.94	134	6
⑦교수업적 엄밀화	38	3.5	133	7
⑧직업교육 중심의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과 산학협력으로 중심축 이동	35	3.77	132	8
⑨교수별교육과 연구의 적정비 자율선택과 책임성	35	3.51	123	9
⑩교육중심대학은 실무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양성하는데 교육과정,교수과정이 집중되어야 함	35	3.49	122	10
⑪1인교수의 강의수업에서 유연한 교수체제로 전환방안	35	3.46	121	11
⑫교수업적평가에서 교육과 연구의 비중을 optional하게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35	3.46	121	11

⑬AHELO도입확산	36	3.33	120	13
⑭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확립	35	3.4	119	14
⑮연구중심대학과 연구소 연계 강화	35	3.31	116	15
⑯책임강의시수제의 폐지와 대안	35	3.03	106	16
⑰교육중심대학 소속교수에게 연구실적은 업적평가에서 제외함	35	2.94	103	17

○추가적으로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 대학의 교육력: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념 정의 필요.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어느 정도로 길러주는 대학의 능력을 말하는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의 역량을 key competencies와 전공역량으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2년 또는 4년간 학습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기업과의 산학협력, 자격증 취득, 교수의 학생교육에의 집중도 등이 대학교육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대학에서는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작동 기제를 마련 필요
- 교수관련 세미나, 교수방법 개발 및 실시, 우수 교원 인정제도 등 교육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재정지원 함.
- 신임교원 임용시에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함.
 - . 연수 기간, 연수 프로그램, 연수 방법, 연수 환경, 연수 인력, 연수 실시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
-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시 교육관련 연수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

12) 교육기회 형평 보장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기회 형평 보장”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33>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기회 형평 보장”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종점	우선 순위
①학자금 및 장학금 확대	40	4.48	179	1
②저소득층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 및 학자금 지원 증진	40	4.18	167	2
③평생교육 기회 확대	40	4.1	164	3
④국사립대간 지원 차등 철폐	39	3.38	132	4
⑤기업의 주문형 교육강화	35	3.51	123	5
⑥대학원의 연구비 연계형 학자금 지원	35	3.51	123	5
⑦평생교육 관련 재정 지원 확대	35	3.43	120	7

⑧ 실질적인 ICL 운영	35	3.37	118	8
⑨ 학생들의 협가정 소득수준, 졸업후 취업소득수준에 대한 데이터 확보체계 마련이 핵심	35	3.34	117	9
⑩ 대학입학 연령의 분포 확산(우리나라가 20~24세 대학생 수 세계 1위 95% 정도)	35	3.14	110	10
⑪ 변형 바우처 제도의 활용 방안	35	3.11	109	11
⑫ 기업의 직업준비교육(인턴십) 지원 강화를 통한 1년치 학비 절감	35	3.09	108	12
⑬ 평생 학습 계좌제 확산	35	3.03	106	13

○ 추가적으로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제도 마련이 필수.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 그러나 정부 재정 능력의 한계 및 기타 타 분야 투자 중요성 등으로 한계
- 현재 과도하게 높은 대학진학률의 하향 조정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필요. 경제와 깊은 연관
- 재능이 있으나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확대 방안 필요

13) 기타

○ 미래사회에 대비한 기타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34> 미래사회에 대비한 기타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 결과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 학생 진로 교육의 확대와 교육과정 연계	37	3.97	147	1
② 기업의 주문형 교육 강화	39	3.62	141	2
③ 창의성, 융합 학제기반 교육을 위해 졸업 학점 확대는 필수적이며,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여 수시 과제 부여 배가, 자기학습 강화 등을 통해 졸업 심사를 엄격히 하여 우수 인재 육성	37	3.81	141	2
④ 비전임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강의 평가를 바탕으로 전임교원과 차별 완화)	36	3.72	134	4
⑤ 학생, 교원 대비 적정 교직원 수비율 제시 필요	37	3.59	133	5
⑥ 대학별/전공별 배출 인재상의 개발과 구체화	36	3.67	132	6
⑦ 예절, 인성 교육의 강화	36	3.67	132	6
⑧ 기업체의 필요 인재상의 개발과 명세화	36	3.47	125	8
⑨ 기업체 필요 과제에 대한 안내와 지원	36	3.42	123	9
⑩ 기업의 직업준비 교육(인턴십) 지원 강화를 통한 1년치 학비 절감	38	3.11	118	10
⑪ 국립대학부터 시범적으로 업무 분석 및 혁신 필요	36	3.28	118	10

○ 추가적으로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효과성 제고를 위한 필수 조건은 기업의 대학교육 및 연구에의 적극적 참여임. 이에 대해서는 90년대 중반 교개위때부터 끊임없이 전경련, 경총 등에 대학에서 길러주기를 원하는 인재상, 역량 등에 대해 요구하여 왔으나,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제 각 산업군별 Sector HRD Councils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이 기구들을 최대 활용하여 각 산업군별로 요구하는 또 미래 전망되는 기술역량을 선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문대학과 직업교육중심 대학의 전공과정을 개발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이미 일부 전문대학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이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를 통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보완한다면, 이들 분야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대학의 교육력 및 졸업생의 취업 역량은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참여와 함께 중요한 것은 대학 교수의 상황인식임.
- 실력있고 혁신적인 비전임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동의함.
- 연구업적, 교수평가를 근거로 재정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4. 3차 델파이 응답 결과

가.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의 추가 의견

- 전반적으로 결과에 동의함. 단, 대학은 단순 기술/기능만을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리드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교육 수요자와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을 수용하여 교육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이는 기성 가치관이 고착되어 있기 쉬운 교수들의 열린 생각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으므로 가치관의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를 좀 더 비중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는 문제의 본질상 별개로 구분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봄. 저출산은 대학정원 조정이나 인재양성과 깊은 관련이 있고, 고령화는 평생교육이나 재교육 차원에서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동차원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곤란할 것이라 사료됨.
- 상기 제시 변화요인들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음. 이들 변화 요인들간의 상호 영향 방향 및 크기 그리고 변화요인 그룹이 다른 그룹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래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 및 연구 수요 그리고 고등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 비록 상위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사회 변화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
- 그러나 현재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에서는 기본적인사회 규범이나, 가치관 등 최소한의 인성 교육의 기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80% 이상이 진학하는 대학에서라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식, 인문학적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
- 가치관의 변화가 2차 응답에서 분권화와 지역 발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순위는 분권화와 지역발전이 앞서는가?
- 3위에 랭크된 세계화의 심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됨.
- ⑥가치관의 변화가 ⑤분권화 보다는 더 앞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임. ⑥이 더 높은 순위에서 더 많이 지적됨.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세계화의 심화가 급격한 사회변화와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는 깊은 연관이 있음. 또한 지식기반사회의 가속화와 세계화의 정도도 상호 간에 관련이 큼. 따라서 2, 3, 4 항목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연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미래변화가 뒤에서 나올 여러 가지 전략과 어떻게 매칭되고 연계될 것인지를 묻는 내용으로 꾸며져야 하지 않을까함.
- 저출산 고령화는 미래사회변화의 중요한 키워드임은 분명하나, 본 조사는 고등교육과 관련된 변화를 말하고 있음. ‘고등’교육에 초점을 두고 미래사회변화를 생각함.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서 지식기반사회의 가속화가 더 적절한 것임.
-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임. 그러나 고등교육 관련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요인이라 생각하지 않음.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변화는 지식기반사회 가속화에 따른 대학교육환경의 부적응이라 생각함.
-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정책에 있어서 대학구조조정 등에 고려할 사항이라 사료됨.
-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변화 예측 및 대응 필요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그러한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질적인 성장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
-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에서 그 대응 필요성이 높은 순서로 급격한 사회변화와 양극화 현상, 분권화와 지역발전 등이 2, 3번을 차지한다고 생각함. 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것이 고등교육이며, 이와 연관되어 지역의 고등교육기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임. 지식기반사회 가속화는 중장기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입장에서는 이들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됨.

- 고등교육관련 미래변화중 저출산고령화는 교육의 양적 측면, 지식기반사회 가속화는 교육의 질적 측면에 주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1, 2차 응답자 절대수도 동일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정시 가치판단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현상적으로는 1~5번 순서에 동의하지만, 그 기반에는 가치관 변화 및 이를 위한 교육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 추가의견

- 학문적 성취를 중심으로 하는 4년제 대학과 달리 고등직업교육을 사명으로 하는 전문대학에 적합한 핵심 키워드의 선정은 별도로 연구되어야 함.
- 교육의 질 제고, 연구력 강화, 경쟁력 강화 등은 모두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문제로 귀결됨.
- 설문에서 대학은 주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사이버 대학 등 다양 한 교육기관이 있으므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 ‘고등교육경쟁력 강화’가 아래 항목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기에, 보고서에서는 각 항목이 뜻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만약 ‘고등교육경쟁력’을 다른 항목들과 차별되게 개념 정의하기 어렵다면, 논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함.
- ①번의 고등 교육경쟁 강화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항목이어서 각 항목간의 Depth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각 항목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법론이 혼재되어 있어 우선 순위 부여가 다소 모호함.
- 대학의 기능이 교육과 연구개발이라고 할 때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 부족
- ①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너무 포괄적이면 ②~⑥을 선정하는 것도 검토 가능
- 고등교육경쟁력강화 항목이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는 문제가 있음.
- 지역별, 학교 설립별 구분보다는 현 상황에서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나누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대학 연구력의 강화는 우리 대학들의 큰 문제점인데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음. 이것은 조사에 응하는 분들의 재직학교 또는 하시는 업무가 연구와 관련이 적은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듬.
- 대학의 교육력 강화, 대학교육의 질 통제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보임. 또한 질

통제 역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마찬가지로 개념의 외연이 너무 넓다고 생각됨.
의미를 보다 한정하면 좋을 것 같음.

- 우선순위가 교육영역에 지나치게 집중됨(대학의 기능이 교육만이 아닌 연구도 있으며, 이미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지식은 교육 효과에 한계가 있음. 우성순위에 있어 수월성 있는 연구성과의 교육연계도 비중을 둘 필요)
- 위의 추가 의견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교육경쟁력강화는 아래 항목을 모두 포함하므로 이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대학의 교육력 강화는 교육과정 개혁,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 학습, 대학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목 간에 포함 관계를 염두에 두고 연구 결과를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 경쟁력은 곧 교육 및 연구의 질을 의미하여, 모든 문항들을 포함함에 따라 높은 순위가 나올 수밖에 없음. 핵심 키워드로는 제외하고 핵심 키워드를 아우르는 목표, 비전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양극화와 대학의 대응이라는 측면의 내용이 빈약한 듯함. 다른 문제들은 부가 질문으로 커버가 될듯한데, 양극화 문제는 그렇지 못한 듯함.
- 대학특수 목적에 부합되는 특성화 정책이 필요함.
- 전문대학 – 직업교육 특성화
- 4년제 – 교육특성화, 국립대 – 인문, 기초학문 강화, 대학원 –연구 특성화
-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포함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며, 실제적으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현실의 변화에 맞춘 ‘교육과정의 개혁’이라고 판단함. 교육과정 개혁의 목표는 ‘대학교육의 질 통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방향성은 구조혁신(특성화등), 대학의 교육력 강화 등이 되는 식으로 연결된다고 생각됨.
- 일부 문항은 너무 광범위, 일부는 너무 협소, 조정 필요
- 대학의 연구력강화는 우선순위에 10위 수준이지만,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수단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양자를 포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항목들간의 수준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 발생
 -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지나치게 넓은 개념으로 다른 항목과 부적절. 제외필요
- 상위 이슈와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연계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우려됨. 예를 들어 지식기반경제와 관련된 것과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것이 유사 수준으로 제시되었는 지에 대한 의문. 점검 필요
- 우수교수 확보 및 유지가 2순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임.
- 대학간 구조조정이 3순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임.

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등교육체제의 핵심 대응 방안 추가의견

1)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 전문대학 교육경쟁력 강화 과제를 별도로 선정 필요
- 우수대학 집중 육성, 대학별 특성화, 대학교육 질 보증, 부실대학 정리 등 많은 정책 수행을 위해 선행되는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을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현실화하고 각 대학 고유의 발전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심층적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함.
- 4년제 대학의 경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 전문대학의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역할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현재는 미래사회변화에 대한 대비 보다는 각종 평가지수(충원율, 취업률)만 높이는데 모든 대학의 교육목표가 정해져있음.
- ‘대학의 거버넌스 체제 혁신’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 인가하는 문제임. 대학이 학생들이 졸업 후 2~3년 또는 5년, 10년 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가? 가르칠 수 있는가?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의 framework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교수가 짠 교육과정에 맞춰 강의학점 따고 교수가 ok하는 논문쓰면 졸업하는 지금의 방식 -10년 또는 20년 후까지 사회경제적으로 경쟁력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방식인가? 지금은 이미 산업사회와 다르지 않은가? 대학에서 이러한 점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보고서에 소개 필요.
-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과제간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 다시 말해 mutually exclusive한 대안이 아니므로 선택오류 가능
- 7이 5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부실대학의 정리 강화가 우선되어야 여타 부분이 가능해짐.
-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에 학교 운영권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재단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
- 고등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 관점에서 형평성(공평성)보다는 경쟁체제하에서 관리 필요(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확보 된다고 봄)
- 대학의 체제 구조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정규대학도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으로 나뉘고, 산업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사이버대학 등이 난립하여 각 대학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음)
- 그러나 대학의 마지막에 있는 대학의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개념 구체화 필요의 항은

대답과 의미가 사립과 국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됨.

-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가 오직 총장 선출 방법의 전환과 동일한 시각은 아니었으면 좋겠음.
- 대학연구여건 개선은 대학 자구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 우수대학집중육성, 지방대학 경쟁력강화, 대학원협력강화 등의 과제들은 기관 단위를 뜻하므로 학과나 전공 단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 필요(전반적으로 우수한 종합대학이라 하여 모든 학문 분야에서 우수한가? 정부 재원에 한계고려)
- 대학 자율성 확대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대학 자율성 확대는 정부나 교육당국의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 산업체의 요구나 압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 대학 자체의 자율적 판단 능력과 집행 능력의 행사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의 확대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균형 발전의 문제라고 생각함. 기준은 우선적으로 대학의 역량이지, 대학의 위치가 아님.
- 사립대학에 대한 대학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족별경영체제, 측근 경영체제 등은 대학발전에 걸림돌임.
- 우수 대학의 육성의 경우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지원 사업의 연속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들이 발전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자력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과 정책개발이 필요
-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책무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1번과 6번의 관계를 통합하는 방안도 있을 듯함.
- 대학의 연구여건 조성만이 제시되고 있는데, 교육여건에 대한 것이 빠져있어서 함께 제시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 앞의 문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특성화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며, 이는 대학의 산업기여, 대학 유형/목적에 따른 고등교육 체계 정립 등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함. 물론 이 과정에서 현재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교육 중심’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미래기술 선도 분야 협력 강화는 모든 대학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음.
- 우수교수 확보는 단일 요인이라기보다는 우선순위 2에 해당하는 대학원 경쟁력 강화의 전제조건임.
- 2번의 세부문항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우려스러움.
- 개인적으로는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움. 응답자의 소속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항이라고 판단됨(내부적 시각과 외부적 시각의 차이)

- 첫째, 다른 응답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실 대학 정리는 대학 자율성에 기반한 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선결과제라고 생각함. 특히 현 시점에서는 부실 대학 문제 해결이 시급하면서 중대한 과제인데 예상보다 주목받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네요. 두 번째, 대학 책무성 과제와 대학 질 보증 제도 정착은 통합할 수 있는 과제인 걸 잘 알고 계시니 통합하셔서 제시 필요.
- 3~9에서도 나오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분위기 형성이 필요함. 간혹 정년 보장 교수가 된 후 교수 및 연구에 태만하면서도 기득권을 유지함으로써 유능한 젊은 교수들의 연구 진작 및 처우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경쟁력 약화에 주 원인이 될 수 있음. (업적 대비 처우 필요)
- 우수대학 30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
- 대학교육을 제대로 연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고등교육연구·평가원의 통합 설립이 필요함.

2) 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 등)

- 융합, 다전공 등을 위해서는 우선 유사전공 학과의 통폐합 선행 필요
-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교과 운영에서 탈피하여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과정 및 교수역량 개발 강화 필요
- 순위 1, 2위인 '통용성 높은 교육과정 개혁'과 '대학의 특성화'가 어떤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논의되기를 바람.
- 전국 1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밀집 현상, 지역별 불균형 문제는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산학협동, 특별히 지역산업과의 연계는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중국에서는 대학 평가시 대학의 설립목적에 대한 충실패 평가에서 지방의 대학들이 그 지역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평가하고 있음)
- 6 대학내 정원감축은 무슨 의미인지?
- 2와 5에 대해서;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1) 특정학과 전공 설치의 학교급을 분명하게 정하고, 2) 해당 학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 학교급에만 집중함으로써 유도될 것임.
- 특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다양한 대학의 종류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대학의 정체성에 따라 특성화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음)
- 대학지배구조, 투명성, 비리척결이 가장 중요(사립대학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의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므로 이에 맞게 특성화유도

- 교육과정 설계, 평가에 있어 현행 교수 개인 또는 학과 위주의 방식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통용성 높은 교육과정으로 개혁이 1위에 랭크된 것은 저가 판단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념도 모호함.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학과가 융합상태로 되어 있는 곳이 간혹 있지만 통용성과는 거리가 있음.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기르고자 하는 곳이며 따라서 통용성과 대학의 체계 개편과는 거리가 있음. 대학의 특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재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는 자칫 대학을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있음
- 현재의 정부재정지원방식이 연구중심, 일반대학 위주로의 집중화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의 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 특성화를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연계 강화, 질 관리를 위한 ‘정원 감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대학내 구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음. 교육조직, 연구조직, 봉사조직, 교수직, 학생조직, 행정조직, 시설 및 재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음 .
- 학과 중심에서 벗어난 유연한 구조가 상대적으로 낮음. 앞으로는 융합 학문이 대세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이 간과됨.
- 대학교육에 있어서 융합화와 학제간 협력은 매우 필요하다. 특히 교양교육은 인성 및 직업소양능력을 배양될 수 있는 분야 중심의 과정이 필요함.
- ‘학과중심에서 벗어난 유연한 교수조직’을 6순위로 상향
- 통용성 높은 교육과정으로 개혁은 “3-5의 교육과정개혁”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도 생각됨.
- 7번의 내용은 “3-3 대학간 구조조정”的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음.
- 지나친 융합교육의 강조는 학부교육의 학문체계를 흔들어 기본역량이 약화된 인력을 배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역시 응답자의 소속에 따라 내부적 시각과 외부적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음.
- 세부 과제 설정 시 ‘특성화 유도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이 아닌 ‘분야별 특성화된 (특성화 추진중인) 대학에 관련 분야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개념 재정립이 필요. 재정지원에 따라 대학 내 특성화분야가 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미래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성화 또한 대학 자율성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임. 이미 각 대학은 대학별 발전계획 등을 통해 지속적인 특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융합 연구/교육이 필요하지만, 학부제 식의 융합에는 반대함. 학부제는 이미 시행 결과

에서 학생지도, 교육 등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음이 지적되었음. 학과를 유지하되, 연계전공이나 자기설계 전공 등 학과의 벽을 낮추고 실제로 학생들 자신에 맞는 융합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융통성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국립대, 사립대, 준사립대(가칭) 등의 대학 유형을 명확히 하고, 국가재정지원 수준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수준을 타당화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대학유형을 토대로 대학의 특성화 전략(교수평가, 교육과정, 대학경영 등)도 도출될 수 있다고 봄.
- 학과간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학내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과중심에서 벗어난 유연한 교수조직이 필요함.

3)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

-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대학의 유형, 경쟁력, 발전계획 등에 대한 심층적 평가, 분석 선행 필요
- 단순한 부실 대학 정리보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학정원 감소 및 교원 충원율 기준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대학간 통폐합의 경우,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국·사립을 통합하는 거시적 통폐합의 방안도 장기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대학 유형별 역할 및 책무/기능을 차별화하여 지원·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개방적으로 한 대학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용할 것인지(예, 4년제 대학에서 2~3년제 산업학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부 입장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제시할 수도 있을 것임.
- 여기서의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대학경쟁력강화에서의 자율성 확대와는 그 취지가 다를 것이나 같은 과제로 서술
- 대학유형/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체계의 정립과 정체성 확보가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임(이에 따라 구조조정 범위와 방법이 결정되어야 함)
- 많은 4년제 교육중심대학과 전문대학과의 정체성에 차이가 있는지? 각 역할이 다른지? 만약 그 역할이 다르다면 정체성을 확실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차이가 없다면 체계를 일원화하고(동일한 조건) 대학 간 경쟁을 유도
- 대학 정원감축에는 동의하나 학교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대규모 대학은 백화점식 이므로 특성화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대규모대학에서의 정원감축이 필요)

- 산학협력의 강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현재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체(기업)에서 적극 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국립대 통합은 필요하나 속도를 조절할 필요 있음(강릉원주대 같은 경우 정밀한 분석 필요)
- 10번이 이 유목에 적절한지? 대학의 거버넌스 개선과 지배구조 혁신은 서로 의미가 중복됨.
- 대학자율성, 다양한 유형의 대학 및 프로그램 운영이 대학간 구조조정의 세부 과제와 맞는지 검토가 필요
- 대학의 서열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획기적 지원으로 서울 명문대학과 지역 대학 간의 격차를 줄임.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위상이 올라가면 지역의 사립대학의 위상이 함께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 대학 정원 감축은 개별대학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임. 부실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은 타당하나 모든 대학의 정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대학의 구조조정이 특정한 지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별 효과를 못 내고 결국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대학간 통폐합 등의 논의가 포함되어야 함.
- 대학의 구조조정은 일정부분 필요하지만,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하는 경우 사립대학간 통폐합 보다 준공영제 방식의 준국립대학, 공립대학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국립대로 전환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국사립간 역할 분담에 관한 장기정책 방향 설정
 - 과중한 사학의존도 개선: 학생수 기준으로 사학 분담비중 축소
 - 설립별 구분 폐지 여부(영국 모델)
 - 사립대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범위
- 대학들이 자율적인 경쟁체제를 함양하도록 하고, 대학의 경쟁체제를 정확히 측정하는 방향을 설정한 후 대학들간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 등에 대한 유도
- 7번 혹은 8번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지만,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 혹은 일반대학과 산업대학간의 역할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7번과 8번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음.
- 국립대 통폐합 특성화 유도는 바람직하지만 통폐합은 개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이를 뿐만 아니라 한다고 생각함.
-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에 앞서 바람직한 고등교육체계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함.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에 대한 부분과 국립대 내에서도 거점대와 중소국립대의 역할정립,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결정 등 거시적인 비전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봄.

- 대학간 구조조정을 언급하기 전에 신규 대학 신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009년 울산과학기술대학 신설 등)
- 구조조정은 경영부실대학에 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 외 대학은 대내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 자체적으로(자율적으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정도가 바람직함 .
- 대학 전체 정원의 단계적 감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4)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 기준으로서의 학업능력 기준 이상으로 졸업 유학생의 취업성과 (해당 전공과 관련된 취업)를 주요한 교육과정 질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유학생 유치 방안 연구 필요
- 단기-중기-장기안으로 나누어 논의 · 제시 필요
- UN 등의 미래 예측에서 미래의 대학 형태가 현재의 학위 중심에서 실질적인 전문지식의 습득 중심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
- 즉, 학위 보다는 “특정 분야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수강한 과목”, “연구한 논문분야” 등이 중요한 척도가 되면 기존의 교육 인증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국제화에 앞서 학위 수여 등 제반 제도, 규정 등의 유연성 검토가 필요함.
- 연구중심, 교육중심 또는 4년제대학, 전문대학 등의 정체성이 선행되어야 각 체계에 맞는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협력의 방법이 정립될 수 있음.
- 교육과정의 국제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추가하여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수의 능력이 국제화 수준에 맞아야하므로 교수 지원에 있어 이런 부분 지원을 강화(외국 대학과의 교류 확대 방향 설정)
- 현재 외국 유학생은 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또한 학교 재정과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유치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음. 따라서 “ 유학생관리 체계정립 ”이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교육시장 개방 및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협조 체제도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됨.
- ⑦이 3 이하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해외 대학과 공동연구 및 교육체제 구축 안에 연구자 교류 및 해외 우수 대학 유치

등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

- 학문의 다양성과 학과 간 융합성 측면에서 저는 이 분야가 중요하다고 봄. 일부 대학이 등록금 확보를 위해 머리 수 채우기 등록생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에서 얼마나 잡을 찾고 국내의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것도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대학의 국제화는 외국학생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님. 외국의 우수 석학이나 대학이 국내대학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대학경영시스템과 교육과정의 국제표준화가 중요함.
- 국제화 및 교육시장개방 측면에서 있어서 모든 대학들이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대학들의 특성과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상황에서 유학생의 관리가 해외우수 대학유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유학생 유치와 관리는 함께 가야 함. 더불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자 교류확대는 주로 해외대학/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2개 과제간 통합 등이 필요함.
- 고등교육 국제화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면서 또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부족한 점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과제가 포괄적으로 제시되어야 하지만 현재 순위에 따르면 일부 영역에 쏠린 정책 과제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음.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과제의 구성은 연구 활동 - 학생 교류 - 교육프로그램의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 ‘대학 교육과정의 국제화’의 중요성 동의함. 그러나 반드시 엄격한 표준화나 인증제도를 일일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서 교육의 질 개선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를 위해서는 외국 학회와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함.
- 유학생의 언어능력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함.
- 국가간 고등교육협력 및 외국인 학생 유치의 질 제고가 필요함.

5) 교육과정 개혁

- 산업체 요구수준 반영 및 참여를 통한 교육과정 개발은 사회변화 속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 산업체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요구수준을 정립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1~2년 내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산업체 요구로 받아들일 경우 지속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중기적인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면서도 지속성이 높은 교육과정 개발에 힘써야 함.

- 단순한 전공지식이나 외국어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인 대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양 및 기초분야의 교육에 대한 비중도 높여야 함.
- 교육과정의 대응성, 적절성, 효과성을 누가 어떻게 측정하고, 그 결과에 터하여 누가 언제 어떻게 개정·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구축·운영이 중요. 대학별로 또는 전공과정별로 Independent Evaluation Group을 운영하는 것도 방안(비슷한 예; 공학인 증제도 등).
- 과제간의 depth 수준 차이
- 교수개인화(사사화)된 교육과정을 공인화로의 개혁이 중요함.
- 기업과의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이 중요하고, 기업체 인사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 시켜도, 특정 기업의 의견만 반영되어 동일 전공이라도 기업체에 따라 의견이 다양한 점이 있음 따라서 산업별 협의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행 교육과정 개발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교육수요와 교수 전공의 불일치로 인하여 교수가 필요 없는 과목임에도 교육과정에 자신의 전공을 고집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
- 각 전공별 기초(필수)지식 발전 확보 방안 필요
- 각 대학들이 얼마나 이러한 문제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전공과정의 직업연계성 강화는 전문대학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역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소속이나 전공 등이 이러한 설문지의 대답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됩니다.
- 일부 우수대학은 대학의 학문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기능도 부여하지 않으면 대학교육의 실용성에만 치우칠 우려 있음
- 의미가 중복되는 항목은 통합하여 과제를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1번과 9번 등
- ⑤동문 및 기업의 교육과정 개정과정 참여보장 및 교수개인용 교육과정 탈피에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수요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에는 공감이 있지만, 기 졸업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해 보임. 동문의 의견이라고는 하나 결국은 경제활동종사자의 의견이고, 이는 기업 측의 참여로 수렴될 것이기 때문임.
- 취업, 산학협력에만 우선순위가 치우친 경향임. 대학원 진학, 해외유학, 프리랜서 육성 등을 위해, 대학원과 학습연계 강화 등의 과제도 간과할 수 없음.
- 11번 항목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과 교양교육의 국제화는 서로 이질적인 것을 하나로 묶었다는 데 문제가 있음.

- 전공과정의 직업연계성 강화와 진로연계성 강화는 서로 다른 개념임.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직업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대학에서는 진로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한 개인이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게 되는 환경에서는 특정한 직업에 부합하는 지식의 전수와 기술 훈련으로는 한계가 있음.
- 앞의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에 이미 “통용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혁” 있는데, 이것과 교육과정 개혁 영역의 하위과제들과 겹치는 의미가 있음.
- 실용성과 현장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봄.
- 특히 인문사회계열에서 유명무실한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음. 학과 명칭에 어울리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문이 사회적 실용가치에 접목될 수 있도록 연계 전공 과정이 활성화되어야 함.
- 교양교육은 인성 및 직업기초능력 배양 중심으로 운영하고. 철학분야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이 탄탄한 전공에 대한 기본 실력이 함양이 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성을 고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혹은 직업별로 필요로 하는 인재상, 직무역량 등에 대한 분석과 제시가 필요함.
- 인턴십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기업체 현장경험자의 강의 지원체제 마련,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가 교육의 질 관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는 무조건적인 ‘통합/융합성 강화’와 ‘국제 통용성 강화’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들의 순위가 높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항목간 수준이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하는 듯
- 5번은 1번, 11번과 관련될 듯 싶으며 3과 13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음.
- 1번이 의미범위와 4, 5, 7 등을 지나치게 세분화된 항목으로 판단됨.
- 역량기반 대학 교육과정 강화필요
- 실용적인 취업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초연구도 중요함. 균형 필요. 일본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도록 장기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학문적 전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평가가 달라져야 함.

6)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 사이버 학습의 실질적 교육 효과를 위한 구체적 질 관리 방안 마련이 선행되지 않고

기술적 확대만 이루어 질 경우 사이버 학습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됨.

- 사이버 교육의 관리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수준에 대한 고려도 되어야 할 것임.
- 이러닝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질 관리 및 인정체제 확립 중요 - 노동시장에서 이러닝 결과가公正하게 평가받고 임금결정, 승진 등에 일반 교육과정과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러닝, 강의공개 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교수학습에 인용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보상 문제임. 현재 대교협을 중심으로 수업목적 사용물에 대한 저작권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미확정된 상황 임.
- 강의공개는 품질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부분 의외로 용이함.
- 강의공개에 대한 문화 확산필요. 단기적으로는, 연구성과중심의 업적평가에서 교육부분을 반영하고 그 중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강의공개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MIT등 선도적인 대학들은 대학의 이미지제고, 우수 학생 유치등 강의공개로 인한 엄청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음. (현재 공개된 강의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中)
- 그러나 국내 대학은 보수적인 문화와 공개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 등의 이유로 개인 단위의 공개는 극히 저조. 단지, 대학평가, 대학정보공시 등의 항목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CTL중심으로 공개.
- 평생학습개념에 따라 다양한 정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중요성 현재보다 높았으면 좋겠음.
- 사이버 교육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사이버 교육에 맞는 정책 유도
(이론 중심 교육 - 현실적으로 현장실습이나 산업체와의 연계 어려움)
- 사이버 교육은 평생교육개념(일반학습자) 중심으로 운영
- 사이버 교육에 대해 정규 학점 부여 방식보다는(학위를 위한 사이버교육은 없어야함 - 수강생을 일반학습자로하면서 이들이 필요한 내용을 교육, 이들은 학위보다는 기술이나 학습 내용이 중요)
- 이러닝, 정보화에 의한 교육 등은 이문 사회계열의 경우 가능하며 앞으로 국제화 교육과 연계되어 주요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실험과목을 필요로 하는 학과는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번과 8번의 차이는 거의 없음.
- 온라인을 통한 학습이 보편화될 것이고, 이를 활용한 학습이 일대일 개인 매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집체적이고 강의식 교육보다는 학생의 실력과 능력에 맞는 학습이 전개될 것으로 보임.
- 일반대학에서 사이버 강의에 대한 운영 준칙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함. 현재 고등교육법

에 의하면 강의방식은 강의실, 실습, 사이버 등 막연히 종류만 제시하고 있는데 학습의 질을 보장하고 철저한 학사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버 학습 시간을 일정시간 이하로 제한 할 필요가 있음.

- 6번과 7번의 학습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중요하며, 이것이 이루어져야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이 가능함.
- 사이버 교육은 무조건적 확대보다는 개방형 학사운영이나 평생학습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측면을 ‘질 관리’ 다음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기본적 순서에 동의
- 사이버 강의의 내적 질 관리, 제도 구축 면에서 교육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예컨대 1)국제적 차원에서 높은 학문적 추구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2)보다 소박한 차원에서 사회의 교육 소외층이나 노령화에 따른 재교육 필요 등을 충족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구별되어 운영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개방형 학사운영은 대학공개를 통해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관리, 대학교육과정 인증 등이 필요함.
- 지나친 사이버교육 강조는 안됨.

7) 대학교육의 질 통제(대학평가 등)

-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평가 객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높은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평가원 설립이 필요
- 다양한 대학별 특성화를 위한 방편으로서 정부, 산업체, 언론 등 다양한 평가주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단, 평가 주체의 책임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과도한 인증, 평가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킴.
- 상기 의견 강조
- 대학 및 학과의 설립목적이 상이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 평가 결과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따라서 분야별, 목적별 평가 지표의 선택 및 다양화가 필요함.
- 정부차원에서 평가 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민간이나 협의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교협의 평가 인증은 장기적으로 교과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⑤대학평가 의무화 및 평가결과의 강력한 집행

- 평가기준의 합리화 객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모든 대학 또는 누구나 만족하는 기준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논의되어 만들어진 기준에 의거 평가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
- 평가 결과에 대한 재정지원 또는 인증이 기업체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인정되도록 하는 정책 필요 –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평가보다는 권위있는 기관에서 사회가 인정하는 평가가 중요(평가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평가 절하는 사회 분위기가 된다면 뭐하려고 평가를 하는가)
- 인증제의 도입, 평가 등은 그 항목을 아주 세심하게 만든 후, 심의 확인 과정을 거쳐 시행되길 바람.
- 대학 평가의 평가항목과 가중치를 너무 객관적 data 만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책임 있는 기관이 수행하면서 정성적 평가 비중을 높여야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될 것임 .
- 대학의 평가 결과와 국가의 재정지원을 연계할 때 교육과 연구 면에서 부익부 빙익빈 현상으로 대학 간에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음. 국가의 재정 지원은 대학 교육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여 지원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 3, 4번은 하나로 통합하여 제시할 필요 있음.
- 요즈음 대학 평가에 대한 신문사들의 자료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음. 결국 순위 경쟁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인상이 됨. 좁은 소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가 대학을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일진대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음. 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봄.
- 대학평가기관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함. 현재 4년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전문대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평가인증원을 두고 대학평가를 하고 있는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대학교육기관과 관련 없는 제3의 평가기관을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독립적 고등교육평가원과 고등교육연구원의 설립은 기존의 관련기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 될 수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고, 기존의 관련기구들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개별학과 프로그램 인증제도로 모든 분야의 인증을 수행할 수 없으며, 기관평가인증과 학과평가인증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함.
- 평가위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므로 이들에 대한 연수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해 대학평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대학교육이 따로 놓는 것이라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질 통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함.

- 대학의 자율성 최대한 확보 과제는 다른 과제들 중 병렬적 과제라기보다는 우선순위 1에 해당하는 대학평가기준의 합리화, 객관화를 위한 전제임.
- 대학평가가 대학의 질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척도 중에는 비합리적인 것이 너무 많음.
- 우리나라 대학이 외국의 대학에 비해 졸업을 쉽게 시키고, 추천서 등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등 전체적인 학사 운영의 엄격성과 신뢰가 부족한 점이 있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대학교육의 질 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대학평가의 전문화 객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연구평가원의 설립이 필요함.

8)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가) 세부 추가과제 응답결과

추가 질문	3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지역별 국립대학 육성 및 일정 수의 사립대학 육성 필요	19	3.95	75
국내 또는 지역내 대학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학생/교수 중심 재정 지원의 필요	18	4.00	72

나) 추가 의견

- 교육 수요자중심의 지속적 재정지원 및 교육 인프라 확충/개선 투자 등을 위한 기관중심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
- 각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시기, 시설에 투자할 시기 등이 다르므로 재정지원금의 활용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확인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성과중심의 재정지원 배분만으로는 각 지표를 올리기 위해 대학교육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대학의 재정지원에 대해 반대할 대학 교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맡고 있는 당사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설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대학에 대한 국가지원보다 기업에 의한 재정확보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되, 부실대학(학교재정을 오히려 재단에서 유용하는)이나 학교 재정을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대학 등을 선별하여 우수대학에 집중 지원

- 대학의 재정지원 부서 간 중복지원 방지 대책 미흡
- 3~3의 10번 이곳으로 이동해야 할 듯.
- 국내 또는 지역내 대학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학생/교수 중심 재정 지원의 필요 → 대학간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학생/교수 중심 재정 지원의 필요가 어떤 맥락에서 인과 논리 구조로 연결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됨.
-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응답자들의 소속이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함. 이 응답은 조금 달리 취급하셔야 할 이유는 없겠는지.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은 필요하나, 우수 인재가 지방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체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업 창출이 우선되어야 함. 지방대학 졸업생들에게 사회진출의 기회가 많이 주워지면, 점차 우수 학생들이 지방대학 진학을 결정할 것임. 지방대학을 인위적으로 선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임.
- 기업의 대학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기여입학제 등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음. 단, 사회적 고려를 통해 한시적으로 비율을 제한할 필요는 있음.
- 대학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대학 재정의 국가지원 확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함. 이는 대학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도 저해하고 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10번 국사립간 차등 철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12번도 거버넌스를 그대로 둔 채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우려
- 성과중심의 재정지원에서 성과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함.
- 국립대학은 권역별로 균형 있게 통합되는 것이 필요함.
- 사립학교의 특성화된 대학 이념 등을 고려하고 존중하며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대학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음. 기관중심, 프로그램 중심 뿐 아니라 학생/교수 중심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국가의 대학에 재정지원 확대가 가장 중요함.

9)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 전문대학의 경우 충실한 직업교육을 위해 최신의 기술과 정보를 보유한 산업체경력교원의 확충이 필요하나 산업체경력교원으로 채용하여도 5년 이상 경과하면 최신의 기술과 정보가 퇴색되기 쉬우므로, 계약제 상근겸임교수 등 다양한 산업체경력교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전임교원 확보 기준에 대한 재설정이 병행되어야 함.

- 외국이 우수교수 유치보다는 유치에 따른 운영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우수교원을 가리기위한 교수 평가제도는 중요하고 계속 강화되어야하나, 교수 평가 기준이 대학에 따라서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음.
- 따라서 학교 설립별(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전문대학 등) 교수업적평가 표준 마련이 선결되어야 함(교육중심 또는 전문대학에서 SCI 논문을 많이 쓰는 교수가 우수교수인가?, 산학협력 등을 통하여 수요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실에 맞게 교육을 잘 하는 교수가 우수교수인가?).
- ①교수에 대한 평가 강화와 평가결과의 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⑤교수평가를 건수 중심 평가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며 그리고 질적인 평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노벨상은 많은 연구가 아니라 훌륭한 연구에 주어진다고 판단됨.
- 9번은 우수교원 확보와도 관련이 있지만 오히려 다음 항목의 대학의 연구력 강화와 보다 밀접해 보임.
- ②교수 고용구조의 유연화 및 다양한 교원임용체계
- 연구나 교수 업적 등에 비추어 실질적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유연한 고용 풍토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나,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이 방법을 우수교원 확보책으로 활용하기보다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오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으면서, 취지의 우수성도 살릴 수 있는 내용 기술이 필요해 보임.
- 우수 교원 확보 및 유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수 교원의 양성이라고 봄. 대학 교원의 양성 제도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요구됨.
- 또한 전임 교원의 교육 및 연구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환경, 평가 체제 구축이 요구됨.
- 우수 교원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복지 부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제 해석입니다만 합리적인 응답 결과로 보임. 상위 2위까지의 우선순위와 이하 우선순위의 점수 편차가 크게 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보임.
- 교수고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인 경우 직업교육 중심대학인데, 학과운영을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학과로 개편하는 경우 기존에 있는 교수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따라서 학과개설에 따른 전공교수의 채용과 이직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함.
- 교수의 평가제도를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으로 트랙을 구비하여, 이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고용구조도 차별화 하는 등의 다양성

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

- 우수교원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연구실적이 높은 교원에서 탈피해야 함.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수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3번 현재 외국인 교수유치에 관해 어떤 규제가 있는지?
- 8번은 여러 대학에서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사례. 원인 분석이 필요
-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고용구조 유연화와 다양한 교원임용체계 그리고 우수교수 유치를 선행하고 이후에 평가강화 등이 논의되어야 할 선후행 지수 관계임.
- 우수교원 특별지원 및 대우 프로그램과 유연한 교수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10) 대학의 연구력 강화

가) 세부 추가과제 응답 결과

추가 질문	3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WCU보다 진전된 국제협력연구 지원 강화	18	3.61	65
대학의 중장기 기초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18	4.28	77

나) 추가의견

추가의견, 제언:

- 고등직업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관점에서 연구는 핵심 역량에서 다소 비켜 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질문에 대한 답도 이같은 전문대학의 관점에서 작성한 것임.
- WCU보다 진전된 국제협력연구 -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 의견 (대학은 근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어야 함.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임. 이 대학의 수와 학생이 너무 많아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만들기 어려움. 과감하게 그 수를 줄이면 됨. 나머지는 모두 전문대학 또는 직업교육 대학교로 하고 그 수는 인력 수급 정도에 따라 하면 된다. 여분의 대학은 통폐합하여 그 재정을 대학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임.)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 주의할 필요
- ⑥ 연구업적평가 부언: 해외에서의 연구 업적의 평가는 SCI 게재 논문수 보다 Peer Review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 네덜란드: 평가자의 2/3 이상을 해외 같은 분야 학자들로 구성)
- 교수별 역할배분(수업시간수 : 연구실적)이 필요할 것임.

- 연구중심대학을 지정하고 재원을 집중 지원
- 대학교수와 기업체 연구소 인력 간의 밀접한 협동연구 강화
- 대학원 박사과정을 지원하되 모든 대학원 박사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성과 또는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
- 연구자의 저변이 확대되어야 함. 대학의 연구력은 한 사람의 훌륭한 학자 지원도 중요 하지만, 훌륭한 학자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저변이 튼튼해야 함. 따라서 연구비를 많은 사람들이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을 해야 할 것임.
- 연구지원의 중간 평가 지양(이 제도가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 연구 결과의 산출을 저해, 우수 논문의 분산 계재 등)
- 대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우 중요함. 더욱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교수들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강화”부분의 고려가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연구력 강화가 너무 강조되어 교육을 경시하게 하는 등의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이제는 연구의 질 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대학의 연구력 강화와 관련하여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 범위내에 박사과정 진학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다학문적 협동연구의 강화는 연구중심대학의 집중육성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할 sub 과제임. .

11) 대학의 교육력 강화

가) 세부 추가과제 응답결과

추가 질문	3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시 교육관련 연수 이수를 의무화	15	3.53	53

나) 추가의견

- 교육 관련 연수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확인, 관리하고 평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별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함.
- ‘재정지원 확대’를 반대한 대학교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도 재정지원 담당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졸업장 속에는 일정 기간의 현장 실습 중심의 직업교육기간이 포함되도록 함.

- 교육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하되, 일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정체성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교육중심대학은 교육만 잘 시키면 되고, 직업교육 중심 전문대학은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취업을 시킨다는 차이?)
- 교수업적평가에 연구중심대학이 아닌 대학(교육중심 또는 직업교육)에서는 산학협력과 교육업적을 강조
- 역량(capacity 또는 competency)에 대한 규정 및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 교육관련 연수 이수는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시 뿐만 아니라, 정교수가 된 이후에도 필요해 보임.
- 대학별로 1학년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고 시행함
- 대학 본부나 단과 대학을 교육력 강화의 주체로 삼기보다는, 학과가 교육력 강화 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함
- 대학의 교육력 강화도 재정지원 확대가 가장 높게나왔고,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오히려 하위에 있는 요소들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임.
- 대학의 설립목적과 교육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교육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취업 및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함.
- 대학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수들이 교육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연마가 필요함. 이에 대학의 기본 학점을 학기당 조정하는 것이 필요. 현행은 대부분 9학점으로 인지하고 있음.
- 교육의 주요한 목적이 기업 등 사회에 대한 우수한 인력 공급 등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이 한 단계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창의 및 융합교육은 필요하나 의무화에는 반대
- 신임교원 연수 및 전임교원의 승진 등에 교육관련 연수 및 수업행동분석 촬영 분석 필수화함.
- 학생의 로드맵 지도를 위한 교수의 상담 역할 및 학교의 상담 지원 강화함.
- 대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12) 교육기회 형평 보장

- 등록금 인하 방안 도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사이버대학 교육의 품질관리를 통해 평생 교육의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사립간 지원차등을 철폐하면 모두 사립대학화하거나 모두 국립대학화하라는 이야기인지

- 국립대 학비는 가정의 부와 소득에 비례하여 차등화 함.
- 대학교육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 다른 차원임(교육수혜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저소득층이지만 우수한 인력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을 없는 것이 문제 이므로 이런 수준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 등록금 결정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대학에 전적으로 맡겨야 함. 단, 정부가 등록금 결정에 관여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기부금 입학제도를 허용하여 대학의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함.
- ④국사립대간 지원 차등 철폐는 학교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따라서 차등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립대학이 어떻게 왜 설립되었는가를 생각해봐야 함. 국사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 지원뿐만 아니라 급여, 인사제도, 학교운영 등등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보다 일부는 생활 연계형 지원(등록금+생활비)도 고려할 시점이 되었음.
- 기업주문형 교육강화가 교육기회 형평보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었으면 함.
-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또는 학생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교육기회의 형평 보장과 거리가 있으므로, 1의 항목이 지닌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함
- 5번은 교육기회 형평 보장과 큰 관계 음.
- 재정지원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학교 발전을 위한 것인가가 애매한 듯합니다. 저는 학교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어떤 분은 전자를, 다른 분은 후자를 염두에 두고 응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
- 학자금대출에 이자를 낮추고, 학자금대출 학생에 대한 취업 우선지원제(인턴, 중소기업 우선채용 등)를 실시하여 조기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교육기회 형평은 학생 때도 중요하지만 이제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현재에도 너무 많아(특히 이 공계의 경우) 현실 적용을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일으키고 있음 .
- 무조건적인 등록금 인하 및 무상장학금은 바람직하지 않음.
- 소득에 연계된 재정지원이 필요함.

13) 기타

- 대학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법한가? 대학 경영에 대한 책임은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대학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투자는 무엇을 근거로 계획·집행 그리고 평가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국민, 학생, 학부모, 기업, 대학, 교수, 총학장, 국회의원, 각료, 대통령 등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그리고 그러한 고민에 터하여 이제까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대학 시스템을 구안할 필요성 심대.
- 인터넷상에서 죄의식없이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고학력자들의 사이버 폭력, 교실 안 일상 대화에서 난무하는 욕 등 청소년들이 이 같은 위험한 환경에 아무 의식 없이 노출되어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인 됨. 대학은 기술자나 전문가를 양성하기 보다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어야 함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정책에 정치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안됨(반값 등록금 여론으로 등록금 인상 여부를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에 넣으면서, 어떻게 우수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는 대학이 나올수 있을까?)
-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요소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원이라고 생각함, 그 많은 재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것인가? 등록금은 인상하지 않으면서?
- 터무니없이 높은 등록금의 인상은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 우수 인력에게는 국가 재정지원을 하는 등의 보완적 정책이 있으면 됨.
- 표에만 관심 있는 정치인들의 논리에 교육의 정책이 혼들리지 않기를.....
- ⑦예절, 인성교육의 강화가 1위에 랭크되길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는 각종 비리도 낮아지고 성추행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인격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인격을 갖춘 학생의 배출이 최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모든 대학교에서 다시 예절, 교양 등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제대로 마련된 교육과정으로 강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기초가 되는 교육을 하는 것이 기업형 맞춤형보다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가 되는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되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 비전임 교수들에 대한 처우를 수강자들의 강의 평가와 연계시켜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지. 이러한 방식을 쓰는 학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음. 여하튼

평가의 의미가 내년도에도 계속 강의 시간을 주느냐 아니냐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 산업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핵심기술요소를 교과과정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전공 교수의 산업체 협업을 강화하는 행·재정 지원책이 필요함.
- 학생 진로 교육 등과 연계해 8번 기업체 필요 인재상 개발 및 명세화/필요과제 안내 지원 등이 훨씬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음.

VII. 핵심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대상 및 내용

- 이 설문조사는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에 대하여 대학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의 내용이 된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음.
 - ①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대학교 지원)
 - ②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전문대학 지원)
 - ③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2010년 11개교, 2011년 11개교 선정)
 - ④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지원(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 80개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 ⑤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등록금 인상 제한(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 2012년 1조 5천억원 차등 지원(대응 자금))
 - ⑥ 대학 구조조정 추진(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연계 추진)
 - ⑦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울산과기대의 법인화국립대로 출범, 서울대 법인화법시행령 제정)
 - ⑧ WCU(World Class University)
 - ⑨ WCC(World Class College)
 - ⑩ BK21(Brain Korea 21)
 - ⑪ GPS(Global Ph.D. Scholarship)
- 현 정부 교육정책 진단을 위한 의식 조사의 설문에 응답한 대학 관계자의 변인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464명으로서 국공립대학 123명, 사립대학 341명, 전문대학 201명, 4년제 대학교 251명, 기타 12명임.

<표 VII-1> 배경변인별 응답자 현황

배경변인		N	비율(%)
설립유형	국공립	123	26.5
	사립	341	73.5
근무지역	특별시	60	12.9
	광역시	95	20.5
	중소도시 이하	309	66.6

근무학교	전문대학	201	43.3
	대학교	251	54.1
	기타	12	2.6
직위1	기획및교무처장	79	17.0
	기타보직교수	86	18.5
	평교수	86	18.5
	교무처및기획처 직원	99	21.3
	기타직원및연구원	114	24.6
직위2	보직교수	165	35.6
	평교수	86	18.5
	직원및기타	213	45.9
합계		464	100.0

2. 설문 분석 결과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의 추진 배경, 추구 방향, 추진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다음 <표 VII-2>와 같다.

<표 VII-2>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의 추진 배경, 추구 방향, 추진 내용에 대한 인지도

구분	N	M	SD
①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대학교 지원)	464	80.30	24.43
②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전문대학 지원)	464	67.11	29.78
③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2010년 11개교, 2011년 11개교 선정)	464	69.27	28.73
④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 80개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464	63.02	30.76
⑤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등록금 인상 제한(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 2012년 1조 5천억원 차등 지원(대응 자금))	464	75.91	22.99
⑥ 대학 구조조정 추진(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연계 추진)	464	83.79	18.20
⑦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울산과기대의 법인화국립대로 출범, 서울대 법인화법시행령제정)	464	70.82	25.27
⑧ WCU(World Class University)	464	60.60	28.09
⑨ WCC(World Class College)	464	61.85	30.05
⑩ BK21(Brain Korea 21)	464	69.14	26.47
⑪ GPS(Global Ph.D. Scholarship)	464	47.93	26.76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다음 <표 VII-3>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80.30(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라 $p<.01$ 의 수준에서, 근무학교, 직위1, 직위2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전문대학보다 대학교가, 직위1에 따라서는 기타직원및연구원보다 기획및교무처장과 기타보직교수가, 직위2에 따라서는 평교수와 직원및기타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3>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23	84.88	22.520	2.436	.015**
	특별시(b)	341	78.65	24.910		
근무지역	(a)	60	84.67	20.949	1.200	.302
	광역시(b)	95	80.63	25.508		
	중소도시(c)	309	79.35	24.698		
근무학교	(a)	201	71.74	26.485	28.379	.000*** b>a
	대학교(b)	251	87.73	19.820		
	기획및교무처장(c)	12	68.33	26.227		
직위1	(a)	79	88.35	20.155	6.862	.000*** a>e, b>e
	기타보직교수(b)	86	85.35	18.259		
	평교수(c)	86	77.21	27.468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99	81.41	25.274		
	기타집단및연구원(e)	114	72.28	25.592		
직위2	(a)	165	86.79	19.191	9.375	.000*** a>b, a>c
	평교수(b)	86	77.21	27.468		
	직원및기타(c)	213	76.53	25.792		
합계		464	80.30	24.431		

** $p<.01$, *** $p<.001$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다음 <표 VII-4>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67.11(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근무지역에 따라 $p<.01$ 의 수준에서, 설립유형, 근무학교, 직위1, 직위2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결과 근무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보다 광역시와 중소도시 이하가,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 및 기타보다 전문대학이, 직위1에 따라서는 기획및교무처장, 평교수, 교무처및기획처 직원, 기타직원및연구원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직위2에 따라서는 직원및기타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4>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23	52.85	28.873	-6.466	.000***
	부설립(b)	341	72.26	28.427		
근무지역	(a)	60	54.00	29.983	7.593	.001**
	광역시(b)	95	65.89	30.300		b>a, c>a
	중소도시&군(c)	309	70.03	28.948		
근무학교	(a)	201	86.57	17.454	112.911	.000***
	대학교(b)	251	51.87	28.637		a>b, a>c
	기획및교무처장	12	60.00	29.542		
직위1	(a)	79	65.57	32.175	8.660	.000***
	기타보직교수(b)	86	82.79	23.597		b>a, b>c,
	평교수(c)	86	67.21	29.090		b>d, b>e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99	60.00	29.692		
	기타집단 및 연구원(e)	114	62.46	29.043		
직위2	(a)	165	74.55	29.248	9.516	.000***
	평교수(b)	86	67.21	29.090		a>c
	직원및기타(c)	213	61.31	29.303		
합계		464	67.11	29.777		

p<.01, *p<.001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다음 <표 VII-5>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69.27(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근무학교, 직위1, 직위2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전문대학보다 대학교가, 직위1에 따라서는 평교수보다 기획및교무처장, 기타직원및연구원보다 기획및교무처장, 기타보직교수, 교무처및기획처 직원이, 직위2에 따라서는 평교수와 직원및기타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5>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23	73.01	27.098	1.749	.082
	부설립(b)	341	67.92	29.216		
근무지역	(a)	60	76.33	27.677	2.959	.053
	광역시(b)	95	71.58	29.257		
	중소도시&군(c)	309	67.18	28.584		
근무학교	(a)	201	55.82	28.257	46.892	.000*** b>a
	대학교(b)	251	79.84	24.722		
	기타(c)	12	73.33	21.462		

기획 및 교무처장						
직위1	(a)	79	83.54	24.128	17.226	.000*** a>c, a>e, b>e, d>e
	기타보직교수(b)	86	75.12	23.552		
	평교수(c)	86	64.65	30.320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99	74.34	28.434		
	기타집무처 직원(e)	114	54.04	26.995		
직위2	(a)	165	79.15	24.129	16.204	.000*** a>b, a>c
	평교수(b)	86	64.65	30.320		
	직원 및 기타(c)	213	63.47	29.415		
합계		464	69.27	28.729		

p<.01, *p<.001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다음 <표 VII-6>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63.02(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전체 배경변인에서 p<.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결과 균무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이하와 특별시보다 광역시가, 균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와 기타보다 전문대학이, 직위1에 따라서는 나머지 모든 직위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직위2에 따라서는 평교수와 직원 및 기타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6>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 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23	44.55	26.341	-8.775	.000***
	부설(a)	341	69.68	29.529		
근무지역	(a)	60	47.33	27.793	9.758	.000*** b>a, b>c
	광역시(b)	95	62.74	30.122		
	중소도시/현(시)회(c)	309	66.15	30.659		
근무학교	(a)	201	86.87	17.165	200.785	.000*** a>b, a>c
	대학교(b)	251	44.14	25.837		
	기획 및 교무처장(c)	12	58.33	27.579		
직위1	(a)	79	58.99	31.198	14.854	.000*** b>a, b>c, b>d, b>e
	기타보직교수(b)	86	84.19	24.565		
	평교수(c)	86	61.16	29.000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99	53.74	30.459		
	기타집무처 직원(e)	114	59.30	29.501		
직위2	(a)	165	72.12	30.580	12.439	.000*** a>b, a>c
	평교수(b)	86	61.16	29.000		
	직원 및 기타(c)	213	56.71	30.008		
합계		464	63.02	30.763		

***p<.001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다음 <표 VII-7>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75.91(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직위1, 직위2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결과 직위1에 따라서는 평교수보다 기획 및교무처장과 기타보직교수가, 기타직원및연구원보다 기획및교무처장, 기타보직교수, 교무처및기획처 직원이, 직위2에 따라서는 평교수와 직원및기타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7>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23	72.85	25.496	-1.609	.109
	부설립(b)	341	77.01	21.946		
근무지역	(a)	60	75.67	22.426	1.292	.276
	광역시(b)	95	72.63	24.763		
	중소도시, 이하(c)	309	76.96	22.501		
근무학교	(a)	201	74.23	22.859	1.561	.211
	대학교(b)	251	77.53	22.810		
	기획 및교무처장(d)	12	70.00	27.634		
직위1	(a)	79	85.82	16.378	14.388	.000*** a>c, a>e, b>c, b>e, d>e, d>e
	기타보직교수(b)	86	81.40	19.832		
	평교수(c)	86	69.07	25.970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99	80.40	19.996		
	기타집행 및연구원(e)	114	66.14	24.259		
직위2	(a)	165	83.52	18.340	15.773	.000*** a>b, a>c
	평교수(b)	86	69.07	25.970		
	직원및기타(c)	213	72.77	23.439		
합계		464	75.91	22.986		

** $p<.01$, *** $p<.001$

대학 구조조정 추진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다음 <표 VII-8>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구조조정 추진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83.79(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근무지역에 따라 $p<.01$ 의 수준에서, 직위1, 직위2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결과 근무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보다 중소도시 이하가, 직위1에 따라서는 기타직원및연구원보다 기획 및교무처장, 기타보직교수, 평교수, 교무처및기획처 직원이, 직위2에 따라서는 직원및기타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8> 대학 구조조정 추진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23	86.18	16.222	1.700	.090
	부설립(b)	341	82.93	18.808		
근무지역	(a)	60	76.33	21.937	6.257	.002** c>a
	광역시(b)	95	83.58	21.033		
	중·소도시·현·군(c)	309	85.31	16.045		
근무학교	(a)	201	81.99	18.331	2.647	.072
	대학교(b)	251	85.50	17.890		
	기획 및 교수부처장	12	78.33	19.924		
직위1	(a)	79	89.11	16.885	10.264	.000*** a>e, b>e, c>e, d>e
	기타보직교수(b)	86	87.21	13.342		
	평교수(c)	86	83.95	18.616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99	86.46	16.119		
	기타집단 및 연구원(e)	114	75.09	20.706		
직위2	(a)	165	88.12	15.125	8.707	.000*** a>c
	평교수(b)	86	83.95	18.616		
	직원 및 기타(c)	213	80.38	19.519		
합계		464	83.79	18.198		

p<.01, *p<.001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다음 <표 VII-9>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70.82(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직위2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설립유형, 근무학교, 직위1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전문대학보다 대학교가, 직위1에 따라서는 기획 및 교무처장,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 기타직원 및 연구원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직위2에 따라서는 직원 및 기타보다 보직교수와 평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9>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23	86.50	18.016	10.070	.000***
	부설립(b)	341	65.16	25.142		
근무지역	(a)	60	64.67	23.395	2.223	.109
	광역시(b)	95	73.05	24.541		
	중·소도시·현·군(c)	309	71.33	25.733		
근무학교	(a)	201	65.27	25.021	8.940	.000*** b>a
	대학교(b)	251	74.90	24.906		
	기획 및 교수부처장	12	78.33	19.924		
직위1	(a)	79	66.33	27.651	5.531	.000***

	기타보직교수(b)	86	80.00	20.580		b>a, b>d, b>e
	평교수(c)	86	75.12	24.722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99	67.88	25.685		
	기타집회및연구원(e)	114	66.32	24.863		
직위2	(a)	165	73.45	25.101	4.589	.011* a>c, b>c
	평교수(b)	86	75.12	24.722		
	직원및기타(c)	213	67.04	25.201		
	합계	464	70.82	25.271		

*p<.05, ***p<.001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다음 <표 VII-10>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60.60(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근무지역과 근무학교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직위1과 직위2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결과 근무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이하보다 특별시가, 직위1에 따라서는 기타직원및연구원보다 기획및교무처장, 평교수가, 교무처및기획처 직원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직위2에 따라서는 직원및기타보다 보직교수와 평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10>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 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23	63.74	28.670	1.446	.149
	부설(a)	341	59.47	27.839		
근무지역	(a)	60	68.33	28.354	3.493	.031* a>c
	광역시(b)	95	62.74	28.376		
	중소도시이하(c)	309	58.45	27.731		
근무학교	(a)	201	57.21	27.572	3.735	.025*
	대학교(b)	251	62.63	28.246		
	기획및교무처장(c)	12	75.00	27.136		
직위1	(a)	79	66.08	27.984	10.938	.000*** a>e, b>d, b>e, c>e
	기타보직교수(b)	86	71.16	25.960		
	평교수(c)	86	66.05	26.581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99	55.35	28.259		
	기타집회및연구원(e)	114	49.30	26.094		
직위2	(a)	165	68.73	26.986	19.715	.000*** a>c, b>c
	평교수(b)	86	66.05	26.581		
	직원및기타(c)	213	52.11	27.226		
	합계	464	60.60	28.094		

*p<.05, ***p<.001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다음 <표 VII-11>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61.85(중간점 60)로 중간 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균무지역에 따라 $p<.05$ 의 수준에서, 설립유형, 균무학교, 직위1, 직위2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결과 균무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보다 광역시와 중소도시이하가, 균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직위1에 따라서는 나머지 직위 모두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직위2에 따라서는 평교수와 직원및기타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11>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 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23	50.57	27.500	-5.184	.000***
	부설(a)	341	65.92	29.923		
근무지역	(a)	60	52.33	27.082	3.721	.025* b>a, c>a
	광역시(b)	95	65.05	28.280		
	중소도시&하위하(c)	309	62.72	30.839		
근무학교	(a)	201	78.41	26.409	72.789	.000*** a>b
	대학교(b)	251	48.45	25.899		
	기획및교무처장	12	65.00	30.896		
직위1	(a)	79	62.78	29.826	18.458	.000*** b>a, b>c, b>d, b>e
	기타보직교수(b)	86	83.02	27.011		
	평교수(c)	86	63.26	28.094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99	51.72	27.849		
	기타집단및연구원(e)	114	52.98	27.521		
직위2	(a)	165	73.33	30.068	25.048	.000*** a>b, a>c
	평교수(b)	86	63.26	28.094		
	직원및기타(c)	213	52.39	27.616		
합계		464	61.85	30.047		

* $p<.05$, *** $p<.001$

BK21(Brain Korea 21)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다음 <표 VII-12>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BK21(Brain Korea 21)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69.14(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 균무학교, 직위1, 직위2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결과 균무학교에 따라서는 기타보다 전문대학이, 직위1에 따라서는 기타직원및연구원보다 기획및교무처장, 기타보직교수, 평교수가, 직위2에 따라서는 직원및기타보다 보직교수와 평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12> BK21(Brain Korea 21)사업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23	78.05	23.804	4.686	.000***
	부설립(b)	341	65.92	26.681		
근무지역	(a)	60	74.00	26.374	2.058	.129
	광역시(b)	95	71.58	26.988		
	중소도시&군(c)	309	67.44	26.241		
근무학교	(a)	201	61.89	27.539	14.530	.000*** c>a
	대학교(b)	251	74.34	24.361		
	기회 및 교육부처장	12	81.67	21.672		
직위1	(a)	79	73.92	24.042	6.722	.000*** a>e, b>e, c>e
	기타보직교수(b)	86	74.65	24.432		
	평교수(c)	86	75.58	26.104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99	64.44	25.323		
	기타집권 및 연구원(e)	114	60.88	28.208		
직위2	(a)	165	74.30	24.175	12.950	.000*** a>c, b>c
	평교수가(b)	86	75.58	26.104		
	직원및기타(c)	213	62.54	26.902		
합계		464	69.14	26.472		

***p<.001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다음 <표 VII-13>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47.93(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라 p<.01의 수준에서, 근무학교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직위1, 직위2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전문대학보다 대학교가, 직위1에 따라서는 기타직원및연구원보다 기획및교무처장, 기타보직교수, 평교수가, 교무처및기획처 직원보다 기획및교무처장과 평교수가, 직위2에 따라서는 직원및기타보다 보직교수와 평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13>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23	53.98	27.927	2.854	.005**
	부설립(b)	341	45.75	26.028		
근무지역	(a)	60	49.33	30.691	.677	.509
	광역시(b)	95	50.32	27.501		
	중소도시&군(c)	309	46.93	25.735		
근무학교	(a)	201	44.08	24.925	4.469	.012* b>a
	대학교(b)	251	50.44	27.673		
	기타(c)	12	60.00	29.542		

기획및교무처장						
직위1	(a)	79	54.18	27.763	7.694	.000*** a>d, a>e, b>e, c>d, c>e
	기타보직교수(b)	86	52.33	26.950		
	평교수(c)	86	55.58	29.649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99	41.41	24.620		
	기타집원및연구원(e)	114	40.18	22.021		
직위2	(a)	165	53.21	27.274	15.279	.000*** a>c, b>c
	평교수(b)	86	55.58	29.649		
	직원및기타(c)	213	40.75	23.218		
합계		464	47.93	26.762		

*p<.05, ***p<.001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다음 <표 VII-14>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66.93(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14>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06	71.51	25.886	2.148	.032*
	특별법(b)	269	65.13	25.896		
근무지역	(a)	52	65.38	23.802	.287	.751
	광역시(b)	75	65.60	27.026		
	중소도시&하(c)	248	67.66	26.223		
근무학교	(a)	141	64.68	24.916	1.052	.350
	대학교(b)	226	68.50	26.707		
	기획및교무처장	8	62.50	24.928		
직위1	(a)	71	67.32	26.020	.956	.431
	기타보직교수(b)	77	69.87	26.482		
	평교수(c)	65	63.38	28.410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78	69.49	25.932		
	기타집원및연구원(e)	84	64.29	23.658		
직위2	(a)	148	68.65	26.203	.928	.396
	평교수(b)	65	63.38	28.410		
	직원및기타(c)	162	66.79	24.839		
합계		375	66.93	26.018		

*p<.05,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다음 <표 VII-15>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66.55(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배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VII-15>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52	63.08	25.169	-1.120	.263
	부설(b)	241	67.30	24.558		
근무지역	(a)	25	65.60	24.166	.029	.972
	광역시(b)	57	67.02	26.047		
	중·소도시·군·군 하(c)	211	66.54	24.473		
근무학교	(a)	185	67.78	24.405	1.721	.181
	대학교(b)	102	65.29	25.003		
	기회 및 기회 부여 장	6	50.00	24.495		
직위1	(a)	43	69.30	22.824	1.469	.212
	기타보직교수(b)	75	69.87	25.758		
	평교수(c)	56	66.43	26.726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52	67.31	24.743		
	기타집회 및 협의구원(e)	67	60.60	22.285		
직위2	(a)	118	69.66	24.632	1.840	.161
	평교수(b)	56	66.43	26.726		
	직원 및 기타(c)	119	63.53	23.527		
합계		293	66.55	24.677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다음 <표 VII-16>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61.09(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근무지역에 따라 $p<.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16>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92	58.26	27.280	-1.198	.232
	부설(b)	220	62.27	26.831		
근무지역	(a)	46	52.17	26.826	3.052	.049*
	광역시(b)	65	63.69	28.699		
	중·소도시·군·군 하(c)	201	62.29	26.167		
근무학교	(a)	97	64.74	25.621	1.294	.276
	대학교(b)	205	59.41	27.576		
	기회 및 기회 부여 장	10	60.00	26.667		
직위1	(a)	66	64.24	25.423	.881	.475
	기타보직교수(b)	70	64.29	27.430		
	평교수(c)	53	58.87	27.850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71	59.44	28.279		

	기타집(원)(e)	52	57.31	25.676		
직위2	(a)	136	64.26	26.377	1.679	.188
	평교수(b)	53	58.87	27.850		
	직원및기타(c)	123	58.54	27.121		
	합계	312	61.09	26.983		

*p<.05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다음 <표 VII-17>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64.29(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배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VII-17>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35	57.71	24.142	-1.627	.105
	사립(b)	226	65.31	25.925		
근무지역	(a)	18	65.56	27.273	.093	.911
	광역시(b)	53	63.02	27.287		
	중소도시(하)c	190	64.53	25.335		
근무학교	(a)	186	66.67	25.355	2.909	.056
	대학교(b)	69	57.97	26.155		
	기획및기획부처장	6	63.33	26.583		
직위1	(a)	34	62.35	26.407	1.836	.122
	기타보직교수(b)	75	66.93	27.012		
	평교수(c)	48	64.58	26.814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43	70.23	23.653		
	기타집(원)(e)	61	57.70	23.692		
직위2	(a)	109	65.50	26.787	.277	.758
	평교수(b)	48	64.58	26.814		
	직원및기타(c)	104	62.88	24.363		
	합계	261	64.29	25.780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다음 <표 VII-18>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55.30(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근무지역에 따라 p<.01의 수준에서, 근무학교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직위1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지역에 따라서는 광역시보다 중소도시 이하가,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상대적으

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18>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 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89	53.26	27.460	-.827	.409
	부설립(b)	273	55.97	26.677		
근무지역	(a)	48	50.83	25.081	5.379	.005** c>b
	광역시(b)	68	47.35	26.294		
	중소도시 와 하(c)	246	58.37	26.875		
근무학교	(a)	152	62.63	24.542	10.292	.000*** a>b
	대학교(b)	202	50.10	27.300		
	기술 및 부 현 장	8	47.50	28.158		
직위1	(a)	74	49.73	28.716	2.572	.038*
	기타보직교수(b)	75	61.07	26.075		
	평교수(c)	57	60.70	25.345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85	54.12	27.744		
	기타집 원 및 원 구원(e)	71	52.11	24.490		
직위2	(a)	149	55.44	27.911	1.635	.196
	평교수(b)	57	60.70	25.345		
	직원및기타(c)	156	53.21	26.249		
	합계	362	55.30	26.858		

*p<.05, **p<.01, ***p<.001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다음 <표 VII-19>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56.01(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근무학교에 따라 p<.01의 수준에서, 직위2에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19>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 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16	47.93	28.998	-3.613	.000***
	부설립(b)	300	59.13	28.105		
근무지역	(a)	46	60.87	27.954	.982	.375
	광역시(b)	83	57.35	27.897		
	중소도시 와 하(c)	287	54.84	29.135		
근무학교	(a)	178	61.91	26.270	7.200	.001** a>b
	대학교(b)	228	51.23	29.746		

	<u>기회 및 기회부여장</u>	10	60.00	31.269		
직위1	(a)	73	58.08	29.470	1.833	.122
	기타보직교수(b)	84	62.62	26.486		
	평교수(c)	76	54.21	29.722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92	52.61	30.915		
	기타집회및연구원(e)	91	53.19	26.536		
직위2	(a)	157	60.51	27.915	3.175	.043*
	평교수(b)	76	54.21	29.722		
	직원및기타(c)	183	52.90	28.743		
	합계	416	56.01	28.765		

*p<.05, **p<.01, ***p<.001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다음 <표 VII-20>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55.00(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근무학교, 직위1, 직위2에 따라 p<.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직위1에 따라서는 평교수와 기타직원및연구원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직위1에 따라서는 평교수와 직원및기타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20>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13	42.30	27.614	-6.195	.000***
	부설립(b)	207	61.93	26.806		
근무지역	(a)	35	54.29	26.378	1.200	.303
	광역시(b)	69	59.71	30.581		
	중·소도시·현·군·면(c)	216	53.61	28.316		
근무학교	(a)	123	62.76	25.132	7.754	.001** a>b
	대학교(b)	187	49.95	29.793		
	기회 및 기회부여장(c)	10	54.00	28.363		
직위1	(a)	46	60.00	27.968	4.905	.001** b>c, b>e
	기타보직교수(b)	75	62.93	29.167		
	평교수(c)	63	46.98	29.217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65	58.77	27.586		
	기타집회및연구원(e)	71	47.04	25.768		
직위2	(a)	121	61.82	28.636	6.579	.002** a>b, a>c
	평교수(b)	63	46.98	29.217		
	직원및기타(c)	136	52.65	27.196		
	합계	320	55.00	28.637		

p<.01, *p<.001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다음 <표 VII-21>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57.70(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라 $p<.01$ 의 수준에서, 근무학교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직위1에 따라 $p<.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직위1에 따라서는 기타직원및연구원이 기타보직교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21>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71	49.58	27.226	-3.101	.002**
	부설립(b)	173	61.04	25.814		
근무지역	(a)	40	54.00	27.250	.816	.443
	광역시(b)	50	61.20	26.002		
근무학교	중소도시&현하(c)	154	57.53	26.797		
	(a)	94	67.23	24.687	10.510	.000*** a>b
	대학교(b)	141	51.77	26.519		
직위1	기획 및 교육부장	9	51.11	22.608		
	(a)	46	54.78	26.478	2.867	.024* b>e
	기타보직교수(b)	62	66.45	26.058		
	평교수(c)	53	53.96	27.620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45	59.11	26.614		
직위2	기타집단 및 연구원(e)	38	50.53	24.044		
	(a)	108	61.48	26.750	1.989	.139
	평교수(b)	53	53.96	27.620		
	직원 및 기타(c)	83	55.18	25.679		
	합계	244	57.70	26.691		

* $p<.05$, ** $p<.01$, *** $p<.001$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다음 <표 VII-22>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62.39(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라 $p<.01$ 의 수준에서, 근무학교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직위1에 따라 $p<.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22>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45	49.78	25.090	-3.517	.001**
	부설립(b)	198	65.25	26.974		
근무지역	(a)	22	57.27	26.400	1.374	.255
	광역시(b)	56	58.57	26.658		
	중·소도시·현·하(c)	165	64.36	27.504		
근무학교	(a)	154	69.22	26.483	14.737	.000*** a>b
	대학교(b)	82	50.73	24.785		
	기회 및 교육부(현장)	7	48.57	22.678		
직위1	(a)	44	60.00	27.280	2.569	.039*
	기타보직교수(b)	70	66.57	28.227		
	평교수(c)	48	62.92	27.979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37	68.65	25.184		
	기타집단 및 연구원(e)	44	52.27	24.482		
직위2	(a)	114	64.04	27.929	.594	.553
	평교수(b)	48	62.92	27.979		
	직원 및 기타(c)	81	59.75	25.980		
합계		243	62.39	27.259		

*p<.05, **p<.01, ***p<.001

BK21(Brain Korea 21)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다음 <표 VII-23>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BK21(Brain Korea 21)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59.09(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직위1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직위에 따라서 직원 및 기타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23> BK21(Brain Korea 21)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00	59.80	24.699	.353	.725
	부설립(b)	209	58.76	24.186		
근무지역	(a)	44	61.36	23.387	.253	.777
	광역시(b)	64	59.38	25.935		
	중·소도시·현·하(c)	201	58.51	24.078		
근무학교	(a)	110	60.73	24.521	1.244	.290
	대학교(b)	189	57.67	24.120		
	기회 및 교육부(현장)	10	68.00	25.298		
직위1	(a)	58	63.10	23.336	2.193	.070
	기타보직교수(b)	63	62.54	25.525		
	평교수(c)	65	61.23	26.191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60	52.67	22.689		
	기타집원및연구원(e)	63	55.87	22.478		
직위2	(a)	121	62.81	24.400	4.127	.017* a>c
	평교수(b)	65	61.23	26.191		
	직원및기타(c)	123	54.31	22.546		
	합계	309	59.09	24.318		

*p<.05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다음 <표 VII-24>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는 64.53(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균무학교에 따라 p<.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균무학교에 따라서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24>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합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51	57.65	25.814	-2.487	.015*
	부설립(b)	99	68.08	21.174		
근무지역	(a)	22	70.00	19.272	.924	.399
	광역시(b)	32	61.25	25.368		
근무학교	중·초등학교(c)	96	64.38	23.432	6.314	.002** a>b
	(a)	53	72.83	18.849		
	대학교(b)	92	59.35	24.531		
	기타 및 기타부설장	5	72.00	17.889		
직위1	(a)	32	59.38	22.992	2.051	.090
	기타보직교수(b)	35	71.43	19.575		
	평교수(c)	41	62.44	26.531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23	70.43	18.944		
	기타집원및연구원(e)	19	57.89	24.850		
직위2	(a)	67	65.67	21.966	.245	.783
	평교수(b)	41	62.44	26.531		
	직원및기타(c)	42	64.76	22.441		
합계		150	64.53	23.304		

*p<.05, **p<.01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다음 <표 VII-25>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65.60(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라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25>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 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06	70.00	27.775	2.025	.044*
	부설립(b)	269	63.87	25.857		
근무지역	(a)	52	64.62	23.966	.145	.865
	광역시(b)	75	64.53	27.817		
	중소도시(c)	248	66.13	26.715		
근무학교	(a)	141	63.55	25.443	.788	.456
	대학교(b)	226	66.99	27.240		
	기초 및 특수학교(c)	8	62.50	24.928		
직위1	(a)	71	67.61	25.605	.703	.590
	기타보직교수(b)	77	67.27	27.321		
	평교수(c)	65	60.92	27.935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78	66.41	26.284		
	기타집행직원(e)	84	65.24	25.811		
직위2	(a)	148	67.43	26.422	1.372	.255
	평교수(b)	65	60.92	27.935		
	직원 및 기타(c)	162	65.80	25.965		
합계		375	65.60	26.520		

* $p < .05$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다음 <표 VII-26>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69.42(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직위1과 직위2에 따라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26>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 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52	66.15	25.526	-1.016	.311
	부설립(b)	241	70.12	25.568		
근무지역	(a)	25	72.80	22.271	.264	.769
	광역시(b)	57	68.42	25.620		
	중소도시(c)	211	69.29	25.985		
근무학교	(a)	185	71.35	26.268	1.439	.239
	대학교(b)	102	66.08	23.846		
	기초 및 특수학교(c)	6	66.67	30.111		
직위1	(a)	43	67.91	25.124	2.562	.039*
	기타보직교수(b)	75	76.80	27.121		

	평교수(c)	56	63.93	27.613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52	70.00	22.229		
	기타집원및연구원(e)	67	66.27	23.409		
직위2	(a)	118	73.56	26.651	3.094	.047*
	평교수(b)	56	63.93	27.613		
	직원및기타(c)	119	67.90	22.880		
	합계	293	69.42	25.562		

*p<.05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다음 <표 VII-27>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62.31(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배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VII-27>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92	61.52	27.050	-.331	.741
	부설립(b)	220	62.64	27.204		
근무지역	(a)	46	57.39	28.785	1.220	.297
	광역시(b)	65	65.54	27.043		
	중소도시&현하(c)	201	62.39	26.726		
근무학교	(a)	97	64.12	25.971	.359	.699
	대학교(b)	205	61.37	27.761		
	기획및교부처장	10	64.00	26.331		
직위1	(a)	66	61.21	27.147	.828	.508
	기타보직교수(b)	70	67.14	26.819		
	평교수(c)	53	58.87	27.850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71	61.13	28.261		
	기타집원및연구원(e)	52	62.31	25.253		
직위2	(a)	136	64.26	27.043	.818	.442
	평교수(b)	53	58.87	27.850		
	직원및기타(c)	123	61.63	26.930		
	합계	312	62.31	27.120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다음 <표 VII-28>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66.21(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근무학교와 직위2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직위2에 따라서는 평교수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28>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35	57.14	24.802	-2.232	.026
	부설립(b)	226	67.61	25.967		
근무지역	(a)	18	62.22	26.470	.230	.795
	광역시(b)	53	66.79	25.703		
	중소도시(c)	190	66.42	26.163		
근무학교	(a)	186	68.71	26.128	3.099	.047*
	대학교(b)	69	60.29	24.851		
	기회 및 기회부여장	6	56.67	26.583		
직위1	(a)	34	65.88	27.205	3.205	.014
	기타보직교수(b)	75	72.80	28.406		
	평교수(c)	48	59.17	24.740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43	70.70	22.824		
	기타집권 및 연구원(e)	61	60.66	23.372		
직위2	(a)	109	70.64	28.096	3.561	.030* a>b
	평교수(b)	48	59.17	24.740		
	직원및기타(c)	104	64.81	23.565		
합계		261	66.21	26.014		

*p<.05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다음 <표 VII-29>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56.41(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근무지역과 직위1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근무학교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보다 중소도시 이하가,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29>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89	52.13	26.904	-1.747	.082
	부설립(b)	273	57.80	26.477		
근무지역	(a)	48	46.25	21.100	4.087	.018* c>a
	광역시(b)	68	57.94	27.239		
	중소도시(c)	246	57.97	27.119		
근무학교	(a)	152	65.00	23.837	14.819	.000*** a>b
	대학교(b)	202	50.40	26.856		
	기회 및 기회부여장	8	45.00	29.761		
직위1	(a)	74	52.70	26.395	2.933	.021*
	기타보직교수(b)	75	64.80	26.881		

	평교수(c)	57	53.68	25.399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85	57.65	27.501		
	기타집원및연구원(e)	71	52.11	25.180		
직위2	(a)	149	58.79	27.236	1.074	.343
	평교수(b)	57	53.68	25.399		
	직원및기타(c)	156	55.13	26.530		
	합계	362	56.41	26.657		

*p<.05, ***p<.001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다음 <표 VII-30>과 같다. 표에서와 같이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58.56(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과 근무학교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직위1과 직위2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직위2에 따라서는 평교수와 직원및기타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30>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16	48.79	27.699	-4.665	.000***
	특별자(b)	300	62.33	26.093		
근무지역	(a)	46	60.87	25.977	.710	.492
	광역시(b)	83	60.96	27.745		
	중·소도시·현·하(c)	287	57.49	27.264		
근무학교	(a)	178	64.38	23.791	8.074	.000*** a>b
	대학교(b)	228	53.77	28.867		
	기획및기획부(현장)	10	64.00	26.331		
직위1	(a)	73	65.21	26.040	3.636	.006**
	기타보직교수(b)	84	64.29	26.539		
	평교수(c)	76	52.11	27.535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92	56.74	27.380		
	기타집원및연구원(e)	91	55.16	26.723		
직위2	(a)	157	64.71	26.228	7.203	.001** a>b, a>c
	평교수(b)	76	52.11	27.535		
	직원및기타(c)	183	55.96	26.993		
	합계	416	58.56	27.204		

p<.01, *p<.001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다음 <표 VII-31>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49.88(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

립유형과 근무학교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직위1과 직위2에 따라 $p<.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31>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13	39.82	26.254	-5.107	$.000***$
	부설립(b)	207	55.36	25.576		
근무지역	(a)	35	47.43	25.245	.301	$.741$
	광역시(b)	69	48.70	27.755		
	중소도시 외하(c)	216	50.65	26.860		
근무학교	(a)	123	58.86	24.063	13.148	$.000***$ a>b
	대학교(b)	187	43.64	26.713		
	기회 및 지원 부족(장)	10	56.00	30.984		
직위1	(a)	46	45.22	24.742	3.104	$.016^*$
	기타보직교수(b)	75	54.40	27.619		
	평교수(c)	63	42.54	26.759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65	56.31	27.362		
	기타집무원 및 연구원(e)	71	48.73	25.238		
직위2	(a)	121	50.91	26.833	3.064	$.048^*$
	평교수(b)	63	42.54	26.759		
	직원 및 기타(c)	136	52.35	26.450		
합계		320	49.88	26.828		

* $p<.05$, ** $p<.001$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다음 <표 VII-32>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56.64(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과 직위1에 따라 $p<.01$ 의 수준에서, 근무학교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직위1에 따라서는 평교수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32>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71	49.86	24.348	-2.710	$.008**$
	부설립(b)	173	59.42	26.626		
근무지역	(a)	40	48.50	23.485	2.332	$.099$
	광역시(b)	50	58.80	28.688		
	중소도시 외하(c)	154	58.05	25.948		
근무학교	(a)	94	66.60	25.634	11.966	$.000***$

	대학교(b)	141	50.50	25.251		a>b
	기회 및 기회부여장(a)	9	48.89	17.638		
직위1	기타보직교수(b)	62	66.45	25.292	3.955	.004** b>c
	평교수(c)	53	49.43	27.062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45	59.11	26.614		
	기타집권 및 협구원(e)	38	53.68	22.351		
	(a)	108	60.19	26.580		
직위2	평교수(b)	53	49.43	27.062	3.021	.051
	직원 및 기타(c)	83	56.63	24.756		
	합계	244	56.64	26.297		

p<.01, *p<.001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다음 <표 VII-33>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62.55(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라 p<.01의 수준에서, 균무학교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직위1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균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33>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 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45	52.00	23.120	-3.298	.002**
	특별법(b)	198	64.95	26.462		
근무지역	(a)	22	54.55	24.828	1.160	.315
	광역시(b)	56	62.50	26.985		
	중소도시·현하(c)	165	63.64	26.251		
근무학교	(a)	154	69.22	25.271	15.265	.000*** a>b
	대학교(b)	82	51.46	24.752		
	기회 및 기회부여장	7	45.71	15.119		
직위1	(a)	44	57.73	26.664	2.859	.024*
	기타보직교수(b)	70	70.86	26.526		
	평교수(c)	48	60.83	26.724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37	62.16	23.937		
	기타집권 및 협구원(e)	44	56.36	24.880		
직위2	(a)	114	65.79	27.229	1.707	.184
	평교수(b)	48	60.83	26.724		
	직원 및 기타(c)	81	59.01	24.475		
	합계	243	62.55	26.318		

*p<.05, **p<.01, ***p<.001

BK21(Brain Korea 21)사업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다음 <표 VII-34>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BK21(Brain Korea 21)사업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56.31(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직위2에 따라 $p<.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34> BK21(Brain Korea 21)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00	57.20	24.291	.447	.655
	사립(b)	209	55.89	24.105		
근무지역	(a)	44	55.45	24.727	.943	.390
	광역시(b)	64	60.00	25.943		
	중소도시·현 하(c)	201	55.32	23.410		
근무학교	(a)	110	57.27	24.604	1.081	.341
	대학교(b)	189	55.24	23.892		
	기획 및 교육부처장	10	66.00	23.190		
직위1	(a)	58	60.00	23.094	2.383	.052
	기타보직교수(b)	63	61.27	24.854		
	평교수(c)	65	52.62	25.877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60	50.33	22.244		
	기타집회 및 연구원(e)	63	57.46	23.138		
직위2	(a)	121	60.66	23.935	3.350	.036*
	평교수(b)	65	52.62	25.877		
	직원 및 기타(c)	123	53.98	22.895		
합계		309	56.31	24.134		

* $p<.05$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다음 <표 VII-35>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는 61.47(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직위1에 따라 $p<.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35>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의 방향에 맞는 현장 변화 정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51	56.86	25.729	-1.682	.095
	사립(b)	99	63.84	23.155		
근무지역	(a)	22	63.64	22.792	.357	.700
	광역시(b)	32	63.75	26.609		
	중소도시·현 하(c)	96	60.21	23.841		
근무학교	(a)	53	64.91	22.839	.914	.403
	대학교(b)	92	59.35	25.063		

	<u>기회 및 기회부여장</u>	5	64.00	21.909		
직위1	(a)	32	59.38	22.992	2.556	.041*
	기타보직교수(b)	35	68.57	21.847		
	평교수(c)	41	56.10	26.914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23	69.57	20.775		
	기타집권 및 연구원(e)	19	53.68	24.086		
직위2	(a)	67	64.18	22.707	1.469	.234
	평교수(b)	41	56.10	26.914		
	직원및기타(c)	42	62.38	23.458		
합계		150	61.47	24.202		

*p<.05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표 VII-36>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60.43(중간점 60)으로 중간 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배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VII-36>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만족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 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06	64.53	29.765	1.780	.076
	부설립(b)	269	58.81	27.292		
근무지역	(a)	52	54.62	26.602	1.314	.270
	광역시(b)	75	60.80	28.747		
	중소도시/현/하(c)	248	61.53	28.156		
근무학교	(a)	141	61.70	25.800	.233	.793
	대학교(b)	226	59.65	29.512		
	기회 및 기회부여장	8	60.00	28.284		
직위1	(a)	71	60.00	29.472	1.676	.155
	기타보직교수(b)	77	65.97	26.767		
	평교수(c)	65	58.46	28.572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78	62.56	28.350		
	기타집권 및 연구원(e)	84	55.24	26.997		
직위2	(a)	148	63.11	28.160	1.117	.328
	평교수(b)	65	58.46	28.572		
	직원및기타(c)	162	58.77	27.814		
합계		375	60.43	28.091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표 VII-37>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61.43(중간점 60)으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배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

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VII-37>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만족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52	58.08	27.514	-.995	.321
	부설(b)	241	62.16	26.683		
근무지역	(a)	25	61.60	25.768	.007	.993
	광역시(b)	57	61.05	26.571		
	중소도시·현(하)(c)	211	61.52	27.143		
근무학교	(a)	185	64.00	27.410	2.379	.094
	대학교(b)	102	57.25	25.179		
	기회 및 교육부여(장)	6	53.33	30.111		
직위1	(a)	43	65.12	26.937	2.210	.068
	기타보직교수(b)	75	66.40	29.438		
	평교수(c)	56	60.00	26.697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52	62.31	25.253		
	기타집무 및 연구원(e)	67	54.03	23.872		
직위2	(a)	118	65.93	28.442	2.963	.053
	평교수(b)	56	60.00	26.697		
	직원 및 기타(c)	119	57.65	24.726		
합계		293	61.43	26.830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표 VII-38>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4.29(중간점 60)으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근무지역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지역에 따라서 특별 시보다 광역시와 중소도시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38>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92	57.17	29.289	1.183	.238
	부설(b)	220	53.09	27.156		
근무지역	(a)	46	38.26	22.638	9.488	$.000^{***}$ $b>a, c>a$
	광역시(b)	65	57.85	29.817		
	중소도시·현(하)(c)	201	56.82	27.089		
근무학교	(a)	97	59.18	25.318	2.866	.058
	대학교(b)	205	51.61	28.626		
	기타(c)	10	62.00	28.983		
직위1	기획 및 교무처장(a)	66	54.55	28.619	1.568	.183

	기타보직교수(b)	70	61.14	26.129		
	평교수(c)	53	50.19	28.181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71	51.83	28.601		
	기타집원및연구원(e)	52	52.31	26.907		
직위2	(a)	136	57.94	27.464	2.169	.116
	평교수(b)	53	50.19	28.181		
	직원및기타(c)	123	52.03	27.786		
	합계	312	54.29	27.817		

***p<.001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표 VII-39>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60.54(중간점 60)으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직위1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직위에 따라서 기타직원및연구원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39>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 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35	57.14	27.501	-.781	.435
	사립(b)	226	61.06	27.628		
근무지역	(a)	18	58.89	27.842	.044	.957
	광역시(b)	53	61.13	28.667		
	중소도시(c)	190	60.53	27.405		
근무학교	(a)	186	62.04	27.707	.965	.382
	대학교(b)	69	56.81	27.359		
	기획처 및 교무처장(c)	6	56.67	26.583		
직위1	(a)	34	64.12	28.190	3.196	.014* b>e
	기타보직교수(b)	75	66.13	29.769		
	평교수(c)	48	56.67	26.524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43	65.12	25.854		
	기타집원및연구원(e)	61	51.48	24.347		
직위2	(a)	109	65.50	29.170	3.087	.047
	평교수(b)	48	56.67	26.524		
	직원및기타(c)	104	57.12	25.757		
합계		261	60.54	27.591		

*p<.05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표 VII-40>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49.17(중간점 60)으로 중간보다 소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과 근무지역에 따라 p<.05

의 수준에서, 근무학교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직위1에 따라 $p<.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직위1에 따라서 기획및교무처장과 기타직원및연구원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40>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89	42.92	25.325	-2.607	.010*
	사립(b)	273	51.21	26.269		
근무지역	(a)	48	42.50	24.625	3.533	.030*
	광역시(b)	68	45.00	25.007		
	중소도시(c)	246	51.63	26.615		
근무학교	(a)	152	59.21	25.307	21.347	.000*** a>b
	대학교(b)	202	41.98	24.516		
	기획및교무처장(c)	8	40.00	26.186		
직위1	(a)	74	42.70	25.064	4.925	.001** b>a, b>e
	기타보직교수(b)	75	59.47	28.470		
	평교수(c)	57	46.32	25.399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85	51.06	27.169		
	기타집무및연구원(e)	71	45.07	21.305		
직위2	(a)	149	51.14	28.033	.835	.435
	평교수(b)	57	46.32	25.399		
	직원및기타(c)	156	48.33	24.779		
합계		362	49.17	26.250		

* $p<.05$, ** $p<.01$, *** $p<.001$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표 VII-41>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0.67(중간점 60)으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과 근무학교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직위1에 따라 $p<.01$ 의 수준에서, 직위2에 따라 $p<.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직위1에 따라서는 기타직원및연구원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직위2에 따라서는 직원및기타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41>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에 대한 만족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16	41.38	26.862	-4.286	.000***
	사립(b)	300	54.27	27.743		

특별시						
근무지역	(a)	46	57.39	28.785	1.577	.208
	광역시(b)	83	48.67	27.796		
	중소도시&군(c)	287	50.17	27.979		
근무학교	(a)	178	59.10	26.453	15.672	.000*** a>b
	대학교(b)	228	43.95	27.594		
	기획 및 기획부처장	10	54.00	28.363		
직위1	(a)	73	49.32	28.690	3.972	.004** b>e
	기타보직교수(b)	84	60.71	27.672		
	평교수(c)	76	49.74	28.751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92	49.35	28.354		
	기타집단 및 연구원(e)	91	44.62	25.136		
직위2	(a)	157	55.41	28.633	3.907	.021* a>c
	평교수(b)	76	49.74	28.751		
	직원 및 기타(c)	183	46.99	26.834		
합계		416	50.67	28.071		

*p<.05, **p<.01, ***p<.001

국립대학 범인화 추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표 VII-42>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립대학 범인화 추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0.69(중간점 60)으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과 근무학교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직위1에 따라 p<.01의 수준에서, 직위2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직위1에 따라서는 평교수와 기타직원 및 연구원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직위2에 따라서 직원 및 기타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42> 국립대학 범인화 추진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13	40.00	26.592	-5.371	.000***
	부설립(b)	207	56.52	25.760		
근무지역	(a)	35	52.00	27.095	.212	.809
	광역시(b)	69	52.17	28.329		
	중소도시&군(c)	216	50.00	26.937		
근무학교	(a)	123	58.70	25.056	10.323	.000*** a>b
	대학교(b)	187	45.03	27.167		
	기획 및 기획부처장	10	58.00	28.983		
직위1	(a)	46	51.74	28.151	4.462	.002** b>c, b>e
	기타보직교수(b)	75	59.20	27.596		
	평교수(c)	63	45.08	27.584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65	54.15	26.628		
	기타직원 및 연구원(e)	71	42.82	23.494		

보직교수						
직위2	(a)	121	56.36	27.928	4.633	.010* a>b
	평교수(b)	63	45.08	27.584		
	직원및기타(c)	136	48.24	25.586		
	합계	320	50.69	27.191		

*p<.05, **p<.01, ***p<.001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은 다음 <표 VII-43>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3.52(중간점 60)으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균무학교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직위1에 따라 p<.01의 수준에서, 직위2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균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직위1에 따라서는 평교수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직위2에 따라서 평교수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43>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에 대한 만족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71	49.58	27.226	-1.553	.122
	부설립(b)	173	55.14	24.675		
근무지역	(a)	40	47.50	22.955	1.342	.263
	광역시(b)	50	54.40	28.583		
	중소도시&현(c)	154	54.81	25.029		
근무학교	(a)	94	62.13	23.549	9.361	.000*** a>b
	대학교(b)	141	47.94	25.510		
	기술및교류처장(c)	9	51.11	22.608		
직위1	(a)	46	50.43	24.125	4.258	.002** b>c
	기타보직교수(b)	62	63.55	25.485		
	평교수(c)	53	46.42	25.653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45	55.56	26.247		
	기타집원및연구원(e)	38	48.42	21.627		
직위2	(a)	108	57.96	25.642	3.879	.022* a>b
	평교수(b)	53	46.42	25.653		
	직원및기타(c)	83	52.29	24.361		
합계		244	53.52	25.513		

*p<.05, **p<.01, ***p<.001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은 다음 <표 VII-44>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60.08(중간점 60)으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라 p<.01의 수준에서, 균무학교와 직위1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직위1에 따라 p<.01의 수준에서, 직위2에 따라 p<.05의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직위1에 따라서는 평교수와 기타직원및연구원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직위2에 따라서 직원및기타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44> WCC(World Class College)사업에 대한 만족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45	48.89	25.781	-3.143	.002**
	부설립(b)	198	62.63	29.292		
근무지역	(a)	22	50.00	24.495	2.948	.054
	광역시(b)	56	55.36	29.043		
	중소도시 이하(c)	165	63.03	29.351		
근무학교	(a)	154	67.53	28.841	15.412	.000*** a>b
	대학교(b)	82	47.32	25.046		
	기획 및 교육부처장	7	45.71	25.071		
직위1	(a)	44	56.82	26.569	5.440	.000*** b>c, b>e
	기타보직교수(b)	70	71.71	31.299		
	평교수(c)	48	54.17	28.868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37	62.70	25.890		
	기타집단 및 연구원(e)	44	49.09	24.948		
직위2	(a)	114	65.96	30.329	4.534	.012* a>c
	평교수(b)	48	54.17	28.868		
	직원및기타(c)	81	55.31	26.129		
합계		243	60.08	29.119		

*p<.05, **p<.01, ***p<.001

BK21(Brain Korea 21)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표 VII-45>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BK21(Brain Korea 21)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5.08(중간점 60)으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직위1과 직위2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직위2에 따라서 직원및기타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45> BK21(Brain Korea 21)사업에 대한 만족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00	55.00	26.572	-.038	.970
	부설립(b)	209	55.12	23.961		
근무지역	(a)	44	52.73	22.861	.245	.783
	광역시(b)	64	55.00	26.904		
	중소도시 이하(c)	201	55.62	24.591		

전문대학						
근무학교	(a)	110	56.91	25.004	.595	.552
	대학교(b)	189	53.86	24.504		
	기획 및 기획부(부)장	10	58.00	28.983		
직위1	(a)	58	57.93	23.000	2.685	.032*
	기타보직교수(b)	63	62.54	25.525		
	평교수(c)	65	52.92	26.323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60	52.33	23.890		
	기타집원 및 연구원(e)	63	49.84	23.520		
직위2	(a)	121	60.33	24.356	4.688	.010* a>c
	평교수(b)	65	52.92	26.323		
	직원 및 기타(c)	123	51.06	23.637		
합계		309	55.08	24.793		

*p<.05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표 VII-46>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8.27(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배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VII-46>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51	56.08	26.539	-.773	.441
	부설립(b)	99	59.39	23.982		
근무지역	(a)	22	57.27	24.139	.024	.977
	광역시(b)	32	58.13	27.526		
	중소도시와 하(c)	96	58.54	24.321		
근무학교	(a)	53	62.64	23.217	1.922	.150
	대학교(b)	92	55.22	25.397		
	기획 및 기획부(부)장	5	68.00	26.833		
직위1	(a)	32	56.88	22.781	1.217	.306
	기타보직교수(b)	35	64.57	23.806		
	평교수(c)	41	55.12	26.751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23	61.74	24.055		
	기타집원 및 연구원(e)	19	51.58	26.090		
직위2	(a)	67	60.90	23.467	.744	.477
	평교수(b)	41	55.12	26.751		
	직원 및 기타(c)	42	57.14	25.210		
합계		150	58.27	24.842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다음 <표 VII-47>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70.88(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과 직위2에 따라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직위2에 따라서 평교수보다 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47>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06	76.42	27.986	2.376	.018*
	부설(b)	269	68.70	28.445		
근무지역	(a)	52	73.46	27.645	.253	.776
	광역시(b)	75	70.13	28.922		
	중·전·울산·부산·제주(c)	248	70.56	28.620		
근무학교	(a)	141	66.52	27.620	2.727	.067
	대학교(b)	226	73.63	28.877		
	기획 및 교부처장	8	70.00	26.186		
직위1	(a)	71	73.80	28.202	2.283	.060
	기타보직교수(b)	77	73.77	27.959		
	평교수(c)	65	62.77	30.389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78	74.87	28.364		
	기타집단 및 연구원(e)	84	68.33	26.924		
직위2	(a)	148	73.78	27.980	3.484	$a > b$
	평교수(b)	65	62.77	30.389		
	직원 및 기타(c)	162	71.48	27.735		
합계		375	70.88	28.492		

* $p < .05$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다음 <표 VII-48>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70.88(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직위1과 직위2에 따라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48>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지속 추진의 필요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52	68.08	28.904	-.747	.455
	부설(b)	241	71.12	26.125		
근무지역	(a)	25	69.60	25.897	1.015	.364
	광역시(b)	57	75.09	25.434		
	중·전·울산·부산·제주(c)	211	69.48	26.996		
근무학교	(a)	185	71.24	26.684	.189	.828
	대학교(b)	102	69.61	26.511		

	<u>기회 및 기도부(영)장</u>	6	66.67	30.111		
직위1	(a)	43	71.63	26.986	2.655	.033*
	기타보직교수(b)	75	74.40	27.026		
	평교수(c)	56	62.86	28.137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52	76.92	25.169		
	기타집권 및 연구원(e)	67	67.16	24.297		
직위2	(a)	118	73.39	26.929	3.121	.046*
	평교수(b)	56	62.86	28.137		
	직원및기타(c)	119	71.43	25.052		
합계		293	70.58	26.612		

*p<.05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다음 <표 VII-49>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63.65(중간 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배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VII-49>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92	64.13	30.024	.184	.854
	부설립(b)	220	63.45	29.344		
근무지역	(a)	46	59.57	31.969	.532	.588
	광역시(b)	65	64.92	29.797		
	중소도시(하)하(c)	201	64.18	28.887		
근무학교	(a)	97	64.54	26.379	1.042	.354
	대학교(b)	205	62.63	30.979		
	기회 및 기도부(영)장	10	76.00	26.331		
직위1	(a)	66	64.85	30.596	1.607	.172
	기타보직교수(b)	70	69.43	26.751		
	평교수(c)	53	58.11	30.950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71	64.79	30.513		
	기타집권 및 연구원(e)	52	58.46	27.962		
직위2	(a)	136	67.21	28.666	2.103	.124
	평교수(b)	53	58.11	30.950		
	직원및기타(c)	123	62.11	29.511		
합계		312	63.65	29.499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다음 <표 VII-50>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66.67(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50>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35	57.14	28.756	-2.168	.031*
	부설립(b)	226	68.14	27.794		
근무지역	(a)	18	65.56	27.273	.322	.725
	광역시(b)	53	69.43	27.902		
	중소도시·현(c)	190	66.00	28.355		
근무학교	(a)	186	68.28	28.174	1.132	.324
	대학교(b)	69	62.32	27.767		
	기획 및 기획부처장	6	66.67	30.111		
직위1	(a)	34	64.71	28.734	2.330	.056
	기타보직교수(b)	75	73.60	28.315		
	평교수(c)	48	64.17	28.272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43	68.84	28.048		
	기타집단 및 연구원(e)	61	59.67	26.202		
직위2	(a)	109	70.83	28.614	2.074	.128
	평교수(b)	48	64.17	28.272		
	직원 및 기타(c)	104	63.46	27.227		
합계		261	66.67	28.121		

*p<.05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다음 <표 VII-51>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지원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60.22(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과 직위1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근무학교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직위1에 따라서는 기획 및 교무처장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51>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지속 추진의 필요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89	54.83	31.265	-2.029	.043*
	부설립(b)	273	61.98	28.032		
근무지역	(a)	48	59.17	27.663	.213	.808
	광역시(b)	68	58.53	31.541		
	중소도시·현(c)	246	60.89	28.586		
근무학교	(a)	152	68.03	25.451	10.322	.000*** a>b
	대학교(b)	202	54.26	29.904		
	기획 및 기획부처장	8	62.50	36.154		
직위1	(a)	74	53.24	27.752	3.117	.015* b>a
	기타보직교수(b)	75	68.53	27.148		
	평교수(c)	57	63.86	29.384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85	57.65	29.986		
	기타집원및연구원(e)	71	58.87	28.862		
직위2	(a)	149	60.94	28.412	.872	.419
	평교수(b)	57	63.86	29.384		
	직원및기타(c)	156	58.21	29.391		
	합계	362	60.22	28.980		

*p<.05, ***p<.001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다음 <표 VII-52>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 지원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59.23(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과 근무학교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근무지역과 직위1에 따라 p<.01의 수준에서, 직위2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직위1에 따라서는 기획및교무처장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52> 대학 구조조정 추진정책 지속 추진의 필요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16	46.90	30.995	-5.269	.000***
	부설립(b)	300	64.00	29.169		
근무지역	(a)	46	72.61	27.442	5.087	.007** a>b, a>c
	광역시(b)	83	58.55	30.728		
	중소도시&현하(c)	287	57.28	30.650		
근무학교	(a)	178	68.09	27.262	16.214	.000*** a>b
	대학교(b)	228	51.75	31.110		
	기획및교무처장	10	72.00	32.931		
직위1	(a)	73	56.44	30.431	4.903	.001** b>a, b>d, b>e
	기타보직교수(b)	84	71.90	27.440		
	평교수(c)	76	57.89	32.262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92	56.52	29.888		
직위2	기타집원및연구원(e)	91	53.63	30.387	4.335	.014* a>c
	(a)	157	64.71	29.798		
	평교수(b)	76	57.89	32.262		
	직원및기타(c)	183	55.08	30.089		
합계		416	59.23	30.630		

*p<.05, **p<.01, ***p<.001

국립대학 범인화 추진 정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다음 <표 VII-53>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국립대학 범인화 추진 정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54.50(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과 근무학교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직위1에 따라 $p<.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직위1에 따라서는 기타직원및연구원보다 기타보직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53>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 지속 추진의 필요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13	40.00	28.909	-7.011	.000***
	부설립(b)	207	62.42	26.438		
근무지역	(a)	35	58.29	28.849	1.873	.155
	광역시(b)	69	59.42	30.287		
	중소도시 이하(c)	216	52.31	28.970		
근무학교	(a)	123	63.74	24.608	12.599	.000*** a>b
	대학교(b)	187	47.81	30.285		
	기타 및 교부처장	10	66.00	32.728		
직위1	(a)	46	56.09	28.164	2.878	.023* b>e
	기타보직교수(b)	75	60.80	28.177		
	평교수(c)	63	51.75	32.455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65	58.15	28.880		
	기타집권 및 연구원(e)	71	45.92	27.128		
직위2	(a)	121	59.01	28.149	2.318	.100
	평교수(b)	63	51.75	32.455		
	직원 및 기타(c)	136	51.76	28.542		
합계		320	54.50	29.325		

* $p<.05$, *** $p<.001$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다음 <표 VII-54>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60.49(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라 $p<.05$ 의 수준에서, 근무학교에 따라 $p<.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54>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71	54.08	27.338	-2.401	.017*
	부설립(b)	173	63.12	26.448		
근무지역	(a)	40	60.50	29.522	.023	.978
	광역시(b)	50	61.20	29.530		
	중소도시 이하(c)	154	60.26	25.564		

전문대학						
근무학교	(a)	94	67.23	23.619	5.032	.007** a>b
	대학교(b)	141	56.03	28.104		
	기획 및 교수부장(c)	9	60.00	30.000		
직위1	(a)	46	58.70	27.456	1.809	.128
	기타보직교수(b)	62	67.74	24.921		
	평교수(c)	53	57.36	29.362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45	60.89	26.614		
	기타집무처 및 연구원(e)	38	54.74	25.334		
직위2	(a)	108	63.89	26.292	1.556	.213
	평교수(b)	53	57.36	29.362		
	직원 및 기타(c)	83	58.07	26.061		
합계		244	60.49	26.969		

*p<.05, **p<.01

WCC(World Class College)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다음 <표 VII-55>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WCC(World Class College)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65.35(중간점 60)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라 p<.01의 수준에서, 근무학교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직위1에 따라 a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근무학교에 따라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VII-55> WCC(World Class College)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 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45	55.56	25.186	-2.711	.007**
	부설(a)	198	67.58	27.208		
근무지역	(a)	22	58.18	25.380	1.490	.228
	광역시(b)	56	62.50	28.556		
	중·전통문화지역(c)	165	67.27	26.877		
근무학교	(a)	154	71.82	25.423	13.551	.000*** a>b
	대학교(b)	82	53.41	26.491		
	기획 및 교수부장(c)	7	62.86	29.277		
직위1	(a)	44	60.00	26.237	2.749	.029*
	기타보직교수(b)	70	72.29	26.219		
	평교수(c)	48	65.00	27.211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37	68.65	26.475		
	기타집무처 및 연구원(e)	44	57.27	28.149		
직위2	(a)	114	67.54	26.792	.828	.438
	평교수(b)	48	65.00	27.211		
	직원 및 기타(c)	81	62.47	27.818		
합계		243	65.35	27.200		

*p<.05, **p<.01, ***p<.001

BK21(Brain Korea 21)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다음 <표 VII-56>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BK21(Brain Korea 21)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59.16(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배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VII-56> BK21(Brain Korea 21)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100	59.40	27.918	.111	.912
	부설립(b)	209	59.04	25.702		
근무지역	(a)	44	61.36	27.752	.381	.684
	광역시(b)	64	60.63	28.052		
	중소도시 이하(c)	201	58.21	25.628		
근무학교	(a)	110	60.36	24.974	.860	.424
	대학교(b)	189	57.99	27.018		
	기획 및 교부처장	10	68.00	30.111		
직위1	(a)	58	63.79	25.808	1.239	.294
	기타보직교수(b)	63	62.54	26.999		
	평교수(c)	65	56.31	26.667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d)	60	55.33	25.872		
	기타집무 및 연구원(e)	63	58.10	26.327		
직위2	(a)	121	63.14	26.332	2.288	.103
	평교수(b)	65	56.31	26.667		
	직원 및 기타(c)	123	56.75	26.036		
합계		309	59.16	26.395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다음 <표 VII-57>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는 59.16(중간점 60)로 중간정도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배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VII-57>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도

배경변인		N	M	SD	t/F	유의확률
설립유형	국공립(a)	51	61.96	29.733	-1.594	.115
	부설립(b)	99	69.70	24.803		
근무지역	(a)	22	76.36	26.645	1.577	.210
	광역시(b)	32	65.00	29.182		
	중소도시 이하(c)	96	65.63	25.744		

전문대학		(a)	53	70.19	23.079	2.498	.086
근무학교	대학교(b)		92	64.13	28.212		
	기획 및 지원부처장		5	88.00	26.833		
직위1	(a)	32	67.50	27.238	1.305	.271	
	기타보직교수(b)	35	66.86	23.234			
	평교수(c)	41	64.39	29.500			
	교무처및기획처 직원(d)	23	77.39	21.995			
	기타집행 및 연구원(e)	19	60.00	29.814			
직위2	(a)	67	67.16	25.034	.380	.684	
	평교수(b)	41	64.39	29.500			
	직원 및 기타(c)	42	69.52	26.955			
합계		150	67.07	26.736			

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보완점에 대한 설문의 다중응답 결과는 <표 VII-58>과 같다. 평가지표 및 방법의 보완이 2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다년간 사업으로 전환(18.5%), 재정집행의 자율성 보장(15.0%)의 순이었다.

<표 VII-58> 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보완점

배경변인		다년간 사업으로 전환	재정지원의 예측 가능성 제고	지원대상대학 확대	지원금액 확대	재정집행의 자율성 보장	평가지표 및 방법의 보완	지원금 배분방식의 개선	대학 내부에서의 성과관리 체제	정부 차원의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 평가	기타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64 26.0%	25 10.2%	16 6.5%	14 5.7%	47 19.1%	39 15.9%	15 6.1%	9 3.7%	11 4.5%	6 2.4%	246 100.0%
	사립	108 15.8%	52 7.6%	82 12.0%	66 9.7%	92 13.5%	153 22.4%	33 4.8%	41 6.0%	40 5.9%	15 2.2%	682 100.0%
근무 지역	특별시	24 20.0%	13 10.8%	9 7.5%	10 8.3%	16 13.3%	25 20.8%	3 2.5%	5 4.2%	8 6.7%	7 5.8%	120 100.0%
	광역시	34 17.9%	16 8.4%	18 9.5%	11 5.8%	26 13.7%	47 24.7%	5 2.6%	15 7.9%	14 7.4%	4 2.1%	190 100.0%
	중소도 시 이하	114 18.4%	48 7.8%	71 11.5%	59 9.5%	97 15.7%	120 19.4%	40 6.5%	30 4.9%	29 4.7%	10 1.6%	618 100.0%
	전문대학	65 16.2%	26 6.5%	40 10.0%	47 11.7%	58 14.4%	85 21.1%	23 5.7%	27 6.7%	24 6.0%	7 1.7%	402 100.0%
근무 학교	대학교	100 19.9%	49 9.8%	57 11.4%	31 6.2%	78 15.5%	101 20.1%	25 5.0%	22 4.4%	26 5.2%	13 2.6%	502 100.0%
	기타	7 29.2%	2 8.3%	1 4.2%	2 8.3%	3 12.5%	6 25.0%	0 .0%	1 4.2%	1 4.2%	1 4.2%	24 100.0%

직위 1	기획및 교육처 장	22	18	27	10	20	34	7	7	9	4	158
		13.9%	11.4%	17.1%	6.3%	12.7%	21.5%	4.4%	4.4%	5.7%	2.5%	100.0%
	기타보 직 교수	23	14	10	27	32	38	8	8	9	3	172
		13.4%	8.1%	5.8%	15.7%	18.6%	22.1%	4.7%	4.7%	5.2%	1.7%	100.0%
	평교수	40	12	16	12	22	34	10	7	15	4	172
		23.3%	7.0%	9.3%	7.0%	12.8%	19.8%	5.8%	4.1%	8.7%	2.3%	100.0%
직위 2	교무처 및기획 처직원	46	14	27	13	32	38	6	11	5	6	198
		23.2%	7.1%	13.6%	6.6%	16.2%	19.2%	3.0%	5.6%	2.5%	3.0%	100.0%
	기타직 원및연 구원	41	19	18	18	33	48	17	17	13	4	228
		18.0%	8.3%	7.9%	7.9%	14.5%	21.1%	7.5%	7.5%	5.7%	1.8%	100.0%
합계	보직 교수	45	32	37	37	52	72	15	15	18	7	330
		13.6%	9.7%	11.2%	11.2%	15.8%	21.8%	4.5%	4.5%	5.5%	2.1%	100.0%
	평교수	40	12	16	12	22	34	10	7	15	4	172
		23.3%	7.0%	9.3%	7.0%	12.8%	19.8%	5.8%	4.1%	8.7%	2.3%	100.0%
	직원및 기타	87	33	45	31	65	86	23	28	18	10	426
		20.4%	7.7%	10.6%	7.3%	15.3%	20.2%	5.4%	6.6%	4.2%	2.3%	
		172	77	98	80	139	192	48	50	51	21	928
		18.5%	8.3%	10.6%	8.6%	15.0%	20.7%	5.2%	5.4%	5.5%	2.3%	100.0%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보완점에 대한 설문의 다중응답 결과는 <표 VII-59>와 같다. 평가지표 및 방법의 보완이 2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다년 간 사업으로 전환(17.3%), 재정집행의 자율성 보장(13.5%)의 순이었다.

<표 VII-59>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보완점

배경변인		다년간 사업으 로 전환	재정지 원의 예측성 제고	지원대 상대학 확대	지원금 액확대	재정집 행의 자율성 보장	평가지 표 및방 법의 보완	지원금 배분방 식의 개선	대학 내부에 서의 성과관 리체계	정부 차원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 평가	기타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57	20	14	12	34	47	15	14	23	10	246
		23.2%	8.1%	5.7%	4.9%	13.8%	19.1%	6.1%	5.7%	9.3%	4.1%	100.0%
근무 지역	사립	104	43	79	92	91	147	46	35	37	8	682
		15.2%	6.3%	11.6%	13.5%	13.3%	21.6%	6.7%	5.1%	5.4%	1.2%	100.0%
	특별시	23	11	8	11	14	23	5	8	13	4	120
		19.2%	9.2%	6.7%	9.2%	11.7%	19.2%	4.2%	6.7%	10.8%	3.3%	100.0%
	광역시	27	16	18	15	22	47	10	10	20	5	190
	중소도	111	36	67	78	89	124	46	31	27	9	618

	시 이하	18.0%	5.8%	10.8%	12.6%	14.4%	20.1%	7.4%	5.0%	4.4%	1.5%	100.0%
근무 학교	전문대학	65	26	40	47	58	85	23	27	24	7	402
	학	16.2%	6.5%	10.0%	11.7%	14.4%	21.1%	5.7%	6.7%	6.0%	1.7%	100.0%
	대학교	100	49	57	31	78	101	25	22	26	13	502
	기타	19.9%	9.8%	11.4%	6.2%	15.5%	20.1%	5.0%	4.4%	5.2%	2.6%	100.0%
직위 1	기획 및 교무처장	7	2	1	2	3	6	0	1	1	1	24
		29.2%	8.3%	4.2%	8.3%	12.5%	25.0%	.0%	4.2%	4.2%	4.2%	100.0%
	기타 보	14	15	27	19	18	40	7	3	9	6	158
	직 교수	8.9%	9.5%	17.1%	12.0%	11.4%	25.3%	4.4%	1.9%	5.7%	3.8%	100.0%
	평교수	19	7	9	34	28	42	12	10	10	1	172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	11.0%	4.1%	5.2%	19.8%	16.3%	24.4%	7.0%	5.8%	5.8%	.6%	100.0%
	기타 직원 및 연구원	41	13	12	22	17	28	12	8	15	4	172
		23.8%	7.6%	7.0%	12.8%	9.9%	16.3%	7.0%	4.7%	8.7%	2.3%	100.0%
직위 2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	43	11	27	14	28	39	7	16	10	3	198
	기타 직원 및 연구원	44	17	18	15	34	45	23	12	16	4	228
	보직교수	33	22	36	53	46	82	19	13	19	7	330
	기타	10.0%	6.7%	10.9%	16.1%	13.9%	24.8%	5.8%	3.9%	5.8%	2.1%	100.0%
	평교수	41	13	12	22	17	28	12	8	15	4	172
	직원 및 연구원	23.8%	7.6%	7.0%	12.8%	9.9%	16.3%	7.0%	4.7%	8.7%	2.3%	100.0%
		20.4%	6.6%	10.6%	6.8%	14.6%	19.7%	7.0%	6.6%	6.1%	1.6%	100.0%
	합계	161	63	93	104	125	194	61	49	60	18	928
		17.3%	6.8%	10.0%	11.2%	13.5%	20.9%	6.6%	5.3%	6.5%	1.9%	100.0%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의 보완점에 대한 설문의 다중응답 결과는 <표 VII-60>과 같다. 평가지표 및 방법의 보완이 2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지원 대상 대학 확대(17.5%), 재정집행의 자율성 보장(13.9%)의 순이었다.

<표 VII-60>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의 보완점

배경변인	지원 대상 대학 확대	대학당 지원금액 확대	지원 기간 연장	재정집행 자율성 보장	사업성과 확산기제의 마련	평가지표 및 방법의 보완	지원금 배분방식의 개선	개별대학 내부에서의 성과관리체계	기타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39	28	23	36	19	51	18	22	10	246
		15.9%	11.4%	9.3%	14.6%	7.7%	20.7%	7.3%	8.9%	4.1%	100.0%

	사업	123	76	52	93	70	137	46	61	24	682
		18.0%	11.1%	7.6%	13.6%	10.3%	20.1%	6.7%	8.9%	3.5%	100.0%
근무 지역	특별시	23	12	10	14	10	20	8	13	10	120
		19.2%	10.0%	8.3%	11.7%	8.3%	16.7%	6.7%	10.8%	8.3%	100.0%
	광역시	32	19	15	17	26	45	10	16	10	190
		16.8%	10.0%	7.9%	8.9%	13.7%	23.7%	5.3%	8.4%	5.3%	100.0%
근무 학교	중소도시	107	73	50	98	53	123	46	54	14	618
		17.3%	11.8%	8.1%	15.9%	8.6%	19.9%	7.4%	8.7%	2.3%	100.0%
	이하	53	58	26	67	42	66	33	44	13	402
		13.2%	14.4%	6.5%	16.7%	10.4%	16.4%	8.2%	10.9%	3.2%	100.0%
직위 1	전문대학	106	43	49	60	43	117	30	34	20	502
		21.1%	8.6%	9.8%	12.0%	8.6%	23.3%	6.0%	6.8%	4.0%	100.0%
	대학교	3	3	0	2	4	5	1	5	1	24
		12.5%	12.5%	.0%	8.3%	16.7%	20.8%	4.2%	20.8%	4.2%	100.0%
직위 2	기획및교무처장	36	13	12	15	22	36	6	12	6	158
		22.8%	8.2%	7.6%	9.5%	13.9%	22.8%	3.8%	7.6%	3.8%	100.0%
	기타보직 교수	18	26	8	42	11	33	13	13	8	172
		10.5%	15.1%	4.7%	24.4%	6.4%	19.2%	7.6%	7.6%	4.7%	100.0%
직위 3	평교수	20	23	15	22	14	35	17	21	5	172
		11.6%	13.4%	8.7%	12.8%	8.1%	20.3%	9.9%	12.2%	2.9%	100.0%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	57	13	15	20	19	42	9	15	8	198
		28.8%	6.6%	7.6%	10.1%	9.6%	21.2%	4.5%	7.6%	4.0%	100.0%
직위 4	기타직원 및연구원	31	29	25	30	23	42	19	22	7	228
		13.6%	12.7%	11.0%	13.2%	10.1%	18.4%	8.3%	9.6%	3.1%	100.0%
	보직교수	54	39	20	57	33	69	19	25	14	330
		16.4%	11.8%	6.1%	17.3%	10.0%	20.9%	5.8%	7.6%	4.2%	100.0%
직위 5	평교수	20	23	15	22	14	35	17	21	5	172
		11.6%	13.4%	8.7%	12.8%	8.1%	20.3%	9.9%	12.2%	2.9%	100.0%
	직원및기타	88	42	40	50	42	84	28	37	15	426
		20.7%	9.9%	9.4%	11.7%	9.9%	19.7%	6.6%	8.7%	3.5%	100.0%
합계		162	104	75	129	89	188	64	83	34	928
		17.5%	11.2%	8.1%	13.9%	9.6%	20.3%	6.9%	8.9%	3.7%	100.0%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의 보완점에 대한 설문의 다중응답 결과는 <표 VII-61>과 같다. 사업을 없애고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단일 지원이 2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평가 지표 및 방법의 보완(19.2%), 평가의 엄정성 및 정확성 제고(18.5%)의 순이었다.

<표 VII-61>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의 보완점

배경변인		지원 대상 대학 확대	대학당 지원 금액 확대	사업을 없애고 전문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으로 단일 지원	평가의 엄정성 및 정확성 제고	사업 성과 확산 기제 마련	평가 지표 및 방법의 보완	지원금 배분 방식 개선	기타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33 13.4%	17 6.9%	47 19.1%	60 24.4%	21 8.5%	37 15.0%	18 7.3%	13 5.3%	246 100.0%
	사립	84 12.3%	89 13.0%	162 23.8%	112 16.4%	50 7.3%	141 20.7%	31 4.5%	13 1.9%	682 100.0%
	특별시	12 10.0%	10 8.3%	28 23.3%	23 19.2%	17 14.2%	18 15.0%	5 4.2%	7 5.8%	120 100.0%
	광역시	24 12.6%	16 8.4%	36 18.9%	39 20.5%	16 8.4%	38 20.0%	12 6.3%	9 4.7%	190 100.0%
근무 지역	중소도 시 이하	81 13.1%	80 12.9%	145 23.5%	110 17.8%	38 6.1%	122 19.7%	32 5.2%	10 1.6%	618 100.0%
	전문대학	43 10.7%	69 17.2%	106 26.4%	52 12.9%	22 5.5%	81 20.1%	25 6.2%	4 1.0%	402 100.0%
	대학교	71 14.1%	36 7.2%	97 19.3%	115 22.9%	46 9.2%	94 18.7%	22 4.4%	21 4.2%	502 100.0%
	기타	3 12.5%	1 4.2%	6 25.0%	5 20.8%	3 12.5%	3 12.5%	2 8.3%	1 4.2%	24 100.0%
직위 1	기획 및 교무처 장	23 14.6%	14 8.9%	27 17.1%	31 19.6%	13 8.2%	34 21.5%	6 3.8%	10 6.3%	158 100.0%
	기타보직 교수	16 9.3%	33 19.2%	28 16.3%	23 13.4%	12 7.0%	48 27.9%	10 5.8%	2 1.2%	172 100.0%
	평교수	15 8.7%	24 14.0%	48 27.9%	32 18.6%	16 9.3%	24 14.0%	8 4.7%	5 2.9%	172 100.0%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	33 16.7%	13 6.6%	49 24.7%	38 19.2%	19 9.6%	32 16.2%	10 5.1%	4 2.0%	198 100.0%
	기타직원 및 연 구원	30 13.2%	22 9.6%	57 25.0%	48 21.1%	11 4.8%	40 17.5%	15 6.6%	5 2.2%	228 100.0%
	보직교수	39 11.8%	47 14.2%	55 16.7%	54 16.4%	25 7.6%	82 24.8%	16 4.8%	12 3.6%	330 100.0%
직위 2	평교수	15 8.7%	24 14.0%	48 27.9%	32 18.6%	16 9.3%	24 14.0%	8 4.7%	5 2.9%	172 100.0%
	직원 및 기타	63 14.8%	35 8.2%	106 24.9%	86 20.2%	30 7.0%	72 16.9%	25 5.9%	9 2.1%	426 100.0%
	합계	117 12.6%	106 11.4%	209 22.5%	172 18.5%	71 7.7%	178 19.2%	49 5.3%	26 2.8%	928 100.0%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보완점에 대한 설문의 다중응답 결과는 <표 VII-62>와 같다. 재정지원의 확대가 2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 유도(22.1%), 재정지원과 연계된 등록금 제한의 완화(19.8%)의 순이었다.

<표 VII-62>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보완점

배경변인		정부의 인상 제한 조치 완화	등록금 차등지원 조건의 완화	재정지원 과 연계된 등록금 제한의 완화	재정지원 의 확대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 유도	기타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29 11.8%	32 13.0%	48 19.5%	63 25.6%	55 22.4%	19 7.7%	246 100.0%
	사립	94 13.8%	84 12.3%	136 19.9%	206 30.2%	150 22.0%	12 1.8%	682 100.0%
근무 지역	특별시	20 16.7%	8 6.7%	22 18.3%	33 27.5%	28 23.3%	9 7.5%	120 100.0%
	광역시	19 10.0%	23 12.1%	35 18.4%	59 31.1%	46 24.2%	8 4.2%	190 100.0%
근무 학교	중소도 시 이하	84 13.6%	85 13.8%	127 20.6%	177 28.6%	131 21.2%	14 2.3%	618 100.0%
	전문대 학	46 11.4%	57 14.2%	77 19.2%	126 31.3%	92 22.9%	4 1.0%	402 100.0%
	대학교	76 15.1%	58 11.6%	102 20.3%	135 26.9%	105 20.9%	26 5.2%	502 100.0%
	기타	1 4.2%	1 4.2%	5 20.8%	8 33.3%	8 33.3%	1 4.2%	24 100.0%
직위 1	기획및 교류처 장	20 12.7%	12 7.6%	38 24.1%	51 32.3%	31 19.6%	6 3.8%	158 100.0%
	기타 보 직 교수	18 10.5%	14 8.1%	34 19.8%	57 33.1%	47 27.3%	2 1.2%	172 100.0%
	평교수	21 12.2%	26 15.1%	30 17.4%	55 32.0%	31 18.0%	9 5.2%	172 100.0%
	교무처 및 기획 처 직원	30 15.2%	26 13.1%	35 17.7%	50 25.3%	50 25.3%	7 3.5%	198 100.0%
	기타 직 원 및 연 수원	34 14.9%	38 16.7%	47 20.6%	56 24.6%	46 20.2%	7 3.1%	228 100.0%
	보직교 수	38 11.5%	26 7.9%	72 21.8%	108 32.7%	78 23.6%	8 2.4%	330 100.0%
직위 2	평교수	21 12.2%	26 15.1%	30 17.4%	55 32.0%	31 18.0%	9 5.2%	172 100.0%
	직원및 기타	64 15.0%	64 15.0%	82 19.2%	106 24.9%	96 22.5%	14 3.3%	426 100.0%
	합계	123 13.3%	116 12.5%	184 19.8%	269 29.0%	205 22.1%	31 3.3%	928 100.0%

대학 구조조정 추진 정책의 보완점에 대한 설문의 다중응답 결과는 <표 VII-63>과 같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등의 선정 평가방법 및 과정의 보완 필요가 3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등 각 단계별 대상 대학 선정 지표의 일관성 확보 및 유지 (27.8%), 구조조정 대상의 재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배려(19.4%)의 순이었다.

<표 VII-63> 대학 구조조정 추진 정책의 보완점

배경변인		재정지원제한 대학,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등 각 단계별 대상 대학 선정 지표의 일관성 확보 및 유지	재정지원제한 대학,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등의 선정 평가방법 및 과정의 보완 필요	연계 또는 통합 가능한 국립 및 사립대학의 연계 또는 통합 유도	구조조정 대상의 재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배려	기타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65 26.4%	85 34.6%	32 13.0%	44 17.9%	20 8.1%	246 100.0%
	사립	193 28.3%	251 36.8%	92 13.5%	136 19.9%	10 1.5%	682 100.0%
근무 지역	특별시	41 34.2%	43 35.8%	16 13.3%	17 14.2%	3 2.5%	120 100.0%
	광역시	55 28.9%	75 39.5%	24 12.6%	30 15.8%	6 3.2%	190 100.0%
근무 학교	중소도시	162 26.2%	218 35.3%	84 13.6%	133 21.5%	21 3.4%	618 100.0%
	이하	99 24.6%	142 35.3%	63 15.7%	96 23.9%	.5% .5%	402 100.0%
직위 1	전문대학	153 30.5%	190 37.8%	55 11.0%	77 15.3%	27 5.4%	502 100.0%
	대학교	6 25.0%	4 16.7%	6 25.0%	7 29.2%	1 4.2%	24 100.0%
직위 2	기획및교무처장	55 34.8%	67 42.4%	16 10.1%	15 9.5%	5 3.2%	158 100.0%
	기타보직 교수	47 27.3%	52 30.2%	37 21.5%	33 19.2%	3 1.7%	172 100.0%
직위 3	평교수	49 28.5%	63 36.6%	21 12.2%	34 19.8%	5 2.9%	172 100.0%
	교무처및기획처 직원	52 26.3%	74 37.4%	20 10.1%	46 23.2%	6 3.0%	198 100.0%
직위 4	기타직원 및연구원	55 24.1%	80 35.1%	30 13.2%	52 22.8%	11 4.8%	228 100.0%

직위 2	보직교수	102	119	53	48	8	330
		30.9%	36.1%	16.1%	14.5%	2.4%	100.0%
	평교수	49	63	21	34	5	172
		28.5%	36.6%	12.2%	19.8%	2.9%	100.0%
	직원및기 타	107	154	50	98	17	426
		25.1%	36.2%	11.7%	23.0%	4.0%	100.0%
	합계	258	336	124	180	30	928
		27.8%	36.2%	13.4%	19.4%	3.2%	100.0%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의 보완점에 대한 설문의 다중응답 결과는 <표 VII-64>와 같다. 개별대학의 사정에 따라 법인화를 추진토록 하는 문제 해소가 2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중소규모 국립대학에 대한 배려(26.8%), 개별대학별로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는 문제 해소(20.3%)의 순이었다.

<표 VII-64>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의 보완점

배경변인		개별대학별 로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는 문제 해소	개별대학의 사정에 따라 법인화를 추진토록 하는 문제 해소	법인화 추진대학에 대해 충분한 추가적 재정지원	중소규모 국립대학에 대한 배려	기타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34	58	55	78	21	246
		13.8%	23.6%	22.4%	31.7%	8.5%	100.0%
	사립	154	198	126	171	33	682
		22.6%	29.0%	18.5%	25.1%	4.8%	100.0%
근무 지역	특별시	29	38	23	21	9	120
		24.2%	31.7%	19.2%	17.5%	7.5%	100.0%
	광역시	45	47	40	47	11	190
	중소도시	114	171	118	181	34	618
근무 학교	이하	18.4%	27.7%	19.1%	29.3%	5.5%	100.0%
	전문대학	77	106	81	118	20	402
		19.2%	26.4%	20.1%	29.4%	5.0%	100.0%
	대학교	105	145	92	127	33	502
직위 1		20.9%	28.9%	18.3%	25.3%	6.6%	100.0%
	기타	6	5	8	4	1	24
		25.0%	20.8%	33.3%	16.7%	4.2%	100.0%
	기획및교 무처장	45	39	27	36	11	158
		28.5%	24.7%	17.1%	22.8%	7.0%	100.0%
	기타보직 교수	30	32	41	58	11	172
		17.4%	18.6%	23.8%	33.7%	6.4%	100.0%

	평교수	31	57	30	44	10	172
		18.0%	33.1%	17.4%	25.6%	5.8%	100.0%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	37	60	42	50	9	198
		18.7%	30.3%	21.2%	25.3%	4.5%	100.0%
	기타직원 및 연구원	45	68	41	61	13	228
		19.7%	29.8%	18.0%	26.8%	5.7%	100.0%
직위 2	보직교수	75	71	68	94	22	330
		22.7%	21.5%	20.6%	28.5%	6.7%	100.0%
	평교수	31	57	30	44	10	172
		18.0%	33.1%	17.4%	25.6%	5.8%	100.0%
	직원 및 기타	82	128	83	111	22	426
	합계	188	256	181	249	54	928
		20.3%	27.6%	19.5%	26.8%	5.8%	100.0%

WCU(World Class University) 정책의 보완점에 대한 설문의 다중응답 결과는 <표 VII-65>와 같다. 특정 대학에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대학의 우수 학과/교수에 지원이 1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단기적 성과 평가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평가(15.3%), 우수한 해외 학자 유치에 대응하는 우수한 국내 학자 대우책 마련(14.4%)의 순이었다.

<표 VII-65> WCU(World Class University) 정책의 보완점

배경변인		연구업적 및 연구역량이 탁월한 해외 학자 유치 검증	유치된 해외 학자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사업비의 확대	우수한 해외 학자 유치에 대응하는 우수한 국내 학자 대우책 마련	해외 고급 두뇌 초빙 활용사업으로 전환	선정지표 및 선정과정의 엄정성 확보	특정 대학에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대학의 우수 학과/교수에 지원	단기적 성과 평가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평가	사업을 통하여 유치된 해외 석학들이 사업종료 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기타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33	28	8	40	15	18	42	41	9	12	246
		13.4%	11.4%	3.3%	16.3%	6.1%	7.3%	17.1%	16.7%	3.7%	4.9%	100.0%
근무 지역	사립	76	63	38	94	25	89	141	101	39	16	682
		11.1%	9.2%	5.6%	13.8%	3.7%	13.0%	20.7%	14.8%	5.7%	2.3%	100.0%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18	16	8	14	5	4	25	17	8	5	120
		15.0%	13.3%	6.7%	11.7%	4.2%	3.3%	20.8%	14.2%	6.7%	4.2%	100.0%
광역시	광역시	18	19	8	25	13	19	42	31	10	5	190
		9.5%	10.0%	4.2%	13.2%	6.8%	10.0%	22.1%	16.3%	5.3%	2.6%	100.0%

	중소도시 이하	73 11.8%	56 9.1%	30 4.9%	95 15.4%	22 3.6%	84 13.6%	116 18.8%	94 15.2%	30 4.9%	18 2.9%	618 100.0%
근무 학교	전문대학	32 8.0%	33 8.2%	23 5.7%	63 15.7%	8 2.0%	64 15.9%	75 18.7%	68 16.9%	23 5.7%	13 3.2%	402 100.0%
		75 14.9%	55 11.0%	22 4.4%	69 13.7%	29 5.8%	41 8.2%	106 21.1%	67 13.3%	24 4.8%	14 2.8%	502 100.0%
	대학교	2 8.3%	3 12.5%	1 4.2%	2 8.3%	3 12.5%	2 8.3%	2 8.3%	7 29.2%	1 4.2%	1 4.2%	24 100.0%
		20 12.7%	17 10.8%	10 6.3%	20 12.7%	8 5.1%	17 10.8%	37 23.4%	17 10.8%	7 4.4%	5 3.2%	158 100.0%
직위 1	기획및교 무처장	11 6.4%	20 11.6%	10 5.8%	32 18.6%	3 1.7%	31 18.0%	24 14.0%	29 16.9%	6 3.5%	6 3.5%	172 100.0%
		17 9.9%	11 6.4%	10 5.8%	23 13.4%	9 5.2%	19 11.0%	43 25.0%	29 16.9%	6 3.5%	5 2.9%	172 100.0%
	교무처및 기획처직 원	32 16.2%	24 12.1%	6 3.0%	26 13.1%	9 4.5%	17 8.6%	39 19.7%	27 13.6%	11 5.6%	7 3.5%	198 100.0%
		29 12.7%	19 8.3%	10 4.4%	33 14.5%	11 4.8%	23 10.1%	40 17.5%	40 17.5%	18 7.9%	5 2.2%	228 100.0%
직위 2	보직교수	31 9.4%	37 11.2%	20 6.1%	52 15.8%	11 3.3%	48 14.5%	61 18.5%	46 13.9%	13 3.9%	11 3.3%	330 100.0%
		17 9.9%	11 6.4%	10 5.8%	23 13.4%	9 5.2%	19 11.0%	43 25.0%	29 16.9%	6 3.5%	5 2.9%	172 100.0%
	평교수	61 14.3%	43 10.1%	16 3.8%	59 13.8%	20 4.7%	40 9.4%	79 18.5%	67 15.7%	29 6.8%	12 2.8%	426 100.0%
		109 11.7%	91 9.8%	46 5.0%	134 14.4%	40 4.3%	107 11.5%	183 19.7%	142 15.3%	48 5.2%	28 3.0%	928 100.0%
	합계											

WCC(World Class College) 정책의 보완점에 대한 설문의 다중응답 결과는 <표 VII-66>과 같다. 선정지표 및 선정과정엄정성 확보가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선정대학확대(21.2%),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이외 추가재원 확보(16.9%)의 순이었다.

<표 VII-66> WCC(World Class College) 정책의 보완점

배경변인	선정대학 확대	선정대학당 지원금액 확대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이외 추가재원 확보	선정지표 및 선정과정 엄정성 확보	사업지 지원기간 (3년) 확대	기타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40 16.3%	32 13.0%	32 13.0%	87 35.4%	36 14.6%	19 7.7%	246 100.0%
		157 23.0%	117 17.2%	125 18.3%	190 27.9%	67 9.8%	26 3.8%	682 100.0%
	사립							

근무 지역	특별시	22	18	16	41	11	12	120
		18.3%	15.0%	13.3%	34.2%	9.2%	10.0%	100.0%
	광역시	34	28	30	66	21	11	190
		17.9%	14.7%	15.8%	34.7%	11.1%	5.8%	100.0%
근무 학교	중소도시	141	103	111	170	71	22	618
		22.8%	16.7%	18.0%	27.5%	11.5%	3.6%	100.0%
	전문대학	91	74	83	91	53	10	402
		22.6%	18.4%	20.6%	22.6%	13.2%	2.5%	100.0%
	대학교	102	73	71	176	46	34	502
		20.3%	14.5%	14.1%	35.1%	9.2%	6.8%	100.0%
직위 1	기획및교	4	2	3	10	4	1	24
		16.7%	8.3%	12.5%	41.7%	16.7%	4.2%	100.0%
	무처장	34	18	28	55	10	13	158
		21.5%	11.4%	17.7%	34.8%	6.3%	8.2%	100.0%
	기타보직	30	36	24	42	31	9	172
		17.4%	20.9%	14.0%	24.4%	18.0%	5.2%	100.0%
	교수	32	25	34	49	26	6	172
		18.6%	14.5%	19.8%	28.5%	15.1%	3.5%	100.0%
직위 2	교무처 및 기획처 직원	49	30	39	57	15	8	198
		24.7%	15.2%	19.7%	28.8%	7.6%	4.0%	100.0%
	기타직원	52	40	32	74	21	9	228
		22.8%	17.5%	14.0%	32.5%	9.2%	3.9%	100.0%
	합계	64	54	52	97	41	22	330
		19.4%	16.4%	15.8%	29.4%	12.4%	6.7%	100.0%
	평교수	32	25	34	49	26	6	172
		18.6%	14.5%	19.8%	28.5%	15.1%	3.5%	100.0%
	직원 및 기타	101	70	71	131	36	17	426
		23.7%	16.4%	16.7%	30.8%	8.5%	4.0%	100.0%
		197	149	157	277	103	45	928
		21.2%	16.1%	16.9%	29.8%	11.1%	4.8%	100.0%

Brain Korea 21(BK21) 정책의 보완점에 대한 설문의 다중응답 결과는 <표 VII-67>과 같다. 단기적 성과위주평가 (매년 평가)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성과평가로 전환이 2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실질적인 신진연구인력 유인책 마련 필요(18.4%),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등의 계열에 따른 차등 해소(15.9%)의 순이었다.

<표 VII-67> Brain Korea 21(BK21) 정책의 보완점

배경변인		예산 등의 집행과 사업수행의 자율성 및 독립권한 제고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등의 계열에 따른 차등 해소	예산 총액의 증액	단기적 성과위주 평가 (매년 평가)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성과평가로 전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대학의 제도개혁과의 연계 지향	실질적인 신진연구인력 유인책 마련 필요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기타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32 13.0%	36 14.6%	9 3.7%	71 28.9%	28 11.4%	51 20.7%	10 4.1%	9 3.7%	246 100.0%
	사립	79 11.6%	112 16.4%	48 7.0%	193 28.3%	83 12.2%	120 17.6%	31 4.5%	16 2.3%	682 100.0%
근무 지역	특별시	13 10.8%	23 19.2%	7 5.8%	30 25.0%	16 13.3%	19 15.8%	7 5.8%	5 4.2%	120 100.0%
	광역시	16 8.4%	29 15.3%	12 6.3%	59 31.1%	21 11.1%	39 20.5%	7 3.7%	7 3.7%	190 100.0%
근무 학교	중소도시	82 13.3%	96 15.5%	38 6.1%	175 28.3%	74 12.0%	113 18.3%	27 4.4%	13 2.1%	618 100.0%
	이하	42 10.4%	61 15.2%	28 7.0%	122 30.3%	43 10.7%	75 18.7%	19 4.7%	12 3.0%	402 100.0%
	전문대학	65 12.9%	86 17.1%	28 5.6%	134 26.7%	65 12.9%	92 18.3%	20 4.0%	12 2.4%	502 100.0%
	대학교	4 16.7%	1 4.2%	1 4.2%	8 33.3%	3 12.5%	4 16.7%	2 8.3%	1 4.2%	24 100.0%
직위 1	기획및교무처장	17 10.8%	29 18.4%	12 7.6%	37 23.4%	18 11.4%	34 21.5%	9 5.7%	2 1.3%	158 100.0%
	기타보직 교수	11 6.4%	26 15.1%	8 4.7%	56 32.6%	14 8.1%	42 24.4%	8 4.7%	7 4.1%	172 100.0%
	평교수	20 11.6%	19 11.0%	14 8.1%	57 33.1%	16 9.3%	23 13.4%	18 10.5%	5 2.9%	172 100.0%
	교목처 및 기획처 직원	23 11.6%	37 18.7%	10 5.1%	57 28.8%	28 14.1%	32 16.2%	4 2.0%	7 3.5%	198 100.0%
	기타직원 및연구원	40 17.5%	37 16.2%	13 5.7%	57 25.0%	35 15.4%	40 17.5%	2 .9%	4 1.8%	228 100.0%
	보직교수	28 8.5%	55 16.7%	20 6.1%	93 28.2%	32 9.7%	76 23.0%	17 5.2%	9 2.7%	330 100.0%
직위 2	평교수	20 11.6%	19 11.0%	14 8.1%	57 33.1%	16 9.3%	23 13.4%	18 10.5%	5 2.9%	172 100.0%
	직원및기타	63 14.8%	74 17.4%	23 5.4%	114 26.8%	63 14.8%	72 16.9%	6 1.4%	11 2.6%	426 100.0%
합계		111 12.0%	148 15.9%	57 6.1%	264 28.4%	111 12.0%	171 18.4%	41 4.4%	25 2.7%	928 100.0%

GPS(Global Ph.D. Scholarship)정책의 보완점에 대한 설문의 다중응답 결과는 <표 VII-68>과 같다. 인문사회계/이공계의 적절한 균형 유지가 2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지원 대상 확대(19.7%), 선정 평가지표 및 평가과정엄정성 확보(14.9%)의 순이었다.

<표 VII-68> GPS(Global Ph.D. Scholarship) 정책의 보완점

배경변인		학생당 지원금 액 확대	지원 대상 확대	학생당 지원기 간확대	인문사회 계/이공계 의 적절한 균형 유지	더 이상 학대하지 말고 학부지원 사업에 치중	대학원생 선정시 취약계층 에 대한 배려	선정 평가지표 및 평가과정 엄정성 확보	기타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24 9.8%	49 19.9%	33 13.4%	51 20.7%	17 6.9%	30 12.2%	34 13.8%	8 3.3%	246 100.0%
	사립	75 11.0%	134 19.6%	77 11.3%	136 19.9%	72 10.6%	68 10.0%	104 15.2%	16 2.3%	682 100.0%
근무 지역	특별시	16 13.3%	30 25.0%	7 5.8%	19 15.8%	16 13.3%	13 10.8%	15 12.5%	4 3.3%	120 100.0%
	광역시	18 9.5%	43 22.6%	16 8.4%	39 20.5%	17 8.9%	21 11.1%	30 15.8%	6 3.2%	190 100.0%
	중소도시	65 10.5%	110 17.8%	87 14.1%	129 20.9%	56 9.1%	64 10.4%	93 15.0%	14 2.3%	618 100.0%
	이하	3 12.5%	5 20.8%	4 16.7%	4 16.7%	0 .0%	5 20.8%	2 8.3%	1 4.2%	24 100.0%
근무 학교	전문대학	43 10.7%	72 17.9%	54 13.4%	66 16.4%	33 8.2%	45 11.2%	75 18.7%	14 3.5%	402 100.0%
	대학교	53 10.6%	106 21.1%	52 10.4%	117 23.3%	56 11.2%	48 9.6%	61 12.2%	9 1.8%	502 100.0%
	기타	3 12.5%	5 20.8%	4 16.7%	4 16.7%	0 .0%	5 20.8%	2 8.3%	1 4.2%	24 100.0%
	기획및교 무처장 기타보직 교수 평교수 교무처처장 기획처처장 기타직원 및연구원	10 6.3%	37 23.4%	10 6.3%	36 22.8%	24 15.2%	17 10.8%	20 12.7%	4 2.5%	158 100.0%
직위 1	교수 평교수 기획처처장 기타직원 및연구원	15 9.3%	25 27.3%	28 12.2%	27 17.4%	11 12.2%	15 8.1%	45 11.6%	6 1.7%	172 100.0%
	교무처처장 기획처처장 기타직원 및연구원	16 10.6%	47 21.2%	21 9.1%	30 24.2%	21 9.6%	14 10.6%	20 11.6%	3 3.0%	172 100.0%
	보직교수 평교수 직원및기 타	21 16.2%	42 14.0%	18 14.5%	48 20.2%	19 6.1%	21 13.6%	23 13.2%	6 2.2%	198 100.0%
	합계	25 10.7%	62 19.7%	38 11.9%	63 20.2%	35 9.6%	32 10.6%	65 14.9%	10 2.6%	330 100.0%
	보직교수 평교수 직원및기 타	16 13.6%	47 17.4%	21 12.0%	30 22.1%	21 7.7%	14 12.2%	20 12.4%	3 2.6%	172 100.0%
	합계	99 10.7%	183 19.7%	110 11.9%	187 20.2%	89 9.6%	98 10.6%	138 14.9%	24 2.6%	928 100.0%
	보직교수 평교수 직원및기 타	58 13.6%	74 17.4%	51 12.0%	94 22.1%	33 7.7%	52 12.2%	53 12.4%	11 2.6%	426 100.0%
	합계	99 10.7%	183 19.7%	110 11.9%	187 20.2%	89 9.6%	98 10.6%	138 14.9%	24 2.6%	928 100.0%

10년 후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전망에 대한 설문의 응답 결과는 <표 VII-69>와 같다. 유지가 4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확대(38.6%), 축소(8.6%)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직위1에 따라 $p<.05$ 의 수준에서, 직위2에 따라 $p<.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69> 10년 후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전망

배경변인	확대	유지	축소	폐지	전체	χ^2	유의확률
설립 유형	국공립	48 39.0%	56 45.5%	8 6.5%	11 8.9%	123 100.0%	3.761 .288
	사립	131 38.4%	162 47.5%	32 9.4%	16 4.7%	341 100.0%	
	특별시	15 25.0%	37 61.7%	3 5.0%	5 8.3%	60 100.0%	
	광역시	38 40.0%	40 42.1%	13 13.7%	4 4.2%	95 100.0%	
근무 지역	중소도시	126 40.8%	141 45.6%	24 7.8%	18 5.8%	309 100.0%	11.733 .068
	이하	126 40.8%	141 45.6%	24 7.8%	18 5.8%	309 100.0%	
근무 학교	전문대학	71 35.3%	102 50.7%	21 10.4%	7 3.5%	201 100.0%	9.772 .135
	대학교	102 40.6%	113 45.0%	18 7.2%	18 7.2%	251 100.0%	
	기타	6 50.0%	3 25.0%	1 8.3%	2 16.7%	12 100.0%	
	기획및교무	36 45.6%	40 50.6%	3 3.8%	0 .0%	79 100.0%	
직위1	처장	30 34.9%	44 51.2%	6 7.0%	6 7.0%	86 100.0%	23.838 .021*
	기타보직	28 32.6%	34 39.5%	13 15.1%	11 12.8%	86 100.0%	
	교수	43 43.4%	44 44.4%	8 8.1%	4 4.0%	99 100.0%	
	평교수	42 36.8%	56 49.1%	10 8.8%	6 5.3%	114 100.0%	
	교무처및기	66 40.0%	84 50.9%	9 5.5%	6 3.6%	165 100.0%	
	획처직원	28 32.6%	34 39.5%	13 15.1%	11 12.8%	86 100.0%	
	기타직원및	85 39.9%	100 46.9%	18 8.5%	10 4.7%	213 100.0%	
	연구원	179 38.6%	218 47.0%	40 8.6%	27 5.8%	464 100.0%	
직위2							
직위2	보직교수	66 40.0%	84 50.9%	9 5.5%	6 3.6%	165 100.0%	17.680 .007**
	평교수	28 32.6%	34 39.5%	13 15.1%	11 12.8%	86 100.0%	
	직원및기타	85 39.9%	100 46.9%	18 8.5%	10 4.7%	213 100.0%	
합계		179 38.6%	218 47.0%	40 8.6%	27 5.8%	464 100.0%	

* $p<.05$, ** $p<.01$

10년 후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전망에 대한 설문의 응답 결과는 <표 VII-70>와 같다. 유지가 4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확대(38.6%), 축소

(10.3%)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 근무학교, 직위1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근무지역과 직위2에 따라 $p<.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70> 10년 후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전망

배경변인		확대	유지	축소	폐지	전체	χ^2	유의 확률
설립 유형	국공립	20 16.3%	73 59.3%	21 17.1%	9 7.3%	123 100.0%	33.364	.000***
	사립	151 44.3%	150 44.0%	27 7.9%	13 3.8%	341 100.0%		
	특별시	10 16.7%	41 68.3%	5 8.3%	4 6.7%	60 100.0%		
	광역시	30 31.6%	48 50.5%	14 14.7%	3 3.2%	95 100.0%		
근무 지역	중소도시	131 42.4%	134 43.4%	29 9.4%	15 4.9%	309 100.0%	19.855	.003**
	이하	1 8.3%	9 75.0%	1 8.3%	1 8.3%	12 100.0%		
	전문대학	121 60.2%	66 32.8%	9 4.5%	5 2.5%	201 100.0%		
	대학교	49 19.5%	148 59.0%	38 15.1%	16 6.4%	251 100.0%		
근무 학교	기타	1 8.3%	9 75.0%	1 8.3%	1 8.3%	12 100.0%	86.753	.000***
	기획및교무	26 32.9%	48 60.8%	5 6.3%	0 .0%	79 100.0%		
	처장	45 52.3%	32 37.2%	2 2.3%	7 8.1%	86 100.0%		
	기타보직 교수	27 31.4%	35 40.7%	16 18.6%	8 9.3%	86 100.0%		
직위1	평교수	35 35.4%	49 49.5%	11 11.1%	4 4.0%	99 100.0%	36.657	.000***
	교무처및기 획처직원	38 33.3%	59 51.8%	14 12.3%	3 2.6%	114 100.0%		
	기타직원및 연구원	71 43.0%	80 48.5%	7 4.2%	7 4.2%	165 100.0%		
	보직교수	27 31.4%	35 40.7%	16 18.6%	8 9.3%	86 100.0%		
직위2	평교수	73 34.3%	108 50.7%	25 11.7%	7 3.3%	213 100.0%	20.896	.002**
	직원및기타	171 36.9%	223 48.1%	48 10.3%	22 4.7%	464 100.0%		
	합계							

** $p<.01$, *** $p<.001$

10년 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의 전망에 대한 설문의 응답 결과는 <표 VII-71>과 같다. 유지가 3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확대(33.2%), 축소(16.2%)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에 따라 $p<.01$ 의 수준에서, 근무학교에 따라 $p<.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71> 10년 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의 전망

배경변인	확대	유지	축소	폐지	전체	χ^2	유의 확률
설립 유형	국공립	34 27.6%	47 38.2%	19 15.4%	23 18.7%	123 100.0%	11.471 .009**
	사립	120 35.2%	138 40.5%	56 16.4%	27 7.9%	341 100.0%	
	특별시	15 25.0%	27 45.0%	10 16.7%	8 13.3%	60 100.0%	
	광역시	38 40.0%	31 32.6%	15 15.8%	11 11.6%	95 100.0%	
근무 지역	중소도시	101 32.7%	127 41.1%	50 16.2%	31 10.0%	309 100.0%	4.923 .554
	이하	5 34.7%	4 34.7%	1 14.3%	2 16.3%	12 100.0%	
근무 학교	전문대학	62 30.8%	94 46.8%	38 18.9%	7 3.5%	201 100.0%	24.401 .000***
	대학교	87 34.7%	87 34.7%	36 14.3%	41 16.3%	251 100.0%	
직위1	기타	5 41.7%	4 33.3%	1 8.3%	2 16.7%	12 100.0%	8.758 .723
	기획및교무	29 36.7%	29 36.7%	14 17.7%	7 8.9%	79 100.0%	
직위2	처장	34 39.5%	32 37.2%	12 14.0%	8 9.3%	86 100.0%	5.452 .487
	기타보직	25 29.1%	32 37.2%	16 18.6%	13 15.1%	86 100.0%	
직원 및 교직원	교무처및기	36 36.4%	41 41.4%	14 14.1%	8 8.1%	99 100.0%	
	획처직원	30 26.3%	51 44.7%	19 16.7%	14 12.3%	114 100.0%	
	기타직원및	63 38.2%	61 37.0%	26 15.8%	15 9.1%	165 100.0%	
	연구원	25 29.1%	32 37.2%	16 18.6%	13 15.1%	86 100.0%	
	보직교수	66 31.0%	92 43.2%	33 15.5%	22 10.3%	213 100.0%	
	평교수	154 33.2%	185 39.9%	75 16.2%	50 10.8%	464 100.0%	
합계							

p<.01, *p<.001

10년 후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의 전망에 대한 설문의 응답 결과는 <표 VII-72>와 같다. 유지가 4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확대(25.2%), 축소(18.3%)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과 근무학교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근무지역과 직위1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72> 10년 후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의 전망

배경변인		확대	유지	축소	폐지	전체	χ^2	유의 확률
설립 유형	국공립	11 8.9%	64 52.0%	32 26.0%	16 13.0%	123 100.0%	25.500	.000***
	사립	106 31.1%	140 41.1%	53 15.5%	42 12.3%	341 100.0%		
	특별시	6 10.0%	29 48.3%	18 30.0%	7 11.7%	60 100.0%		
	광역시	25 26.3%	42 44.2%	13 13.7%	15 15.8%	95 100.0%		
근무 지역	중소도시	86 27.8%	133 43.0%	54 17.5%	36 11.7%	309 100.0%	13.452	.036*
	이하	1 8.3%	6 50.0%	4 33.3%	1 8.3%	12 100.0%		
	전문대학	85 42.3%	68 33.8%	22 10.9%	26 12.9%	201 100.0%		
	대학교	31 12.4%	130 51.8%	59 23.5%	31 12.4%	251 100.0%		
직위1	기획및교무	15 19.0%	37 46.8%	15 19.0%	12 15.2%	79 100.0%	25.494	.013*
	처장	36 41.9%	33 38.4%	10 11.6%	7 8.1%	86 100.0%		
	교수	23 26.7%	32 37.2%	20 23.3%	11 12.8%	86 100.0%		
	교무처및기	21 21.2%	48 48.5%	22 22.2%	8 8.1%	99 100.0%		
	회처직원	22 19.3%	54 47.4%	18 15.8%	20 17.5%	114 100.0%		
	기타직원및	1 19.3%	6 47.4%	4 15.8%	1 17.5%	12 100.0%		
	연구원	51 30.9%	70 42.4%	25 15.2%	19 11.5%	165 100.0%		
	보직교수	23 26.7%	32 37.2%	20 23.3%	11 12.8%	86 100.0%		
	평교수	43 20.2%	102 47.9%	40 18.8%	28 13.1%	213 100.0%		
	합계	117 25.2%	204 44.0%	85 18.3%	58 12.5%	464 100.0%		

*p<.05, ***p<.001

10년 후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전망에 대한 설문의 응답 결과는 <표 VII-73>과 같다. 유지가 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확대(33.4%), 축소(19.0%)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근무지역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근무학교와 직위1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73> 10년 후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전망

배경변인		확대	유지	축소	폐지	전체	χ^2	유의 확률
설립 유형	국공립	35 28.5%	43 35.0%	29 23.6%	16 13.0%	123 100.0%	4.762	.190
	사립	120 35.2%	131 38.4%	59 17.3%	31 9.1%	341 100.0%		
	특별시	12 20.0%	23 38.3%	13 21.7%	12 20.0%	60 100.0%		
	광역시	32 33.7%	32 33.7%	23 24.2%	8 8.4%	95 100.0%		
근무 지역	중소도시	111 35.9%	119 38.5%	52 16.8%	27 8.7%	309 100.0%	13.269	.039*
	이하	8 66.7%	2 16.7%	1 8.3%	1 8.3%	12 100.0%		
	전문대학	91 45.3%	84 41.8%	20 10.0%	6 3.0%	201 100.0%		
	대학교	56 22.3%	88 35.1%	67 26.7%	40 15.9%	251 100.0%		
근무 학교	기타	8 66.7%	2 16.7%	1 8.3%	1 8.3%	12 100.0%	60.227	.000***
	기획및교무	13 16.5%	26 32.9%	27 34.2%	13 16.5%	79 100.0%		
	처장	40 46.5%	30 34.9%	10 11.6%	6 7.0%	86 100.0%		
	기타보직	38 44.2%	32 37.2%	8 9.3%	8 9.3%	86 100.0%		
직위1	교수	28 28.3%	39 39.4%	21 21.2%	11 11.1%	99 100.0%	37.484	.000***
	평교수	36 31.6%	47 41.2%	22 19.3%	9 7.9%	114 100.0%		
	교무처및기	36 31.6%	47 41.2%	22 19.3%	9 7.9%	114 100.0%		
	학처직원	36 31.6%	47 41.2%	22 19.3%	9 7.9%	114 100.0%		
직위2	기타직원및	36 31.6%	47 41.2%	22 19.3%	9 7.9%	114 100.0%	10.751	.096
	연구원	53 32.1%	56 33.9%	37 22.4%	19 11.5%	165 100.0%		
	보직교수	38 44.2%	32 37.2%	8 9.3%	8 9.3%	86 100.0%		
	평교수	64 30.0%	86 40.4%	43 20.2%	20 9.4%	213 100.0%		
합계		155 33.4%	174 37.5%	88 19.0%	47 10.1%	464 100.0%		

*p<.05, ***p<.001

10년 후 대학 구조조정 추진 정책의 전망에 대한 설문의 응답 결과는 <표 VII-74>와 같다. 유지가 3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확대(30.2%), 축소(16.8%)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 근무학교, 직위1, 직위2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74> 10년 후 대학 구조조정 추진 정책의 전망

배경변인		확대	유지	축소	폐지	전체	χ^2	유의 확률
설립 유형	국공립	25 20.3%	39 31.7%	27 22.0%	32 26.0%	123 100.0%	28.550	.000***
	사립	115 33.7%	143 41.9%	51 15.0%	32 9.4%	341 100.0%		
	특별시	20 33.3%	27 45.0%	7 11.7%	6 10.0%	60 100.0%		
	광역시	27 28.4%	42 44.2%	17 17.9%	9 9.5%	95 100.0%		
근무 지역	중소도시	93 30.1%	113 36.6%	54 17.5%	49 15.9%	309 100.0%	5.921	.432
	이하	2 58.3%	2 16.7%	1 8.3%	2 16.7%	12 100.0%		
	전문대학	82 40.8%	86 42.8%	23 11.4%	10 5.0%	201 100.0%		
	대학교	51 20.3%	94 37.5%	54 21.5%	52 20.7%	251 100.0%		
근무 학교	기타	7 58.3%	2 16.7%	1 8.3%	2 16.7%	12 100.0%	48.546	.000***
	기획및교무	14 17.7%	43 54.4%	14 17.7%	8 10.1%	79 100.0%		
	처장	40 46.5%	34 39.5%	3 3.5%	9 10.5%	86 100.0%		
	기타보직	38 44.2%	20 23.3%	13 15.1%	15 17.4%	86 100.0%		
직위1	교무처및기	21 21.2%	40 40.4%	25 25.3%	13 13.1%	99 100.0%	49.013	.000***
	회처직원	27 23.7%	45 39.5%	23 20.2%	19 16.7%	114 100.0%		
	기타직원및	54 32.7%	77 46.7%	17 10.3%	17 10.3%	165 100.0%		
	연구원	38 44.2%	20 23.3%	13 15.1%	15 17.4%	86 100.0%		
직위2	보직교수	48 22.5%	85 39.9%	48 22.5%	32 15.0%	213 100.0%	28.995	.000***
	평교수	140 30.2%	182 39.2%	78 16.8%	64 13.8%	464 100.0%		
	직원및기타	54 32.7%	77 46.7%	17 10.3%	17 10.3%	165 100.0%		
	합계	38 44.2%	20 23.3%	13 15.1%	15 17.4%	86 100.0%		

***p<.001

10년 후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정책의 전망에 대한 설문의 응답 결과는 <표 VII-75>와 같다. 유지가 4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확대(22.1%), 축소(18.1%)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 근무학교, 직위1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직위2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75> 10년 후 국립대학 범인화 추진 정책의 전망

배경변인		확대	유지	축소	폐지	전체	χ^2	유의 확률
설립 유형	국공립	15 12.2%	21 17.1%	31 25.2%	56 45.5%	123 100.0%	120.615	.000***
	사립	83 24.3%	183 53.7%	53 15.5%	22 6.5%	341 100.0%		
	특별시	11 18.3%	36 60.0%	6 10.0%	7 11.7%	60 100.0%		
	광역시	22 23.2%	44 46.3%	18 18.9%	11 11.6%	95 100.0%		
근무 지역	중소도시	65 21.0%	124 40.1%	60 19.4%	60 19.4%	309 100.0%	11.320	.079
	이하	21.0%	40.1%	19.4%	19.4%	100.0%		
	전문대학	50 24.9%	110 54.7%	27 13.4%	14 7.0%	201 100.0%		
	대학교	40 15.9%	91 36.3%	57 22.7%	63 25.1%	251 100.0%		
근무 학교	기타	8 66.7%	3 25.0%	0 .0%	1 8.3%	12 100.0%	55.890	.000***
	기획및교무	18 22.8%	44 55.7%	12 15.2%	5 6.3%	79 100.0%		
	처장	22.8%	55.7%	15.2%	6.3%	100.0%		
	기타보직	27 31.4%	32 37.2%	11 12.8%	16 18.6%	86 100.0%		
직위1	교수	19 22.1%	27 31.4%	21 24.4%	19 22.1%	86 100.0%	36.691	.000***
	평교수	19 22.1%	27 31.4%	21 24.4%	19 22.1%	86 100.0%		
	교무처및기	16 16.2%	56 56.6%	18 18.2%	9 9.1%	99 100.0%		
	회처직원	16.2%	56.6%	18.2%	9.1%	100.0%		
직위2	기타직원및	18 15.8%	45 39.5%	22 19.3%	29 25.4%	114 100.0%	16.239	.013*
	연구원	15.8%	39.5%	19.3%	25.4%	100.0%		
	보직교수	45 27.3%	76 46.1%	23 13.9%	21 12.7%	165 100.0%		
	평교수	19 22.1%	27 31.4%	21 24.4%	19 22.1%	86 100.0%		
합계	직원및기타	34 16.0%	101 47.4%	40 18.8%	38 17.8%	213 100.0%		
		98 21.1%	204 44.0%	84 18.1%	78 16.8%	464 100.0%		

*p<.05, ***p<.001

10년 후 WCU(World Clss University) 사업의 전망에 대한 설문의 응답 결과는 <표 VII-76>과 같다. 유지가 50.4%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축소(23.9%), 확대(19.2%)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 직위1, 직위2에 따라 p<.01의 수준에서, 근무학교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76> 10년 후 WCU(World Clss University) 사업의 전망

배경변인		확대	유지	축소	폐지	전체	χ^2	유의 확률
설립 유형	국공립	15 12.2%	58 47.2%	36 29.3%	14 11.4%	123 100.0%	12.871	.005**
	사립	74 21.7%	176 51.6%	75 22.0%	16 4.7%	341 100.0%		
	특별시	11 18.3%	25 41.7%	17 28.3%	7 11.7%	60 100.0%		
	광역시	25 26.3%	42 44.2%	24 25.3%	4 4.2%	95 100.0%		
근무 지역	중소도시	53 17.2%	167 54.0%	70 22.7%	19 6.1%	309 100.0%	9.723	.137
	이하	17.2%	54.0%	22.7%	6.1%	100.0%		
	전문대학	53 26.4%	109 54.2%	32 15.9%	7 3.5%	201 100.0%		
	대학교	34 13.5%	120 47.8%	76 30.3%	21 8.4%	251 100.0%		
근무 학교	기타	2 16.7%	5 41.7%	3 25.0%	2 16.7%	12 100.0%	26.434	.000***
	기획및교무	11 13.9%	44 55.7%	18 22.8%	6 7.6%	79 100.0%		
	처장	26 30.2%	44 51.2%	14 16.3%	2 2.3%	86 100.0%		
	교수	15 17.4%	34 39.5%	24 27.9%	13 15.1%	86 100.0%		
직위1	평교수	20 20.2%	50 50.5%	25 25.3%	4 4.0%	99 100.0%	27.821	.006**
	교무처및기	17 14.9%	62 54.4%	30 26.3%	5 4.4%	114 100.0%		
	회처직원	17 14.9%	62 54.4%	30 26.3%	5 4.4%	114 100.0%		
	기타직원및 연구원	17 14.9%	62 54.4%	30 26.3%	5 4.4%	114 100.0%		
직위2	보직교수	37 22.4%	88 53.3%	32 19.4%	8 4.8%	165 100.0%	18.481	.005**
	평교수	15 17.4%	34 39.5%	24 27.9%	13 15.1%	86 100.0%		
	직원및기타	37 17.4%	112 52.6%	55 25.8%	9 4.2%	213 100.0%		
	합계	89 19.2%	234 50.4%	111 23.9%	30 6.5%	464 100.0%		

p<.01, *p<.001

10년 후 WCC(World Clss College) 사업의 전망에 대한 설문의 응답 결과는 <표 VII-77>과 같다. 유지가 47.0%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축소(24.1%), 확대(21.6%)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설립유형과 근무학교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직위1과 직위2에 따라 p<.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77> 10년 후 WCC(World Class College) 사업의 전망

배경변인		확대	유지	축소	폐지	전체	χ^2	유의 확률
설립 유형	국공립	7 5.7%	57 46.3%	40 32.5%	19 15.4%	123 100.0%	39.481	.000***
	사립	93 27.3%	161 47.2%	72 21.1%	15 4.4%	341 100.0%		
	특별시	11 18.3%	26 43.3%	18 30.0%	5 8.3%	60 100.0%		
	광역시	19 20.0%	43 45.3%	25 26.3%	8 8.4%	95 100.0%		
근무 지역	중소도시	70 22.7%	149 48.2%	69 22.3%	21 6.8%	309 100.0%	2.715	.844
	이하	0 .0%	7 58.3%	4 33.3%	1 8.3%	12 100.0%		
	전문대학	83 41.3%	90 44.8%	20 10.0%	8 4.0%	201 100.0%		
	대학교	17 6.8%	121 48.2%	88 35.1%	25 10.0%	251 100.0%		
근무 학교	기타	0 .0%	7 58.3%	4 33.3%	1 8.3%	12 100.0%	100.040	.000***
	기획및교무	13 16.5%	34 43.0%	24 30.4%	8 10.1%	79 100.0%		
	처장	32 37.2%	37 43.0%	12 14.0%	5 5.8%	86 100.0%		
	교수	19 22.1%	33 38.4%	22 25.6%	12 14.0%	86 100.0%		
직위1	평교수	20 20.2%	50 50.5%	26 26.3%	3 3.0%	99 100.0%	32.683	.001**
	교무처및기	16 14.0%	64 56.1%	28 24.6%	6 5.3%	114 100.0%		
	회처직원	0 .0%	0 0.0%	0 0.0%	0 0.0%	0 0.0%		
	연구원	0 .0%	0 0.0%	0 0.0%	0 0.0%	0 0.0%		
직위2	보직교수	45 27.3%	71 43.0%	36 21.8%	13 7.9%	165 100.0%	17.089	.009**
	평교수	19 22.1%	33 38.4%	22 25.6%	12 14.0%	86 100.0%		
	직원및기타	36 16.9%	114 53.5%	54 25.4%	9 4.2%	213 100.0%		
	합계	100 21.6%	218 47.0%	112 24.1%	34 7.3%	464 100.0%		

p<.01, *p<.001

10년 후 BK21(Brain Korea 21) 사업의 전망에 대한 설문의 응답 결과는 <표 VII-78>과 같다. 유지가 51.1%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축소(25.6%), 확대(16.4%)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근무지역과 직위에 따라 p<.05의 수준에서, 직위2에 따라 p<.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78> 10년 후 BK21 (Brain Korea 21) 사업의 전망

배경변인		확대	유지	축소	폐지	전체	χ^2	유의 확률
설립 유형	국공립	22	63	28	10	123	1.144	.766
		17.9%	51.2%	22.8%	8.1%	100.0%		
	사립	54	174	91	22	341		
		15.8%	51.0%	26.7%	6.5%	100.0%		
근무 지역	특별시	11	27	14	8	60	13.161	.041*
		18.3%	45.0%	23.3%	13.3%	100.0%		
	광역시	21	48	17	9	95		
		22.1%	50.5%	17.9%	9.5%	100.0%		
근무 학교	중소도시	44	162	88	15	309	3.290	.772
		14.2%	52.4%	28.5%	4.9%	100.0%		
	기타	35	105	49	12	201		
		17.4%	52.2%	24.4%	6.0%	100.0%		
직위1	전문대학	40	127	66	18	251	21.796	.040*
		15.9%	50.6%	26.3%	7.2%	100.0%		
	대학교	1	5	4	2	12		
		8.3%	41.7%	33.3%	16.7%	100.0%		
	기획및교무	12	48	17	2	79		
		15.2%	60.8%	21.5%	2.5%	100.0%		
	처장	6	50	25	5	86		
		7.0%	58.1%	29.1%	5.8%	100.0%		
직위2	평교수	20	31	24	11	86	18.091	.006**
		23.3%	36.0%	27.9%	12.8%	100.0%		
	교무처및기	18	48	26	7	99		
		18.2%	48.5%	26.3%	7.1%	100.0%		
	기타직원및 연구원	20	60	27	7	114		
		17.5%	52.6%	23.7%	6.1%	100.0%		
	보직교수	18	98	42	7	165		
		10.9%	59.4%	25.5%	4.2%	100.0%		
	평교수	20	31	24	11	86		
		23.3%	36.0%	27.9%	12.8%	100.0%		
	직원및기타	38	108	53	14	213		
		17.8%	50.7%	24.9%	6.6%	100.0%		
	합계		76	237	119	32	464	
			16.4%	51.1%	25.6%	6.9%	100.0%	

*p<.05, **p<.01

10년 후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의 전망에 대한 설문의 응답 결과는 <표 VII-79>와 같다. 유지가 54.3%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확대(21.8%), 축소(20.7%)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배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VII-79> 10년 후 GPS(Globl Ph.D. Scholrship)지원사업의 전망

배경변인		확대	유지	축소	폐지	전체	x^2	유의확률
설립 유형	국공립	32 26.0%	64 52.0%	23 18.7%	4 3.3%	123 100.0%	1.869	.600
	사립	69 20.2%	188 55.1%	73 21.4%	11 3.2%	341 100.0%		
	특별시	20 33.3%	28 46.7%	9 15.0%	3 5.0%	60 100.0%		
	광역시	25 26.3%	49 51.6%	18 18.9%	3 3.2%	95 100.0%		
근무 지역	중소도시	56 18.1%	175 56.6%	69 22.3%	9 2.9%	309 100.0%	9.718	.137
	이하	4 33.3%	6 50.0%	2 16.7%	0 .0%	12 100.0%		
	전문대학	43 21.4%	115 57.2%	36 17.9%	7 3.5%	201 100.0%		
	대학교	54 21.5%	131 52.2%	58 23.1%	8 3.2%	251 100.0%		
근무 학교	기타	4 33.3%	6 50.0%	2 16.7%	0 .0%	12 100.0%	3.300	.770
	기획및교무	15 19.0%	48 60.8%	14 17.7%	2 2.5%	79 100.0%		
	처장	15 17.4%	53 61.6%	16 18.6%	2 2.3%	86 100.0%		
	교수	27 31.4%	35 40.7%	20 23.3%	4 4.7%	86 100.0%		
직위1	평교수	23 23.2%	51 51.5%	22 22.2%	3 3.0%	99 100.0%	11.874	.456
	교무처및기	21 18.4%	65 57.0%	24 21.1%	4 3.5%	114 100.0%		
	회처직원	30 18.2%	101 61.2%	30 18.2%	4 2.4%	165 100.0%		
	기타직원및 연구원	27 31.4%	35 40.7%	20 23.3%	4 4.7%	86 100.0%		
직위2	보직교수	44 20.7%	116 54.5%	46 21.6%	7 3.3%	213 100.0%	10.871	.092
	평교수	101 21.8%	252 54.3%	96 20.7%	15 3.2%	464 100.0%		
	직원및기타	101 21.8%	252 54.3%	96 20.7%	15 3.2%	464 100.0%		
	합계	101 21.8%	252 54.3%	96 20.7%	15 3.2%	464 100.0%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의 10년후 전망에 대한 응답 결과(4점 만점:중간점 2점)는 <표 VII-80>과 같다.

<표 VII-80>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의 10년후 전망

구분	N	M	SD
①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대학교 지원)	464	3.18	.820
②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전문대학 지원)	464	3.17	.796
③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2010년 11개교, 2011년 11개교 선정)	464	2.95	.962
④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사업(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 80개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464	2.82	.951
⑤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등록금 인상 제한(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 2012년 1조 5천억원 차등 지원(대응 자금))	464	2.94	.963
⑥ 대학 구조조정 추진(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연계 추진)	464	2.86	1.002
⑦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울산과기대의 법인화국립대로 출범, 서울대 법인화법시행령제정)	464	2.69	.986
⑧ WCU(World Class University)	464	2.82	.812
⑨ WCC(World Class College)	464	2.83	.850
⑩ BK21(Brain Korea 21)	464	2.77	.803
⑪ GPS(Global Ph.D. Scholarship)	464	2.95	.743

VIII. 주요 고등교육 발전 과제

-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상과 실태를 분석하고, 현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을 분석하였으며, 고등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 고등교육의 모습을 전망해 보고, 미래 고등교육 체제를 전망한 연구를 리뷰해 보았음. 이와 함께 고등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요구와 미래사회의 변화 및 요구와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전문가 대상 텔파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에 대하여 대학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대학유형/목적에 맞는 고등교육체제 정립, 세계 수준의 명문대학 육성, 차별화된 학부교육의 강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을 통한 적정 규모화, 환경·기술변화에 따른 대학 전공 개편, 대학 행·재정체제의 재구조화, 대학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역량 제고,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대학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質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 대학교육의 개방화와 세계화 추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여기서는 이를 중에서 몇가지 중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과제 1> 고등교육의 구조 개편: 장기적으로 30개 우수대학 집중 육성

가. 배경

- 줄어들 줄 모르는 사교육비의 근본 원인은 대입구조에 있음.
 - 2010년 고교 졸업자 65만명이며, 수능시험 응시자는 69.4만명임.
 - 반면 SKY 대학의 입학정원은 1만명인데, 이는 수능 응시자의 1.4%만 SKY에 진학하는 구조임을 시사함.
 - 우리나라는 학벌사회로서 SKY 졸업장의 위력은 무시 못할 수준임.
 -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가고자 하는 좋은 대학이 한정되어 있다는 데 있음.
 -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방치한 채 쉬운 수능 출제나 학원 단속, EBS 연

계와 같은 대증(對症)적인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음.

- 특히 문제풀이 위주의 EBS 수능과외로는 공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학생들의 기초실력 저하라는 근본 문제에 봉착하게 함.

○ 반면 선진사회로 갈수록 고등교육의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음.

-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등교육의 수익률이 초중등교육의 수익률을 앞섬.
-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등교육을 통한 투자수익의 확보가 중요함.
- 최근 Future Schools를 직접 투자 설립하고,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빌 게이츠는 모든 시민이 고등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따라서 학별을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됨.

○ 고등학교에서 사교육에 매달리는 경쟁 인구는 대체로 성적 상위 20~30% 수준의 학생들임.

- 이들의 경쟁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상대적으로 대학의 평준화를 이루고 고등교육 경쟁력이 심하지 않은 유럽의 국가들은 20~35% 수준의 대학취학률을 보임.

- 이미 보편 고등교육단계에 들어선 우리의 경우 “만민 고등교육”을 제공함과 함께 20% 수준의 대학을 모두 우수한 대학으로 끌어올려 고등교육에 대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우수 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 정책과제

○ 장기적인 비전으로 상위 30개의 우수 대학을 집중 육성함.

- 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을 고려하여 수도권 10여개, 지방 20여개의 우수 대학 중 점 육성함.
- 한 대학당 3천~5천명의 입학정원을 예상할 때 대략 10만~15만명 수준의 입학정원을 확보하여 고교졸업자의 20% 수준을 우수대학에서 확보가능함
- 이들 30개 대학은 특성화와 장점을 확보도록 하여, 유럽 국가들처럼 어느 대학을 나와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과제 2> 학부/학과의 융합형 학과구조: (Convergence-oriented Structure) 설계

가. 배경

- IT, BT, NT 등 첨단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산업또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분야의 인력양성이 중요함. 특히 바이오 분야, 네트워크 서비스 분야 등 기술 중심의 분야 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대학의 학과를 증설하거나 별도의 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수요에 충족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인력양성이 이루어져야 함.
- 1995년 미국의 National Academy of Science Committee on Science, Engineering and Public Policy(COSEPUP)는 대학원 교육의 혁신을 위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대학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함. 이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대학원 교육이 단일학과 중심의 운영이었고, 지도교수와 제자 1:1의 관계에 의한 교육, 전공연구 내에 국한된 연구범위, 학위 취득 후 진로선택 범위의 협소함(대체로 대학 교수)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이 보고서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대학원 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핵심 내용은 학문간 통합, 융통성, 확대, 박사 학위 취득자의 직업선택의 다양화, 학문간 공동 연구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그러나 미국에서 이러한 공감대가 대학현장에 정착하게 된 것은 2001년 이후부터임. 즉,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재를 채용해본 기업체의 요구, 학제간 연구가 점점 증가하는 학문세계의 동향, 대학원 교육의 수요-공급 조절 등의 영향으로 대학에서는 이제 융합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게 된 것이고 이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동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나. 정책과제

- 융복합 과학기술 인력의 효과적인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인력양성계획에 따라 기업, 공공연구소, 대학간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학의 경우, 교육내용과 방법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공학, 경영학, 디자인을 결합한 기술경영과정 등 다양한 학문간 또는 비즈니스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획기적인 융합지향형 패러다임의 적용이 필요함.
- 이와 아울러 산업계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교원으로 충원하기 위해 채용기준의 다양화 등 의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융복합 연구 및 교육을 위해서는 그동안 학과 간 두꺼운 벽을 쌓고 지내던 교수들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구체적으로 융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대학의 학과/학부소속 교수제도를 단과 대 계열별 또는 본부 교수단으로 개편하여 현장 수요에 따라 학과/학부의 신설 및 통 폐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년제 융합학과를 개설하여 현행 학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학점의 1.6배~2배 정도 많은 학점과 과목을 이수 할 수 있는 유연성의 모색이 필요함.

<과제 3> "아태 지역 통합 글로벌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 협력 프로그램 마련

가. 배경

- OECD와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더 나은 고등교육을 찾아 국경을 이동하는 학생 인구가 1975년 80만명에서 2007년에는 300만명으로 급증하였음. 현재까지는 고등교육 단계의 학생 이동이 비영어권 아시아 지역학생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어권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지만, 최근 세계 고등교육 이동에서 관찰되는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고등교육 교류·협력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블록화 되고 있다는 점임.
- 학생이동의 중요한 계기는 EU 통합을 계기로 EU 국가들이 유럽시민양성을 기치로 내세우며 유럽 대학 국제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음. 소크라테스, 에라스무스 등으로 대표되는 EU 주관 고등교육 국제화 프로그램들은 EU 대학 간 교육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미국 대학에게 빼앗겼던 유럽 유학생들의 발걸음을 EU 회원국으로 되돌리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 호주, 일본 등 정치·경제·외교 측면에서 주요 대상국들을 전략적으로 설정, 이들 국가 내 고등교육 기관들과의 고등교육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들도 문화적 동질성과 경제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내 고등교육 교류·협력 블록 형성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됨. 이미 한·중·일 3국은 CAMPUS Asia 프로그램의 전격 시행을 통해 동북아 지역 내 고등교육 교류·협력 블록을 형성해 나가고 있음.
-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이 더욱 주목받게 되면, 아시아 지역 내 고등교육 수요는 물론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찾아 아시아로 찾아드는 글로벌 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임. 아시아

를 향한 글로벌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외교 측면에서의 국정 방향을 고려한, 거시적이며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나. 정책과제

- 고등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개발되어야 함.
- 첫째, 대학생의 어학연수 및 학위 프로그램에 치중한 "기존 국제교육협력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각화"해야 함.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EU 국제화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 간 협력과 대학생 이동(에라스무스)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레오나르도 다 빈치), 평생학습(장 모네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교육·훈련 영역을 포괄하는 등 매우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음(박소영 외, 2009). 대내외적 경제 발전과 고등교육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대학(원)생 교류를 뛰어넘는 확장된 범주의 글로벌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역별·국가별 수요 맞춤형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즉, 정치·경제·외교 측면에서의 국가 이해관계와 대규모 공적개발원조 계획등 기존의 정책 지원 현황을 고려하여 국가별, 지역별로 특화된 고등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셋째, 글로벌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국제화 인프라 구축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함. 2020을 대비하는 국제화 인프라 구축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어야 함. 특히, u-러닝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u-러닝의 표준화와 산업화 지원 체계 구축, 아시아 지역 내 국제 질 보장 체제 및 인증 시스템 구축 주도"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한 과제임. 동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면 한국이 아·태지역 고등 교육 허브로 부상하는 데 크게 뒷받침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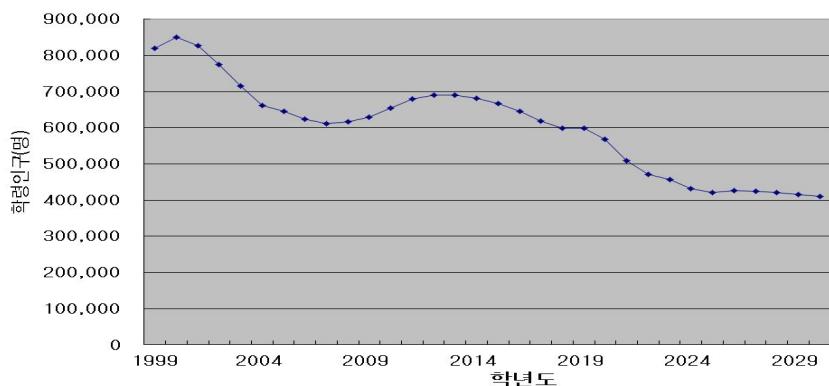
<과제 4> 고등교육단계 평생 직업교육기회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 그리고 빠른 고령화 진전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를 초래함.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유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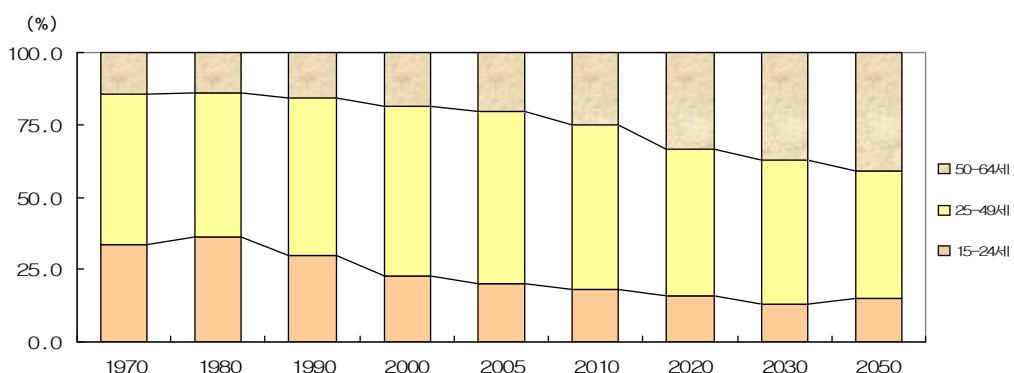
인력(예, 여성, 고령자)의 활성화와 함께 노동인력 1인당 생산성이 크게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2006년 11월에 작성된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결과(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임)에 따르면, 2007학년도(2006년)까지 학령인구가 감소하다가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2012학년도(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함. 2030학년도의 학령인구는 약 41만 명으로 2012학년도(69만 명)의 약 59.4%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임.



[그림 VIII-1] 학령인구(18세인구)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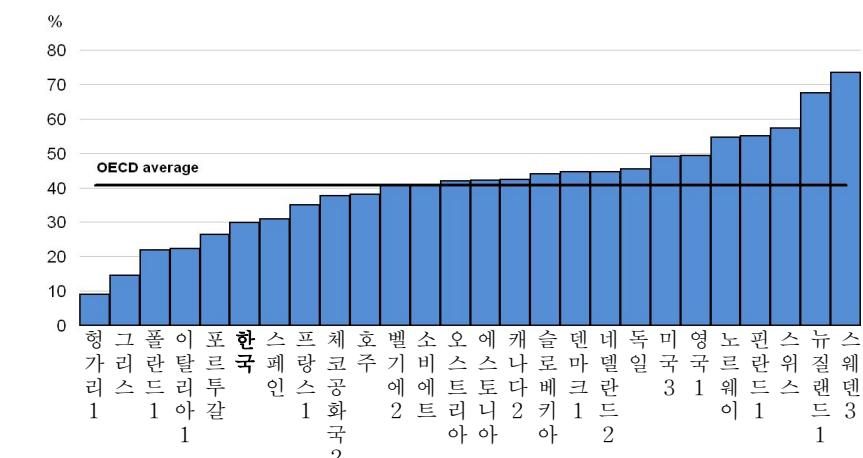
-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 36,190천명(73.4%)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35,506천명(72.0%), 2050년에는 22,424천명(53.0%)에 이를 것으로 전망임. 이러한 전망에서 중요한 점은 비단 생산 가능인구의 절대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생산 가능인구 층인 25세~49세 연령층의 비중 또한 줄어든다는 점임.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이.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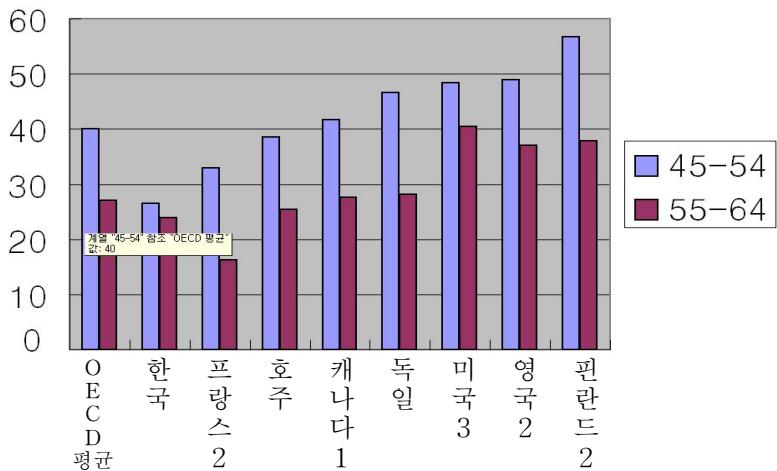
[그림 VIII-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 산업 및 직종구조 변화 전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평생 직업교육체제가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성인근로자의 새로운 지식·기술 습득을 위한 재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그리고 학부를 졸업한 인력의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기술 습득을 위한 대학원 진학 수요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지식과 기술의 생성-소멸주기가 지속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학교교육의 효용성이 점차 낮아지고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산업구조는 향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최용재 외, 2008).
 - 직종별 취업자의 경우도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기능직과 사무직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임.
 -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의 수요는 감소하고, 고졸의 수요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에 대졸이상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박명수, 2010)
- 상기 근로자 1인당 생산성 증대 및 이를 위한 재교육훈련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인 근로자 대상 평생직업교육 기회는 제한적임.
 - 25~64세, 45~54세, 55~64세 성인 정규 및 비정규 교육 참여율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임.
 - 이는 계속교육 기회 제공의 한계(시간 부족, 높은 교육훈련 비용 부담), 고등교육기관의 성인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제공 및 정부 유도 정책 미흡 등의 문제에 기인함.



주: 1=2006년, 2=2008년, 3=2005년
자료: www.oecd.org/edu/eag2010.

[그림 VIII-3] OECD 국가 25~64세 인구 정규 및 비정규 교육 참여율(2007)



주: 1=2006년, 2=2008년, 3=2005년
자료: www.oecd.org/edu/eag2010.

[그림 VIII-4] OECD 주요국 45-54세 및 55-64세 정규 및 비정규교육 참여율

나. 정책과제 4-1: 평생 직업교육 시장 개방 및 육성

- 성인 근로자 대상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시장을 정규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4년제 대학, 폴리테크닉 대학 등) 뿐만 아니라 민간 직업교육기관 그리고 기업에 개방함.

- 보다 다양한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기관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1) 현행 사내대학 제도 확대·운영 유도

- 사내대학 설치·운영 기업에 대한 교육 비용 지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 사내대학의 개방을 통한 타 기업 근로자 수학 기회 제공
- 사내대학과 정규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사내대학 현황: 3개교 105명, 산업체가 산업체내 학교 설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경비 전액 고용주 부담

구분	삼성전자공과대학교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개교	'05. 3	'07. 3	'11. 3
교육과정	학사학위(4년)	전문학사학위(2년)	전문학사학위(2년)
정원 / 학과	40 / 반도체	40 / 조선해양	25 / 제과·제빵

(2) 민간 직업교육기관의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시장 참여 자격 부여

- 정부 또는 산업체 대표기구의 직업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절차

구축·운영

- 민간 직업교육기관 교육훈련 이수 실적의 학점 인정
- 다수 직업교육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
- 고등교육단계 평생 직업교육 시장 참여 직업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기제 구축·운영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 직업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평가관리 체제 운영
 - (1) 정부의 M&E 관리체제 구축
 - 시장 실패의 사전 방지책으로 질적 관리를 위한 정부 개입
 - 직업교육시장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보급
 - (2) 평가 결과와 직업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의 정부 재정지원 연계
 - 일정 등급 이상의 직업교육기관 제공 프로그램만 재정 지원 대상으로 인정
 -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한 수요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도
 - (1) HRDNet, WorkNet, CareerNet 등에 직업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를 공개 → 성인 근로자, 기업, 정부 등 수요자 및 지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평생 직업교육시장에서의 개인별 직업교육 결과의 공식적 평가·인정체제 구축·운영
 - 언제 어디서 어떤 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든지 그 결과를 정부 또는 산업별 대표기구에서 평가·인정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승진 및 임금 결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1) 과정 이수형 자격 부여 제도 운영 시, 정부 또는 산업별 대표기구의 적극 참여를 통한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평가·인증 실시
 - 개인별 포트폴리오 개발·관리를 통하여 경력개발에 활용
- 평생 직업교육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 고등교육단계 평생 직업교육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의 유형·종류 및 규모, 그리고 질적 수준 등 공급에 관한 정보와 함께 재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정보의 상시 수집·분석·관리·보급 시스템 운영
 - 성인 근로자가 재정적 제약없이 재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책 확대
 - (1) 고용보험기금에서의 재직 근로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이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즉, 재직근로자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재정적 제약

을 덜 받으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 구체적으로 이자 보전뿐만 아니라 학자금 일부를 지원.

(2) 한국장학재단 성인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수학할 재직근로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차원에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지원 방식을 보완·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다. 정책과제 4-2: 고등교육단계 평생 직업교육 트랙 구축·운영¹⁾

○ 특성화 고교→전문대학/폴리테크닉→4년제 대학(직업교육 중심 과정, 특성화고교 →4년제 대학)→대학원으로 이어지는 평생 직업교육 트랙 구축·운영

- 각 단계별로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일하다가 필요 시 언제라도 동급 또는 상급 단계 직업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상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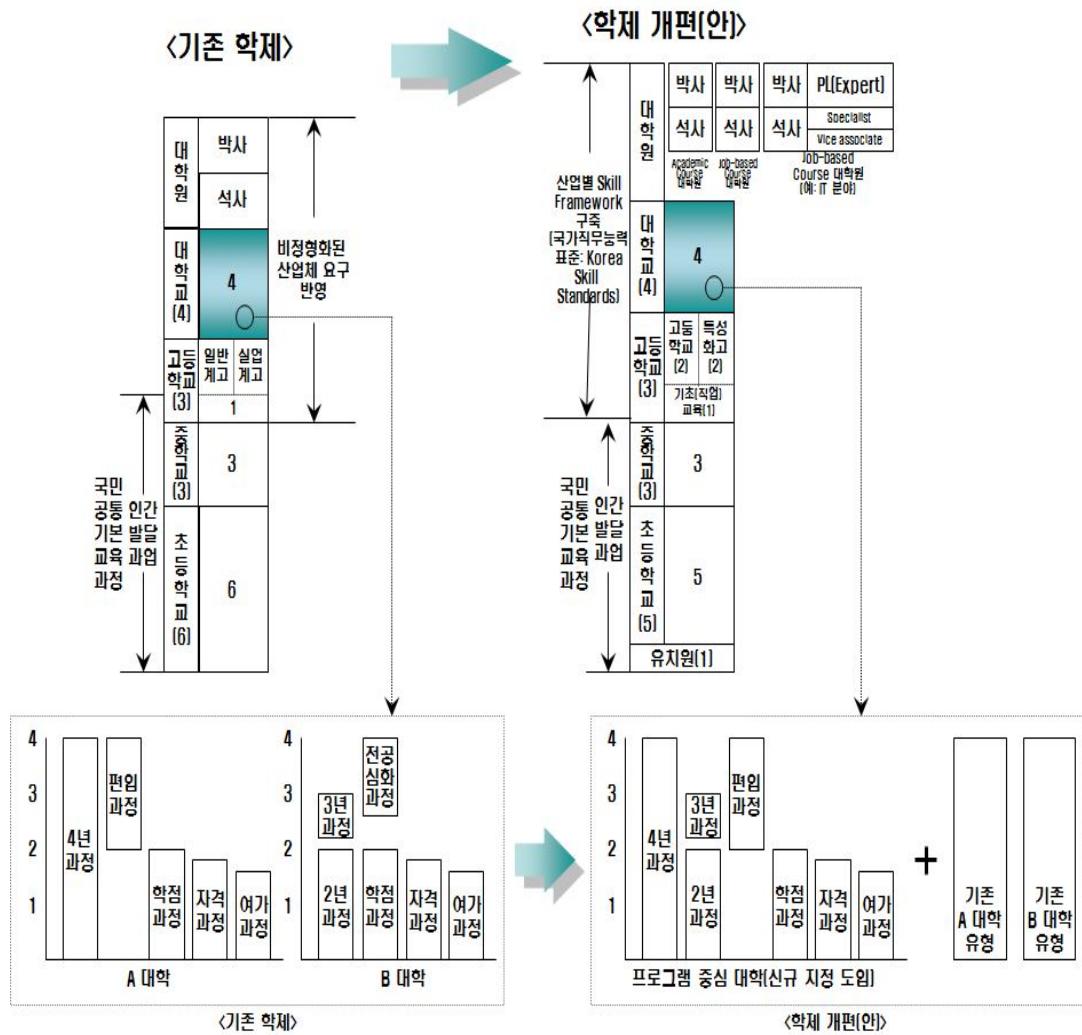
(1) ‘프로그램 중심 대학’ 설계·운영

- 하나의 대학에서 4년 과정, 3년 과정, 2년 과정 등의 정규 학위 과정을 운영하면서 편입과정, 학점과정, 자격과정, 여가과정 등의 비학위 과정도 함께 제공
- 2년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이 노동시장에서 일하다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대학으로 돌아와 3-4학년 과정을 밟고 학사 학위를 취득

(2) 직업교육에 특화된 직무중심의 석·박사과정 신설·운영

- 기존의 특수대학원을 개편·운영

1) 백성준 외(2011.11). 미래 지향 평생 직업교육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미발간).



[그림 VIII-5] 고등교육단계 평생 직업교육학제 개편(안)

<과제 5>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가. 배경 및 필요성

- 미래 사회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키워드에 대해서 40인의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개혁’을 5번째로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음. 대학 교육과정은 고등교육의 질 향상, 대학특성화 유도, 학과간 구조조정, 대학경쟁력 강화의 핵심의 하

나임.

-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 강화의 수단임. 특히 고용축소시대에 맞는 직업연계성, 세계화시대에 맞는 국제통용성,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개방편의성을 지닐 필요가 있음.
- 전문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은 생산성 강조의 산학연계를, 연구중심대학과 대학원은 R&D 강조의 산학연계가 요구됨.

나. 정책과제 5-1: 진로맞춤형 대학 교육과정 강화

- 고용축소사회에 대비한 대학생의 고용가능성과 직업창출능력 강화
 - 신입생 강좌를 통한 대학생의 진로지도 강화, 지도교수 및 동문 선배들의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진로준비능력 제고
 - 신입생의 학습동기유발과 전공진입준비와 함께 생애주기별 진로설계, 목적지향적 학습설계를 통한 대학생의 사회진출준비도 강화
 - 산학협력형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을 통한 대학교육과정의 현장밀착도 제고
 - 교수 개인의 교육과정을 넘어 학회인증, 세계수준, 세계통용의 교육과정의 개발
 - 교육과정 개정시 졸업생의 의견과 전공 관련 기업체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노력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 교양, 전공, 전공 지식의 종합하는 캡스톤 디자인 혹은 종합 포트폴리오 작성, 직업현장 체험 등을 연계하는 진로맞춤형, 산학협력형 교육과정 이수 체계 마련
- 대학의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 유도
 - 정부기관, 공기업부터 각 고용기관별 학력별 고용할당률을 공식포털에 공시를 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계획에 신호체계로 작동하게 함
 -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능력 강화하고, 학력인플레를 억제하는 학력별 고용할당제의 공시를 제도화하고, 이를 종합 공시하는 포털을 마련하여 대학생만 아니라 중등학교 졸업자의 진로도 안내함.
 - 학력별, 전공별 취업가능 직종 등을 공시하여 졸업생의 일자리를 찾기를 도와줌.
- 직업연계성 강화
 - 대학은 현장적응력 제고(실제사회에서 활용되는 교육) 노력, 사회 변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급변하는 사회 및 지식 발전, 기업 발전에 따른 update 된 내용을 가르쳐야 함.
 - 산업현장 밀착형 교육과정 개선,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 및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대학졸업장 속에는 일정 기간의 현장 실습 중심의 직업교육기간이 포함되도록 함. 전공학습의 경우 PBL과 연계하고, 현장실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학습 실시. 기업의 직업준비교육(인턴십)지원 강화를 통한 1년치 학비절감.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대학의 교육력 및 졸업생의 취업역량은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학생진로교육의 확대와 교육과정 연계, 전공과정의 직업연계성은 대학생 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될 필요, 역량기반 대학 교육과정의 강화, 교육성과를 명시적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행수준 설정,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확립, 학생의 역량을 key competencies와 전공역량으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2년 또는 4년간 학습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
- 교육중심대학 집중 육성(실무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양성하는데 교육과정을 집중). 직업교육 중심의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과 산학협력으로 중심축 이동,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기업과의 산학협력, 산업군별 Sector HRD Councils을 활용하여 산업군별로 요구하는 또 미래 전망되는 기술역량을 선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문대학과 직업교육중심 대학의 전공과정을 개발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자격증 취득, 교수의 학생교육에의 집중도 강화
- 기업의 주문형 교육과정 개설 확대, 기업의 대학교육 및 연구에의 적극적 참여 유도

○ 다전공 활성화, 학생진로와 연계한 트랙 개발 운영

- 학생수요, 사회적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필요
- 새로운 학문과 산업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
- 학생들의 자기설계 전공
- 교수의 새로운 학문분야 개척 장려, 교수의 전공 불일치 해소
- 대학원과 학습연계 강화

다. 정책과제 5-2: 교육과정의 국제 통용성 강화

○ 교육과정의 국제 통용성 강화

-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양 교육과정의 국제화
- 국제화에 부합하는 대학 프로그램 정립 및 교육과정의 국제 표준화
- 국내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질 향상 필요, 유학생들도 무엇을 배우러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이 강점을 가진 교육과정이 있어야

우수 유학생 유치가 가능

- 고등교육의 국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교육과정의 국제화’. 교육과정의 국제화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분야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가 필요. 필요성, 분야, 가능방안, 교육과정안, 실행 후 경제적 효과 등 연구 필요
- 학회 등으로부터 공인된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필요
- OECD의 AHELO(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도입 및 확산,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학사관리 강화 및 졸업심사 엄격화를 통한 우수인재 육성

라. 정책과제 5-3: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WET, 이러닝 및 공개 강좌 확대: 학비, 시간 절감 방안
-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관리 방안 마련, 사이버 학습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학습 효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
- 사이버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 학습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온라인 학습체제 및 컨텐츠 개발과 함께 사이버 강의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질 관리가 필요
- 교수의 강의 공개 강화 및 강의 평가의 실질적 운용
- 고령화에 부응하는 개방형 학사운영체제 구축(성인의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 평생학습개념에 따라 다양한 정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성인학생이 시간적·재정적 제약없이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 이러닝 뿐만 아니라 Offline학습의 개방
- 이러닝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강의공개의 제도화
 - 교육자료 및 강의 공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마. 정책과제 5-4: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매뉴얼화

○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매뉴얼화

- 동문 및 기업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참여 보장
- 교수개인용 교육과정 탈피, 교수개인화(사사화)된 교육과정을 공인화로의 개혁

이) 중요

- 대학특성화 중심, 전공 학과 프로그램 중심, 교수 개인 중심의 교육과정의 합리적 조화 필요
-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전문성
- 교육과정 개정 적용 결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및 feedback
-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임, 대학 내에서 각 전공간, 대학과 기업간 협력 필요. 강력한 인센티브 기제를 사용 필요. positive와 negative 병행. 교수업적평가, 연봉, 연구비, 참여기업 세제 혜택,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바. 정책과제 5-5: 교과목, 전공간 통합/융합성 강화

○ 교과목, 전공간 통합/융합성 강화

- 학과간 구조조정 및 융합학제 마련, 다전공 활성화, 학과(전공)간 융합연구/교육으로 높은 통용성 교육 및 사회수요 연구 특화 필요
- 융합학제를 위한 학부제 강화
- 교수조직 변화(학과중심에서 벗어난 유연한 교수조직, 외국대학처럼 복수학과 또는 계열조직으로 전환하여 융합 강조 필요)
- 유사 전공분야 다수의 교수 확보를 통한 교수간 경쟁 및 협력 유도가 중요(학과별로 다수의 critical mass를 확보);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간 빅딜, 특성화 등을 통해 가능
- 정부재정지원 단위도 특정학과(복수포함)간 융합연구/교육단위가 될 수 있음.
- 교육과정이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함.
-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1) 특정학과 전공 설치의 학교급을 분명하게 정하고, 2) 해당 학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 학교급에만 집중함으로써 유도될 것임.
-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에서 중복학과의 통합에서도 교육과정 문제가 개재됨.

<과제 6> 고등교육연구개발센터의 설립

가. 배경 및 필요성

-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와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미래

사회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 국내 대학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임. 반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적인 연구체제는 부족함.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학교육 연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대교협, 전문대교협, 민간평가기구, 정부에서 다양한 대학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평가기관간 연계 부족으로 대학에 대한 중복평가에 따른 평가부담 과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중복적인 평가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함께, 평가결과의 사회적 활용이 미흡하며, 평가 체제간 적정 기능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사회적 평가 비용 최소화가 필요한 시점임.
 -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평가를 체계화, 종합화하게 되면 평가 주체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평가 결과의 공유, 평가 기준의 합리적 조정 및 일관성 있는 적용 등이 가능하게 되어 평가를 보다 내실화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재정지원 사업 평가의 총괄 기구가 필요함.
 - 교과부와 지경부 등 정부의 다양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위한 평가가 증가하여 대학의 평가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며,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성과관리체계가 불비하여 재정지원의 중복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제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 사업 평가를 총괄할 기구가 필요함.
- 대학 경영 및 연구를 위한 자료 축적과 지원이 필요함.
 - 현재 많은 대학은 자기 대학의 교육여건, 교육성과, 기타 대학 경영에 필요한 DB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임.
 - 그 결과 자기 대학의 과거 변화 추세와 현 상황을 분석하여 경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나아가 미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축적된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대학평가와 연구를 위한 국가차원의 DB 구축과 함께 대학이 필요한 DB를 구축하도록 도울 경우 대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정책과제

- 고등교육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국책연구기관과 같이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 현재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교육연구소를 확대 설치할 수도 있음
- 어떤 경우이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고등교육연구 및 개발기능을 고등교육연구개발센터으로 통합해야 할 것임

○ 고등교육연구개발센터에서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함.

- 고등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 수행: 고등교육 관련 R&D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고등교육 관련 기초 및 정책 연구 수행
 - 한국교육자료데이터베이스(Korea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구축(미국의 ERIC에 해당)
- 고등교육기관 평가의 연구·총괄·기획·조정
- 기관 평가기관에 대한 인증 및 일부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평가
-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평가
- 외국 대학 및 국제고등교육연구센터와의 교류 활성화
- 고등교육 홍보 기능

○ 고등교육연구개발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회관의 건립 및 활용이 필요함.

- 대학회관은 고등교육연구개발센터의 공간으로 활용
- 주요 학회의 국내외 학술활동 공간 제공
- 외국 방문자 연구실겸 숙소 제공

<과제 7>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및 지속적 지원

가. 배경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관련 총예산규모 추이의 불안정
- 2010년도 교과부 예산은 38조원으로 정부 예산의 15%를 차지함.
 - 고등교육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나,
 - 정부 예산대비 고등교육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교과부 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도 최근 증가하기보다 답보상태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교육예산중 12.5%에 불과한 고등교육예산은 일본의 24%에도 훨씬 못미치고, 전체 학생대비 20%를 초과하는 고등교육 학생수 비중에 비해서도 매우 낮음

<표 VIII-1> 고등교육 예산 추이

연도	GDP규모(A)	정부예산(B)	교과부 교육예산(C)	고등교육 예산(D)	D/A	D/B	D/C
2005	865.2	134.4	27.7	3.4	0.38	2.5	12.1
2006	908.7	144.8	29.0	3.6	0.37	2.5	12.4
2007	975.0	156.5	31.2	4.0	0.37	2.6	12.9
2008	1,026.5	183.5	36.0	4.4	0.42	2.4	12.2
2009	1,063.1	214.6	36.9	5.2	0.45	2.4	14.1
2010	-	256.5	38.3	5.0	-	2.0	13.1

주: 1)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2) 교과부 교육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교육분야 예산)

3) 고등교육 예산=교과부 교육분야 고등교육 부문 예산으로 과학기술분야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불포함(결산금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 교육통계연보.

○ 대학재정 총량규모의 영세

- 학생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중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92%에 이르는 반면,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63%에 그치고 있음.
- 다른 나라의 경우, 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나, 한국의 경우 비슷함.
- 1인당 GDP 대비 학생당 고등교육비 비율 역시 37%로 OECD 평균인 43%에 미달함
- 한국의 학생당 교육비가 낮다는 것은 한국의 대학들이 선진국만큼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임

<표 VIII-2> 주요국의 학생당 고등교육비(US\$)

구 분	OECD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12,907	8,920	27,010	15,463	14,201	13,823	12,773

자료: OECD(2010). Education at Glance.

○ OECD 대비 국가 재정투자의 미흡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총량규모가 적음.
- GDP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비율은 0.6%인데, 이는 OECD 평균 1.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특히 고등교육예산 가운데 60%는 국립대 인건비와 운영비, 대학생 학자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대학정책관련 지원사업 예산은 매우 적음
- 고등교육 투자비 중 정부재원 비중은 20.7%로 OECD 평균 69.1%의 1/3에도 못미치며 우리와 사학비중이 비슷한 일본 32.5% 보다 낮은 수준임(OECD, 2010).

- 낮은 공공부담 비율은 곧 민간부담 교육비의 과중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 동안 한국의 고등교육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임
- 전체대학의 86%(학생수 기준 75%)를 차지하는 한국 사립대학의 재원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하며, 국공립대학에서 조차 그 비중은 40%를 넘어섬
- 이처럼 사부담 재정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당 공교육비는 낮음

<표 VIII-3> GDP 대비 고등교육 재원

구 분	OECD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정부 재원	1.0	0.6	1.0	0.7	0.5	0.9	1.2
민간 재원	0.5	1.9	2.1	0.6	1.0	0.2	0.2
계	1.5	2.4	3.1	1.3	1.5	1.1	1.4

자료: OECD(2010). Education at Glance.

<표 VIII-4> 고등교육투자의 정부재원 대비 민간재원 비율

구 분	OECD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정부 재원	69.1	20.7	31.6	35.8	32.5	84.7	84.5
민간 재원	30.9	79.3	68.4	64.2	67.5	15.3	15.5

자료: OECD(2010). Education at Glance.

○ 대학재정지원의 일관성 및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투자 요구

-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상당 비율은 단년도 지원사업임. 이에 따라 대학이 발전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움
-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에서는 매번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형편이며,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결정됨
- 이에 따라 머지않아 종료를 앞두고 있는 BK21, WCU 등의 후속사업에 대해서도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은 매년 사업 확장 여부가 불확실한 형편임.
- 반면에 설문조사결과에서는 고등교육관련 재정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았고, 대학 교육역량 강화지원사업,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WCC(World Class College)사업,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BK21(Brain Korea 21)사업,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 사업 등 모든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임

○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즉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현실에서 우리 대학들은 고등교육시장 개방, 대학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미흡 등 대·내외 대학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학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임
- 둘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대학구조개혁을 통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과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갈 핵심전략분야의 고급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이 절실함
- 셋째, 현재 교육예산의 대부분이 초·중등교육에 투자되고,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체의 12%에 머무르고 있음. 이제는 인적자본의 확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만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유일한 수단인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현재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민간영역에만 의존할 수는 없음. 이제는 국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나. 정책과제

-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법제화가 필요함. 이미 40조원에 육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하여 초중등교육은 어느 정도 재정적 안정화가 가능함. 이제는 고등교육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때임.
 - 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확보하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의 안정적 재정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대학재원의 법적 독립성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의 목적, 범위, 기준, 재원조달 방법 등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법제화하고, 재원규모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고등교육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임. 1%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8년 예산 기준 1조원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의 재정 확보가 가능함
- 기존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후속 대책의 마련이 시급함
 - 대학 교육역량 강화지원사업,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WCC(World Class College)사업, WCU(World Class University)사

업, BK21(Brain Korea 21)사업,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사업 등 모든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속되어야 함

- 교육역량 강화지원사업 등과 같은 단년도 사업에 대한 안정적 대책을 마련하고,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대상의 확대(매년 10개교 선정 및 4년 간 총 40개교 운영), 사업이 종료되는 BK21, WCU 사업에 대한 후속사업의 마련이 필요함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 교육과학기술부(2011.8.17). 2011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8.24). 대학정보공시, 2011년 대학 계열별 취업률 공개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9.9).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0).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국회입법조사처.
- 기획재정부(2010). 2010년 IMD 세계경쟁력 평가 순위....23위. 보도자료.
- 김광웅(2009).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서울: 생각의 나무.
- 김병주(1998). 사립대학 재정의 구조와 문제 분석. 고등교육연구, 9(2).
- 김병주(2000).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9(2).
- 김병주, 나민주, 유현숙, 이영(2007). 지자체(공공) 및 민간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방안. 재정경제부.
- 김병주, 박정수, 이 영, 나민주(2009).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포퓰리 지표개발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방안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김병주, 나민주, 박동열, 정성수, 정종철, 최정윤(2010). 대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방향. 한국연구재단.교육과학기술부.
- 김병주, 나민주, 송경오, 정성수(2011).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3개년 성과분석 및 2011년도 사업설계. 한국연구재단.교육과학기술부.
- 김영섭, 김병주, 김진영, 박호범, 이 영, 이정미(2010). 대학(원) 재정지원 개선·통합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김철희 외(200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인력수급체계 개선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김태년 외(2007).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정책 검토 및 개선방향. 2007 입법 및 정책지원사업. 국회입법조사처.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7).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희망과 신뢰의 학습사회 실현.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6). 사회비전 2030 선진복지 한국의 비전과 전략.
- 박명수(2010).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8-2018. 한국고용정보원.
- 박영숙 외(2009), 미리 가본 2018년 - 유엔미래보고서. 교보문고.
- 박영한 외(2001). 대학과 지역 발전 : 인구동향과 전망. 대학지리학회지. 제36권 제4.

대학지리학회.

- 박재윤·이정미(2010). 미래 교육비전 연구—미래교육에 대한 요구, 비전 및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반상진 외(200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백성준(2009).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백성준(2010).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성과평가모형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백성준·채창균(2009).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지원방식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변종임 외(2010). 휴먼뉴딜을 위한 대학평생학습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서정현 외(2006). 대학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개편 및 제도개선 시 행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송기창(2009). 국가의 고등교육재원 배분 실태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18(1).
- 송기창·김병주·박정수·정태화(2007). 고등교육재정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과제 연구.
- 유의선 외(2010). 미래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상호작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유현숙(1998). 21세기 고등교육 변화와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 외(2005). 고등교육개혁 국제동향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 외(2006).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 외(2011).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윤종혁 외(2006). 창의적 인재양성과 효율적 운영체제 구축.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IV 06-11. 한국교육개발원.
- 이성종 외(2009). 대학 교육과정의 혁신적 개편을 통한 융합 과학자 육성 방안.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pp. 265-277.
- 이세준 외(2008). 과학기술 미래전략연구를 위한 사전 기획조사. 교육과학기술부.
- 이영(2011.8.6). 장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추정.
- 이예경(2009). 국가인적자원 측면에서 본 지식융합, 지식융합시대의 한국교육. 한국교육학회. 85~91.

- 이일용(2010). ESD의 잠재력과 활용성.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콜로퀴엄 시리즈. 유네스코 위위원회 · 한국교육개발원.
- 이정미 외(2010).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호영 외(2006).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IV 06-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임기철 (2000), 국가와 기업에서의 기술예측 결과 활용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전상인 외(2008). 한국미래학회 “미래를 묻는다” – 한국 2030. 에코리브르.
- 조용수(2009). 해외 미래예측기관들이 보는 10년 후 세상. LG BusinessInsight. LG 경제연구소.
- 채재은 외(2009). 고등교육 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최상덕 외 (2007).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체계 혁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용재 외(2008). 한국 산업·무역구조의 중장기 전망.
- 통계청(2009a).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 통계청(2009b). 학령인구변화에 따른 학교수 교사수 변화 및 시사점. 보도자료.
- 통계청(2011). 2010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개발연구원(2007). 선진한국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2010). 미래비전 2040 – 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가발전전략.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 메가트렌드 분석자료. 비발간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년 간추린 교육통계.
- 한국연구재단(2010). 2009년 우리나라 SCI 논문수 세계 11위. 보도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8).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ICT가 변화시키는 트렌드, ICT를 발전시킬 트렌드. IT & Future Strategy. 제6호.
- 황주성 외(2005). 22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III – IT 기반 미래국가발전전략 연구 총괄 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황홍규(2009). 2030 한국교육의 전망과 대학정책의 과제. 교육과학기술부(미발간자료)

e-나라지표(2011). IMD 교육 경쟁력 순위(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26)

Center for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2005).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Landscape 2020. p.p.95–101. University of Twente. <http://doc.utwente.nl/60111/1/Enders05European.pdf>

OECD(2008). *Four Future Scenarios for Higher Education*. OECD/France International Conference: Higher Education to 2030 발표 자료. <http://www.oecd.org/edu/universityfutures>.

Vincent-Lancrin, Stephan(2004). Building Futures Scenarios for Universities and Higher Education: an international approach. *Policy Futures in Education*, 2(2), 257–261.

<부 록>

<부록 1> 텔파이 1차 조사지	233
<부록 2> 텔파이 2차 조사지	241
<부록 3> 텔파이 3차 조사지	256
<부록 4> 설문조사지	272

<부록 1> 델파이 1차 조사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개편 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

- 제 1 차 델파이 조사지 -

이 조사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개편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고등교육 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 주도적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의 역할과 기능 및 체제개편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고등교육이 국가발전 주요 전략수단으로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국가혁신체제의 리더로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부디 바쁘시더라도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사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조사: 9월 23일(금)~9월 27일(화)
- 2차 조사: 9월 30일(금)~10월 4일(화)
- 3차 조사: 10월 7일(금)~10월 11일(화)

○ 제출처: 이메일(김무영 blacksoul99@paran.com, 김병주 kimbj@yu.ac.kr)

○ 문 의: 고등교육체제개편 정책연구팀

김병주(010-9595-7474), 김무영(010-9374-4832)

※ 다음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간략한 정보입니다.

1. 저출산 · 고령화 사회

- 최근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추세
 -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 . 1983년 이후 출산율 2.1명 이하로 하락, 2009년 기준 1.15명
 - . 2008년 입학정원 유지시 2015년부터 고교졸업자가 대학입학정원을 418명 초과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 127,282명 초과
 - . 2018년에 학령인구와 대학입학정원이 같아지고, 이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학령인구보다도 적어짐
 -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미충원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및 특성화 중심 발전전략 전환 불가피
 - . 학령인구의 급속 한 감소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양질의 교육 요구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성인교육이 중요해질 것
 - . 성인교육 체제는 평생교육, 계속교육, 원격교육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져야 하고, 늘어가는 중 · 고령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
 - . 성인교육은 각자의 구체적인 필요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양해지고, 면대면 학급 수업뿐만 아니라 원격교육, e-learning, 재택교육, 통신교육 등이 활용될 필요

2. 분권화와 지역발전

- 정치 · 행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분권화, 지역발전 및 행정의 효율화 진척
 - 중앙의 권한이 널리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역의 발전이 이루 어지며, 행정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
 - . 세계화 추세에 예외가 아닌 우리나라로 이와 같은 지역화, 분권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국제사회에서 공공부문과 행정체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필요가 절실히 따라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등을 포함한 효율화가 추진되고, 이것이 하나의 강력한 추세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그 목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 발휘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목표들이 달성된다면 세계화와 균형발전에 기여

- 공공부문의 책무를 민간에 맡기는 민영화(privatization) 추세도 대두
 -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그로 인한 조직 변화
 - 이러한 추세는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닐 것.
 - . 지방대학 혁신역량 제고 및 구조개혁과 국립대학 법인화, 지역 클러스터 개발, 낙후지역 활성화 등이 추진

3. 지식기반사회의 가속화

- 미래사회에는 지식기반사회가 심화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인류의 사회발전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기반사회로 진행
 - . 지식기반사회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지식의 확산·보급 및 활용이 일반화되어 지식 활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활발해지는 사회를 의미
 -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식’과 지식 활동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사람’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
 - . 힘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지식의 격차가 과거 경제력에 의한 빈부격차보다 더 커지게 됨.
 -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의 창출 능력이 강조
 - 미래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심화되면서 현행 학제의 개혁을 포함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
 -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양이 폭증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육내용인 지식을 재구조화해야 하고, 지식 사회에서 필요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학교 기능도 단순한 지식의 전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지식의 창출과 활용 기능까지도 담당 필요
 - 지식기반사회는 그 성격상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
 - . 이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학습기관, 학습제도 등이 새로운 형태와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 . 기존의 학습구조는 전면적으로 재구조화되고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벽은 허물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하게 부각될 것

4. 세계화의 심화

- 경제·사회·기술·문화·정치 등의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의존과 통합 그리고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교육 분야에서는 국경을 넘는 교육체제가 구축되고 있고, 국가 간 유학생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
- 세계화는 장점과 위험이 내포
 -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 파급효과로 인한 경제,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가 전망
 - 경제적으로는 국제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이민이 증가하며, 문화적으로는 종전보다 훨씬 많은 교류가 예상
- 한국교육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대
 - 외국인 국내 유학생의 급격한 증가
 - 한국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지속적 협력
 - 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유치하는 정책이 추진

5. 급격한 사회변화와 양극화

- 사회의 질과 삶의 질의 변화
 - 경제적 선진국은 이루었으나, 사회적 선진국은 미결 과제
 - 사회적 불신(신뢰 저하)이 사회의 질을 끌어내림
 - 산업화, 민주화에 이은 갈등사회 도래: 이탈과 해체, 사회통합 미흡, 투명성 미흡
 - 양적 성장사회에서 질적 성숙사회로: 사회통합과 공정성, 역동적 균형(성장과 분배, 이상과 현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 등)
-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 증대
 - 가족 및 아동, 건강의 사회적 위험 증대: 가족의 해체(이혼의 증가), 아동빈곤율의 증가, 위기 아동, 만성질병의 증가
 - 노동시장구조의 악화: 낮은 취업률, 일자리의 양극화 심화, 불안정 고용의 증가, 고용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 빈곤층 및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양극화 심화: 빈곤율의 증가, 소득분배의 악화와 빈곤의 심화, 정규/비정규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악화
 - 힘겨운 아동 양육: 양육부담, 양육과 교육의 사적 부담 증가
 - 너무나 긴 노후: 노인돌봄 부담(노인부양비의 증가), 의료비 부담의 증가
 - 복지지출의 증가 :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비
 - 중산층 비중의 감소
 -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취약
- 불평등 및 국내외 갈등 심화
 - GINI 계수 상승(과거 10년간 47개국 중 30개국에서 상승): 한국은 지니계수 상승

국가

- 양극화 : 국가간/국가내(소득의 양극화, 기업의 양극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고용구조, 지역별)
- 교육을 통한 불평등 대물림 현상 심화: 계층간 사교육비 격차 심화
- 잠재적 교육 취약계층 증가: 결혼 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등 잠재적 교육취약계층 증가

6. 가치관의 변화

-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
 - 개인주의, 탈권위주의와 개성사회,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 미래에 새롭게 주목할 가치: 행복, 정의, 선, 지속가능성, 정의와 공정성, 창의력과 상상력
- 미래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관심
 - 가치 교육: 윤리교육, 인성교육, 가치관 교육, 정신 건강 교육
 - 삶의 질, 사회의 질을 높이는 교육
 - 개인의 인격, 사회의 품격, 국격을 높이는 교육

7. 세계질서와 남북관계 변화

- 세계 정치질서의 변화
 - 아시아의 부상
 - 동맹의 변화(안보와 경제의 분리, 강대국 협조체제)
 - 중국변수와 동아시아(중국으로의 힘의 이동 증가, 중국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
 - 미래학자들이 보는 북한의 변화
 - 북한의 대외 개방 및 경제개혁 진전
 -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의 완만한 진전
 - 통일 시기 및 통일 비용의 증대(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25년까지 단일 국가 또는 연방체제로의 통일 전망)
 - 북한의 불확실성(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 통일 이후 통합교육과 교육제도 통합 문제,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논리 개발 필요

※ 다음부터는 고등교육체제 개편에 관한 제1차 델파이 조사지입니다.

1.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

○ 전문가들은 미래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를 예상합니다. 특히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한 영역으로 저출산 고령화, 분권화와 지역발전, 지식기반사회 가속화, 세계화의 심화, 급격한 사회변화와 양극화, 가치관의 변화,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미래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社会의 변화	이 유
1.	
2.	
3.	
4.	
5.	

2.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

○ 저출산 고령화, 분권화와 지역발전, 지식기반사회 가속화, 세계화의 심화, 급격한 사회변화와 양극화, 가치관의 변화,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생각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예: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 등),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교육과정 개혁,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대학교육의 질 통제(대학평가 등),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대학의 연구력 강화, 대학의 교육력 강화 등

순위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	이유
1.		
2.		
3.		
4.		
5.		

3.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 등),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교육과정 개혁,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대학교육의 질 통제(대학평가 등),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대학의 연구력 강화, 대학의 교육력 강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방안별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세부과제는 무엇입니까?

영역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세부과제(예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세부과제
고등 교육 의 경쟁력 강화	30개 우수대학 집중 육성, 대학원 경쟁력 강화, 미래기술 선도분야 협력 강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의 자율성 확대, 대학의 책무성 제고	
대학내 구조 혁신(특성화 등)	학과간 구조조정, 통용성 높은 교육과정으로 개혁, 지역산업과의 연계, 정원 감축(다운사이징), 특성화 유도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대학간 구조 조정(통폐합 등)	차별화된 전문대 육성, 국립대학 통폐합, 국립대학 지배구조(법인화), 소수대학 집중지원, 대학정원 감축, 경영부실 사립대학, 특정 학과의 대학-대학원 동시지원 배제	
교육시장 개 방 및 국제교 류 협력	유학생 유치, 연구자 교류 확대, 해외 우수대학 유치, 국내 대학 해외진출,	
교육과정 개 혁	교양과정의 통합/융합성 강화, 전공과정의 직업연계성 강화, 대학원과 학습연계 강화,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메뉴얼화(표준화), 교수개인용 교육과정 탈피, 동문 및 기업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 참여 보장, 교육과정의 국제통용성 강화	
개방형 학사 운영 및 사이 버학습	다학기제, 선진화된 정보화 서비스, 국제적 이더닝 체제, 사이버학습의 해외진출,	
대학 교육 의 질 통제(대학 평가 등)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고등교육연구원 설립, 대학평가 의무화,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국가인정 박사학위제 도입	
대학 재정의 확보 및 분담	수요자중심 재정지원, 성과중심 재정지원, 선택과 집중,	
우수교원 확 보 및 유지	외국인 우수교수 유치, 교수평가 강화, 교수고용구조의 유연화, 국내 학자 육성 우대	
대학의 연구력 강화	연구중심대학 집중 육성, 대학의 R&D 역할 확대, 국내 박사과정 진학자 재정 지원 강화	
대학의 교육력 강화	교육관련 재정지원 확대, 교육중심대학 집중 육성, 교수업적평가에서 교육업적 강조,	
교육기회 형 평 보장	학자금 및 장학금 확대, 평생교육 기회 확대	
기타		

<부록 2> 델파이 2차 조사지

1.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

○ 1차 조사결과 40분의 전문가들은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미래 한국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계
저출산고령화	19	3	2	4	2	30
지식기반사회 가속화	12	7	6	2	1	28
세계화의 심화	1	11	4	5	3	24
급격한 사회변화와 양극화	2	3	9	3	4	21
분권화와 지역발전	1	4	3	3	5	16
가치관의 변화	1	3	6	3	1	14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		1	1	1	4	7
기타*		2	1	1	1	5

*기타 의견: 스마트및하이브리드사회, 대학에 대한 요구 증대, 다양성 존중 사회, 고등교육의 중앙집중화, 고등교육의 초과 공급현상

○ 제시된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5위(1, 2, 3, 4, 5)까지 적어주시고, 추가로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추가의견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

구분	1차 응답자수	우선순위
①저출산고령화	30	
②지식기반사회 가속화	28	
③세계화의 심화	24	
④급격한 사회변화와 양극화	21	
⑤분권화와 지역발전	16	
⑥가치관의 변화	14	
⑦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	7	
⑧기타의견:	5	

※추가의견:

2.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

○ 1차 조사결과 40분의 전문가들은 미래 사회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16	1	2		1	20
대학교육의 질 통제	3	3	5	5	3	19
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등)	1	7	6	2	3	19
교육과정 개혁	2	6	4	1	1	14
대학의 교육력 강화	3	3	2	3	3	14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2	1	3	4	2	12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2	2	2	2	3	11
대학 거버넌스 개혁	2	2	2	3		9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1	2	2	2	1	8
대학의 연구력 강화	1	1	1	1	1	5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1	2		2		5
대학간 구조조정		3		1		4
대학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	2	2				4
기타*			2	2	3	7

*기타의견: 남북 통합에 따른 체제 정비, 산학연 체제의 강화, 통일한국, 다문화한국 리더십, 대학 재정의 부담과 운영 투명성, 사회적 연계강화, 국사립 대학간 적정 분담 비율, 국가인재와 지역인재의 양극화 심화, 융합형 인력양성 수요 급증, 창의적 중심의 지식기반 중시, 적정 고등 교육 인구 규모

○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5위(1, 2, 3, 4, 5)까지 적어주시고, 추가로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추가의견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		
구분	1차 응답자수	우선순위
①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20	
②대학교육의 질 통제	19	
③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등)	19	
④교육과정 개혁	14	
⑤대학의 교육력 강화	14	
⑥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12	
⑦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11	
⑧대학 거버넌스 개혁	9	
⑨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8	
⑩대학의 연구력 강화	5	
⑪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5	
⑫대학간 구조조정	4	
⑬대학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	4	

※추가의견:

3.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등교육체제의 핵심 대응 방안

3-1.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의 세부과제에 대한 1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V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	1차 응답 수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 요 치 않 음	전 현 안 중 요 함
①우수대학 집중육성(30개교)(연구중심, 교육중심)	15	(5)	(4)	(3)	(2)	(1)
②지방대학 경쟁력강화	10	(5)	(4)	(3)	(2)	(1)
③대학의 자율성확대	9	(5)	(4)	(3)	(2)	(1)
④미래기술 선도분야 협력 강화	9	(5)	(4)	(3)	(2)	(1)
⑤대학의 책무성 제고(대학 및 교수 책무성 보장 기제2)	9	(5)	(4)	(3)	(2)	(1)
⑥대학원 경쟁력강화	8	(5)	(4)	(3)	(2)	(1)
⑦대학거버넌스 체제혁신	2	(5)	(4)	(3)	(2)	(1)
⑧경쟁력 개념상세화 및 성과지표개발	1	(5)	(4)	(3)	(2)	(1)
⑨계량화된 지표 이외 정성적 지표 보완이 필요	1	(5)	(4)	(3)	(2)	(1)
⑩공동학위제등 대학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강화	1	(5)	(4)	(3)	(2)	(1)
⑪대학간/학과간 통폐합을 통한 CriticalMass(인적 /물적자원)조건종족	1	(5)	(4)	(3)	(2)	(1)
⑫대학교육 질 보증제도의 정착	1	(5)	(4)	(3)	(2)	(1)
⑬대학별 특성화(탁월성중심의 우수대학과 지역산업관련인재양성)	1	(5)	(4)	(3)	(2)	(1)
⑭대학유형/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체계의 정립	1	(5)	(4)	(3)	(2)	(1)
⑮대학의 산업기여	1	(5)	(4)	(3)	(2)	(1)
⑯대학의 연구여건조성	1	(5)	(4)	(3)	(2)	(1)
⑰대학의 질적 통제체제 확립	1	(5)	(4)	(3)	(2)	(1)
⑱부실대학의 정리 강화	1	(5)	(4)	(3)	(2)	(1)
⑲우수교수 확보	1	(5)	(4)	(3)	(2)	(1)
⑳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취업률중심의 평가로 인한 부작용최소화	1	(5)	(4)	(3)	(2)	(1)
(2)질관리를 위한 정보공개	1	(5)	(4)	(3)	(2)	(1)
(2)평가기제 정착	1	(5)	(4)	(3)	(2)	(1)
※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3-2.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1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V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대학내 구조혁신 (특성화 등) 세부 과제	1차 응답 수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 치않음	전혀 안중 요
①통용성 높은 교육과정으로 개혁	14					
②특성화 유도를 위한 정부재정지원방식 개선	11					
③학과간 구조조정	8					
④지역산업과의 연계	7					
⑤정원 감축	5					
⑥대학의 특성화	2					
⑦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준국립대학(가칭)의 전체 적방향과 정체성 정립	1					
⑧국립대학 육성방안 마련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확보	1					
⑨다전공 활성화	1					
⑩대학의 특성화에 부합하는 평가 지표의 개발에 의한 객관적 대학 평가	1					
⑪블록펀딩 평가의 엄격화	1					
⑫대학지배구조 및 투명성개선, 비리 척결	1					
⑬대학행정 혁신	1					
⑭학과 중심에서 벗어난 유연한 교수조직	1					

※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3-3.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1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V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 세부 과제	1차 응답 수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 치 않음	전혀 안중 요
①국립대 통폐합	15	⑤	④	③	②	①
②경영부설 사립대학 구조조정	15	⑤	④	③	②	①
③대학 정원 감축	10	⑤	④	③	②	①
④국립대학 지배구조(법인화)	7	⑤	④	③	②	①
⑤전문대학별 특성화 방안	7	⑤	④	③	②	①
⑥대학의 거버넌스의 개선필요	2	⑤	④	③	②	①
⑦교수학생 중심의 재정지원제도 정착	1	⑤	④	③	②	①
⑧국립대학 특성화 유도	1	⑤	④	③	②	①
⑨다양한 유형의 대학 및 프로그램 운영	1	⑤	④	③	②	①
⑩대학 자율성 확대	1	⑤	④	③	②	①
⑪대학생 대학원생의 능력 극대화	1	⑤	④	③	②	①
⑫대학유형/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체계의 정립	1	⑤	④	③	②	①
⑬대학의 설립목적이 뚜렷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을 육성하되, 지역거점형태는 부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1	⑤	④	③	②	①
⑭전문대학과 대학간의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 유도	1	⑤	④	③	②	①
⑮정부 주도의 특정 학과 지원 배제	1	⑤	④	③	②	①
⑯정부 지원 대학의 집중화	1	⑤	④	③	②	①
⑰특성화를 통한 downsizing 유도와 관련 기관의 통합	1	⑤	④	③	②	①
⑱특정 학과의 대학대학원 동시 지원 배제	1	⑤	④	③	②	①

※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3-4.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의 세부과제에 대한 1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V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중요도					
세부 과제	1차 응답 수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 치않음	전혀 안중 요	
①연구자 교류 확대	15	(5)	(4)	(3)	(2)	(1)	
②유학생 유치	13	(5)	(4)	(3)	(2)	(1)	
③국내대학 해외진출	12	(5)	(4)	(3)	(2)	(1)	
④해외 우수대학 유치(국내대학과 연계)	10	(5)	(4)	(3)	(2)	(1)	
⑤해외대학과 공동연구 및 교육체제구축	2	(5)	(4)	(3)	(2)	(1)	
⑥교육과정의 국제 표준화	1	(5)	(4)	(3)	(2)	(1)	
⑦국제화에 부합하는 대학 프로그램정립	1	(5)	(4)	(3)	(2)	(1)	
⑧명확한 방향설정후 중장기관점에서 전략적 접근 시도 필요.	1	(5)	(4)	(3)	(2)	(1)	
⑨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주도	1	(5)	(4)	(3)	(2)	(1)	
⑩유학생 교육과정 질 향상	1	(5)	(4)	(3)	(2)	(1)	
⑪유학생관리 체계정립	1	(5)	(4)	(3)	(2)	(1)	
⑫주요대학에서 국내학위자 고용할당제	1	(5)	(4)	(3)	(2)	(1)	
⑬해외잠재적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대학 입학 설명회’ 등 지원 필요	1	(5)	(4)	(3)	(2)	(1)	

*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3-5.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개혁”의 세부과제에 대한 1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V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세부 과제	1차 응답 수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 치않음	전혀 안중요
①전공 과정의 직업연계성 강화	14	⑤	④	③	②	①
②교육과정의 통합/융합성 강화	13	⑤	④	③	②	①
③교육과정의 국제 통용성 강화	8	⑤	④	③	②	①
④대학원과 학습연계 강화	4	⑤	④	③	②	①
⑤동문 및 기업의 교육과정개정과정 참여보장	3	⑤	④	③	②	①
⑥교수개인용 교육과정 탈피	2	⑤	④	③	②	①
⑦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매뉴얼화(표준화)	2	⑤	④	③	②	①
⑧교육과정 적용 결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및 feedback	2	⑤	④	③	②	①
⑨각대학 교육철학이 반영된 교육과정의 개발·적용	1	⑤	④	③	②	①
⑩고등교육평가원설립	1	⑤	④	③	②	①
⑪교수법 혁신, 교육수요와 교수 전공의 불일치 해소	1	⑤	④	③	②	①
⑫교양과 전공지식의 구분	1	⑤	④	③	②	①
⑬교양과정의 창의력	1	⑤	④	③	②	①
⑭교육과정의 개별화 체제구축	1	⑤	④	③	②	①
⑮국가인정 박사학위 제도입	1	⑤	④	③	②	①
⑯국제화·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1	⑤	④	③	②	①
⑰기업연계형 과정과 순수 연구형 과정의 차별화,	1	⑤	④	③	②	①
⑱다전공 활성화, 학생 진로와 연계한 트랙 개발 운영	1	⑤	④	③	②	①
⑲사회 변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1	⑤	④	③	②	①
⑳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과 교양 교육과정의 국제화	1	⑤	④	③	②	①
(2)외국어능력배양	1	⑤	④	③	②	①
(2)융복합 대학원의 설치	1	⑤	④	③	②	①
(2)융합과정은 대학원 중심으로 연구와 병행하는 교육과정 개편	1	⑤	④	③	②	①
(2)이론과 실무지식의 구분	1	⑤	④	③	②	①
(2)창의적 교양 및 전공과정의 운영	1	⑤	④	③	②	①

※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3-6.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의 세부과제에 대한 1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V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세부 과제	1차 응답 수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 치않음	전혀 안중 요	
①국제적 이러닝 체계	12	⑤	④	③	②	①	
②다학기제 도입	9	⑤	④	③	②	①	
③선진화된 정보화 서비스	8	⑤	④	③	②	①	
④사이버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5	⑤	④	③	②	①	
⑤교수의 강의 공개 강화 및 강의 평가의 실질적 운용	2	⑤	④	③	②	①	
⑥학기 운영의 다양화	2	⑤	④	③	②	①	
⑦고령화에 부응하는 개방형 학사운영체제구축	1	⑤	④	③	②	①	
⑧교육자료 및 강의 공개분위기조성이 필요함	1	⑤	④	③	②	①	
⑨브랜디드러닝	1	⑤	④	③	②	①	
⑩사이버 학습의 교양과정 중심화	1	⑤	④	③	②	①	
⑪사이버대학간 특성화방안	1	⑤	④	③	②	①	
⑫성인의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1	⑤	④	③	②	①	
⑬시간제 학생 제도 정착	1	⑤	④	③	②	①	
⑭이런닝 뿐만아니라 Offline학습의 개방	1	⑤	④	③	②	①	
⑮평생학습개념에 따라 다양한 정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 체제구축	1	⑤	④	③	②	①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3-7.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대학교육의 질 통제(대학평가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1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V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대학교육의 질 통제(대학평가 등)		중요도					
세부 과제	1차 응답 수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안중요	
①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9	(5)	(4)	(3)	(2)	(1)	
②고등교육평가원 설립	8	(5)	(4)	(3)	(2)	(1)	
③고등교육연구원 설립	6	(5)	(4)	(3)	(2)	(1)	
④국가공인박사학위제 도입	6	(5)	(4)	(3)	(2)	(1)	
⑤대학평가 의무화	6	(5)	(4)	(3)	(2)	(1)	
⑥대학 평가 기준의 합리화, 객관화	3	(5)	(4)	(3)	(2)	(1)	
⑦기관평가보다는 개별 학과 등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정착	3	(5)	(4)	(3)	(2)	(1)	
⑧대학의 인증제 강화방안	3	(5)	(4)	(3)	(2)	(1)	
⑨대교협의 기능고도화로 수용가능	1	(5)	(4)	(3)	(2)	(1)	
⑩대학의 자율성 최대한 확보	1	(5)	(4)	(3)	(2)	(1)	
⑪대학자율화와연계한대학평가엄밀화	1	(5)	(4)	(3)	(2)	(1)	
⑫대학평가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1	(5)	(4)	(3)	(2)	(1)	
⑬대학평가지표에 대한 새로운 고민	1	(5)	(4)	(3)	(2)	(1)	
⑭실질적 교육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 연구 개발	1	(5)	(4)	(3)	(2)	(1)	
⑮정부 주도의 평가에는 반대 따라서 재정지원 연계도 부정적	1	(5)	(4)	(3)	(2)	(1)	
⑯지식의 현장 적응력 제고(실제 사회에서 활용되는 교육)	1	(5)	(4)	(3)	(2)	(1)	
⑰평가결과의 강력한 집행	1	(5)	(4)	(3)	(2)	(1)	
⑱현재 대학은 민간언론사의 평가에 더 비중을 두고 있고, 대교협을 통한 정부의 평가는 단지 정부의 재정지원 자격요건으로서만 인식되고 있음	1	(5)	(4)	(3)	(2)	(1)	
⑲협의회 등 대학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기관을 배제한 독립적인 평가기관 설립/운영	1	(5)	(4)	(3)	(2)	(1)	

*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3-8.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의 세부과제에 대한 1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V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중요도					
세부 과제	1차 응답 수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 치 않 음	전혀 안중 요	
①성과중심 재정지원	11	(5)	(4)	(3)	(2)	(1)	
②선택과 집중	8	(5)	(4)	(3)	(2)	(1)	
③수요자중심 재정지원	7	(5)	(4)	(3)	(2)	(1)	
④재정지원 확대	5	(5)	(4)	(3)	(2)	(1)	
⑤학생지원 위주 재정지원	3	(5)	(4)	(3)	(2)	(1)	
⑥국사립대학간 재정지원 차등 철폐	2	(5)	(4)	(3)	(2)	(1)	
⑦국가고급인재양성 측면에서 선별적 재정지원	1	(5)	(4)	(3)	(2)	(1)	
⑧기업 재정지원 성과와 연계한 정부지원	1	(5)	(4)	(3)	(2)	(1)	
⑨기업체의 대학교육투자 확대	1	(5)	(4)	(3)	(2)	(1)	
⑩대학성과에 대한평가의 합리적개선이 필요함	1	(5)	(4)	(3)	(2)	(1)	
⑪대학의 자체적 발전전략을 교란하지 않는 재정지원 정책	1	(5)	(4)	(3)	(2)	(1)	
⑫대학재정 활용의 자율성증대와 책무성확인 방안	1	(5)	(4)	(3)	(2)	(1)	
⑬대학재정은 대학의경상비를 지원할 수있어야 함	1	(5)	(4)	(3)	(2)	(1)	
⑭대학재정의 충실도 검증체제구축	1	(5)	(4)	(3)	(2)	(1)	
⑮안정적 대학재정 확보방안	1	(5)	(4)	(3)	(2)	(1)	
⑯장기적인 투자관점에서의 평가지표보완필요	1	(5)	(4)	(3)	(2)	(1)	
⑰재정지원 규모 및 방식 법제화	1	(5)	(4)	(3)	(2)	(1)	
⑱특성화 중심 재정지원	1	(5)	(4)	(3)	(2)	(1)	

*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3-9.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의 세부과제에 대한 1차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V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중요도					
세부 과제	1차 응답 수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 안중요	
① 교수 평가 강화	14	(5)	(4)	(3)	(2)	(1)	
② 교수 고용구조의 유연화	10	(5)	(4)	(3)	(2)	(1)	
③ 국내학자 육성 우대	9	(5)	(4)	(3)	(2)	(1)	
④ 외국인 우수교수 유치	8	(5)	(4)	(3)	(2)	(1)	
⑤ 교수별 교육과 연구의 적정비 자율선택과 책무성	1	(5)	(4)	(3)	(2)	(1)	
⑥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원임용체계	1	(5)	(4)	(3)	(2)	(1)	
⑦ 대학간 인적 교류 활성화	1	(5)	(4)	(3)	(2)	(1)	
⑧ 신임교수 지원 프로그램 확대	1	(5)	(4)	(3)	(2)	(1)	
⑨ 외국인 교수 유치를 위한 규제의 대폭 완화	1	(5)	(4)	(3)	(2)	(1)	
⑩ 외국인 교수를 유치할 수 있기 위해 외국인 교수 개인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할 수 있어야 함	1	(5)	(4)	(3)	(2)	(1)	
⑪ 우수교수 평가가 건수 중심으로 평가에서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1	(5)	(4)	(3)	(2)	(1)	
⑫ 정년보장 교수의 재임용제 강화에 따른 연구력 확보	1	(5)	(4)	(3)	(2)	(1)	
⑬ 주요 대학에서 국내박사학위 소지자의 일정비율 고용할 당제를 통한 대학원육성과 학문의 자립도 강화	1	(5)	(4)	(3)	(2)	(1)	

*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3-10.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대학의 연구력 강화”의 세부과제에 대한 1차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V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세부 과제	1차 응답수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 안중요	
①연구 중심대학의 집중 육성	13	(5)	(4)	(3)	(2)	(1)	
②대학의 R&D역할확대	12	(5)	(4)	(3)	(2)	(1)	
③박사과정 진학자 재정지원 확대	9	(5)	(4)	(3)	(2)	(1)	
④학문적 새 이론 창출과 신기술 개발 집중 육성 (연구량 기준 평가체계 철폐)	2	(5)	(4)	(3)	(2)	(1)	
⑤RA 및 TA제도의 정착	1	(5)	(4)	(3)	(2)	(1)	
⑥SCI중심의 연구업적평가 지양	1	(5)	(4)	(3)	(2)	(1)	
⑦교수별교육과 연구의 적정비 자율선택과 책무성	1	(5)	(4)	(3)	(2)	(1)	
⑧국내 대학원 역량 제고	1	(5)	(4)	(3)	(2)	(1)	
⑨대학 연구성과 기반 중기적 연구비 지원 확립	1	(5)	(4)	(3)	(2)	(1)	
⑩대학내 연구조직의 정착 및 연구조직 경쟁력확보	1	(5)	(4)	(3)	(2)	(1)	
⑪신진 연구 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1	(5)	(4)	(3)	(2)	(1)	
⑫우수 연구자 우대 정책 및 연구자 재정 지원	1	(5)	(4)	(3)	(2)	(1)	
⑬정부출연연과 대학연구소의 연계	1	(5)	(4)	(3)	(2)	(1)	
⑭협동연구의 강화	1	(5)	(4)	(3)	(2)	(1)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3-11.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대학의 교육력강화”의 세부과제에 대한 1차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V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세부 과제	1차 응답 수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 치않 음	전혀 안중 요
① 교육관련 재정지원 확대	18	(5)	(4)	(3)	(2)	(1)
② 교수업적평가에서 교육업적 강조	9	(5)	(4)	(3)	(2)	(1)
③ 교육중심대학 집중육성	6	(5)	(4)	(3)	(2)	(1)
④ 창의, 융합교육의무화	2	(5)	(4)	(3)	(2)	(1)
⑤ 대학의 교육력 제고 방안	2	(5)	(4)	(3)	(2)	(1)
⑥ 교육중심 대학과 기업연계	1	(5)	(4)	(3)	(2)	(1)
⑦ 1인교수의 강의수업에서 유연한 교수체제로 전환방안	1	(5)	(4)	(3)	(2)	(1)
⑧ AHELO 도입확산	1	(5)	(4)	(3)	(2)	(1)
⑨ 교수 업적평가에서 교육과 연구의 비중을 optional하게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1	(5)	(4)	(3)	(2)	(1)
⑩ 교수별교육과 연구의 적정비 자율선택과 책무성	1	(5)	(4)	(3)	(2)	(1)
⑪ 교수업적 엄밀화	1	(5)	(4)	(3)	(2)	(1)
⑫ 교육중심대학 소속교수에게 연구실적은 업적평가에서 제외함	1	(5)	(4)	(3)	(2)	(1)
⑬ 교육중심대학은 실무능력과 국제적감각을 양성하는데 교육과정, 교수과정이 집중되어야함	1	(5)	(4)	(3)	(2)	(1)
⑭ 연구중심대학과 연구소 연계 강화	1	(5)	(4)	(3)	(2)	(1)
⑮ 직업교육 중심의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과 산학협력으로 중심축 이동	1	(5)	(4)	(3)	(2)	(1)
⑯ 책임강의시수제의 폐지와 대안	1	(5)	(4)	(3)	(2)	(1)
⑰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확립	1	(5)	(4)	(3)	(2)	(1)

*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3-12.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교육기회 형평 보장**”의 세부과제에 대한 1차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V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교육기회 형평 보장		중요도				
세부 과제	1차 응답 수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 안중요
①학자금 및 장학금 확대	16	⑤	④	③	②	①
②평생교육 기회 확대	10	⑤	④	③	②	①
③국사립대간 지원 차등 철폐	3	⑤	④	③	②	①
④저소득층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 및 학자금 지원 증진	3	⑤	④	③	②	①
⑤기업의 주문형 교육강화	1	⑤	④	③	②	①
⑥기업의 직업준비 교육(인턴십)지원강화를 통한 1년 치학비절감	1	⑤	④	③	②	①
⑦대학 입학 년령의 분포 확산(우리나라가 2024세 대 학생수 세계 1위 95%정도)	1	⑤	④	③	②	①
⑧대학원의 연구비 연계형 학자금 지원	1	⑤	④	③	②	①
⑨변형 바우처 제도의 활용방안	1	⑤	④	③	②	①
⑩실질적인 ICL 운영	1	⑤	④	③	②	①
⑪평생 학습계좌제 확산	1	⑤	④	③	②	①
⑫평생교육 관련 재정 지원 확대	1	⑤	④	③	②	①
⑬학생들의 현 가정소득수준, 졸업후 취업소득수준에 대한 데이터 확보 체제 마련이 핵심	1	⑤	④	③	②	①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3-13.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기타의 세부과제** 의견에 대한 1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V 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세부 과제	1차 응답 수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 치않음	전혀 안중 요	
①기업의 주문형 교육강화	1	(5)	(4)	(3)	(2)	(1)	
②기업의 직업준비교육(인턴십)지원강화를 통한 1년치 학비절감	1	(5)	(4)	(3)	(2)	(1)	
③기업체의 필요 인재상의 개발과 명세화	1	(5)	(4)	(3)	(2)	(1)	
④창의성, 융합 학제기반 교육을 위해 졸업학점 확대는 필수적이며,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여 수시과제 부여 배가, 자기 학습 강화 등을 통해 졸업 심사를 엄격히 하여 우수 인재 육성	1	(5)	(4)	(3)	(2)	(1)	
⑤국립대학부터 시범적으로 업무 분석 및 혁신 필요	1	(5)	(4)	(3)	(2)	(1)	
⑥기업체 필요과제에 대한 안내와 지원	1	(5)	(4)	(3)	(2)	(1)	
⑦대학별/전공별 배출 인재상의 개발과 구체화	1	(5)	(4)	(3)	(2)	(1)	
⑧비전임교원에 대한 처우개선(강의평가를 바탕으로 전임교원과 차별완화)	1	(5)	(4)	(3)	(2)	(1)	
⑨예절, 인성교육의 강화	1	(5)	(4)	(3)	(2)	(1)	
⑩학생·교원대비적정교직원수비율제시필요	1	(5)	(4)	(3)	(2)	(1)	
⑪학생진로교육의 확대와 교육과정 연계	1	(5)	(4)	(3)	(2)	(1)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 성의있는 응답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개편 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

- 제 3 차 델파이 조사지 -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개편 방향을 수립을 위한 델파이 조사에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10년 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의 역할과 기능 및 체제개편 방안 및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 조사,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2차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 조사까지 40분이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2차 조사에서 응답하여 주신 의견에 기초하여 3차 조사지를 작성하였습니다.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을 보다 핵심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우리 나라 고등교육 체제 혁신을 위하여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조사지는 **10월 13일(목) 저녁까지 회송**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1차 조사: 9월 23일(금)~ 9월 30일(금)
- 2차 조사: 10월 3일(월)~10월 7일(금)
- 3차 조사: 10월 10일(월)~10월 13일(목)

○ 제출처: 이메일(김무영 blacksoul99@paran.com, 김병주 kimbj@yu.ac.kr)

○ 문 의: 고등교육체제개편 정책연구팀

김병주(010-9595-7474), 김무영(010-9374-4832)

1.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

- 2차 조사결과 40분의 전문가들은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미래 한국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계
저출산고령화	29	2	2	4	1	38
지식기반사회 가속화	9	21	6	3	1	40
세계화의 심화	1	10	15	6	5	37
급격한 사회변화와 양극화		5	9	15	9	38
분권화와 지역발전		1	2	5	12	20
가치관의 변화	1	1	4	6	11	23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			2	1	1	4

*기타 의견: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평생교육 확대 강조 필요. 사회의 변화를 근시안적인 측면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의 고려가 중요함.

- 1, 2차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 관련 주목해야 할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

구분	1차 응답자수	2차 응답자수	2차 응답 순위
①저출산고령화	30	38	1
②지식기반사회 가속화	28	40	2
③세계화의 심화	24	37	3
④급격한 사회변화와 양극화	21	38	4
⑤분권화와 지역발전	16	20	5
⑥가치관의 변화	14	23	
⑦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	7	4	
⑧기타의견:	5		

※추가의견, 제언:

2.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

○ 2차 조사결과 40분의 전문가들은 미래 사회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29	1	2		2	34
대학교육의 질 통제	1	13	4	6	3	27
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등)	2	13	11	4	5	35
교육과정 개혁	4	3	4	6	1	18
대학의 교육력 강화	1	5	7	4	6	23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2	1	6	5	7	21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6	1	7
대학 거버넌스 개혁		2			3	5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1	2	3	6
대학의 연구력 강화			3	3	4	10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1		1	2	4
대학간 구조조정			1	1	2	4
대학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				1		1

○ 1, 2차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이 문항의 전문가들의 핵심키워드만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방안도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바랍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핵심 키워드

구분	1차 응답자수	2차 응답자수	2차 응답 순위
①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20	34	1
②대학교육의 질 통제	19	27	2
③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등)	19	35	3
④대학의 교육력 강화	14	23	4
⑤교육과정 개혁	14	18	5
⑥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12	21	6
⑦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11	7	
⑧대학 거버넌스 개혁	9	5	
⑨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8	6	
⑩대학의 연구력 강화	5	10	
⑪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5	4	
⑫대학간 구조조정	4	4	
⑬대학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	4	1	

※ 추가의견:

- '고등교육경쟁력강화'가 아래 항목 모두를 포함 가능
-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누어서 조사 필요
- 대학 교육과 연구의 공공성에 관한 문항도 추가 필요

※ 추가의견, 제언:

3.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등교육체제의 핵심 대응 방안

3-1.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세부 과제	2차 응답 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대학의 자율성 확대	40	4.25	170	1
②대학원 경쟁력 강화	40	4.15	166	2
③미래기술 선도 분야 협력 강화	40	4.05	162	3
④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40	4.03	161	4
⑤우수대학 집중 육성(30개교)(연구중심, 교육중심)	40	4.00	160	5
⑥대학의 책무성 제고(대학 및 교수 책무성 보장기제)	39	3.95	154	6
⑦대학별 특성화(탁월성 중심의 우수대학, 지역산업 관련 인재양성)	37	4.05	150	7
⑧대학 거버넌스 체제 혁신	39	3.69	144	8
⑨대학유형/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체계의 정립	37	3.86	143	9
⑩우수교수 확보	36	3.86	139	10
⑪대학교육 질 보증제도(대학평가 및 질적 통제)의 정착	38	3.63	138	11
⑫대학의 연구여건 조성	37	3.73	138	11
⑬부실대학의 정리 강화	37	3.68	136	13
⑭질관리를 위한 정보공개	37	3.43	127	14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 대학 의사결정에 교수 외에 산업계 인사, 사회지도층 인사가 1/20이상 참여하고, 대학소재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에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것 필요
- 우수대학 집중육성에 찬성은 하지만, 소규모의 학교 중에는 한두 분야가 탁월할 수도 있는데, 전체 대규모 대학의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여 없어지거나 차별받을 위험 우려
-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교육 이수자들의 역량 강화 필요
- 고교졸업생들의 부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부실대학의 정리가 우선인데 18위에 올라와 있으니 문제의 심각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듯함
- 대학평가가 일시적인 평가가 아닌 지속가능한 지표, 대학교육 전반적인 질적인 지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대학의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개념 구체화 필요

*추가의견, 제언:

3-2.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대학내 구조혁신(특성화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내 구조혁신 (특성화 등)					
세부 과제	2차 응답 수	중도평균	응답점수	우선순위	
①통용성 높은 교육과정으로 개혁	38	4.34	165	1	
②대학의 특성화	37	4.27	158	2	
③특성화 유도를 위한 정부재정지원방식 개선	38	4.08	155	3	
④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38	4.03	153	4	
⑤학과간 구조조정 및 융합학제 마련, 다전공 활성화	36	3.89	140	5	
⑥대학내 정원 감축	37	3.7	137	6	
⑦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준국립대학(가칭)의 전체적 방향과 정체성 정립	33	3.85	127	7	
⑧대학지배구조 및 투명성개선, 비리척결	33	3.85	127	7	
⑨학과중심에서 벗어난 유연한 교수조직	33	3.64	120	9	
⑩대학행정 혁신	33	3.48	115	10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 학과(전공)간 융합연구/교육으로 높은 통용성 교육 및 사회수요 연구 특화 필요
- 정부재정지원 방식도 특정학과(복수포함)간 융합연구/교육단위로 지원 필요
- 교수 조직도 외국대학처럼 복수학과 또는 계열조직으로 전환하여 융합 강조 필요
-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체제 혁신 필요. 법인화 필수 및 자율성에 부합하는 책무성 보장기제
- 사립대학 거버넌스도 재검토 필요
- 대학별로 미래 대비 교육과정의 설계·운영·평가에 최우선 관심 필요. 현재의 교수 개인 위주의 교과목 운영으로는 세계 수준에 크게 미흡
- 융합학제를 위한 학부제 강화
-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이 교수에 연구비, 학생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전공별 교육 성과에 대한 졸업생 개개인에 대한 인증 평가 실시
- 교육과정이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함. 또한 대학에서 지속적인 교수법의 개발과 학습클래스사이즈 감소 등과 같은 노력이 경주되어어야 함

***추가의견, 제언:**

3-3.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등)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경영부실사립대학 구조조정	40	4.28	171	1	
②대학 전체 정원 감축	40	3.95	158	2	
③국립대 통폐합 및 특성화 유도	40	3.78	151	3	
④전문대학별 특성화 방안	39	3.85	150	4	
⑤대학의 거버넌스의 개선 필요	39	3.74	146	5	
⑥대학 자율성 확대	36	4.06	146	5	
⑦대학유형/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체계의 정립	36	3.97	143	7	
⑧다양한 유형의 대학 및 프로그램 운영	36	3.86	139	8	
⑨국립대학 지배구조(법인화) 혁신	40	3.35	134	9	
⑩교수학생중심의 재정지원제도 정착	36	3.72	134	9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 한 개 도에 두 개 이상의 국립대가 있는 경우, 캠퍼스별로 특성화하고, 1도 1국립대학 체제로 운영
- 권역별 국립대학 통폐합 및 부실사립대학의 흡수
- 국립대나 사립대나 무관하게, 노력하고 필요한 만큼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함.
- 국립대학의 통폐합 효과 분석 지속 추진
- 산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실습기간을 포함하는 전문대학 체제 강화. 이를 통해서 무분별한 대학진학 풍토를 개선해야 함.
- 대학에 대학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확립이 필요

※추가의견, 제언:

3-4.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의 세부과제에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장 개방 및 국제교류 협력					
세부 과제	2차 응답 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연구자 교류 확대	40	4.3	172	1	
②해외대학과 공동연구 및 교육체제구축	39	4.33	169	2	
③유학생 유치	40	3.95	158	3	
④해외우수 대학유치(국내대학과 연계)	40	3.75	150	4	
⑤유학생관리 체계정립	36	4.06	146	5	
⑥국내대학 해외진출	40	3.6	144	6	
⑦국제화에 부합하는 대학 프로그램 정립 및 교육과정의 국제 표준화	36	3.86	139	7	
⑧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질 향상 필요	36	3.83	138	8	
⑨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주도	37	3.3	122	9	

※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 국내외 우수 석학과 교류로 연구/교육분야의 수월성을 높이고 기초/응용과학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
- 고등교육의 국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교육과정의 국제화’라고 판단함. 교육과정의 국제화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분야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가 필요. 필요성, 분야, 가능성, 가능방안, 교육과정안, 실행 후 경제적 효과 등 연구 필요.
- 우수 유학생 유치 장학금 지원
- 연구자 교류 확대를 위해서 단기, 장기 교류 계획 및 지원 확대
- 연구자 교류와 해외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교육 체제 구축을 통해서 교육 및 연구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음.
- 국가 및 대학 차원의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시스템의 보강이 필요

※ 추가의견, 제언:

3-5.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개혁”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개혁					
세부 과제	2차 응답 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전공 과정의 직업연계성 강화	40	4.38	175	1	
②교육과정의 통합/융합성 강화	40	4.2	168	2	
③교육과정의 국제 통용성 강화	40	4.15	166	3	
④교육과정 개정절차의 매뉴얼화 및 교육과정 적용결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및 feedback	39	3.82	149	4	
⑤동문 및 기업의 교육과정 개정과정 참여보장 및 교수개인용 교육과정 탈피	38	3.87	147	5	
⑥사회 변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36	3.97	143	6	
⑦교수법 혁신, 교수수요와 교수전공의 불일치해소	36	3.81	137	7	
⑧대학원과 학습연계 강화	39	3.46	135	8	
⑨외국어능력 배양	36	3.69	133	9	
⑩다전공 활성화, 학생진로와 연계한 트랙 개발운영	36	3.67	132	10	
⑪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과 교양 교육과정의 국제화	36	3.61	130	11	
⑫각 대학 교육철학이 반영된 교육과정의 개발·적용	36	3.58	129	12	
⑬국제화·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36	3.56	128	13	
⑭창의적교양 및 전공과정의 운영	36	3.39	122	14	
⑮기업연계형 과정과 순수연구형과정의 차별화	36	3.36	121	15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임, 대학 내에서 각 전공간, 대학과 기업간 협력 필요. 강력한 인센티브 기제를 사용 필요. positive와 negative 병행. 교수업적평가, 연봉, 연구비, 참여기업 세제 혜택,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 산업현장 밀착형 학과 지원 ○ 전공과정의 직업연계성은 대학생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될 필요 ○ 급변하는 사회 및 지식 발전, 기업발전에 따른 update 된 내용을 가르쳐야 함. ○ 기초지식 발전 확보 방안도 필요. ○ 역량기반 대학 교육과정의 강화 ○ 명시적 성과를 행동으로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행수준 설정 ○ 전공학습의 경우 PBL과 연계하고, 현장실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학습 실시 ○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전문성 ○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의 연계성 					

***추가의견, 제언:**

3-6.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
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사이버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	40	4.1	164	1	
②교수의 강의 공개 강화 및 강의 평가의 실질적 운용	40	3.88	155	2	
③국제적 이러닝 체계	39	3.74	146	3	
④선진화된 정보화 서비스	38	3.82	145	4	
⑤학기운영의 다양화 및 다학기제 도입	39	3.64	142	5	
⑥고령화에 부응하는 개방형 학사운영체계 구축(성인 의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에 대한 제도적/재 정적 지원)	35	3.83	134	6	
⑦평생학습개념에 따라 다양한 정규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학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35	3.69	129	7	
⑧교육자료 및 강의 공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35	3.46	121	8	
⑨이런 닝 뿐만 아니라 Offline학습의 개방	35	3.2	112	9	

※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 이러닝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강의공개의 제도화
- 성인학생이 시간적·재정적 제약없이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 고용보험기금으로 성인 근로자의 대학 수강, 사이버 코스 수강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대학에서의 시간제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관리 방안 마련
-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학습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온라인 학습체제 및 컨텐츠 개
발과 함께 사이버 강의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질 관리가 필요
- 사이버 학습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학습 효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
- 사이버 학습 환경 체제의 구축과 이를 위한 재정 및 행정 지원, 그리고 이를 유지하
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

※ 추가의견, 제언:

3-7.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대학교육의 질 통제(대학평가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육의 질 통제(대학평가 등)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대학평가기준의 합리화, 객관화	40	4.15	166	1
②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40	3.93	157	2
③기관평가보다는 개별 학과 등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정착	39	3.74	146	3
④대학의 인증제 강화 방안 마련	39	3.69	144	4
⑤대학평가 의무화	40	3.48	139	5
⑥독립적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39	3.44	134	6
⑦대학평가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35	3.83	134	6
⑧대학의 자율성 최대한 확보	35	3.8	133	8
⑨실질적 교육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 및 지표 연구 개발	34	3.91	133	8
⑩고등교육연구원 설립/체계적 연구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 노력	38	3.49	133	8
⑪지식의 현장적응력 제고(실제사회에서 활용되는 교육) 노력	34	3.71	126	11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주체의 비신뢰, 비형평, 비미래지향성 및 지표의 부적절성으로 대학 자율성 저해함 ○ 기관 평가보다 개별학과 인증제도가 중요 ○ 대학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책임있는 기관에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대학교육 및 연구 수요자에 따라 중요시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와 논리를 이용, 다양한 평가를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학, 수요자 모두에게 유리 ○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을 더욱 확대 필요. 지원의 근거로 대학평가결과를 사용. 정부 인력개발, innovation, 사회통합 등 전략적 목적 실현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이때 중요한 것은 국내 뿐만아니라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의 개발임. 대학 교육력 및 연구력의 투입, 과정, 산출 등의 일련의 과정별 중요요인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지표의 설정 · 활용이 필수. 이를 위해서는 국제 협력 연구 필요. 				
*추가의견, 제언:				

3-8.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개의 추가질문에 답해주십시오.

대학재정의 확보 및 분담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40	4.45	178	1	
②대학 재정지원의 선택과 집중	40	4.13	165	2	
③성과중심의 재정지원	40	4.03	161	3	
④기업체의 대학교육투자 확대	35	4.23	148	4	
⑤수요자(학생 및 교수) 중심 재정지원	40	3.65	146	5	
⑥안정적 대학재정 확보방안 마련(재정지원 규모 및 방식 법 제화 등)	35	4.14	145	6	
⑦대학재정 활용의 자율성증대와 책무성확인 방안	35	3.97	139	7	
⑧대학의 자체적 발전전략을 교란하지 않는 재정지원 정책	35	3.91	137	8	
⑨장기적인 투자관점에서의 평가지표 보완	35	3.77	132	9	
⑩국사립 대학간 재정지원 차등 철폐	38	3.42	130	10	
⑪대학 특성화 중심 재정지원	35	3.46	121	11	
⑫장기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경상비 지원	35	3.44	120	12	
추가 질문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보통	약간 덜중요	전혀 안중요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지역별 국립대학 육성 및 일정 수의 사립대학 육성 필요	⑤	④	③	②	①
국내 또는 지역내 대학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학생/교수 중심 재정 지원의 필요	⑤	④	③	②	①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립대학 체제 개편에 대한 재정지원은 일반 재정지원사업과 별도로 운영될 필요
- 기관중심, 프로그램/사업단 중심, 개인 중심 재정지원의 합리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
-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별 국립대학 육성 및 일정 수의 사립대학 육성 필요
-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 및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국내 또는 지역내 대학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학생/교수 중심 재정 지원의 필요
- 고정 지원금과 경쟁적 지원금의 구분: 경쟁적 지원금의 배정 원칙 마련 및 경쟁적 지원금의 공정한 배정

***추가의견, 제언:**

3-9.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교수에 대한 평가 강화와 평가결과의 활용	40	4.38	175	1
②교수 고용구조의 유연화 및 다양한 교원임용체계	40	4.28	171	2
③외국인 우수교수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확대	40	3.68	147	3
④국내 우수학자 육성 우대	40	3.65	146	4
⑤교수평가를 건수 중심 평가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	35	3.60	126	5
⑥대학간 인적 교류 활성화	35	3.54	124	6
⑦신임교수 지원 프로그램 확대	35	3.54	124	6
⑧교수업적평가시 교수별 교육과 연구의 평가비중 자율선택과 책무성	35	3.51	123	8
⑨정년보장 교수의 재임용제 강화에 따른 연구력 확보	35	3.37	118	9

※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 유사 전공분야 다수의 교수 확보를 통한 교수간 경쟁 및 협력 유도가 중요(학과별로 다수의 critical mass를 확보);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간 빅딜, 특성화 등을 통해 가능
- 실력이나 열정없는 정년보장 교수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신진학자들이 연구하거나 가르칠 자리가 없거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풍토를 바꿀 필요
- 연구나 교수 업적 및 성과에 비추어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유연한 고용 풍토 마련이 필요

※ 추가의견, 제언:

3-10.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대학의 연구력 강화”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개의 추가질문에 답해주십시오.

대학의 연구력 강화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대학의 R&D 역할 확대 및 지원	40	4.38	175	1	
②연구중심대학의 집중 육성	40	4.3	172	2	
③박사과정 진학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40	3.95	158	3	
④학문적 새이론 창출과 신기술 개발 집중 육성	38	4.16	158	3	
⑤국내 대학원 역량 제고	35	4.03	141	5	
⑥SCI중심 및 연구량 중심의 연구업적평가 지양	35	3.89	136	6	
⑦대학 연구성과 기반 중기적 연구비 지원 확립	35	3.74	131	7	
⑧대학내 연구조직의 정착 및 연구조직 경쟁력확보	35	3.74	131	7	
⑨우수 연구자 우대 정책 및 연구자 재정 지원	35	3.71	130	9	
⑩RA 및 TA제도의 정착	35	3.69	129	10	
⑪신진 연구 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35	3.57	125	11	
⑫다학문적 협동연구의 강화	35	3.57	125	11	
⑬정부출연연과 대학연구소의 연계	35	3.37	118	13	
추가 질문	매우 중요 함	약간 중요 함	보통	약간 덜 중요	전혀 안중요
WCU보다 진전된 국제협력연구 지원 강화	⑤	④	③	②	①
대학의 중장기 기초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⑤	④	③	②	①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 등 국가와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은 필수적임
- 다학문적 협동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중장기 기초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WCU보다 진전된 국제협력연구 지원 강화
- 대학은 근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대학의 수와 학생이 너무 많아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만들기 어렵다. 과감하게 그 수를 줄이면 된다. 나머지는 모두 전문대학 또는 직업교육 대학교로 하고 그 수는 인력 수급 정도에 따라 하면 된다. 여분의 대학은 통폐합하여 그 재정을 대학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추가의견, 제언:

3-11.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대학의 교육력 강화”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개의 추가질문에 답해주십시오.

대학의 교육력 강화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 대학교육관련 재정지원 확대	40	4.58	183	1	
② 교수업적평가에서 교육업적 강조 및 엄밀화	39	4.31	168	2	
③ 대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연구 및 마련	38	4.21	160	3	
④ 교육중심대학 집중 육성 및 기업과의 연계 강화	40	3.89	156	4	
⑤ 창의교육 및 융합교육 의무화	34	3.94	134	5	
⑥ 직업교육 중심의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과 산학협력으로 중심축 이동	35	3.77	132	6	
⑦ 교육중심대학은 실무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양성하는데 교육과정이 집중되어야 함	35	3.49	122	7	
⑧ OECD의 AHELO(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도입 및 확산	36	3.33	120	8	
⑨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확립	35	3.40	119	9	
추가 질문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보통	약간 덜중요	전혀 안중요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시 교육관련 연수 이수를 의무화	⑤	④	③	②	①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 학생의 역량을 key competencies와 전공역량으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2년 또는 4년간 학습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를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
-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기업과의 산학협력, 자격증 취득, 교수의 학생교육에의 집중도 등이 대학교육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 교수관련 세미나, 교수방법 개발 및 실시, 우수 교원 인정제도 등 교육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재정지원함.
- 신임교원 임용시에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과 관련된 연수 실시: 연수 기간, 연수 프로그램, 연수 방법, 연수 환경, 연수 인력, 연수 실시를 위한 행정적 지원
-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시 교육관련 연수 이수를 의무화

***추가의견, 제언:**

3-12.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교육기회 형평 보장**”의 세부과제에 대한 2차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회 형평 보장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학자금 및 장학금 확대	40	4.48	179	1
②저소득층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 및 학자금 지원 증진	40	4.18	167	2
③평생교육 기회 확대	40	4.1	164	3
④국사립대간 지원 차등 철폐	39	3.38	132	4
⑤기업의 주문형 교육강화	35	3.51	123	5
⑥대학원의 연구비 연계형 학자금 지원	35	3.51	123	5
⑦평생교육 관련 재정 지원 확대	35	3.43	120	7
⑧실질적인 ICL(소득연계 학자금 대여프로그램) 운영	35	3.37	118	8
⑨기업의 직업준비교육(인턴십)지원 강화를 통한 1년치 학비절감	35	3.09	108	12
⑩평생 학습계좌제 확산	35	3.03	106	13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제도 마련이 필수.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 그러나 정부 재정 능력의 한계 및 기타 타 분야 투자 중요성 등으로 한계.
- 과도하게 높은 대학진학률의 하향 조정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재능이 있으나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확대 방안 필요.

***추가의견, 제언:**

3-13.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기타의 세부과제 의견에 대한 2차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세부 과제	2차 응답수	중요도 평균	응답 총점	우선 순위
① 학생진로교육의 확대와 교육과정 연계	37	3.97	147	1
② 기업의 주문형 교육 강화	39	3.62	141	2
③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학사관리 강화 및 졸업심사 엄격화를 통한 우수인재 육성	37	3.81	141	2
④ 비전임교원에 대한 처우개선(강의평가를 바탕으로 전임교원과 차별 완화)	36	3.72	134	4
⑤ 학생, 교원대비 적정 교직원수비율 제시 필요	37	3.59	133	5
⑥ 대학별/전공별 배출 인재상의 개발과 구체화	36	3.67	132	6
⑦ 예절, 인성교육의 강화	36	3.67	132	6
⑧ 기업체의 필요 인재상의 개발과 명세화/기업체 필요과제에 대한 안내와 지원	36	3.47	125	8
⑨ 기업의 직업준비교육(인턴십)지원 강화를 통한 1년치 학비 절감	38	3.11	118	9
⑩ 국립대학부터 시범적으로 업무 분석 및 혁신 필요	36	3.28	118	9

***핵심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 또는 의견:**

-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효과성 제고를 위한 필수 조건은 기업의 대학교육 및 연구에의 적극적 참여임. 이제 각 산업군별 Sector HRD Councils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니, 이 기구들을 최대 활용하여 각 산업군별로 요구하는 또 미래 전망되는 기술역량을 선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문대학과 직업교육중심 대학의 전공과정을 개발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이미 일부 전문대학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이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를 통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보완한다면, 이들 분야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대학의 교육력 및 졸업생의 취업역량은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기업의 참여와 함께 중요한 것은 대학 교수의 상황인식임.
- 실력있고 혁신적인 비전임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동의함.
- 연구업적, 교수평가를 근거로 재정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추가의견, 제언:**

- 성의있는 응답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부록 4> 설문조사지

현 정부 교육정책 진단을 위한 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교육 분야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발굴·논의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진단을 통해 교육정책의제를 마련하여 대통령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문회의에서는 미래 사회 환경과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들을 진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제 주요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대학관계자분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단기적, 장기적 교육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본 조사의 취지를 혜량하시고 너그라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에 걸리는 시간은 약 5분 이내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오직 본 정책의제 발굴과 관련한 통계 분석에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안병만

※ 본 조사지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대학교	김병주 교수	<input type="checkbox"/> 전화 : 053-810-3124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kimbj@yu.ac.kr
김무영 연구원		<input type="checkbox"/> 전화 : 053-810-3610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blacksoul99@paran.com

※ 다음은 선생님의 개인 배경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란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및 직원>

1. 성별

① 남 ② 여

2. 현재 근무 지역

① 특별시 ② 광역시 ③ 중소도시
 ④ 읍면 이하(광역시 및 도농통합도시 내 읍면지역 포함)

3. 현재 근무 학교 설립유형

① 국립 ② 공립 ③ 사립

4. 현재 근무 학교(직장)

① 전문대학 ② 대학교 ③ 대학원대학교 ④ 기타

5. 근무 경력 총합 년 개월

6. 직위

① 기획처장 ② 교무처장 ③ 그 외 보직교수
 ④ 평교수 ⑤ 기획처 및 교무처 근무 직원
 ⑥ 그 외 직원 ⑦ 연구원

※다음은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개별 정책 별로 선생님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란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답하시기 전에 각 정책들에 설명 자료를 먼저 살펴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귀하께서는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의 추진 배경, 추구하는 방향, 추진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질문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르고 있다
①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대학교 지원)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전문대학 지원)	<input type="checkbox"/>				
③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2010년 11개교, 2011년 11개교 선정)	<input type="checkbox"/>				
④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지원(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 80개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등록금 인상 제한(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 2012년 1조 5천억원 차등 지원(대웅 자금))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구조조정 추진(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연계 추진)	<input type="checkbox"/>				
⑦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울산과기대의 법인화국립대로 출범, 서울대 법인화법시행령 제정)	<input type="checkbox"/>				
⑧ WCU(World Class University)	<input type="checkbox"/>				
⑨ WCC(World Class College)	<input type="checkbox"/>				
⑩ BK21(Brain Korea 21)	<input type="checkbox"/>				
⑪ GPS(Global Ph.D. Scholarship)	<input type="checkbox"/>				

8. 귀하께서는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이 추진 배경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대학교 지원)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전문대학 지원)	<input type="checkbox"/>				
③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2010년 11개교, 2011년 11개교 선정)	<input type="checkbox"/>				
④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지원(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 80개교를 대상으로)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등록금 인상 제한(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 2012년 1조 5천억원 차등 지원(대응 자금))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구조조정 추진(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연계 추진)	<input type="checkbox"/>				
⑦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울산과기대의 법인화국립대로 출범, 서울대 법인화법시행령 제정)	<input type="checkbox"/>				
⑧ WCU(World Class University)	<input type="checkbox"/>				
⑨ WCC(World Class College)	<input type="checkbox"/>				
⑩ BK21(Brain Korea 21)	<input type="checkbox"/>				
⑪ GPS(Global Ph.D. Scholarship)	<input type="checkbox"/>				

9. 귀하께서는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현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대학교 지원)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전문대학 지원)	<input type="checkbox"/>				
③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2010년 11개교, 2011년 11개교 선정)	<input type="checkbox"/>				
④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지원(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 80개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등록금 인상 제한(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 2012년 1조 5천억원 차등 지원(대응 자금))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구조조정 추진(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연계 추진)	<input type="checkbox"/>				
⑦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울산과기대의 법인화국립대로 출범, 서울대 법인화법시행령 제정)	<input type="checkbox"/>				
⑧ WCU(World Class University)	<input type="checkbox"/>				
⑨ WCC(World Class College)	<input type="checkbox"/>				
⑩ BK21(Brain Korea 21)	<input type="checkbox"/>				
⑪ GPS(Global Ph.D. Scholarship)	<input type="checkbox"/>				

10. 귀하께서는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 다	만족한 다	보통 이다	만족하 지 않다	전혀 만족하지 않다
①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대학교 지원)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전문대학 지원)	<input type="checkbox"/>				
③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2010년 11개교, 2011년 11개교 선정)	<input type="checkbox"/>				
④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지원(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 80개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등록금 인상 제한(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 2012년 1조 5천억원 차등 지원(대응 자금))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구조조정 추진(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연계 추진)	<input type="checkbox"/>				
⑦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울산과기대의 법인화 국립대로 출범, 서울대 법인화법시행령 제정)	<input type="checkbox"/>				
⑧ WCU(World Class University)	<input type="checkbox"/>				
⑨ WCC(World Class College)	<input type="checkbox"/>				
⑩ BK21(Brain Korea 21)	<input type="checkbox"/>				
⑪ GPS(Global Ph.D. Scholarship)	<input type="checkbox"/>				

11. 귀하께서는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들은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대학교 지원)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전문대학 지원)	<input type="checkbox"/>				
③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2010년 11개교, 2011년 11개교 선정)	<input type="checkbox"/>				
④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지원(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 80개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등록금 인상 제한(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 2012년 1조 5천억원 차등 지원(대응 자금))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구조조정 추진(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연계 추진)	<input type="checkbox"/>				
⑦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울산과기대의 법인화 국립대로 출범, 서울대 법인화법시행령 제정)	<input type="checkbox"/>				
⑧ WCU(World Class University)	<input type="checkbox"/>				
⑨ WCC(World Class College)	<input type="checkbox"/>				
⑩ BK21(Brain Korea 21)	<input type="checkbox"/>				
⑪ GPS(Global Ph.D. Scholarship)	<input type="checkbox"/>				

※ 다음은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들의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점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개별 정책(17개)별로 혹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을 보기에서 **두 개씩** 골라 주십시오.

12. 대학교의 학부교육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보완점은 무엇입니까?

- ① 재정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다년간 사업으로 전환
- ② 재정지원의 예측 가능성 제고
- ③ 지원대상대학 확대
- ④ 지원금액 확대
- ⑤ 재정집행의 자율성 보장
- ⑥ 평가지표 및 방법의 보완
- ⑦ 지원금 배분방식의 개선
- ⑧ 대학 내부에서의 성과관리체제
- ⑨ 정부 차원에서의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 평가
- ⑩ 기타()

13. 전문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보완점은 무엇입니까?

- ① 재정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다년간 사업으로 전환
- ② 재정지원의 예측 가능성 제고
- ③ 지원대상대학 확대
- ④ 지원금액 확대
- ⑤ 재정집행의 자율성 보장
- ⑥ 평가지표 및 방법의 보완
- ⑦ 지원금 배분방식의 개선
- ⑧ 대학 내부에서의 성과관리체제
- ⑨ 정부 차원에서의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 평가
- ⑩ 기타()

14.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의 보완점은 무엇입니까?

- ① 지원대상 대학의 확대
- ② 대학당 지원금액의 확대
- ③ 지원기간의 연장(2+2에서 3+3이나 그 이상)
- ④ 재정집행의 자율성 보장
- ⑤ 사업성과 확산기제의 마련
- ⑥ 평가지표 및 방법의 보완
- ⑦ 지원금 배분방식의 개선
- ⑧ 개별대학 내부에서의 성과관리체제
- ⑨ 기타()

15.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인 대표 브랜드 사업의 보완점은 무엇입니까?

- ① 지원대상 대학의 확대
- ② 대학당 지원금액의 확대
- ③ 대표브랜드 사업을 없애고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단일 지원
- ④ 평가의 엄정성 및 정확성 제고
- ⑤ 사업성과 확산기제의 마련
- ⑥ 평가지표 및 방법의 보완
- ⑦ 지원금 배분방식의 개선
- ⑧ 기타()

16.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등록금 인상 제한(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 2012년 1조 5천억원 차등 지원(대응 자금), 국가장학금 체계, 대학의 자구노력 등)의 보완점은 무엇입니까?

- ① 정부의 인상 제한 조치 완화
- ② 등록금 차등지원 조건의 완화
- ③ 재정지원과 연계된 등록금 제한의 완화
- ④ 재정지원의 확대
- ⑤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 유도
- ⑥ 기타()

17. 대학 구조조정 추진(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연계 추진) 정책의 보완점은 무엇입니까?

- ① 재정지원제한 대학,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등 각 단계 별 대상 대학 선정 지표의 일관성 확보 및 유지
- ② 재정지원제한 대학,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등의 선정 평가방법 및 과정의 보완 필요
- ③ 연계 또는 통합 가능한 국립 및 사립대학의 연계 또는 통합 유도
- ④ 구조조정 대상의 재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배려
- ⑤ 기타()

18.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울산과기대의 법인화국립대로 출범, 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 제정) 정책의 보완점은 무엇입니까?

- ① 개별대학별로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는 문제 해소
- ② 개별대학의 사정에 따라 법인화를 추진토록 하는 문제 해소
- ③ 법인화 추진대학에 대해 충분한 추가적 재정지원
- ④ 중소규모 국립대학에 대한 배려
- ⑤ 기타()

19. WCU(World Class University) 정책의 보완점은 무엇입니까?

- ① 연구업적 및 연구역량이 탁월한 해외학자 유치 검증
- ② 유치된 해외학자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③ 사업비의 확대
- ④ 우수한 해외학자 유치에 대응하는 우수한 국내학자 대우책 마련
- ⑤ 해외 고급두뇌 초빙 활용사업으로 전환
- ⑥ 선정지표 및 선정과정의 엄정성 확보
- ⑦ 선정대학을 특정대학에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대학의 우수 학과/교수에 지원(대학보다는 개별교수들의 역량과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단을 선정)
- ⑧ 단기적 성과평가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평가
- ⑨ WCU 사업을 통하여 유치된 해외석학들이 사업종료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 ⑩ 기타()

20. WCC(World Class College) 정책의 보완점은 무엇입니까?

- ① 선정대학의 확대(2011년 7개교, 총 21개교 선정 예정)
- ② 선정대학당 지원금액의 확대(3년간 대학당 연간 32억 지원(교육역량 강화사업비))
- ③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이외의 추가재원 확보
- ④ 선정지표 및 선정과정의 엄정성 확보
- ⑤ 사업지 지원기간(3년)의 확대
- ⑥ 기타()

21. Brain Korea 21(BK21) 정책의 보완점은 무엇입니까?

- ① 예산 등의 집행과 사업수행의 자율성 및 독립권한 제고
- ②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등의 계열에 따른 차등 해소
- ③ 예산 총액의 증액
- ④ 단기적 성과위주의 평가(매년 평가)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성과평가로 전환
- ⑤ 사업과 관련이 없는 대학의 제도개혁과의 연계 지향
- ⑥ 실질적인 신진연구인력 유인책 마련 필요
- ⑦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⑧ 기타()

22. GPS(Global Ph.D. Scholarship) 정책의 보완점은 무엇입니까?

- _____ ① 학생당 지원금액(연간 3천만원 2년간 지원)의 확대
_____ ② 지원대상(2011년 287명 지원)의 확대
_____ ③ 학생당 지원기간(현재는 2년)의 확대
_____ ④ 인문사회계와 이공계의 적절한 균형 유지
_____ ⑤ 대학원 지원사업은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학부지원 사업에 치중
_____ ⑥ 지원대상 대학원생 선정 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_____ ⑦ 지원대상 선정 평가지표 및 평가과정의 엄정성 확보
_____ ⑧ 기타()

23. 정부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은 10년 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확대	유지	축소	폐지
① 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대학교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2011년 80개 전문대학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③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2010년 11개교, 2011년 11개교 선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④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지원(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 80개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등록금 인상 제한(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 2012년 1조 5천억원 차등 지원(대용 자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구조조정 추진(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연계 추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⑦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울산과기대의 법인화국립대로 출범, 서울대 법인화법시행령 제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⑧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4년제 대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⑨ WCC(World Class College) 사업(전문대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⑩ BK21(Brain Korea 21) 사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⑪ GPS(Global Ph.D. Scholarship)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부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정책별 설문에 응답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1.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 2008년부터 시작된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부교육 선도 모델의 창출·확산을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으로 구분
- 20011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는 선정지원신청 가능 대학 185개교중 165개교(89.2%)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교육지표 포뮬러와 재원 배분 포뮬러를 적용하여 80개 대학(신청 대학의 48.5%)을 선정하여, 1개교에 평균 29.6억 원을 지원
-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발전의 핵심지표로 구성된 포뮬러에 의해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자율적 재정집행을 보장하며, 2011년 지원총액은 2,406.6억 원(기본 지원금 2,366.6억 + 성과평가 인센티브 40억) 규모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 80개 이내 대학을 지원('10년 예산(수도권 675억, 지방 1,912억) → '11년 예산(수도권 645억, 지방 1,761.6억))
- 지원 대학 선정은 대학별 공시정보인 객관적·정량적 지표를 사전에 구성된 공식(formula)에 적용하여 결정되며, 지원대학 순위는 대학이 창출한 성과 및 교육여건 관련 지표로 구성된 공식(교육지표 포뮬러)에 의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결정
- 대학별 지원액은 교육지표 포뮬러 획득 점수 및 대학의 재학생 규모 등을 반영한 공식(재원배분 포뮬러)에 의해 결정

2.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선도대학)은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정한다는 원칙하에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
- ACE 선도대학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대학 중에서 선정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신청대학 98개 중에서 수도권 대규모(재학생 1만명 이하) 1개교·중·소규모(재학생 1만명 미만) 2개교, 지방 대규모 3개교, 중·소규모 5개교로 총 11개교*를 선정
- ACE 선도대학은 2010년 11개교에 이어 총 22개교가 되며, 교당 평균 27억 정도 지원('10년 예산(수도권 119억, 지방 178억) → '11년 예산(수도권 209억, 지방 388억))

3.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및 대표브랜드 사업

- 2008년부터 시작된 전문대학 교육역량 우수대학은 146개 전문대학 중 교육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전문대학 80개(수도권 26개교, 비수도권 54개교)를 선정하고, 대학당 평균 약 32억 원의 예산을 지원
- 2011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총 2,600억 원 규모로, 지표가 우수한 80개 전문대학을 「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 자율 재정집행액 1,812억 원,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에 776억 원을 각각 지원
- 「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의 선정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산학협력수익률 등 전문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나타내는 8개 핵심지표로 지원대학을 선정

4.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 고등교육법의 등록금 인상 제한(2010년 1월 22일 고등교육법 제11조의 전문 개정)
 - 제11조 제4항: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제3항: 제2항의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6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9월 8일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 2천5백억원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
- 기준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
 - 1조5천억원 중 절반 수준인 7,500억원이 이러한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될 전망
- 1조5천억원 중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며, 학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준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
 - 이 재원은 5%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계획
 - 대학의 자구노력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7,500억원을 매칭하여 대학의 노력을 뒷받침
-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
 -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

5. 대학 구조조정 및 개혁

- 2011년 7월 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추진 기본계획
<국립대학>
 - 대학 특성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 관점에서 국립대학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며, 초등교사 장기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교육대학과 인근 일반대학의 통합을 강력 유도
 -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선과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총장 직선제 개선과 총장 성과목표제 도입을 검토하며, 평가 순위 하위권 대학에 대한 "특별관리제"를 운영**<사립대학>**
 - 경영 부실대학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과 함께 정상적인 학사운영

<p>이 어려운 대학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시 결과 등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되, 문제 지속시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학교폐쇄와 법인해산도 추진</p> <p>○대학간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요건을 조정하고, 연금 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내지 못하도록 하며, 대학의 결산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p> <p>○사립학교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구조조정 촉진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p> <p><국·사립대학 공통></p> <p>○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들을 평가, 하위 15%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 이와 별도로 선정하게 될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p> <p>○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1. 7. 21)됨에 따라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가 도입되며,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에 따라 대학의 특성을 감안한 3~4학기제 등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p> <p>* 대출제한대학 선정평가 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 :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4개 지표) - 상대평가 :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장학금지급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전문대학은 산학협력수익률을 포함하여 9개 지표) <p>□ '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p> <p>○대학과 전문대는 설립목적과 교육여건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평가하며,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통합하여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수도권 하위 대학들의 경쟁을 유도</p> <p>○경영부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 중 절대기준 4개가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 행재정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를 결정</p> <p>○평가순위 하위 대학(하위 15% 내외)에 포함될 경우 '12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다만,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지급)</p> <p>□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9. 5일(월) 대학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p> <p>○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 전문대 146)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8, 전문대 15)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17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대학 9, 전문대 8)으로 선정</p> <p>○2012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전체 346개 대학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금번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대학을 제외한 288개 대학(대학 157, 전문대 131)</p>

6. 국립대학 법인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간 통·폐합 및 동일권역 소재 대학간 “연합대학 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확정·발표
- 연합대학 법인화는 동일 권역(행정권, 경제권) 내 2개 이상의 국립대학이 MoU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를 구축·운영하여 유사·중복 영역을 통·폐합하고 대학 간 기능을 조정한 후 일정기간(예, 3~5년) 내에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특히 법인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중소규모 대학에 대해서는 법인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법인화 미이행 및 통폐합 성과 미진 등 당초에 의도된 실적이 도출되지 않거나 예산을 사업 목적으로 집행할 경우 지원예산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질적인 사업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이미 법인화된 국립대학으로 출범하였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 시행령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대 법인화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 양도, 정관 제정, 교직원 신분 전환 등 후속조치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고, 차질 없는 준비과정을 통해 '12년 1월에 서울대법인이 공식 출범 예정

7. WCU(World Class University)

- 추진 배경
- new 성장동력 분야의 국가 핵심인재 양성 및 세계적 연구 선도
- 우수 해외학자(Star faculty)를 국내대학에 유치하여 교육·연구 풍토를 혁신하고, 나아가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도모
- 주요 내용
- 총 사업비: '08~'12년, 총 8,250억원('10년 : 1,591억원)
- 지원 현황: 35개 대학 총 149개 과제('10.9월 기준)
- 지원 내용
 - 우수 해외학자를 유치하여 융복합 중심 전공·학과 개설 지원
 - 해외학자와 국내 교수의 공동 연구·교육 활동 지원
- 해외학자 유치 현황: 노벨상 수상자 9명을 포함하여 340명 유치

8. WCC(World Class College)

- WCC(World Class College): 국내·외 산업체의 요구 및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계속적인 성장가능성과 글로벌 직업교육역량을 갖춘 선도 전문대학 육성
- 2011년 7개교 선정: 전체 146개 국·공·사립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4단계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
 - WCC로 선정된 대학은 한국 최고의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명예를 갖게 되고, 대학의 자율

성이 확대되도록 재정 및 학사운영 측면에서 각종 우대조치를 지원

- 재정적인 인센티브로 2011년 80개 전문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2,600억원의 교육역량강화사업비(교당 평균 32억원)를 별도의 평가 없이 3년간('11~'13년) 지원
- 2011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도 일반대학보다 2~3배 수준 더 지원

○2011년 7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14개교를 추가하여 최종 21개교를 선정 예정

- 평가순위 15%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것에 대응하여 최상위 15% 대학(21개교)은 자율성을 확대하여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수월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9. BK21(Brain Korea 21)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후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과 박사후과정생 등을 지원하는 『창의적인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

- 1단계(1999~2005) : 1조 3천억원
- 2단계(2006~2012) : 약 2조원
- 총 74개 대학 564개 사업단(팀)

○대학원 학과조직단위의 사업단(팀)을 지원 ⇒ 전반적인 교육역량 신장 ⇒ 세계수준의 우수대학원 육성

10. GPS(Global Ph.D. Fellowship)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는 2011년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지원대상자는 287명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여 미래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박사급 고급 두뇌로, 나아가 노벨상 후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국가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선정된 287명의 박사과정생에게는 연 3,000만원씩 2년 동안 6,000만원까지 지원

- 우수 학생의 국내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이공계의 경우 선발인원의 30% 이상을 석·박사통합과정생에게 배정함은 물론,
- 기초학문 중심의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에 각각 1대 1*로 인원을 배정

* 인문사회: 인문학 30명, 사회과학 30명, 과학기술: 자연과학 120명, 공학 120명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방안

발 행: 2011년 12월 8일

발행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발행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주 소 (110-7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02호

전화: 02)2100-8644~9

팩스: 02)2100-8650

홈페이지: <http://www.pacest.go.kr>

인쇄처 대구프린팅(053-811-0334)

<비매품>